

# 2024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 ☑ 본 보고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된 2024년도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임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 2022. 7. 5.] [법률 제18708호, 2022. 1. 4., 제정]

- 제15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 본 평가에서는 동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로서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1~2040)』에서 수립된 K-SDG 총 236개 지표 중 가용통계가 존재하는 176개 지표를 대상으로 목표순향도를 평가함
  - ✓ 목표순향도 평가: 각 지표별 5~10년치 가용통계에 대한 추세분석을 바탕으로 2040 목표를 향한 순향도를 평가
  - ✓ 평가에 활용된 수치는 통계 가용여부에 따라 2006~2024년 사이의 수치로, 지표별로 본문에 명시됨
  - ✓ 현재의 수준(현황)이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바람직한지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미래의 목표달성 전망을 고려하여 현재까지의 추세가 바람직한지를 평가한다는 점에 유의

# Contents

제1장   국가 지속가능발전 추진 현황 .....	1
제1절 지속가능발전 국제 동향 .....	3
제2절 국내 지속가능발전 추진 현황 .....	5
제3절 주요국 대비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이행 현황 .....	6
제2장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K-SDG에 따른 지표 평가 .....	29
제1절 평가의 개요 .....	31
1. K-SDG 구성체계 .....	31
2. 목표순항도 평가체계 .....	32
제2절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 지표별 평가 결과 .....	34
[전략1] 사람(사회) -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 .....	34
• 목표 1: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	34
• 목표 2: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	37
• 목표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	39
• 목표 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	43
• 목표 5: 성평등 보장 .....	50
• 목표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	55
[전략2] 번영(경제) - 혁신적 성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58
• 목표 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	58
• 목표 9: 산업의 성장과 혁신 활성화 및 사회기반시설 구축 .....	61
• 목표 10: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	64
• 목표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	67
[전략3] 환경 -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리는 깨끗한 환경 .....	71
• 목표 6: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	71
• 목표 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	75
• 목표 13: 기후변화와 대응 .....	77
• 목표 14: 해양생태계 보전 .....	79
• 목표 15: 육상생태계 보전 .....	82



<b>[전략4] 평화·협력 - 지구촌 평화와 협력 강화</b> .....	<b>85</b>
• 목표 16: 평화·정의·포용 .....	85
• 목표 17: 지구촌 협력 강화 .....	89
<b>제3절 요약 및 총평</b> .....	<b>91</b>
1. K-SDG 목표순항도 평가 결과: 전략별 요약 .....	91
2. 주요 결과 및 시사점 .....	100
3. K-SDG 지표 평가의 한계 및 개선방향 제언 .....	105
<b>제3장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및 과제</b> .....	<b>109</b>
<b>제1절 심층평가의 개요</b> .....	<b>111</b>
<b>제2절 지표별 심층평가</b> .....	<b>114</b>
1. 취약계층 긴급복지지원 예산 .....	114
2. 자살률 .....	121
3.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 .....	129
4.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 .....	136
5. 산업재해율 .....	143
6.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 .....	149
7. 지방상수도 자금률 .....	153
8. 온실가스 배출량 .....	158
9. 산림면적 비율 .....	164
10. 사이버 침해범죄 검거율 .....	168
11. GNI 대비 ODA .....	174
<b>제3절 요약 및 향후 과제</b> .....	<b>180</b>
<b>참고문헌</b> .....	<b>187</b>
<b>부록</b> .....	<b>191</b>
부록 I. K-SDG 지표평가 세부자료(산식, 출처 등) .....	193
부록 II. 2024 K-SDG 지표별 평가결과 요약 .....	222

## 표 차례

〈표 1-1〉 주요국 대비 한국의 이행현황: SDG 목표1(빈곤 퇴치) .....	6
〈표 1-2〉 주요국 대비 한국의 이행현황: SDG 목표2(기아 종식) .....	7
〈표 1-3〉 주요국 대비 한국의 이행현황: SDG 목표3(건강과 웰빙 증진) .....	9
〈표 1-4〉 주요국 대비 한국의 이행현황: SDG 목표4(양질의 교육 보장) .....	10
〈표 1-5〉 주요국 대비 한국의 이행현황: SDG 목표5(성평등 달성) .....	11
〈표 1-6〉 주요국 대비 한국의 이행현황: SDG 목표6(깨끗한 물과 위생 보장) .....	13
〈표 1-7〉 주요국 대비 한국의 이행현황: SDG 목표7(모두를 위한 에너지 보장) .....	14
〈표 1-8〉 주요국 대비 한국의 이행현황: SDG 목표8(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	15
〈표 1-9〉 주요국 대비 한국의 이행현황: SDG 목표9(사회기반시설 산업화 및 혁신) .....	16
〈표 1-10〉 주요국 대비 한국의 이행현황: SDG 목표10(불평등 감소) .....	17
〈표 1-11〉 주요국 대비 한국의 이행현황: SDG 목표11(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	18
〈표 1-12〉 주요국 대비 한국의 이행현황: SDG 목표12(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	19
〈표 1-13〉 주요국 대비 한국의 이행현황: SDG 목표13(기후변화 대응) .....	20
〈표 1-14〉 주요국 대비 한국의 이행현황: SDG 목표14(해양생태계 보존) .....	21
〈표 1-15〉 주요국 대비 한국의 이행현황: SDG 목표15(육상생태계 보호) .....	23
〈표 1-16〉 주요국 대비 한국의 이행현황: SDG 목표16(평화, 정의, 포용적인 제도) .....	24
〈표 1-17〉 주요국 대비 한국의 이행현황: SDG 목표17(글로벌 파트너십) .....	25
〈표 2-1〉 목표순항도 평가체계 .....	33
〈표 2-2〉 2022년 평가와의 비교- 평가등급별 비중 .....	101
〈표 2-3〉 2024 평가결과: 악화 추세("뇌우")인 지표 .....	101
〈표 2-4〉 지속적으로 악화 추세인 지표(2022, 2024 평가결과 연속으로 "뇌우") .....	102
〈표 2-5〉 2024 평가결과: 정체("흐림") 중인 지표 .....	103
〈표 2-6〉 최근 추세가 악화된 지표 (2022 평가 "맑거나 흐림" 또는 "맑음"→2024 평가 "흐림" 또는 "뇌우") .....	104
〈표 2-7〉 전략별 평가결과 비교 - 평가등급별 비중 .....	104
〈표 3-1〉 심층평가 대상지표 선정 - 요약 .....	112
〈표 3-2〉 심층평가 대상지표 - 정책적 중요성/시급성 요약 .....	112
〈표 3-3〉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 변화 .....	116
〈표 3-4〉 긴급복지지원 예산 추이(본예산 및 추경포함) .....	116
〈표 3-5〉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	117
〈표 3-6〉 긴급복지지원 소득 및 재산 기준 .....	117
〈표 3-7〉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내용 .....	118
〈표 3-8〉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주요내용 .....	119



〈표 3-9〉 고용장려금의 세부 유형 .....	119
〈표 3-10〉 사회재난 28종 .....	130
〈표 3-11〉 최근 10년간 사회재난 발생 현황 .....	131
〈표 3-12〉 고용형태별 연도별 임금근로자수 .....	137
〈표 3-13〉 연도별 한국의 임시고용 비율 및 국가 순위 .....	137
〈표 3-14〉 한국의 정규직/비정규직 특성 비교 .....	138
〈표 3-15〉 비정규직 일자리 관련 지표 추이 .....	138
〈표 3-16〉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의 비정규직 비율 감소를 위한 정책 예시 .....	140
〈표 3-17〉 OECD 국가별 사고사망 만인율 .....	147
〈표 3-18〉 배출권거래제 이행연도별 최종할당량 및 업체 수(단위: 백만 톤) .....	161
〈표 3-19〉 사이버범죄 발생 및 검거 .....	169
〈표 3-20〉 범죄유형별 사이버범죄 발생 및 검거 .....	170
〈표 3-21〉 전체 사이버범죄 대비 정보통신망이용범죄 발생 및 검거 .....	171
〈표 3-22〉 한국의 ODA 예산규모(확정액 기준) 추이와 현황 .....	177

## 그림 차례

[그림 1-1]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체계	4
[그림 1-2] SDG 목표별 점수 비교	26
[그림 2-1]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따른 K-SDG 체계	31
[그림 2-2] K-SDG 17개 목표 체계	32
[그림 2-3] 사회 부문(전략1) 평가결과 요약 -평가등급별 비중	93
[그림 2-4] 경제 부문(전략2) 평가결과 요약 -평가등급별 비중	95
[그림 2-5] 환경 부문(전략3) 평가결과 요약 -평가등급별 비중	97
[그림 2-6] 평화·협력 부문(전략4) 평가결과 요약 -평가등급별 비중	99
[그림 2-7] 전체 평가결과 요약 -평가등급별 비중	100
[그림 2-8] 목표순항도 평가 제외지표	106
[그림 2-9] 전략별·목표별 지표수	106
[그림 3-1] 자살률 및 월별 자살사망자 수 추이	122
[그림 3-2] 자살원인(동기)별 및 직업별 자살현황(2022)	123
[그림 3-3] 자살 영향요인	124
[그림 3-4]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의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	125
[그림 3-5] 제4차 자살예방기본계획(자살예방국가행동계획)의 성과 평가	126
[그림 3-6] 자살예방정책 문제의 영향력과 대비수준	127
[그림 3-7] 사회재난 인명피해(2012~2022)	132
[그림 3-8] 사회재난 유형별 발생건수(2020~2022)	132
[그림 3-9] 산업재해율 및 사망만인율 추이(2001~2023)	143
[그림 3-10] 업종별 산업재해 현황	144
[그림 3-11] 사업장 규모별 산업재해 현황	145
[그림 3-12] 업무상 질병 신청 건수 및 승인률	146
[그림 3-13] 중대재해감축로드맵 추진방향	148
[그림 3-14]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대책	148
[그림 3-15] 생활폐기물의 연도별 발생량 및 재활용률 추이	150
[그림 3-16]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 변화 추이	151
[그림 3-17] 전국 지자체 물자금률 추이, 2008~2021	154
[그림 3-18] 전국 지자체 물자금률 상·중·하위 지역(2008~2021년 평균)	154
[그림 3-19]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물자금을 관련 내용(예시)	157
[그림 3-20] 국가수도기본계획 상의 물자금을 관련 내용(예시)	157
[그림 3-21]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1990~2021(단위: 100만톤CO <sub>2</sub> eq.)	159
[그림 3-22]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량 및 거래가격 추이	162



[그림 3-23] 연도별 산림면적 비율 .....	165
[그림 3-24] 산지전용 현황(2000-2023) .....	166
[그림 3-25] 국가 임목축적량 .....	168
[그림 3-26] 한국의 ODA 연도별 규모, 2010-2023 .....	175
[그림 3-27] OECD/DAC 회원국의 ODA 규모 .....	176



# 제1장

# 국가 지속가능발전 추진 현황

- 제1절 지속가능발전 국제 동향
- 제2절 국내 지속가능발전 추진 현황
- 제3절 주요국 대비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이행 현황



# 제1장 | 국가 지속가능발전 추진 현황



## 제1절 지속가능발전 국제 동향

국제적으로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은 1987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sup>1)</sup>)’에서 발표된 일명 브룬트란트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여기서 지속가능발전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할 능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sup>2)</sup>으로 정의되었다.

이후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sup>3)</sup>)’, 일명 리우 지구정상 회의에서 리우 선언<sup>4)</sup>과 의제21 (agenda21)이 채택되었고,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은 환경과 경제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SSD<sup>5)</sup>)’의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의제21에서는 세계 각국이 지속가능발전을 경제·사회·환경 부문에서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국가전략(NSDS<sup>6)</sup>)’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리우선언과 의제21의 이행을 위한 추진기구로 유엔 지속가능발전위원회(CSD<sup>7)</sup>)를 설립하였다.

1997년 유엔총회 특별세션(일명 Rio+5)에서는 모든 나라가 2002년까지 지속가능발전 국가전략(NSDS)을 채택하기로 합의하였다.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sup>8)</sup>)’, 일명 Rio+10)에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은 환경-경제-사회의 통합과 균형을 지향하는 인류의 보편적인 발전전략으로 정착되었다.

리우 정상회의 20주년을 기념해 열린 2012년 유엔 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 일명 Rio+20)에

1)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2) “Sustainable development is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WCED, 1987, p.41)

3) 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Rio Summit; Earth Summit

4)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5)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6) National Strate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7)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2013년 이후 ‘지속가능발전 고위급정치포럼(HLPF,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으로 이어짐

8)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서는 20년에 걸친 각국의 지속가능발전 노력을 점검하고,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라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up>9)</sup>)를 수립하는 데에 합의하였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는 유엔이 2000년 새천년정상회의(Millennium Summit)에서 경제·사회발전과 환경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에 초점을 맞추어 수립했던 새천년개발목표(MDG<sup>10)</sup>)가 목표연도인 2015년에 이르러 종료되면서 그 후속 성격의 글로벌 의제로 발전되었다. 2015년 유엔총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 2030 의제<sup>11)</sup>’를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가 공식 채택되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는 세계 공동의 노력으로 2030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17개 목표(goal)와 이를 구성하는 169개 세부목표(target)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국제적 합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세계의 각국은 국가별 지속가능발전 국가전략(NSDS)을 수립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에 기반한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SDG와 2030 의제의 이행상황 점검을 위해 유엔은 매년 SDG 이행보고서(SDG Progress Report)와 함께 4년 주기의 과학과 정책 연계 보고서인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보고서(GSDR<sup>12)</sup>)를 발간하고, 매년 유엔 고위급정치포럼(HLPF<sup>13)</sup>)을 개최하여 점검하고 있다. HLPF는 매년 각료급 회의와 함께 4년 주기로 정상급 회의가 개최된다.



출처: UN SDG, <https://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news/communications-material/>

[그림 1-1]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체계

9)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0)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11)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12)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13) High-Level Political Forum

## 제2절 국내 지속가능발전 추진 현황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발전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제적 합의를 이행하고 국내 정책에 지속가능발전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1992년 국제적으로 리우선언과 의제21이 채택된 이후 국내에서도 1996년 '의제21 국가실천계획'을 수립하였고, 각 지자체 단위의 지방의제21 수립도 활발하였다. 2000년에는 '새천년 국가환경비전'을 선포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국정으로 채택하였고, 또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출범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체계가 마련되었다.

2005년에는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JPOI<sup>14)</sup>, 2002)에 따라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을 선언하였고, 2006년에는 이를 구체화하는 '제1차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06~10년)'을 수립하였다. 2007년에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최초 제정되어 법적 기반을 다졌다. 이후 법령을 근거로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오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이 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지속가능성 평가를 실시해오고 있다.

2015년 유엔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가 채택된 이후에는 이 체계를 국내적으로 도입하여 2019년 17개 목표와 122개 세부목표, 214개 지표로 구성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를 수립하여, 제3차 기본계획의 변경계획으로 삼았다. 2021년 수립된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사람(사회), 번영(경제), 환경, 평화·협력으로 구성된 4대 전략하에 17개 목표, 119개 세부목표, 236개 지표를 수립하여 기본계획으로 삼았다. 2020년부터는 국가지속가능성 평가도 K-SDG를 기반으로 실시되고 있다.

2008년부터는 녹색성장이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되면서 2009년 대통령 소속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 국가전략이 마련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2010)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위상을 조정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개정되고, 대통령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전환되어 운영되었다. 이후 탄소중립이 국가비전으로 채택(2020)되면서 녹색성장 법제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체제로 전환(2021)되었고, 지속가능발전 체제도 변화를 맞아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재제정되었다. 제재정된 기본법 체제에 따라 곧 새로운 지속가능발전 국가전략('26~45)의 수립을 앞두고 있다.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제재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체제는 그 위상이 격상되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지속가능발전 국가전략으로 전환된다. 또한 제재정된 기본법에서는 법률 목적(제1조)에 '경제·사회·환경의 균형 및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명시하여, 지속가능발전이 추구하는 경제-사회-

14) Johannesburg Plan of Implementation

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국가의 목표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를 명시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 정부의 역할과 더불어 지방정부의 역할을 분명히 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의 다중적 접근을 강조하였다.

### 제3절 주요국 대비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이행 현황

본 절에서는 UN이 수립한 글로벌 SDG에 대한 각국의 이행 현황을 분석한 SDSN(2024)<sup>15)</sup>의 SDG Index 방법론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 이행에 있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치를 가늠해 본다. 여기서 17개 목표별 SDG 점수(score)는 100점 만점으로 나타낸 목표별 SDG 달성을 향한 진전도(%)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활용된 SDSN의 2024년판 데이터는 총 125개의 지표(98개의 글로벌 지표와 27개의 OECD 추가지표)를 바탕으로 산정되었으며, 유엔 193개 회원국 중 데이터가 갖춰진 167개국에 대해 17개 목표를 종합한 SDG 종합지수(SDG Index score)를 바탕으로 순위가 매겨진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 중 OECD 회원국을 기준으로, 목표별 SDG 점수와 주요 지표별 수치들을 바탕으로 한국의 위치를 점검한다.<sup>16)</sup>

## 1. SDG 목표1: 빈곤 퇴치

〈표 1-1〉 주요국 대비 한국의 이행현황: SDG 목표1(빈곤 퇴치)

목표1	한국	OECD 최우수	OECD 평균
목표1 점수	99.4	아일랜드: 99.9	98.0
빈곤율(하루 \$3.65 기준, 2017 PPP, %)	0.378	아일랜드: 0.046	1.46
세금 및 이전소득 이후 빈곤율(%)	15.1	아이슬란드: 4.9	11.5

### 가. 주요 지표별 비교

#### 1) 빈곤율(빈곤선 미만 인구 비율)

하루 \$3.65를 빈곤선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의 빈곤율은 0.378%로, OECD 평균인 1.46%에 비해 상당히 낮아 우수한 편으로 나타난다. 한편 OECD 회원국 중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국가는 아일랜드로 0.046%에 이른다.

15) SDSN(2024)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4」, <https://dashboards.sdgindex.org/explorer>. SDG Index와 score의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SDSN(2024)와 Lafortune et al.(2018) 참고.

16) 이하 “주요국 대비 한국의 이행현황” 표에 제시된 한국, OECD 최우수, OECD 평균 수치는 SDSN(2024)의 데이터 파일(<https://dashboards.sdgindex.org/static/downloads/files/SDR2024-data.xlsx>)에 제시된 한국 수치 및 OECD 국가별 수치의 최대, 최소와 단순평균이다. 참고로 SDSN(2024)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4」 보고서에 제시된 OECD 평균은 국가별 수치의 단순평균이 아닌 인구가중 평균이다.

## 2) 세금 및 이전소득 이후 빈곤율

세금 및 이전소득을 감안한 후의 한국의 빈곤율은 15.1%로, OECD 평균인 11.5%와 최우수 수치인 아이슬란드의 4.9%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이는 한국의 사회 안전망 및 재분배 정책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빈곤감소 효과가 낮은 편임을 가리킨다.

## 나. 종합 평가

빈곤퇴치를 향한 한국의 SDG 목표1 점수는 99.4점으로 나타났다. 점수의 절대 수치를 보면 SDG를 향한 목표달성도가 높은 목표로 해석된다. 이는 OECD 평균인 98.0점보다 높은 수치이며, OECD 중 최우수국으로 나타난 아일랜드의 99.9점에 근접한 수준이다.

주요 지표별로 보면 한국은 빈곤을 완화하는 데 있어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세금 및 이전소득 이후 빈곤율에는 개선의 여지가 보여 사회복지 정책 및 재분배 메커니즘의 강화가 요구된다.

## 2. SDG 목표2: 기아 종식

〈표 1-2〉 주요국 대비 한국의 이행현황: SDG 목표2(기아 종식)

목표2	한국	OECD 최우수	OECD 평균
목표2 점수	81.6	한국: 81.6	66.2
영양실조 유병률(%)	2.5	여러 국가: 2.5	2.65
5세 미만 아동의 발육부진 유병률(%)	0.9	라트비아: 0.5	3.28
5세 미만 아동의 발육저하 유병률(%)	0.2	미국: 0.1	1.05
비만 유병률(BMI ≥ 30, 성인인구 중 %)	7.3	일본: 5.5	23.0
곡물 수확량(경작지 헥타르 당 톤)	6.60	네덜란드: 8.94	5.47
지속가능한 질소 관리 지수(최선: 0 ~ 최악: 1.41)	0.774	미국: 0.451	0.830

## 가. 주요 지표별 비교

## 1) 영양실조 유병률

한국의 영양실조 유병률은 2.5%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다른 여러 국가들과 나란히 가장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난다.<sup>17)</sup>

## 2) 아동의 발육부진/발육저하 유병률

한국의 5세 미만 아동의 발육부진(stunting) 유병률은 0.9%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OECD 평균인

17) 다만 통계 집계상의 이유로 2.5%가 최소치로 산정된 것으로, 우수국들간의 정확한 순위는 따지기 어렵다.

3.28%에 비해 상당히 낮으며, 최우수로 집계된 라트비아의 0.5%에 이어 두 번째로 우수한 수치에 해당한다. 5세 미만의 발육저하(wasting) 유병률도 0.2%로, OECD 평균인 1.05%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한국은 최우수 수치인 미국의 0.1%에 근접한 수치이며, 호주와 함께 OECD 2위에 해당한다. 한국의 아동 영양관리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3) 비만 유병률

한국 성인인구의 비만율은 7.3%로 최우수 수치인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나타나며, OECD 평균인 23.0%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이다. 이는 식생활, 생활습관, 유전 등의 요인과 더불어 비만 관리를 위한 공중보건 정책의 효과를 시사한다.

### 4) 곡물 수확량

한국에서는 경작지 1헥타르당 6.60톤의 곡물이 수확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며, 이는 OECD 평균인 5.47톤을 상회한다. 한편 네덜란드의 최우수 수치는 8.94톤에 이른다.

### 5) 지속가능한 질소관리 지수

지속가능한 질소관리 지수(SNMI, Sustainable Nitrogen Management Index)는 곡물 수확의 극대화과 질소비료의 효율적 사용 사이의 균형을 나타내며,<sup>18)</sup> 가장 바람직한 상태인 0부터 가장 최악의 상태인 1.41까지의 수치로 산출된다. 한국은 0.774로, OECD 평균인 0.830보다 약간 우수한 편이지만 최우수 수치인 미국의 0.451보다는 뒤쳐진 수치이다. 농업에서의 질소관리 측면에서 추가적인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 나. 종합 평가

기아종식을 향한 한국의 SDG 목표2 점수는 81.6점으로, OECD 평균인 66.2점을 크게 상회하며 OECD 국가 중 최우수 수치로 나타난다. 2위로 집계되는 프랑스의 76.2점과 비교해도 상당한 차이가 드러나, 기아 종식과 지속가능한 농업 관련 지표에서의 한국의 강점을 드러낸다.

주요 지표별로 보면 한국은 영양실조, 아동 발육, 비만관리와 같은 영양 측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다. 곡물 수확량과 지속가능한 질소관리(질소비료의 사용) 등 농업 측면에서도 양호한 성과를 보이는데, 최우수 수치와 비교하면 개선의 여지가 존재한다.

18) Yale University,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EPI): Sustainable Nitrogen Management Index, <https://epi.yale.edu/epi-results/2022/component/snm> (2024.9.25 접속)

### 3. SDG 목표3: 건강과 웰빙 증진

〈표 1-3〉 주요국 대비 한국의 이행현황: SDG 목표3(건강과 웰빙 증진)

목표3	한국	OECD 최우수	OECD 평균
목표3 점수	93.6	아이슬란드: 96.9	91.6
모성 사망비(출생 10만 명당)	8.12	노르웨이: 1.66	10.84
신생아 사망률(출생 1천 명당)	1.33	일본: 0.79	2.46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출생 1천 명당)	2.77	에스토니아: 1.88	4.14
결핵 발병률(인구 10만 명당)	39.0	그리스: 2.2	9.95
출생 시 기대수명(년)	83.70	일본: 84.78	79.96
보편적 건강 보장(UHC) 지수	89	캐나다: 91	83.5

#### 가. 주요 지표별 비교

##### 1) 모성 및 신생아 사망률

한국의 모성 사망비는 출생 10만 명당 8.12로, OECD 평균인 10.84보다 낮아 우수한 편이지만 최우수 수치인 노르웨이의 1.66과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한편 한국의 신생아 사망률은 출생 1천 명당 1.33으로, OECD 평균인 2.46보다 낮아 우수한 편이지만 최우수 수치인 일본의 0.79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이는 한국이 비교적 안전한 출산 환경과 모성 및 신생아 건강관리 체계를 갖고 있으나,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나타낸다.

##### 2)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한국의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은 출생 1천 명당 2.77로, OECD 평균 4.14보다 낮아 우수한 편이지만 최우수 수치인 에스토니아의 1.88에는 이르지 못한다.

##### 3) 결핵 발병률

한국의 결핵 발병률은 인구 10만 명당 39.0건으로 집계된다. 이는 최우수 수치인 그리스의 2.2건과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며, OECD 평균인 9.95건에 비해서도 꽤 높다. 이는 결핵 관리에 개선의 여지를 시사한다.

##### 4) 출생 시 기대수명

한국의 출생 시 기대수명은 83.70년으로, OECD 평균인 79.96년보다 약 4년 정도 더 길다. 최우수 수치인 일본의 84.78년과는 약 1년 정도의 차이가 존재한다.

##### 5) 보편적 건강 보장(UHC) 지수

보편적 건강 보장(UHC, Universal Health Coverage) 지수는 출산, 감염성 질환, 비감염성 질환,

서비스 역량 및 접근성의 4개 영역에 걸친 14개 필수 의료서비스의 보장 수준과 형평성 정도를 측정하여 0부터 100까지의 지수로 나타낸 것이다. 한국은 89점으로, OECD 평균인 83.5보다 높으며, 최우수 수치인 캐나다는 91점에 이른다.

### 나. 종합 평가

건강과 웰빙 목표를 향한 한국의 SDG 목표3 점수는 93.6점으로, OECD 평균인 91.6점과 비교해 더 우수한 편으로 나타난다. 한편 최고점인 아이슬란드의 96.9점과 비교한다면 한국의 건강과 웰빙 수준에 더욱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주요 지표별로 보면 한국은 모성 및 아동 건강과 기대수명에서 뛰어난 편이며, 보편적 건강 보장(UHC) 지수에서 드러나는 의료체계의 수준도 높은 편이다. 한편 결핵 발병률을 낮추고 신생아 사망률을 개선하여 최우수국과의 격차를 더 줄일 필요가 있다.

## 4. SDG 목표4: 양질의 교육 보장

〈표 1-4〉 주요국 대비 한국의 이행현황: SDG 목표4(양질의 교육 보장)

목표4	한국	OECD 최우수	OECD 평균
목표4 점수	95.4	폴란드: 99.9	95.3
유아교육 참여율(4~6세 아동 비율, %)	93.3	폴란드: 99.9	94.9
초등학교 순 등록률(%)	98.93	일본: 99.97	98.34
중학교 졸업률(%)	95.2	미국: 103.4	96.7
문해율(15-24세 인구 비율, %)	100.0	한국: 100.0	99.58
고등교육 이수율(25-34세 인구 비율, %)	69.6	한국: 69.6	47.2

### 가. 주요 지표별 비교

#### 1) 유아교육 참여율

한국의 유아교육 참여율은 93.3%로 집계되는데, OECD 평균인 94.9%를 약간 하회하는 수치이다. 최고 수치인 폴란드는 99.9%에 이른다.

#### 2) 초등학교 순 등록률

한국은 98.93%로 일본의 최고 등록률 99.97%에 근접하며, OECD 평균인 98.34%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는 거의 모든 아동이 초등교육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 3) 중학교 졸업률

한국의 중학교 졸업률은 95.2%로, OECD 평균인 96.7%보다 약간 낮은 수치이다. 최고 수치를 가진 미국의 중학교 졸업률은 103.4%로 집계된다.

## 4) 문해율

한국의 15~24세 인구의 문해율은 100.0%로 집계된다. OECD 평균인 99.58%와 비교하면 큰 격차는 아니지만, 통계가 집계된 OECD 14개국 중 유일한 만점으로 최우수 수치에 해당한다.

## 5) 고등교육 이수율

한국의 25~34세 인구 중 대학 졸업자 비율, 즉 고등교육 이수율은 69.6%로, OECD 평균인 47.2%에 비해 상당히 높으며 OECD 국가 중 최우수 수치에 해당한다. 이는 청년 인구의 고등교육 수준이 매우 높은 편임을 나타낸다.

## 나. 종합 평가

양질의 교육 보장을 향한 한국의 SDG 목표4 점수는 95.4점으로, OECD 평균인 95.3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폴란드의 최고 점수는 99.9점에 이른다. 점수의 절대 수치를 보면 목표달성도가 높은 편인데, 최우수국과 비교한다면 더욱 개선해나갈 여지도 존재한다.

주요 지표별로 보면, 한국은 젊은 층의 문해율과 고등교육 이수율이 뛰어난 편이며, 초등학교 등록률도 좋은 편이다. 유아교육 및 중등교육 이수율을 조금 더 개선한다면 최우수국들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을 보인다.

## 5. SDG 목표5: 성평등 달성

〈표 1-5〉 주요국 대비 한국의 이행현황: SDG 목표5(성평등 달성)

목표5	한국	OECD 최우수	OECD 평균
목표5 점수	66.2	아이슬란드: 93.8	79.0
평균 교육기간의 성별 격차(%)	90.3	라트비아: 105.2	99.3
노동 참여율의 성별 격차(%)	76.1	핀란드: 90.8	81.4
여성 국회의원 비율(%)	19.2	멕시코: 50.4	34.0
성별 임금 격차(%)	31.2	룩셈부르크: 0.4	11.6

## 가. 주요 지표별 비교

### 1) 평균 교육기간의 성별 격차

한국 남성(=100) 대비 여성의 평균 교육기간은 90.3%으로, OECD 평균인 99.3%에 비해 상당히 낮게 나타난다. 최고 수치인 라트비아의 경우 여성의 평균 교육기간이 더 긴 105.2%로 나타난다. 한국의 교육에 아직도 성별 격차가 뚜렷함을 시사한다.

### 2) 노동 참여율의 성별 격차

한국 남성 대비 여성의 노동 참여율은 76.1%에 불과하며, OECD 평균인 81.4%보다도 낮고 핀란드의 90.8%와 상당한 격차가 드러난다. 이는 한국 여성의 노동 참여에 장벽을 시사한다.

### 3) 여성 국회의원 비율

한국의 국회의원 중 여성은 19.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OECD 평균인 34.0%와 최우수 수치인 멕시코의 50.4%에 비교하면 상당한 격차가 드러난다. 이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미흡한 수준임을 나타낸다.

### 4) 성별 임금 격차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1.2%로, 여성의 중위 임금이 남성에 비해 31.2% 낮음을 나타낸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이며, OECD 평균인 11.6%와도 상당한 격차가 드러난다. 이는 한국의 남녀 간 임금 격차에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나. 종합 평가

성평등 목표를 향한 한국의 SDG 목표5 점수는 66.2점에 불과하며, OECD 평균인 79.0점과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최고 점수인 아이슬란드의 93.8점에 비하면 더욱 큰 격차가 드러난다. 절대 점수로 보아도 목표 달성도가 60점대에 불과해, 한국의 성평등에 상당한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요 지표별로 보면 성평등 부문 대부분의 지표에서 OECD 평균에 비해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임금 격차, 노동 참여율, 정치적 대표성, 교육 격차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성평등 개선을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다만 교육 격차, 노동 참여율, 국회의원 비율, 임금 격차 등 대부분 지표가 예전에 비하면 개선되고 있는 추세임은 다행스러운 신호이다.

## 6. SDG 목표6: 깨끗한 물과 위생 보장

〈표 1-6〉 주요국 대비 한국의 이행현황: SDG 목표6(깨끗한 물과 위생 보장)

목표6	한국	OECD 최우수	OECD 평균
목표6 점수	71.9	핀란드: 94.4	83.3
기본 음용수서비스 이용률(%)	100.0	여러 국가: 100.0	99.3
기본 위생서비스 이용률(%)	99.8	여러 국가: 100.0	98.3
담수 자원 취수율(%)	85.2	아이슬란드: 0.4	21.4
오염수 처리율(%)	76.8	여러 국가: 100	71.6

### 가. 주요 지표별 비교

#### 1) 기본 음용수서비스 이용률

한국에서 기본적인 수준의 음용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구 비율은 100%로 집계되어, 다른 여러 국가들과 함께 가장 우수한 수준이다. OECD 평균은 99.3%로 집계된다.

#### 2) 기본 위생서비스 이용률

한국에서 기본적인 수준의 위생서비스를 이용하는 인구 비율은 99.8%로, 최우수 국가들의 수치인 100%에 근접하며, OECD 평균인 98.3%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 3) 담수 자원 취수율

담수 자원의 취수율은 물 스트레스 수준을 나타낸다. 한국은 담수 자원의 85.2%가 취수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OECD 평균인 21.4%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는 수자원에 대한 높은 부담을 시사하며, 물 관리의 지속가능성 수준에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 4) 오염수 처리율

한국에서 인간 활동에 의해 오염된 폐수 중 적절하게 처리되는 비율은 76.8%로, OECD 평균인 71.6%를 상회하지만 최우수 수치인 핀란드나 네덜란드의 100%와는 격차가 존재한다. 폐수 처리의 수준이 양호한 편이나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 나. 종합 평가

깨끗한 물과 위생을 향한 한국의 SDG 목표6 점수는 71.9점으로, OECD 평균인 83.3점에 비해 10점 이상 낮으며, 핀란드의 최고 점수인 94.4점에 비하면 더욱 낮은 수준이다. 절대 점수로 보아도 목표 달성도가 70점대 초반에 불과해, 깨끗한 물과 위생 부문에서 개선의 여지를 드러낸다.

주요 지표별로 보면 한국은 기본 음용수 및 위생서비스에 대해 거의 전 국민이 접근 가능하여 우수

한 성과를 보인다. 한편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취수량을 줄여 물 스트레스 수준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오염수의 처리 비율도 향상시켜 최고 성과 국가들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

## 7. SDG 목표7: 모두를 위한 에너지 보장

〈표 1-7〉 주요국 대비 한국의 이행현황: SDG 목표7(모두를 위한 에너지 보장)

목표7	한국	OECD 최우수	OECD 평균
목표7 점수	71.1	아이슬란드: 99.2	79.8
전기 접근성(%)	100	여러 국가: 100	100
청정 연료 및 요리법 접근성(%)	100	여러 국가: 100	99.2
연료 연소로 인한 CO <sub>2</sub> 배출량 (총 전기 생산량 대비, MtCO <sub>2</sub> /TW)	0.99	아이슬란드: 0.18	1.32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율(%)	3.6	아이슬란드: 82.8	25.1

### 가. 주요 지표별 비교

#### 1) 전기 접근성

한국에서 전기 서비스에 접근 가능한 인구 비율은 100%로 집계되며, 대부분의 OECD 국가들과 함께 가장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 2) 청정연료 및 요리법 접근성

한국에서 청정연료와 요리법에 접근 가능한 인구 비율도 100%로 집계된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OECD 국가들과 함께 가장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 3) 연료 연소로 인한 CO<sub>2</sub> 배출량

한국에서 총 전기 생산량 대비 연료 연소로 인한 CO<sub>2</sub> 배출량은 0.99MtCO<sub>2</sub>/TWh로 집계된다. OECD 평균인 1.32보다 낮아 우수한 편으로 나타나는데, 최우수 수치인 아이슬란드의 0.18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 전력 생산에서의 탄소 집약도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개선의 여지도 있음을 시사한다.

#### 4)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율

한국의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율은 3.6%에 불과하여, OECD 평균인 25.1%를 크게 하회하며 최우수 수치인 아이슬란드의 82.8%와는 더욱 큰 격차가 드러난다. 한국의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낮은 수준으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 나. 종합 평가

에너지 부문의 한국의 SDG 목표7 점수는 71.1점으로 절대 점수로 보아도 목표 달성도가 70점대

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OECD 평균인 79.8점보다 낮으며, 아이슬란드의 최고 점수인 99.2점에 비하면 더욱 큰 격차가 드러난다. 모두를 위한 접근가능하고 깨끗한 에너지 보장이라는 목표에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요 지표별로 보면, 한국은 전기 접근성 및 청정연료·요리법 접근성에서 다른 여러 국가들과 함께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나며, 전 국민에게 보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한편 탄소 집약도를 더욱 개선하고, 특히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 8. SDG 목표8: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표 1-8〉 주요국 대비 한국의 이행현황: SDG 목표8(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목표8	한국	OECD 최우수	OECD 평균
목표8 점수	82.5	일본: 85.7	78.8
조정된 GDP 성장률(%)	-0.26	노르웨이: 13.42	0.50
현대판 노예 피해자 수(인구 1천 명당)	3.50	스위스: 0.50	3.43
금융계좌 보유율(%)	98.7	여러 국가: 100	93.4
실업률(총 노동력 대비, 15세 이상, %)	2.79	체코: 2.55	5.59

### 가. 주요 지표별 비교

#### 1) 조정된 GDP 성장률

소득수준에 따라 조정된 한국의 GDP 성장률은 2022년 기준 -0.26%로, OECD 평균인 0.50%와 최우수 수치인 노르웨이의 13.42%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로 기록된다. 한국 경제의 코로나19 영향으로부터 회복과 성장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2) 현대판 노예 피해자 수

현대판 노예란 강제노역 또는 강제결혼의 피해자를 말한다. 한국의 현대판 노예 피해자 수는 1천 명당 3.50명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OECD 평균인 3.43명에 근접한 수치이며, 최우수 수치인 스위스의 0.50명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다. 강제노역 등과 관련된 인권유린의 근절에 개선의 여지를 시사한다.

#### 3) 금융계좌 보유율

한국의 15세 이상 성인 중 은행, 금융기관 등의 계좌를 보유한 비율은 98.7%로 OECD 평균인 93.4%보다 높지만, 최우수 수치인 덴마크와 아이슬란드는 100%에 이른다. 금융 포용성이 높은 편이지만, 추가적인 개선의 여지를 의미한다.

#### 4) 실업률

한국의 실업률은 2.79%로, OECD 평균인 5.59%에 비해 상당히 낮아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체코의 실업률이 2.55%로 제일 낮은 수치로 집계되었다.

### 나. 종합 평가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향한 한국의 SDG 목표8 점수는 82.5점으로 OECD 평균인 78.8점보다 높은 수준이다. 일본의 최고 점수는 85.7점에 이른다.

주요 지표별로 보면 한국은 금융 포용성과 낮은 실업률에서 우수한 편으로 나타나며, 한편 강제노역 등과 관련된 인권 문제를 근절하고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9. SDG 목표9: 사회기반시설 산업화 및 혁신

〈표 1-9〉 주요국 대비 한국의 이행현황: SDG 목표9(사회기반시설 산업화 및 혁신)

목표9	한국	OECD 최우수	OECD 평균
목표9 점수	99.6	한국: 99.6	87.1
농촌 도로접근성(%)	100	여러 국가: 100	99.0
인터넷 이용률(%)	97.2	아이슬란드: 99.8	90.9
모바일 광대역 가입자 수(인구 100명당)	120.1	일본: 234.4	119.2
물류 성과지수	4.1	스위스: 4.4	3.7
연구개발 지출 (GDP 대비 %)	4.93	이스라엘: 5.56	2.08

### 가. 주요 지표별 비교

#### 1) 농촌 도로접근성

한국에서 연중 모든 계절에 도로에 접근가능한 농촌 인구 비율은 100%로 집계되어, 여러 다른 국가들과 함께 가장 우수한 수준이다. OECD 평균은 99.0%로 집계되었다.

#### 2) 인터넷 이용률

한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은 97.2%로, OECD 평균인 90.9%를 크게 상회하며, 아이슬란드의 최고 수치인 99.8%에 가깝다. 한국의 인터넷 보급률이 높은 편임을 보여준다.

#### 3) 모바일 광대역 가입자 수

한국은 인구 100명당 120.1명의 모바일 광대역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OECD 평균인 119.1명을 약간 상회하는데, 최고 수치인 일본은 234.4명에 이른다.

## 4) 물류 성과지수

물류 성과지수(Logistics Performance Index)는 무역 및 수송 관련 기반시설의 질을 나타내며, 1부터 5까지의 수치로 표현된다. 한국의 물류 성과지수는 4.1로, OECD 평균인 3.7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스위스의 최고 수치인 4.4에는 미치지 못한다.

## 5) 연구개발 지출

한국의 연구개발 지출 규모는 GDP의 4.93%로, OECD 평균인 2.08%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난다. 최우수 수치인 이스라엘의 5.56%에 이어 OECD 국가 중 2위로 집계된다.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우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종합 평가

사회기반시설 산업화와 혁신을 향한 한국의 SDG 목표9 점수는 99.6점으로 거의 만점에 가까우며, OECD 평균인 87.1점을 크게 상회한다. 산업, 혁신 및 기반시설 부문에서 한국의 지표들이 주요국 대비 우수한 수준이며, 점수의 절대 수치로 보면 9번 목표에서 SDG를 향한 목표달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주요 지표별로 보면 한국은 연구개발 투자 규모, 물류 인프라의 질, 인터넷 및 모바일 보급률, 그리고 농촌 도로접근성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다. 다만 최우수 수치와 비교한다면 물류 인프라 등의 성과를 더욱 향상시킬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10. SDG 목표10: 불평등 감소

〈표 1-10〉 주요국 대비 한국의 이행현황: SDG 목표10(불평등 감소)

목표10	한국	OECD 최우수	OECD 평균
목표10 점수	82.6	여러 국가: 100	79.6
지니 계수	31.4	슬로바키아: 23.2	33.0
팔마 비율(Palma Ratio)	1.28	슬로바키아: 0.69	1.33
노인 빈곤율(66세 이상 인구, %)	39.3	아이슬란드: 3.1	14.9

## 가. 주요 지표별 비교

## 1) 지니 계수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 계수(Gini index)는 한국에서 31.4로 측정되었으며, OECD 평균인 33.0보다 약간 낮아 양호한 편인데, 최우수 수치인 슬로바키아의 23.2와는 다소 격차가 드러난다.

2) 팔마 비율

소득분배 지표 중 하나인 팔마 비율(Palma Ratio)은 소득 상위 10% 인구의 소득 점유율을 하위 40% 인구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 값이다. 한국은 1.28의 팔마 비율을 기록하였다. 이는 OECD 평균인 1.33보다 약간 낮은 수치로 양호한 편인데, 최우수 수치인 슬로바키아의 0.69에 비하면 개선의 여지가 드러난다.

3) 노인 빈곤율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39.3%로, 에스토니아의 41.3%에 이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 기록되었다. OECD 평균인 14.9% 및 최우수 수치인 아이슬란드의 3.1%와 비교하면 상당한 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나. 종합 평가

불평등 감소를 향한 한국의 SDG 목표10 점수는 82.6점으로, OECD 평균인 79.6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다만 벨기에, 아이슬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 여러 국가들이 100점을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불평등 완화를 위한 개선의 여지를 볼 수 있다.

주요 지표별로 보면, 지니 계수와 팔마 비율 등 한국의 소득분배 지표는 OECD 평균에 비해 양호한 쪽이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아, 더욱 개선해 나갈 여지가 있다. 한국은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 기록되어 노인 빈곤의 완화를 위한 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며, 다양한 측면의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인다.

11. SDG 목표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표 1-11〉 주요국 대비 한국의 이행현황: SDG 목표11(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목표11	한국	OECD 최우수	OECD 평균
목표11 점수	83.1	에스토니아: 98.8	93.8
초미세먼지 오염도(PM2.5, $\mu\text{g}/\text{m}^3$ )	23.3	아이슬란드: 4.9	12.4
도시 도보 접근성(%)	96.2	룩셈부르크: 99.6	94.1
도시 대중교통 접근성(%)	72.9	이스라엘: 99.9	87.6

가. 주요 지표별 비교

1) 초미세먼지 오염도

한국의 연평균 PM2.5 농도는  $23.3\mu\text{g}/\text{m}^3$ 로, OECD 평균인  $12.4\mu\text{g}/\text{m}^3$ 의 거의 두 배에 달하며, 최우수 수치인 아이슬란드의  $4.9\mu\text{g}/\text{m}^3$ 를 보면 더욱 큰 격차가 확인된다. 한국의 대기오염 수준에

개선이 필요하다.

## 2) 도시내 이동 접근성 (도보, 대중교통)

도시의 도보 접근성은 주요 관심지점(points of interest)에 도보 15분 내로 접근할 수 있는 도시인구 비율(%)을 말한다. 한국의 수치는 96.2%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OECD 평균인 94.1%에 비해 조금 더 우수한 편이다. 최우수 수치인 룩셈부르크는 99.6%에 달한다.

한편 도시 대중교통 접근성은 도시 내 대중교통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인구 비율(%)을 말한다. 한국의 대중교통 접근성은 72.9%로 집계되어, OECD 평균인 87.6%에 한참 못 미친다. 최우수 수치인 이스라엘은 99.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대중교통 접근성에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나. 종합 평가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를 향한 한국의 SDG 목표11 점수는 83.1점으로, OECD 평균인 93.8점을 크게 하회하며, 에스토니아의 최고 점수는 98.8점에 이른다. 도시와 주거지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요 지표별로 보면, 도시의 도보 접근성이 비교적 우수한 편이나, 초미세먼지(PM2.5) 오염도가 높은 편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며, 대중교통 접근성도 개선이 필요하다.

## 12. SDG 목표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표 1-12〉 주요국 대비 한국의 이행현황: SDG 목표12(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목표12	한국	OECD 최우수	OECD 평균
목표12 점수	70.3	콜롬비아: 87.6	56.3
생활폐기물 발생량(kg/인/일)	1.10	콜롬비아: 0.73	1.45
전자폐기물 발생량(kg/인)	15.8	콜롬비아: 6.3	17.1
생산 기반 대기오염 (1천 명 인구당 DALYs)	5.97	콜롬비아: 0.55	7.63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량(1인당 kg)	0.66	콜롬비아: 0.11	9.84

## 가. 주요 지표별 비교

### 1) 폐기물 발생량 (생활폐기물, 전자폐기물)

한국의 생활폐기물 발생(수거)량은 1인당 하루에 1.10kg으로 집계되는데, OECD 평균인 1.45kg/인에 비해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한편 최우수 수치인 콜롬비아는 0.73kg/인으로 집계된다.

한국의 전자폐기물은 1인당 15.8kg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마찬가지로 OECD 평균인 17.1kg/인보다 양호한 편으로 나타난다. 최우수 수치인 콜롬비아는 6.3kg/인으로 집계된다.

2) 생산 기반 대기오염

생산 기반 대기오염은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에 관련된 대기오염의 발생을 1천 명당 장애보정 손실 수명(DALY, disability-adjusted life year)으로 나타낸 것이다. 한국의 수치는 5.97로 집계되어, OECD 평균인 7.63보다 낮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다. 최우수 수치인 콜롬비아로 0.55로 집계된다.

3)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량

한국은 1인당 0.66kg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는데, OECD 평균인 9.84kg/인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아 우수한 편이다. 최우수 수치는 콜롬비아의 0.11kg/인으로 나타난다.

나. 종합 평가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향한 한국의 SDG 목표12 점수는 70.3점으로 OECD 평균인 56.3점을 크게 상회하나, 절대 점수로 보면 약 70점에 불과해 소비와 생산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목표 달성도에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콜롬비아의 최고 점수는 87.6점으로 집계되었다.

주요 지표별로 보면, 한국은 생활폐기물과 전자폐기물의 저감, 플라스틱 폐기물의 수출, 생산기반 대기오염 등 대부분 지표에서 OECD 평균보다 양호한 편으로, 폐기물 관리와 지속가능한 생산·소비에서 상당한 성과를 나타낸다.

13. SDG 목표13: 기후변화 대응

<표 1-13> 주요국 대비 한국의 이행현황: SDG 목표13(기후변화 대응)

목표13	한국	OECD 최우수	OECD 평균
목표13 점수	66.6	코스타리카: 92.8	71.8
화석연료 및 시멘트 관련 CO <sub>2</sub> 배출량(tCO <sub>2</sub> /인)	11.60	코스타리카: 1.53	6.83
수입에 내재된 온실가스 배출량(tCO <sub>2</sub> /인)	6.77	콜롬비아: 1.06	6.87
탄소가격 점수(EUR/tCO <sub>2</sub> 기준)	47.9	그리스: 79.7	51.5

가. 주요 지표별 비교

1) 화석연료 및 시멘트 관련 CO<sub>2</sub> 배출량

한국에서 화석연료의 연소 및 시멘트 생산으로 인한 CO<sub>2</sub> 배출량은 11.60tCO<sub>2</sub>/인으로, OECD

평균인 6.83tCO<sub>2</sub>/인보다 훨씬 높아 개선의 여지가 드러난다. 최우수 수치인 코스타리카의 1.53tCO<sub>2</sub>/인으로 집계된다.

### 2) 수입에 내재된 온실가스 배출량

수입에 내재된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6.77tCO<sub>2</sub>/인으로, OECD 평균인 6.87tCO<sub>2</sub>/인보다 약간 낮아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최우수 수치는 콜롬비아의 1.06tCO<sub>2</sub>/인으로 집계된다.

### 3) 탄소가격 점수

탄소가격 점수(Carbon Pricing Score, CPS)는 에너지와 관련된 모든 탄소배출에 대해 적절한 가격을 부과하고 있는지를 측정한다. 한국의 탄소가격 점수는 47.9로, OECD 평균인 51.5보다 약간 낮아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최우수 수치인 그리스의 79.7과 상당한 격차가 있다. 탄소가격 제도가 더욱 확대·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나. 종합 평가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향한 한국의 SDG 목표13 점수는 66.6점으로, OECD 평균인 71.8점보다 다소 낮아 개선의 여지가 드러나며, 코스타리카의 최고 점수는 92.8점에 이른다. 절대 점수로 보아도 목표 달성도가 60점대에 불과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요 지표별로 보면 수입에 관련된 탄소배출의 경우 OECD 평균에 근접하여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나타나나, 화석연료 및 시멘트 생산과 관련된 탄소배출, 그리고 탄소가격 제도 등에 있어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 14. SDG 목표14: 해양생태계 보전

〈표 1-14〉 주요국 대비 한국의 이행현황: SDG 목표14(해양생태계 보전)

목표14	한국	OECD 최우수	OECD 평균
목표14 점수	55.7	핀란드: 87.9	66.1
해양 보호지역 비율(%)	38.7	에스토니아: 97.7	64.2
해양 건강성 지수 (깨끗한 물)	66.6	캐나다: 86.5	70.9
남획·고갈된 어족자원의 어획량 비율(%)	42.2	에스토니아: 1.6	35.9
저인망·형망에 의한 어획량 비율(%)	27.2	칠레: 0.3	26.1

## 가. 주요 지표별 비교

### 1) 생물다양성에 중요한 해양 보호지역 비율

한국에서 해양의 생물다양성 핵심지역(Key Biodiversity Area, KBA) 중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비율은 38.7%로, OECD 평균인 64.2%에 비해 상당히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 최우수 수치인 에스토니아는 97.7%에 이른다.

### 2) 해양 건강성 지수 (깨끗한 물)

해양 건강성 지수(Ocean Health Index) 중 깨끗한 물(Clean Waters) 부문은 해수가 화학물질, 부영양화, 병원균, 쓰레기 등에 의해 오염된 정도를 나타낸다. 한국의 경우 66.6점으로 OECD 평균인 70.9점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며, 최우수 수치인 캐나다의 86.5점과 비교하면 상당한 격차가 나타난다. 해수의 수질과 해양환경 보전 노력에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3) 남획·고갈된 어족자원의 어획량 비율

한국에서 남획 또는 고갈된 어족자원에서 잡힌 어획량 비율은 42.2%로 집계되어, OECD 평균인 35.9%에 비해 높은 수치로 개선의 여지가 드러난다. 최우수 수치인 에스토니아는 1.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된다.

### 4) 저인망·형망에 의한 어획량 비율

해저 생태계의 파괴가 심한 것으로 알려진 저인망(trawling)과 형망(dredging) 어업에 의한 어획량 비율은 한국의 경우 27.2%로, OECD 평균인 26.1%보다 약간 높은 수치로 개선의 여지가 보인다. 최우수 수치인 칠레는 0.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된다. 어업 관행의 지속가능성을 점검 및 향상시키고 해양생태계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나. 종합 평가

해양생태계 보존을 향한 한국의 SDG 목표14 점수는 55.7점으로 평가되었다. 절대 수치가 상당히 낮는데, OECD 평균인 66.1점과 비교하면 10점 이상 낮은 수준이며, 핀란드의 최고 점수인 87.9점과는 더욱 큰 격차가 확인된다. 주요국의 해양생태계 보존 노력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가운데 한국은 더욱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나, 강력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주요 지표별로 보면 해양 보호구역, 해양 건강성, 남획 등 해양생태계 보존에 관한 대부분 주요 지표에서 주요국 대비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나, 해양생태계의 적극적 보호와 파괴적 어업 관행의 저감을 위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저인망·형망 어업 비율과 전반적인 점수는 주요국 평균과 비교적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 15. SDG 목표15: 육상생태계 보호

〈표 1-15〉 주요국 대비 한국의 이행현황: SDG 목표15(육상생태계 보호)

목표15	한국	OECD 최우수	OECD 평균
목표15 점수	51.9	체코: 91.8	70.4
육상 보호지역 비율(%)	37.6	라트비아: 97.3	64.3
적색목록 지수(Red List Index)	0.678	스웨덴: 0.992	0.886
영구적 산림파괴율(산림면적 대비 %, 3년 평균)	0.004	여러 국가: 0	0.031
수입 관련 산림파괴(m <sup>2</sup> /인)	17.1	콜롬비아: 3.6	23.4

### 가. 주요 지표별 비교

#### 1) 육상 보호지역 비율

한국에서 육상의 생물다양성 핵심지역(Key Biodiversity Area, KBA) 중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비율은 37.6%로, OECD 평균인 64.3%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개선을 요한다. 최우수 수치인 라트비아는 97.3%에 이른다. 보호지역 확대를 통해 주요국들과의 격차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는 것을 보인다.

#### 2) 적색목록 지수

적색목록 지수는 생물종의 멸종 위험 정도를 나타내며, 0부터 1까지의 수치 중 1에 가까울수록 멸종 위험이 크고 생물다양성이 낮다. 한국의 적색목록 지수는 0.678로, OECD 평균인 0.886에 비해 상당히 낮아 개선의 여지가 드러난다. 최우수 수치인 스웨덴은 0.992에 달한다. 생물종의 멸종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이 드러나, 생물다양성과 종 보호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3) 영구적 산림파괴율

한국의 영구적인 산림파괴율은 0.004%로 집계되었다. 이는 OECD 평균인 0.031%보다 낮아 양호한 편으로 평가되며, 여러 다른 나라와 함께 가장 우수한 편으로 나타난다.

#### 4) 수입 관련 산림파괴

한국의 수입 관련 산림파괴는 17.1m<sup>2</sup>/인으로 집계된다. OECD 평균인 23.4m<sup>2</sup>/인보다 낮아 양호한 편이다. 최우수 수치인 콜롬비아의 경우에는 3.6m<sup>2</sup>/인으로 집계되었다.

### 나. 종합 평가

육상생태계 보호를 향한 한국의 SDG 목표15 점수는 51.9점으로, 절대 수치가 상당히 낮을 뿐 아니라 OECD 평균인 70.4점을 크게 하회한다. 체코의 최고 점수인 91.8점과 비교하면 더욱 큰 격차

가 드러나며, 육상생태계 보전 노력이 크게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주요 지표별로 보면, 영구적 산림파괴를 최소화하는 데에서는 주요국 대비 우수한 편으로 나타났다. 반면 육상 보호구역의 확대, 생물종의 멸종 위험, 수입 관련 산림파괴 등 대부분 지표에서 주요국 대비 미흡한 수준으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 16. SDG 목표16: 평화, 정의, 포용적인 제도

〈표 1-16〉 주요국 대비 한국의 이행현황: SDG 목표16(평화, 정의, 포용적인 제도)

목표16	한국	OECD 최우수	OECD 평균
목표16 점수	79.5	덴마크: 93.0	80.3
살인 발생비(인구 10만 명당)	0.53	일본: 0.23	3.01
범죄 통제 효과성 점수	0.92	노르웨이: 0.96	0.86
미결수 비율(전체 수감자 중, %)	34.5	체코: 7.4	25.4
부패 인식 지수	63	덴마크: 90	66.1
언론 자유 지수	64.87	노르웨이: 91.89	74.46

### 가. 주요 지표별 비교

#### 1) 살인 발생비

한국의 살인 발생비는 인구 10만 명당 0.53명이다. OECD 평균인 3.01명의 약 1/6 수준으로 상당히 낮아 우수한 편이다. 최우수 수치인 일본의 경우 10만 명당 0.23명에 불과하다. 살인과 같은 폭력 범죄로부터 비교적 안전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2) 범죄 통제 효과성 점수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orld Justice Project)의 법치지수(Rule-of-Law Index) 중 범죄의 효과적 통제에 관한 점수는 한국의 경우 0.92로 평가된다. OECD 평균인 0.86보다 높아 우수한 편인데, 노르웨이의 최고 점수는 0.96에 이른다.

#### 3) 미결수 비율

한국의 교정시설 수감자 중 미결수 비율은 34.5%로 집계되어, OECD 평균인 25.4%에 비해 높은 편으로 나타난다. 미결수 비율이 가장 낮은 체코의 경우 7.4%에 불과하다. 미결수 관리에 개선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 4) 부패 인식 지수

공공·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패의 정도를 나타내는 부패 인식 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0~100점)는 한국의 경우 63점으로, OECD 평균인 66.1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CPI가 가장 높은 나라는 덴마크로 90점이다.

#### 5) 언론 자유 지수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Press Freedom Index, 0~100점)는 64.87점으로, OECD 평균인 74.46점보다 낮으며, 최우수 수치인 노르웨이의 91.89점과 비교하면 더욱 격차가 드러난다.

### 나. 종합 평가

평화, 정의, 포용적인 제도를 향한 한국의 SDG 목표16 점수는 79.5점으로, OECD 평균인 80.3점에 근접하지만 약간 낮은 점수이며, 덴마크의 최고 점수인 93.0점과 비교하면 더욱 분명한 격차가 드러난다.

주요 지표별로 보면, 한국은 살인 발생비가 낮고 범죄 통제 효과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치안과 평화로운 사회 유지에 강점을 보인다. 한편 공공부문의 부패, 언론의 자유, 교정시설 미결수 비율 등 정의롭고 민주적인 제도 운영과 관련된 지표에서 개선의 여지가 드러난다.

## 17. SDG 목표17: 글로벌 파트너십

〈표 1-17〉 주요국 대비 한국의 이행현황: SDG 목표17(글로벌 파트너십)

목표17	한국	OECD 최우수	OECD 평균
목표17 점수	63.6	노르웨이: 89.1	67.5
보건 및 교육 정부지출(GDP 대비 %)	10.5	스웨덴: 16.3	12.2
ODA 비율 (GNI 대비 %)	0.18	노르웨이: 1.09	0.37
통계역량지수	87.8	핀란드: 93.6	89.8
UN 다자협력 지원 지수	63.3	코스타리카: 88.6	65.2

#### 가. 주요 지표별 비교

##### 1) 보건 및 교육 부문 정부지출

한국의 보건 및 교육 부문 정부지출은 GDP 대비 10.5%로 집계되어, OECD 평균인 12.2%보다 다소 낮은 편으로 나타난다. 최우수 수치인 스웨덴은 16.3%로 집계된다.

##### 2) ODA 비율

한국의 GNI 대비 ODA 비율은 0.18%로, OECD 평균인 0.37%의 절반 이하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우수 수치인 노르웨이는 1.09%에 달한다. 주요국과 비교하면 공적개발원조의 규모를 계속해

서 더욱 늘려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3) 통계역량 지수

한국의 국가통계체계의 역량을 나타내는 통계역량지수(Statistical Performance Index, 0~100 점)는 87.8점으로, OECD 평균인 89.8점에 비해 약간 낮게 평가되었다. 최우수 수치인 핀란드는 93.6점이다.

### 4) UN 다자협력 지원 지수

유엔 기반 다자협력에 대한 국가별 지원 정도(0~100점)에 대해 한국은 63.3점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OECD 평균인 65.2점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이며, 최우수 수치인 코스타리카는 88.6점으로 평가되었다.

## 나. 종합 평가

글로벌 파트너십을 향한 한국의 SDG 목표17 점수는 63.6점으로, OECD 평균인 67.5점을 하회하며, 노르웨이의 최고 점수인 89.1점과 상당한 격차가 드러난다. 절대 점수로 보아도 60점대 초반에 불과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위한 기여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지표별로 보면, 국가통계역량, 다자협력 등에서 OECD 평균보다 다소 낮지만 비교적 근접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ODA 비율은 주요국 대비 미흡한 수준으로 꾸준히 늘려갈 필요가 있으며, 보건 및 교육 정부지출에서도 더욱 개선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18. 총평



출처: SDSN(2024)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

[그림 1-2] SDG 목표별 점수 비교

[그림 1-2]는 SDG 목표별 한국의 점수를 OECD 최우수국 및 OECD 평균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17개 목표별 점수를 전부 종합한 한국의 SDG 종합지수(SDG Index Score)는 77.3점으로, OECD 평균(79.1점)을 약간 하회하는 수준이며, OECD 최우수국(86.4점)인 핀란드와는 더욱 격차가 드러난다. 즉 한국의 SDG 이행은 OECD 국가 대비 대체로 약간 낮은 편이다. 또한 한국이 OECD 중 최우수국으로 나타난 목표는 SDG-2(기아 종식)과 SDG-9(사회기반시설 산업화 및 혁신)의 2개이며, 그 외 여러 분야에서 더욱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각 목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은 SDG-2(기아 종식)와 SDG-9(사회기반시설 산업화 및 혁신)에서 각각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점수인 81.6점과 99.6점을 기록하였다. 이 두 목표에서 OECD 평균(66.2점, 87.1점)을 큰 폭으로 앞서, 기아 종식 및 농업 증진, 사회기반시설 산업화 및 혁신에서 주요국 대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SDG-12(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서도 OECD 평균 대비 10점 이상 높은 점수로 비교적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한편 절대 점수가 낮은 목표들을 살펴보면 육상 및 해양 생태계 보호에 관한 SDG-15(육상 생태계 보호, 51.9점), SDG-14(해양 생태계 보전, 55.7점)의 두 목표가 50점대에 불과하여,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해 더욱 강력한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SDG-17(글로벌 파트너십, 63.6점), SDG-5(성평등, 66.2점), SDG-13(기후변화 대응, 66.6점)의 세 목표도 60점대를 기록하였다. 각 점수는 SDG 목표를 향한 달성도를 나타내는 만큼, 절대 점수가 낮은 목표의 경우 글로벌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더욱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OECD 평균에 비해 10점 이상 낮게 평가된 목표는 SDG-15(육상 생태계 보호, OECD 평균 대비 -18.6점차), SDG-5(성평등, -12.9점), SDG-6(깨끗한 물과 위생, -11.4점), SDG-11(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10.8점), SDG-14(해양 생태계 보전, -10.4점)의 5개 목표이다. 이들은 주요국 대비 더욱 노력이 필요한 목표들이다. 육상 및 해양 생태계 보호에 관한 두 목표(SDG-15, SDG-14)는 OECD 최우수국과 비교해 30점 이상 낮은 목표이기도 하다.



## 제2장

#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K-SDG에 따른 지표 평가

- 제1절 평가의 개요
- 제2절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 지표별 평가 결과
- 제3절 요약 및 총평



## 제2장 | 국가지속가능성 평가:K-SDG에 따른 지표 평가



### 제1절 평가의 개요

#### 1. K-SDG 구성체계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1~2040)』에서 수립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는 [그림 2-1]과 같은 체계로 구성되었다. 즉 사람(사회), 번영(경제), 환경, 평화·협력으로 구성된 4대 전략하에 17개 목표, 119개 세부목표, 236개 지표로 구성된다. 국가지속가능성 평가는 이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 체계를 기반으로 실시된다.

비전	포용과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 국가 실현			
전략	사람	번영	환경	평화·협력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	혁신적 성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리는 깨끗한 환경	지구촌 평화와 협력 강화
K-SDGs 17개 목표	[목표1]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목표2] 식량안보 및 지속 가능한 농업 강화 [목표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목표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목표5] 성평등 보장 [목표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목표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 성장 [목표9] 산업의 성장과 혁신 활성화 및 사회 기반시설 구축 [목표10]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목표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목표6]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목표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목표13] 기후변화와 대응 [목표14] 해양생태계 보전 [목표15] 육상생태계 보전	[목표16] 평화·정의·포용 [목표17] 지구촌 협력 강화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1)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그림 2-1]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따른 K-SDG 체계

#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 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K-SDGs)







출처: 지속가능발전포털, <https://ncsd.go.kr/>

[그림 2-2] K-SDG 17개 목표 체계

## 2. 목표순향도 평가체계

K-SDG에 대한 지표평가는 「2020 국가지속가능성 평가」부터 활용되어 온 목표순향도 평가체계를 따라 이루어졌다. 각 지표별 추세 분석을 바탕으로 2040 목표를 향해 얼마나 잘 나아가고 있는가를 날씨로 표현하여, ‘맑음☀️’, ‘맑거나 흐림☁️’, ‘흐림☁️’, ‘뇌우⚡️’의 4단계 등급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맑음에서 뇌우로 갈수록 2040 목표를 달성할 전망이 부정적임을 뜻한다. 어떤 지표의 목표순향도가 ‘맑음☀️’으로 평가되었다는 것은 ‘최근의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면 2040 목표가 달성 가능할 전망’임을 뜻한다. 덧붙여, 본 평가체계는 현재의 수준(현황)이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바람직한지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미래의 목표달성 전망을 고려하여 현재의 추세가 바람직한지를 평가하는 것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2-1〉 목표순향도 평가체계

날씨 표현	평가의 의미	
	2040 목표치가 명시된 경우	목표 방향만 명시된 경우
 맑음	현 추세 유지시 2040 목표 달성 전망 (최근 5년의 추세가 2040 목표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추세의 95% 이상)	장·단기 추세 모두 목표 방향으로 진행 중 (10년치의 장기시계열을 함께 고려)
 맑거나 흐림	목표를 향해 진행 중이나 현 추세로는 2040 목표 달성 불가 (요구되는 추세의 5%~95%)	단기 추세만 목표 방향으로 진행 중 (10년치의 장기시계열을 함께 고려)
 흐림	정체상태	정체상태
 뇌우	목표 반대 방향으로 진행 중 (악화 추세)	목표 반대 방향으로 진행 중 (악화 추세)

자료: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20, p.43)의 평가방법론 서술을 바탕으로 보완하여 작성

K-SDG 지표 중에는 2040 목표치가 명시된 지표도 있지만 목표의 방향만 명시되었거나, 목표 설정을 향후 과제로 남겨둔 지표들도 있다. 목표치가 명시된 지표는 평가시점 기준 최신 5년치 가용 통계의 연평균 성장률(CAGR<sup>19</sup>)을 2040년 목표치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연평균 성장률과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즉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성장률이 2040 목표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연평균 성장률의 95% 이상이면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목표순향도를 ‘맑음☀️’으로 평가한다. 한편 요구되는 연평균 성장률의 5%부터 95% 사이에 있는 경우,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나 2040 목표치에 도달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고 ‘맑거나 흐림☁️’으로 평가하였다. ‘흐림☁️’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내며, ‘뇌우⚡️’는 목표 방향과 반대로 진행하고 있어 오히려 악화 추세인 경우를 나타낸다.

한편 2040 목표치가 설정되지 않고 목표 방향만 설정된 지표의 경우에는 OECD(2019)의 추세분석 방법론<sup>20</sup>을 이용하여 추세만으로 4단계 평가를 실시하였다. 즉 장기(10년)와 단기(5년) 추세가 모두 목표 방향의 추세를 만족할 경우 ‘맑음☀️’, 단기 추세만 만족할 경우 ‘맑거나 흐림☁️’으로 평가하고, ‘흐림☁️’ 및 ‘뇌우⚡️’는 마찬가지로 정체상태 혹은 목표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를 나타낸다. 단 10년 이상의 통계를 구할 수 없는 경우는 5년 추세와 3년 추세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명확한 유의성이 없을 경우에는 평가를 보류하였다.

각 지표의 평가를 위한 통계수치들은 국가승인통계와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의 관리 통계를 바탕으로 하며, 이번 2024 평가에서는 총 236개 지표 중 176개 지표에 대해 구득한 통계를 바탕으로 목표순향도 평가가 실시되었다.

19) Compound Annual Growth Rate

20) 연도-지표값의 스피어만(Spearman) 상관계수를 유의수준 10%로 검정.

## 제2절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 지표별 평가 결과

### 전략 1 사람 (사회) |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

#### 목표 1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목표 번호	목표명	세부 목표 번호	세부목표	지표	소관부처
목표 1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1-1	남녀노소, 장애여부 등과 관계없이 빈곤 인구 비율을 OECD 평균 이하 수준으로 줄인다.	(1) 중위 가처분소득 50% 기준 상대빈곤율 (성별, 연령 집단별, 장애집단여부별) (2) 복지 급여(소득보장) 예산 및 GDP 대비 비율	복지부
		1-2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달성한다.	(1) 의료비 가계직접 본인부담률 (2) 고용보험 가입률 (3)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율	복지부
		1-3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1) GDP 대비 공적사회 지출 비중 (2)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	복지부
		1-4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경제·사회·환경적 충격 및 재난에 대한 노출을 감소하고, 회복력을 강화한다.	(1) 취약계층 긴급복지지원 예산 및 비율 ※ 긴급복지 예산 = 긴급복지지원금+일자리사업 (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사망률의 비중	복지부

세부 목표 번호	지표명	2040 목표	2022 순향도	2024 평가결과					평가대상 기간	2024 순향도	
				지표값 (최신 5년 가용지표)							
1-1	(1) 중위 가처분소득 50% 기준 상대빈곤율 (성별, 연령 집단별, 장애집단 여부별)	11.8		〈중위 처분가능소득 50% 기준 상대적 빈곤율〉					2018-2022		
					2018	2019	2020	2021			2022
	(%)	16.5	16.1	15.1	14.8	14.9					
1-1	(2) 복지 급여(소득보장) 예산 및 GDP 대비 비율	1.5			2017	2018	2019	2020	2021	2017-2021	
				(%)	0.78	0.99	1.11	1.28	1.26		
1-2	(1) 의료비 가계직접 본인부담률	25			2017	2018	2019	2020	2021	2017-2021	
				(%)	37.3	36.2	35.8	34.7	35.5		
					2018	2019	2020	2021	2022		
	(%)	89.6	90.3	90.3	90.5	91.8	2018-2022				
1-2	(3)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율	84.2			2018	2019	2020	2021	2022	2018-2022	
				(%)	66.7	67.2	67.9	68.0	67.2		

세부 목표 번호	지표명	2040 목표	2022 순향도	2024 평가결과					평가대상 기간	2024 순향도																																										
				지표값 (최신 5년 가용지표)																																																
1-3	(1) GDP 대비 공적사회지출 비중	20			2018	2019	2020	2021	2022	2018-2022																																										
	(2)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 비중	6.5	-	(명, %)		2020	2021	2022		2020-2022																																										
1-4	(1) 취약계층 긴급복지지원 예산 및 비율 ※ 긴급복지 예산 = 긴급복지 지원금 + 일자리사업	(0.009%)		<긴급복지와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 및 GDP 대비 비중> (억 원, %)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2019</th> <th>2020</th> <th>2021</th> <th>2022</th> <th>2023</th> </tr> </thead> <tbody> <tr> <td>긴급복지 지원금 (억원)</td> <td>1,422</td> <td>1,656</td> <td>1,856</td> <td>2,156</td> <td>3,155</td> </tr> <tr> <td>비중(%)</td> <td>0.007</td> <td>0.008</td> <td>0.008</td> <td>0.009</td> <td>0.013</td> </tr> <tr> <td>재정지원 일자리 (억원)</td> <td>212,374</td> <td>254,998</td> <td>305,131</td> <td>315,809</td> <td>303,481</td> </tr> <tr> <td>비중(%)</td> <td>1.041</td> <td>1.239</td> <td>1.373</td> <td>1.359</td> <td>1.264</td> </tr> <tr> <td>합계 (억원)</td> <td>213,796</td> <td>256,654</td> <td>306,987</td> <td>317,965</td> <td>306,636</td> </tr> <tr> <td>비중(%)</td> <td>1.048</td> <td>1.247</td> <td>1.382</td> <td>1.368</td> <td>1.277</td> </tr> </tbody> </table>						2019	2020	2021	2022	2023	긴급복지 지원금 (억원)	1,422	1,656	1,856	2,156	3,155	비중(%)	0.007	0.008	0.008	0.009	0.013	재정지원 일자리 (억원)	212,374	254,998	305,131	315,809	303,481	비중(%)	1.041	1.239	1.373	1.359	1.264	합계 (억원)	213,796	256,654	306,987	317,965	306,636	비중(%)	1.048	1.247	1.382	1.368	1.277	2019-2023	
		2019	2020	2021	2022	2023																																														
긴급복지 지원금 (억원)	1,422	1,656	1,856	2,156	3,155																																															
비중(%)	0.007	0.008	0.008	0.009	0.013																																															
재정지원 일자리 (억원)	212,374	254,998	305,131	315,809	303,481																																															
비중(%)	1.041	1.239	1.373	1.359	1.264																																															
합계 (억원)	213,796	256,654	306,987	317,965	306,636																																															
비중(%)	1.048	1.247	1.382	1.368	1.277																																															
(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사망률의 비중	지속 감소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사망률>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2018</th> <th>2019</th> <th>2020</th> <th>2021</th> <th>2022</th> </tr> </thead> <tbody> <tr> <td>어린이</td> <td>2.4</td> <td>2.6</td> <td>2.4</td> <td>2.2</td> <td>2.3</td> </tr> <tr> <td>장애인</td> <td>56.2</td> <td>54.6</td> <td>55.6</td> <td>54.2</td> <td>52.5</td> </tr> </tbody> </table>						2018	2019	2020	2021	2022	어린이	2.4	2.6	2.4	2.2	2.3	장애인	56.2	54.6	55.6	54.2	52.5	2018-2022 주1)																										
	2018	2019	2020	2021	2022																																															
어린이	2.4	2.6	2.4	2.2	2.3																																															
장애인	56.2	54.6	55.6	54.2	52.5																																															

주1) 목표순향도 평가방법(목표방향만 명시, 맑음 또는 맑/흐)에 따라 장기시계열(10년치)의 추세를 함께 고려함

K-SDG 1번 목표는 절대적, 상대적 빈곤의 감소와 빈곤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추구한다. 평가결과 1번 목표의 총 9개 지표 중 6개 지표는 현 추세가 유지될 경우 2040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고(‘맑음’), 2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하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맑거나 흐림’) 나타났다. 나머지 1개 지표(취약계층 긴급복지지원 예산 및 비율)은 정체 상태(‘흐림’)로 평가되었다.

GDP 대비 공적사회지출 비중과 복지급여 예산 지표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크게 늘어난 뒤 다소 줄어들거나 정체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5년치의 추세를 기준으로 보면 2040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상대적 빈곤율은 2010년대 초반 18%대로부터 전반적으로 감소해오던 중 2022년에는 소폭의 증가를 보였으나, 5년치의 추세로 보면 '맑음'으로 평가되었다.

어린이 및 장애인의 안전사고 사망률 또한 전반적으로 개선 추세를 이어오고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복지 예산 지표의 경우 긴급복지 지원금과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으로 구성되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늘어났던 고용장려금 등이 다시 줄어들면서 지표는 정체 증으로 평가되었으나, 코로나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중 하위지표인 긴급복지지원금의 경우 2040 목표인 GDP 대비 0.009%를 2022년부터 넘어섰다.



의료비 가계직접 본인부담률은 2015년부터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2040 목표인 25%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추세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최근 더욱 증가하여, 2022년 지속가능성 평가 당시에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였으나 이번 2024 평가 결과 현 추세면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율은 그간 증가세를 유지해오다 2022년에 소폭 감소하여, 현 추세로는 2040 목표치 84.2%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었다.

**목표 2**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목표 번호	목표명	세부 목표 번호	세부목표	지표	소관부처
목표 2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2-1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 접근성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	(1) 소득수준 하위가구 식품안정성 확보가구	농식품부
		2-2	농가 소득원을 다각화하고, 경영 안전망을 확충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1) 농가소득 (2)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농식품부
		2-3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를 구축한다.	(1) 유기농업 인증면적 비율 (2) 농경지 토양유기물 함량 (3) 발토양 산도	농식품부 농진청
		2-4	종자, 작물, 가축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신품종을 개발한다.	(1) 중장기 보존시설에 확보된 식물유전자원 점수 (2) 중장기 보존시설에 확보된 동물유전자원 점수 (3)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개발된 품종 수	농진청
		2-5	식량작물의 가격 변동성을 줄여 식량 접근성을 보장한다.	(1) 정부비축미 평균재고량	농식품부

세부 목표 번호	지표명	2040 목표	2022 순황도	2024 평가결과							평가대상 기간	2024 순황도
				지표값 (최신 5년 가용지표)								
2-1	(1) 소득수준 하위가구 식품안정성 확보가구	지속 확대			2018	2019	2020	2021	2022	2013-2022 주1)		
				(%)	88.5	87.0	86.6	89.6	94.1			
2-2	(1) 농가소득	지속 확대			2019	2020	2021	2022	2023	2019-2023		
	(천원)	41,182	45,029	47,759	46,153	50,828						
2-2	(2)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지속 확대			2019	2020	2021	2022	2023	2014-2023 주1)		
	(%)	38.8	45.0	49.4	49.9	52.0						
2-3	(1) 유기농업 인증면적 비율	지속 확대			2019	2020	2021	2022	2023	2019-2023		
	(%)	1.88	2.46	2.62	2.33	2.50						
2-3	(2) 농경지 토양유기물 함량	25			2013	2017	2021				2013-2021	
	(g/kg)	26	27	27								
2-3	(3) 발토양 산도	6.5			2013	2017	2021				2013-2021	
	(pH)	6.3	6.4	6.5								
2-4	(1) 중장기 보존시설에 확보된 식물유전자원 점수	290			2019	2020	2021	2022	2023	2019-2023		
	(천 점)	263	267	272	275	280						
2-4	(2) 중장기 보존시설에 확보된 동물유전자원 점수	370			2019	2020	2021	2022	2023	2019-2023		
	(천 점)	279	308	363	399	409						
2-4	(3)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개발된 품종 수	500			2019	2020	2021	2022	2023	2019-2023		
	(종)	273	289	303	318	337						

세부 목표 번호	지표명	2040 목표	2022 순향도	2024 평가결과				평가대상 기간	2024 순향도		
				지표값 (최신 5년 가용지표)							
2-5	(1) 정부비축미 평균재고량	800		〈양곡 연도별 연말재고량〉 (천톤)					2018- 2022		
					2018	2019	2020	2021			2022
				쌀	1,442	898	1,302	785			1,302
	합계*	2,877	2,368	3,297	2,513	3,297					

\* 쌀, 보리쌀, 밀, 옥수수, 콩, 서류, 기타 합계

주1) 목표순향도 평가방법(목표방향만 명시, 맑음 또는 맑/흐)에 따라 장기시계열(10년치)의 추세를 함께 고려함

K-SDG 2번 목표는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이다. UN의 글로벌 SDG 2번 목표는 기아 종식에 초점을 두지만, K-SDG에서는 한국적 상황을 고려하여 식량안보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2번 목표에 설정된 총 10개 지표 중 8개 지표가 최근 추세를 유지한다면 2040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어 순향도는 우수한 편이다.

저소득가구의 식품안정성 확보비율은 2022년 평가 당시 정체상태로 평가되었으나 이후 94.1%로 크게 늘어, 2024 평가에서는 ‘맑음’으로 평가결과가 개선되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개발된 품종의 수도 2022년 평가 당시 2040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번 평가에서는 ‘맑음’으로 평가되어, 현 추세면 2040년까지 500종의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농가소득 및 유기농업 인증면적의 2개 지표는 정체상태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농가소득의 경우 농촌의 고령화·과소화로 농업생산의 지속성이 약화되고 있고, 농산물 수입 증가와 농가 경영비 상승 등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농업, 환경, 먹거리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에서 친환경 농업의 역할은 중요하다. 저투입·자연순환형 유기농업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농업 확산을 통해 농업정책과 환경정책의 유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K-SDG에서는 유기농업 인증면적 비율을 지속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21년까지 증가 추세를 유지하다가 이후 증감하며 정체상태로 평가되었다.

유전적 다양성 유지를 위해 증장기 보존시설에 동·식물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확보된 동식물 유전자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2040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23년 확보된 동물자원의 수는 409천 점으로, 2040 목표로 설정된 370천 점을 이미 넘어섰다.




목표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목표 번호	목표명	세부 목표 번호	세부목표	지표	소관부처
목표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3-1	만성질환의 위험요인관리와 건강보장을 확대한다.	(1) 심혈관질환, 암, 당뇨, 만성 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사망률(30~70세)	복지부
				(2) 당뇨병 조절률	
				(3) 성인 흡연율	
				(4) 장애인 만성질환유병률	
		3-2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약물오남용을 예방한다.	(1)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	복지부
				(2)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알코올 섭취량	
		3-3	교통사고 등 각종 인명사고로 인한 사망과 신체손상을 예방한다.	(1) 인구 1천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국토부
		3-4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1) 인구 십만 명당 결핵신고 신환자율	복지부 질병청
				(2) 인구 십만 명당 말라리아 발생률	
3-5	모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1) 출생아 십만 명당 모성사망자 수	복지부		
3-6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1) 출생아 1천 명당 신생아 사망률	복지부		
		(2)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			
		(3) 아동·청소년 비만 유병률			
3-7	유해화학물질, 대기, 물, 토양오염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을 줄인다.	(1) 인구가중 초미세먼지(PM2.5) 농도	환경부 복지부 질병청		
		(2) 인체 내 환경유해물질 농도 수준			
3-8	대한민국의 저출생 극복과 인구고령화를 대비한다.	(1) 영아사망률	복지부		
		(2)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3)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			
		(4) 기능제한 없는 노인인구 비율			
3-9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확대하여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한다.	(1) 인구 1천 명당 공공병상 수	복지부		

세부 목표 번호	지표명	2040 목표	2022 순향도	2024 평가결과					평가대상 기간	2024 순향도	
				지표값(최신 5년 가용지표)							
3-1	(1) 심혈관질환, 암, 당뇨, 만성 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사망률(30~70세)	2.4	-	2015 (%)	2016	2017	2018	2019	2015-2019		
				8.4	8.2	7.8	7.5	7.3			
	(2) 당뇨병 조절률	38.5		13-15년 (%)	16-18년	19-21년				2013-2021	
				23.1	28.3	24.2	* 당뇨병(공복혈당 또는 당화혈색소 기준) 관리수준(조절률(유병자 기준), 만 19세 이상)				
	(3) 성인 흡연율	12.7		2018 (%)	2019	2020	2021	2022	2018-2022		
				22.4	21.5	20.6	19.3	17.7			
	(4) 장애인 만성질환 유병률	75	-	2011 (%)	2014	2017	2020	2023	2017-2023		
				70	75.8	79.3	70.6	84.8			

세부 목표 번호	지표명	2040 목표	2022 순황도	2024 평가결과					평가대상 기간	2024 순황도																																							
				지표값(최신 5년 가용지표)																																													
3-2	(1)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	지속 감소		2018	2019	2020	2021	2022	2018-2022																																								
	(2)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알코올 섭취량	지속 감소		(L)	2017	2018	2019	2020			2021	2013-2022 주1)																																					
3-3	(1) 인구 1천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1.2		2019	2020	2021	2022	2023	2019-2023																																								
3-4	(1) 인구 십만 명당 결핵신고 신환자율	지속 감소		2019	2020	2021	2022	2023	2014-2023 주1)																																								
	(2) 인구 십만 명당 말라리아 발생률	말라리아 퇴치 인증	-	2019	2020	2021	2022	2023			2019-2023																																						
3-5	(1) 모성사망비(출생아 십만 명당)	6		2018	2019	2020	2021	2022	2018-2022																																								
3-6	(1) 출생아 1천 명당 신생아 사망률	1		2019	2020	2021	2022	2023	2019-2023																																								
	(2)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	85		(%)	2018	2019	2020	2021	2022	2018-2022																																							
	(3) 아동·청소년 비만 유병률	지속 감소		(%)	2019	2020	2021	2022	2023	2019-2023																																							
3-7	(1) 인구가중 초미세먼지(PM2.5) 농도	지속 감소		( $\mu\text{g}/\text{m}^3$ )	2018	2019	2020	2021	2022	2015-2022 주2)																																							
	(2) 인체 내 환경유해물질 농도 수준	지속 감소		<인체 내 환경유해물질 노출 수준>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구분</th> <th>제2기 ('12~'14)</th> <th>제3기 ('15~'17)</th> <th>제4기 ('18~'20)</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혈중 납 (<math>\mu\text{g}/\text{dL}</math>)</td> <td>중·고등 학생</td> <td>-</td> <td>0.80</td> <td>0.82</td> </tr> <tr> <td>성인</td> <td>1.94</td> <td>1.60</td> <td>1.51</td> </tr> <tr> <td rowspan="2">혈중 수은 (<math>\mu\text{g}/\text{L}</math>)</td> <td>중·고등 학생</td> <td>-</td> <td>1.37</td> <td>1.38</td> </tr> <tr> <td>성인</td> <td>3.11</td> <td>2.75</td> <td>2.96</td> </tr> <tr> <td rowspan="4">요중 카드뮴 (<math>\mu\text{g}/\text{L}</math>)</td> <td>영유아</td> <td>-</td> <td>0.11</td> <td>*</td> </tr> <tr> <td>초등 학생</td> <td>-</td> <td>0.23</td> <td>0.20</td> </tr> <tr> <td>중·고등 학생</td> <td>-</td> <td>0.29</td> <td>0.15</td> </tr> <tr> <td>성인</td> <td>0.38</td> <td>0.36</td> <td>0.35</td> </tr> </tbody> </table> * 검출률 60% 이하로 산출하지 않음					구분			제2기 ('12~'14)	제3기 ('15~'17)	제4기 ('18~'20)	혈중 납 ( $\mu\text{g}/\text{dL}$ )	중·고등 학생	-	0.80	0.82	성인	1.94	1.60	1.51	혈중 수은 ( $\mu\text{g}/\text{L}$ )	중·고등 학생	-	1.37	1.38	성인	3.11	2.75	2.96	요중 카드뮴 ( $\mu\text{g}/\text{L}$ )	영유아	-	0.11	*	초등 학생	-	0.23	0.20	중·고등 학생	-	0.29	0.15	성인	0.38	0.36	0.35
구분		제2기 ('12~'14)	제3기 ('15~'17)	제4기 ('18~'20)																																													
혈중 납 ( $\mu\text{g}/\text{dL}$ )	중·고등 학생	-	0.80	0.82																																													
	성인	1.94	1.60	1.51																																													
혈중 수은 ( $\mu\text{g}/\text{L}$ )	중·고등 학생	-	1.37	1.38																																													
	성인	3.11	2.75	2.96																																													
요중 카드뮴 ( $\mu\text{g}/\text{L}$ )	영유아	-	0.11	*																																													
	초등 학생	-	0.23	0.20																																													
	중·고등 학생	-	0.29	0.15																																													
	성인	0.38	0.36	0.35																																													
3-8	(1) 영아사망률	2.1		(%)	2018	2019	2020	2021	2022	2018-2022																																							

세부 목표 번호	지표명	2040 목표	2022 순향도	2024 평가결과						평가대상 기간	2024 순향도
				지표값(최신 5년 가용지표)							
(2)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8	-	〈OECD Better Life Index 2023 한국의 토픽별 점수〉 (10점 만점)						-	-
				주거	소득	일자리	커뮤니티	교육	환경		
				7.5	3.4	7.8	1.5	7.8	3.1		
				시민 참여	건강	웰빙	안전	일과 삶의 균형			
7.8	4.8	3.1	8.8	3.8							
(3)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		85	-	〈치매 상병자수 대비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등록률〉					2018-2022		
				2018	2019	2020	2021	2022			
(%)	44.6	50.4	53.6	51.7	53.4						
(4) 기능제한 없는 노인인구 비율		75		〈참고〉 〈인구 천 명당 병상 수〉				2011-2020			
				2011	2014	2017	2020				
(%)	85.1	81.8	74.7	87.8							
3-9 (1) 인구 1천 명당 공공병상수		3.07	-	〈참고〉 〈인구 천 명당 병상 수〉					-	-	
				2018	2019	2020	2021	2022			
13.6	13.6	13.8	14.0	14.1							

주1) 목표순향도 평가방법(목표방향만 명시, 맑음 또는 맑/흐)에 따라 장기시계열(10년치)의 추세를 함께 고려함

주2) 가용한 장기시계열(8년치)의 추세를 함께 고려함

K-SDG 3번 목표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보장을 추구한다. 순향도 평가가 실시된 18개 지표 중 10개는 2040 목표를 향해 순향하고 있는 것(‘맑음’)으로 평가되었고, 2개는 목표 방향으로 진행 중이지만 2040 목표치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추세(‘맑거나 흐림’)로, 5개 지표는 정체상태(‘흐림’), 1개 지표는 오히려 악화(‘뇌우’)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성인 흡연율, 알코올 섭취량, 결핵 신환자,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 인구가중 초미세먼지 농도, 기능제한 없는 노인인구 비율은 지난 2022 평가에 이어 이번 평가에서도 ‘맑음’으로 평가되어, 2040 목표달성에 충분한 추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인체 내 환경유해물질 농도의 경우 2022 평가 이후 새로운 수치가 나오지 않아 지난번 평가등급(‘맑음’)이 유지되었다. 당뇨병 조절률은 지난 2022 평가에서는 순향 중(‘맑음’)이었으나 최근 조사에서 수치가 악화되어, 2024년 평가에서는 정체상태(‘흐림’)로 평가되었다.<sup>21)</sup> 자살률의 경우 등락을 반복하며 정체 증으로, 2022 평가에 이어 연속으로 ‘흐림’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뇌우로 평가된 지표는 장애인 만성질환 유병률로, 민감/취약계층의 건강 관련 지표이다. 저성장, 인구고령화 등 경제·사회구조의 지속가능성 위협요인이 증가하면서 취약계층의 보건·복지 및 돌봄 정책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더욱 늘어날 노인 치매환자에 대한 공적 돌봄체계를

21) 단, 당시와 조사 기준이 달라짐. (2022 평가: 당뇨병(공복혈당 기준) 관리수준 (조절률(유병자 기준))

강화하여 개인과 가족의 부담을 사회가 나눠 질 필요가 있는데,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률은 2020년 53.6%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등락을 보이며 정체상태에 있다.

모성사망비와 영아사망률은 지난번 평가에서 각각 악화(‘뇌우’) 및 정체상태(‘흐림’)로 평가되었으나, 2022년까지의 최신 수치를 반영한 결과 뚜렷한 개선 추세가 관찰되어 2040 목표의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맑음’) 평가되었다.

## 목표 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목표 번호	목표명	세부 목표 번호	세부목표	지표	소관부처
목표 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4-1	모든 아동이 성별과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질의 무상 초·중등교육의 평등한 이수를 보장한다.	(1) 취학률 (2) 국제 학업성취도평가(PISA 2~6수준 학생 비율) (3) 국가수준 학습성과지표 산출	교육부
		4-2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서비스의 이용기회를 보장하여 초등 교육에 대비한다.	(1) 신체적 건강, 학습, 심리사회적 안녕(well-being) 측면에서 발달정도가 정상적인 5세 이하 여아와 남아 비율 (2) 초등학교 취학 전 체계적인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 이용률 (3)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 (4) 긍정적인 가정학습 및 양육환경을 경험하는 영유아 비율	교육부
		4-3	모든 학습자들에게 성별과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적정 비용으로 가능한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교육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해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1) 고등교육 이수율 (2) 학생 1인당 국가장학금 수혜 금액 (3) 고등교육기관에서 성인 학습자의 비학위 교육과정 참여율	교육부
		4-4	디지털화, 기술변화에 따라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직업기술 등 적절한 기술을 가진 청소년 및 성인의 수를 실질적으로 증대한다.	(1) 평생학습 참여율 (2)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 (3) 청소년 및 성인의 ICT 역량 수준	교육부
		4-5	교육에서의 성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 이주민, 취약상황에 처한 아동 등 취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1) 모든 지표에 성별, 장애, 취약계층별 분리 통계 도입	교육부
		4-6	모든 청소년과 다수의 성인이 문해 및 산술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1) 활용 가능한 언어역량과 수리역량의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숙련도를 달성한 특정 연령 인구 비율 (PIAAC) (2) 성인 문해율	교육부
		4-7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한 생활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문화 확산,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존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1)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주류화 정도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사교육, 학생평가) (2)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교육정책 사업 비율 (3) 교육과정 내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요소 반영 비율 (4) 교원 중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경험자 비율	교육부 외교부
		4-8	아동, 장애인, 성별을 고려한 교육시설을 건립·개선하고,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한다.	(1)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율 (2) 학교 내진보강률 (3) Wee 클래스 설치 비율	교육부

목표 번호	목표명	세부 목표 번호	세부목표	지표	소관부처
		4-9	포용적이고 양질의 교육을 위해 모든 교육단계에서의 충분한 교육재정을 확보한다.	(1) 교육단계별 GDP 대비 공교육비 정부부담 비율	교육부
		4-10	모든 교육단계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사를 충분히 확보한다.	(1) 교사 1인당 학생 수 (2) 보육교사 중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비율 (3) 특수교사 1인당 특수학생 수 (4) 초·중등 전문상담교사 배치 비율	교육부

세부 목표 번호	지표명	2040 목표	2022 순향도	2024 평가결과					평가대상 기간	2024 순향도			
				지표값(최신 5년 가용지표)									
4-1	(1) 취학률	지속 증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교육기관	2014-2023 주1)			
				2019	48.5	98.6	96.7	91.4	67.1				
				2020	48.7	98.2	95.3	90.8	69.0				
			2021	50.1	98.1	97.4	95.7	70.2					
			2022	52.7	98.5	98.2	94.5	71.9					
			2023	54.8	99.8	96.9	93.3	76.2					
	(2) 국제 학업성취도평가(PISA 2~6수준 학생 비율)	평가 점수 지속 증가	-	〈한국의 PISA 주기별 결과〉				2012-2022					
				년도 (OECD순위)	수학	읽기	과학						
				2012	554 (1)	536 (1~2)	538 (2~4)						
				2015	524 (1~4)	517 (3~8)	516 (5~8)						
				2018	526 (1~4)	514 (2~7)	519 (3~5)						
				2022	527 (1~2)	515 (1~7)	528 (2~5)						
	(3) 국가수준 학습성과 지표 산출	지속 증가	-	〈참고〉〈학업성취도 평가(교과별 성취수준 비율)〉					-	-			
					국어		수학		영어				
					3 수준 이상	2 수준	1 수준	3 수준 이상	2 수준	1 수준			
				2018	중3 81.3	14.3	4.4	62.3	26.6	11.1	65.8	28.9	5.3
					고2 81.6	15.0	3.4	70.4	19.2	10.4	80.4	13.4	6.2
				2019	중3 82.9	13.0	4.1	61.3	26.9	11.8	72.6	24.1	3.3
					고2 77.5	18.5	4.0	65.5	25.5	9.0	78.8	17.6	3.6
				2020	중3 75.4	18.2	6.4	57.7	28.9	13.4	63.9	29.0	7.1
					고2 69.8	23.4	6.8	60.8	25.7	13.5	76.7	14.7	8.6
				2021	중3 74.4	19.6	6.0	55.6	32.8	11.6	64.3	29.8	5.9
					고2 64.3	28.6	7.1	63.1	22.7	14.2	74.5	15.7	9.8
				2022	중3 63.4	25.3	11.3	49.7	37.1	13.2	55.9	35.3	8.8
					고2 54.0	38.0	8.0	55.2	29.8	15.0	66.3	24.4	9.3

세부 목표 번호	지표명	2040 목표	2022 순향도	2024 평가결과					평가대상 기간	2024 순향도																																											
				지표값(최신 5년 가용지표)																																																	
4-2	(1) 신체적 건강, 학습, 심리사회적 안녕 (well-being) 측면에서 발달 정도가 정상적인 5세 이하 여아와 남아 비율	지속 증가	-	<b>〈참고〉 (0-5세 아동의 발달 수준)</b> <table border="1"> <thead> <tr> <th>영역</th> <th>2018</th> <th>2023</th> </tr> </thead> <tbody> <tr> <td>인지 발달</td> <td>2.23</td> <td>2.46</td> </tr> <tr> <td>언어 발달</td> <td>2.25</td> <td>2.40</td> </tr> <tr> <td>사회성 발달</td> <td>-</td> <td>2.35</td> </tr> </tbody> </table> * 4점 척도: 0점(전혀 할 수 없다) ~ 3점(잘 할 수 있다)					영역	2018	2023	인지 발달	2.23	2.46	언어 발달	2.25	2.40	사회성 발달	-	2.35	-	-																															
	영역	2018	2023																																																		
	인지 발달	2.23	2.46																																																		
	언어 발달	2.25	2.40																																																		
사회성 발달	-	2.35																																																			
(2) 초등학교 취학 전 체계적인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 이용률	지속 증가	-	<b>〈유아교육 취원율〉</b>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2019</th> <th>2020</th> <th>2021</th> <th>2022</th> <th>2023</th> </tr> </thead> <tbody> <tr> <td>(%)</td> <td>91.6</td> <td>91.5</td> <td>93.5</td> <td>94.3</td> <td>94.3</td> </tr> </tbody> </table>						2019	2020	2021	2022	2023	(%)	91.6	91.5	93.5	94.3	94.3	2014-2023 주1)																																	
	2019	2020	2021	2022	2023																																																
(%)	91.6	91.5	93.5	94.3	94.3																																																
(3)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	지속 증가	-	<b>〈국공립 어린이집 원아 수〉</b>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2020</th> <th>2021</th> <th>2022</th> <th>2023</th> </tr> </thead> <tbody> <tr> <td>국공립 원아 수</td> <td>253,251</td> <td>268,967</td> <td>276,670</td> <td>286,487</td> </tr> <tr> <td>전체 원아 수</td> <td>1,244,396</td> <td>1,184,716</td> <td>1,095,450</td> <td>1,011,813</td> </tr> <tr> <td>국공립 이용률(%)</td> <td>20.4</td> <td>22.7</td> <td>25.2</td> <td>28.3</td> </tr> </tbody> </table> <b>〈국공립 유치원 원아 수〉</b>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2019</th> <th>2020</th> <th>2021</th> <th>2022</th> <th>2023</th> </tr> </thead> <tbody> <tr> <td>국공립 원아 수</td> <td>177,330</td> <td>178,901</td> <td>177,361</td> <td>167,485</td> <td>152,661</td> </tr> <tr> <td>전체 원아 수</td> <td>633,913</td> <td>612,538</td> <td>582,572</td> <td>552,812</td> <td>521,794</td> </tr> <tr> <td>국공립 이용률(%)</td> <td>28.0</td> <td>29.2</td> <td>30.4</td> <td>30.3</td> <td>29.2</td> </tr> </tbody> </table>						2020	2021	2022	2023	국공립 원아 수	253,251	268,967	276,670	286,487	전체 원아 수	1,244,396	1,184,716	1,095,450	1,011,813	국공립 이용률(%)	20.4	22.7	25.2	28.3		2019	2020	2021	2022	2023	국공립 원아 수	177,330	178,901	177,361	167,485	152,661	전체 원아 수	633,913	612,538	582,572	552,812	521,794	국공립 이용률(%)	28.0	29.2	30.4	30.3	29.2	2014-2023 주1)	
	2020	2021	2022	2023																																																	
국공립 원아 수	253,251	268,967	276,670	286,487																																																	
전체 원아 수	1,244,396	1,184,716	1,095,450	1,011,813																																																	
국공립 이용률(%)	20.4	22.7	25.2	28.3																																																	
	2019	2020	2021	2022	2023																																																
국공립 원아 수	177,330	178,901	177,361	167,485	152,661																																																
전체 원아 수	633,913	612,538	582,572	552,812	521,794																																																
국공립 이용률(%)	28.0	29.2	30.4	30.3	29.2																																																
(4) 긍정적인 가정학습 및 양육환경을 경험하는 영유아 비율	-	-	-					-	-																																												
4-3	(1) 고등교육 이수율	49 유지		2018	2019	2020	2021	2022	2018-2022																																												
	(2) 학생 1인당 국가장학금 수혜 금액	지속 증가	-	<b>〈1인당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b> (백만 원)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2017</th> <th>2018</th> <th>2019</th> <th>2020</th> <th>2021</th> </tr> </thead> <tbody> <tr> <td></td> <td>2.05</td> <td>-</td> <td>2.02</td> <td>1.99</td> <td>1.99</td> </tr> </tbody> </table> * 2학기 기준. 2018년 수치 없음						2017	2018	2019	2020	2021		2.05	-	2.02	1.99	1.99	2017-2021																																
		2017	2018	2019	2020	2021																																															
	2.05	-	2.02	1.99	1.99																																																
(3) 고등교육기관에서 성인 학습자의 비학위 교육과정 참여율	지속 증가	-	-					-	-																																												
4-4	(1) 평생학습 참여율	지속 확대		<b>〈만 25-79세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b>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2019</th> <th>2020</th> <th>2021</th> <th>2022</th> <th>2023</th> </tr> </thead> <tbody> <tr> <td>전체 참여율</td> <td>41.7</td> <td>40.0</td> <td>30.7</td> <td>28.5</td> <td>32.3</td> </tr> <tr> <td>형식교육</td> <td>1.5</td> <td>1.4</td> <td>0.8</td> <td>0.6</td> <td>0.6</td> </tr> <tr> <td>비형식교육</td> <td>40.9</td> <td>39.3</td> <td>30.2</td> <td>28.0</td> <td>31.9</td> </tr> <tr> <td>직업관련 비형식교육</td> <td>18.7</td> <td>20.1</td> <td>17.1</td> <td>15.4</td> <td>15.0</td> </tr> </tbody> </table>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전체 참여율	41.7	40.0	30.7	28.5	32.3	형식교육	1.5	1.4	0.8	0.6	0.6	비형식교육	40.9	39.3	30.2	28.0	31.9	직업관련 비형식교육	18.7	20.1	17.1	15.4	15.0	2019-2023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전체 참여율	41.7	40.0	30.7	28.5	32.3																																																
형식교육	1.5	1.4	0.8	0.6	0.6																																																
비형식교육	40.9	39.3	30.2	28.0	31.9																																																
직업관련 비형식교육	18.7	20.1	17.1	15.4	15.0																																																

세부 목표 번호	지표명	2040 목표	2022 순향도	2024 평가결과					평가대상 기간	2024 순향도
				지표값(최신 5년 가용지표)						
	(2)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	지속 증가		<b>&lt;직업능력개발 훈련실시 현황&gt;</b> (단위: 천 명)					2019-2023	
	(3) 청소년 및 성인의 ICT 역량 수준	-	-	<b>&lt;참고&gt; (국제컴퓨터정보소양(CIL) 수준별 학생 비율(%))</b>						
4-5	(1) 모든 지표에 성별, 장애, 취약계층별 분리통계 도입	1.0 유지	-	-					-	-
4-6	(1) 활용 가능한 언어 역량과 수리역량의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숙련도를 달성한 특정 연령 인구 비율 (PIAAC)	(2030) 언어 능력 level2 이상 90%, 수리 능력 level2 이상 84%	-	<b>&lt;PIAAC 언어능력 및 수리능력 수준별 분포 현황, 2011~2012&gt;</b>						

※ 2주기 데이터 '24년 12월 말 공개예정

세부 목표 번호	지표명	2040 목표	2022 순향도	2024 평가결과					평가대상 기간	2024 순향도	
				지표값(최신 5년 가용지표)							
	(2) 성인 문해율	(2030) 수준4 이상 90%		구분	수준 정의	2014	2017	2020	2014-2020		
				수준 1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가 불가능한 수준 (초등 1~2학년 학습 필요 수준)	6.4	7.2	4.5			
				수준 2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는 가능하지만, 일상생활에 활용은 미흡 (초등 3~6학년 학습 필요 수준)	6.0	5.1	4.2			
				수준 3	가정 및 여가생활 등 단순한 일상생활에 활용은 가능하지만, 공공 및 경제생활 등 복잡한 일상생활에 활용은 미흡한 수준 (중학 1~3학년 학습 필요 수준)	16.2	10.1	11.4			
				수준 4 이상	일상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문해력을 갖춘 수준 (중학 학력 이상 수준)	71.5	77.6	79.8			
4-7	(1)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주류화 정도 (교육 정책, 교육과정, 교사교육, 학생평가)	-	-	구분	2020	-	-	-	-		
	(2)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교육정책 사업 비율	-	-	국가교육정책	1.00	-	-	-	-		
	(3) 교육과정 내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요소 반영 비율	-	-	교육과정	0.88	-	-	-	-		
	(4) 교원 중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경험자 비율	-	-	교사교육	1.00	-	-	-	-		
				학생평가	0.83						
4-8	(1)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율	지속 증가		〈특수학급 수〉					2014-2023 주1)		
				2019	2020	2021	2022	2023			
	(2) 학교 내진보강률	100			2019	2020	2021	2022	2023	2019-2023	
					(%)	49.1	57.6	62.1	66.6		
	(3) Wee 클래스 설치 비율	100			2019	2020	2021	2022	2023	2019-2023	
					Wee클래스 설치 학교수	7,230	7,631	8,059	8,619		
설치율(%)					61.1	63.8	67.1	73.1	75.0		

세부 목표 번호	지표명	2040 목표	2022 순향도	2024 평가결과					평가대상 기간	2024 순향도	
				지표값(최신 5년 가용지표)							
4-9	(1) 교육단계별 GDP 대비 공교육비 정부 부담 비율	OECD 평균	-	〈재원 및 교육단계별 연간 GDP 공교육비 정부부담 비율, %〉					-	-	
					2016	2017	2018	2019			2020
				초중등교육 과정 (OECD 평균)	3.1 (3.1)	3.0 (3.1)	3.1 (3.1)	3.3 (3.1)			3.3 (3.3)
				고등교육 과정 (OECD 평균)	0.7 (0.9)	0.6 (1.3)	0.6 (0.9)	0.6 (0.9)			0.7 (1.0)
	초등교육 ~ 고등교육 (OECD 평균)	3.8 (4.0)	3.6 (4.1)	3.8 (4.1)	4.0 (4.1)	4.0 (4.3)					
4-10	(1) 교사 1인당 학생 수	지속 감소			2019	2020	2021	2022	2023	2019-2023	
				유치원	11.9	11.4	10.9	10.3	9.4		
				초등학교	14.6	14.2	14.0	13.7	13.3		
				중학교	11.7	11.8	11.9	11.7	11.6		
				고등학교	10.6	10.1	9.9	9.6	9.8		
				전문대학	35.9	35.7	33.3	33.3	33.3		
		일반대학	23.7	23.4	22.8	22.6	23.0				
	(2) 보육교사 중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비율	지속 증가			2015	2018	2021			2015-2021	
					77.2	77.1	82.8	※ 3년제 이하 대학졸업 + 4년제 이상 대학졸업 + 대학원재학 + 대학원졸업			
	(3) 특수교사 1인당 특수학생 수	지속 감소			2019	2020	2021	2022	2023	2014-2023 주1)	
				학생수	92,958	95,420	98,154	103,695	109,703		
				교원수	20,773	22,145	23,494	24,962	25,925		
특수교사 1인당 특수학생 수				4.5	4.3	4.2	4.2	4.2			
(4) 초·중등 전문상담 교사 배치 비율	100			2019	2020	2021	2022	2023	2019-2023		
			초등학교	9.8	13.3	20.0	28.9	31.5			
			중학교	43.8	16.0	48.8	53.3	55.5			
			고등학교	43.3	47.2	53.3	59.3	63.1			

주1) 목표순향도 평가방법(목표방향만 명시, 맑음 또는 맑/흐)에 따라 장기시계열(10년차)의 추세를 함께 고려함

K-SDG 4번 목표는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을 추구한다. 순향도 평가가 실시된 16개 지표 중 11개는 2040 목표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맑음’) 평가되었고, 2개는 개선 추세이나 목표달성은 어려울 것으로(‘맑거나 흐림’), 3개는 정체상태(‘흐림’)로 평가되었다.

취학률, PISA 국제학업성취도 평가, 유아교육 취원율,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비율, 고등교육 이수율, 특수학급 설치수, 학교 내진보강률, Wee클래스 설치비율, 교사 1인당 학생 수, 보육교사 전문 학위 소지 비율, 초·중등 전문상담교사 배치 비율에 관해 2040 목표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유아교육 취원율의 경우 2002년 56.9%로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부터는 90%를 넘어섰고, 2023년에는 94.3%에 이르렀다.

반면 학생 1인당 국가장학금 수혜 금액, 평생학습 참여율, 직업훈련교육 경험 비율은 정체상태로 나타났다. 만 25~79세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2007년 29.8%로부터 코로나 팬데믹 직전인 2019년에는 41.7%까지 점차 증가했으나, 코로나19시기 대면활동의 위축에 따라 2022년 28.5%까지 감소하였다가 2023년에는 회복세로 32.3%를 기록하여, 지난 5년치의 추세는 정체상태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2022년 평가 당시 ‘뇌우’로 평가되었던 데 비하면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성인 문해율 지표는 수준 4 이상인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나 개선 추세에 있지만, 이전 평가와 마찬가지로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맑거나 흐림’) 나타났다. 또한, 특수교사 1인당 특수학생 수는 2021년까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으나 이후 정체되어 ‘맑거나 흐림’으로 평가되었다. 계속해서 늘고 있는 특수학생 수를 감안하면, 교사 1인당 특수학생 수의 지속감소라는 K-SDG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특수교사 수를 더욱 과감하게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목표 5 성평등 보장



목표 번호	목표명	세부 목표 번호	세부목표	지표	소관부처
목표 5	성평등 보장	5-1	여성과 소녀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한다.	(1)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률	여가부
		5-2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해 모든 영역에서의 인신매매, 성적착취 등의 폭력을 철폐한다.	(1) 가정폭력 실신고건수 및 대응률	여가부
				(2) 성폭력 발생사건 및 미검거율	
				(3) 디지털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 및 미검거율	
		5-3	무보수 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해 인정하고 가치를 부여한다.	(1) 맞벌이가구 여성대비 남성의 가정 내 무보수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 시간 비율	여가부 고용부
		5-4	정치·경제·공적생활의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리더십을 위해 평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1) 의회와 지방의회의 여성 비율	여가부
				(2)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과제 목표 달성률	
(3) 민간부문 여성 관리자 비율					
5-5	성·재생산 건강과 재생산 권리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	(1) 성·재생산권과 건강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을 보장하는 제도마련 여부	여가부		
		(2) 초·중·고등학교에서 성교육을 수행한 비율			
		(3) 피임 실천율			
5-6	여성권한 강화를 위해 핵심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여성인력을 양성한다.	(1) 성별 스마트폰 보유율	여가부 과기부		
		(2) 대학교 여성과학기술인력 졸업 현황			
5-7	모든 수준에서 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한 강화를 위한 건실한 정책과 법을 채택하고 증진한다.	(1)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외건 수용률	여가부		

세부 목표 번호	지표명	2040 목표	2022 순향도	2024 평가결과					
				지표값(최신 5년 가용지표)			평가대상 기간	2024 순향도	
5-1	(1) 성별영향평가정책 개선이행률	73.2		(단위: 개, %)				2018-2022	
					개선계획 수립과제	개선과제 (이행과제)	개선이행률(%)		
				2018	8,835	2,613	29.6		
				2019	8,088	3,373	41.7		
				2020	8,528	3,811	44.7		
				2021	8,716	4,566	52.4		
2022	8,191	4,074	49.7						

세부 목표 번호	지표명	2040 목표	2022 순향도	2024 평가결과						평가대상 기간	2024 순향도				
				지표값(최신 5년 가용지표)											
5-2	(1) 가정폭력 실 신고 건수 및 대응률	지속 증가	-	(참고) <가정폭력 사건 처리 관련 경찰청 통계>						-	-				
				연도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치인원		가정보호사건 의견송치 인원						
							구속	불구속							
				2017	38,583	45,264	384	44,880	15,979						
				2018	41,905	43,576	355	43,221	14,689						
				2019	50,277	59,472	490	58,982	21,228						
				2020	44,459	52,431	330	52,101	19,379						
				2021	46,041	53,985	410	53,575	24,867						
				2022	44,816	52,146	496	14,501	25,319						
	(2) 성폭력 발생사건 및 미검거율	지속 저감		성폭력	2020	2021	2022	2020-2022							
발생건수(건)				30,105	32,898	41,433									
검거건수(건)				28,675	29,759	36,489									
미검거율 (%)				4.8%	9.5%	11.9%									
5-2	(3) 디지털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 및 미검거율	지속 저감		최종별	음란물 유포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등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 다중이용 장소침입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등	2020-2022					
				2020	발생건수 (건)	1,409	4,881	2,047	686			2,621			
					검거건수 (건)	982	4,617	1,701	629			2,412			
					미검거율 (%)	30.3	5.4	16.9	8.3			8.0			
				2021	발생건수 (건)	793	5,541	5,067	534			1,628			
					검거건수 (건)	501	4,916	3,956	501			1,438			
					미검거율 (%)	36.8	11.3	21.9	6.2			11.7			
				2022	발생건수 (건)	598	5,816	10,563	603			1,598			
					검거건수 (건)	365	5,077	8,214	537			1,322			
					미검거율 (%)	39.0	13.6	22.2	10.9			17.3			
				5-3	(1) 맞벌이가 구 여성대 비남성의 가정내무 보수기사 노동및돌봄노동시간 비율	40		구분	2009			2014	2019	2014-2019	
								여성 대비 남성 시간 비율	18.5			21.2	28.9		
여성 평균 시간	3:20	3:13	3:07												
남성 평균 시간	0:37	0:41	0:54												

세부 목표 번호	지표명	2040 목표	2022 순향도	2024 평가결과					평가대상 기간	2024 순향도																																																																																			
				지표값(최신 5년 가용지표)																																																																																									
5-4	(1) 의회와 지방의회의 여성비율	지속 증가		<b>〈여성 국회의원 비율〉</b>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2019</th> <th>2020</th> <th>2021</th> <th>2022</th> <th>2023</th> </tr> </thead> <tbody> <tr> <td>(%)</td> <td>17.3</td> <td>19.0</td> <td>18.6</td> <td>19.1</td> <td>19.2</td> </tr> </tbody> </table>						2019	2020	2021	2022	2023	(%)	17.3	19.0	18.6	19.1	19.2	2010-2023 주1)																																																																								
		2019	2020	2021	2022	2023																																																																																							
	(%)	17.3	19.0	18.6	19.1	19.2																																																																																							
	<b>〈지방의회의원 선거 여성 당선자 비율〉</b>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2010</th> <th>2014</th> <th>2018</th> <th>2022</th> </tr> </thead> <tbody> <tr> <td>광역의회</td> <td>14.8</td> <td>14.3</td> <td>19.4</td> <td>19.8</td> </tr> <tr> <td>기초의회</td> <td>21.7</td> <td>25.3</td> <td>30.8</td> <td>33.4</td> </tr> <tr> <td>계</td> <td>20.3</td> <td>22.9</td> <td>29.3</td> <td>30.3</td> </tr> </tbody> </table>					(%)	2010	2014	2018	2022	광역의회	14.8	14.3	19.4	19.8	기초의회	21.7	25.3	30.8	33.4	계	20.3	22.9	29.3	30.3																																																																				
(%)	2010	2014	2018	2022																																																																																									
광역의회	14.8	14.3	19.4	19.8																																																																																									
기초의회	21.7	25.3	30.8	33.4																																																																																									
계	20.3	22.9	29.3	30.3																																																																																									
	<b>〈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계획 과제 목표 달성률〉</b>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부문</th> <th>'19년 실적</th> <th>'20년 실적</th> <th>'21년 실적</th> <th>'22년 실적</th> <th>'23년 실적</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공무원</td> <td>국가 고위공무원</td> <td>7.9</td> <td>8.5</td> <td>10.0</td> <td>11.2</td> <td>11.7</td> </tr> <tr> <td>본부 과장급(4급 이상)</td> <td>20.8</td> <td>22.8</td> <td>24.4</td> <td>26.4</td> <td>28.4</td> </tr> <tr> <td>지방 지자체 과장급(5급 이상)</td> <td>17.8</td> <td>20.8</td> <td>24.3</td> <td>27.4</td> <td>30.9</td> </tr> <tr> <td rowspan="2">공공기관</td> <td>공공기관 임원</td> <td>21.1</td> <td>22.1</td> <td>22.5</td> <td>23.6</td> <td>21.5</td> </tr> <tr> <td>공공기관 관리자</td> <td>25.1</td> <td>26.4</td> <td>27.8</td> <td>28.8</td> <td>30.4</td> </tr> <tr> <td>지방공기업</td> <td>지방공기업 관리자 *</td> <td>9.1</td> <td>10.6</td> <td>11.8</td> <td>12.9</td> <td>14.0</td> </tr> <tr> <td rowspan="2">교원</td> <td>국립대 교수**</td> <td>17.3</td> <td>18.1</td> <td>18.9</td> <td>20.2</td> <td>21.0</td> </tr> <tr> <td>4대 과학기술원 교원***</td> <td>-</td> <td>-</td> <td>-</td> <td>-</td> <td>12.6</td> </tr> <tr> <td>군인</td> <td>군인 간부</td> <td>6.7</td> <td>7.5</td> <td>8.2</td> <td>9.0</td> <td>10.0</td> </tr> <tr> <td rowspan="2">경찰</td> <td>일반경찰</td> <td>12.6</td> <td>13.4</td> <td>14.2</td> <td>15.1</td> <td>15.4</td> </tr> <tr> <td>해양경찰</td> <td>12.7</td> <td>13.2</td> <td>14.5</td> <td>16.6</td> <td>17.5</td> </tr> <tr> <td colspan="2">정부위원회</td> <td>43.0</td> <td>43.2</td> <td>42.4</td> <td>41.4</td> <td>40.5</td> </tr> </tbody> </table> <p>* ('18년) 300인 이상(25개) → ('19년) 전체(151개)로 확대                  ** 「고등교육법」 상 국립대 교수                  *** 제3차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계획('23-'27)부터 신규지표 포함</p>					부문		'19년 실적	'20년 실적	'21년 실적	'22년 실적	'23년 실적	공무원	국가 고위공무원	7.9	8.5	10.0	11.2	11.7	본부 과장급(4급 이상)	20.8	22.8	24.4	26.4	28.4	지방 지자체 과장급(5급 이상)	17.8	20.8	24.3	27.4	30.9	공공기관	공공기관 임원	21.1	22.1	22.5	23.6	21.5	공공기관 관리자	25.1	26.4	27.8	28.8	30.4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 관리자 *	9.1	10.6	11.8	12.9	14.0	교원	국립대 교수**	17.3	18.1	18.9	20.2	21.0	4대 과학기술원 교원***	-	-	-	-	12.6	군인	군인 간부	6.7	7.5	8.2	9.0	10.0	경찰	일반경찰	12.6	13.4	14.2	15.1	15.4	해양경찰	12.7	13.2	14.5	16.6	17.5	정부위원회		43.0	43.2	42.4	41.4	40.5	2019-2023	
부문		'19년 실적	'20년 실적	'21년 실적	'22년 실적	'23년 실적																																																																																							
공무원	국가 고위공무원	7.9	8.5	10.0	11.2	11.7																																																																																							
	본부 과장급(4급 이상)	20.8	22.8	24.4	26.4	28.4																																																																																							
	지방 지자체 과장급(5급 이상)	17.8	20.8	24.3	27.4	30.9																																																																																							
공공기관	공공기관 임원	21.1	22.1	22.5	23.6	21.5																																																																																							
	공공기관 관리자	25.1	26.4	27.8	28.8	30.4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 관리자 *	9.1	10.6	11.8	12.9	14.0																																																																																							
교원	국립대 교수**	17.3	18.1	18.9	20.2	21.0																																																																																							
	4대 과학기술원 교원***	-	-	-	-	12.6																																																																																							
군인	군인 간부	6.7	7.5	8.2	9.0	10.0																																																																																							
경찰	일반경찰	12.6	13.4	14.2	15.1	15.4																																																																																							
	해양경찰	12.7	13.2	14.5	16.6	17.5																																																																																							
정부위원회		43.0	43.2	42.4	41.4	40.5																																																																																							
(3) 민간부문 여성 관리자 비율	지속 확대		<b>〈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대상 사업장의 여성 관리자 비율〉</b>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2018</th> <th>2019</th> <th>2020</th> <th>2021</th> <th>2022</th> </tr> </thead> <tbody> <tr> <td>(%)</td> <td>21.6</td> <td>20.9</td> <td>21.9</td> <td>22.2</td> <td>22.5</td> </tr> </tbody> </table>						2018	2019	2020	2021	2022	(%)	21.6	20.9	21.9	22.2	22.5	2013-2022 주1)																																																																									
	2018	2019	2020	2021	2022																																																																																								
(%)	21.6	20.9	21.9	22.2	22.5																																																																																								
5-5	(1) 성·재생산 권과 건강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 보장 하는 제도 마련 여부	제도 수립	-	-					-	-																																																																																			
	(2) 초·중·고등학교에서 성교육을 수행한 비율	100	-	<b>〈연간 성교육 경험률〉</b>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2014</th> <th>2015</th> <th>2016</th> <th>2017</th> <th>2018</th> </tr> </thead> <tbody> <tr> <td>(%)</td> <td>71.8</td> <td>73.3</td> <td>71.9</td> <td>76.2</td> <td>78.6</td> </tr> </tbody> </table>						2014	2015	2016	2017	2018	(%)	71.8	73.3	71.9	76.2	78.6	2014-2018																																																																								
	2014	2015	2016	2017	2018																																																																																								
(%)	71.8	73.3	71.9	76.2	78.6																																																																																								

세부 목표 번호	지표명	2040 목표	2022 순향도	2024 평가결과						평가대상 기간	2024 순향도
				지표값(최신 5년 가용지표)							
(3) 피임 실천율	지속 증가	☀️	☀️	2006	2009	2012	2015	2018	2021*	2006-2021	☀️
				(%)	79.6	80.0	77.1	79.6	82.3		
* 2018년까지는 유배우 여성(15~49세)의 피임 실천율. 2021년은 성인(19~49세) 남녀 중 "항상" 또는 "대부분" 피임 실천율											
(1) 성별 스마트폰 보유율	지속 증가	☀️	☀️	2019	2020	2021	2022	2023	2014-2023 주1)	☀️	
				남	94.4	94.8	97.1	98.8			96.9
				여	90.0	91.3	94.3	97.8	95.3		
5-6	(2) 대학교 여성과 학기 졸업률 졸업 현황	지속 확대	-	(참고) <자연·공학계열 여성 대학졸업자 비율> (단위: 명, %)					-	-	
					소계	남자	여자	여성비율			
				2018	201,911	143,854	58,057	28.8			
				2019	201,899	143,822	58,077	28.8			
				2020	207,908	147,708	60,200	29.0			
				2021	207,156	144,789	62,367	30.1			
				2022	210,800	145,139	65,661	31.1			
5-7	(1) 성별영향 평가정책 개선의견 수용률	89.1%	☀️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실적> (단위: 개, %)			2018-2022	☁️			
					대상과제	개선의견			개선의견 수용률		
				2018	33,195	3,093 (9.3)			2,631 (85.1)		
				2019	29,395	3,177 (10.8)			2,704 (85.1)		
				2020	29,906	3,188 (10.7)			2,761 (86.6)		
				2021	30,659	2,834 (9.2)			2,413 (85.1)		
				2022	27,109	2,485 (9.2)			2,123 (85.4)		

주1) 목표순향도 평가방법(목표방향만 명시, 맑음 또는 맑/흐)에 따라 장기시계열(10년차)의 추세를 함께 고려함

K-SDG 5번 목표는 성평등의 보장을 지향한다. 순향도 평가가 실시된 11개 지표 중 8개가 2040 목표 달성이 가능하도록 순향('맑음')하고 있고 1개 지표는 정체상태('흐림'), 나머지 2개 지표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뇌우') 평가되었다.

성별영향평가 이행률, 맞벌이 가구의 남성 가사 및 돌봄 노동시간, 국회 및 지방의회 여성 비율, 공공과 민간부문의 여성 대표성, 성교육 실시 등의 지표가 바람직한 추세를 보이고 있어, 현 추세면 2040 목표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목표와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두 개의 지표는 세부목표 5-2 여성폭력 근절과 관련된 성폭력 및 디지털 성폭력 관련 지표이다. 성폭력 범죄의 발생건수가 최근 크게 늘고 있는 동시에 검거율은 떨어져, 미검거율이 2022년 11.9%에 달한다. 각종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검거율도 대체로 하락하고

있으며, 음란물 유포의 경우 미검거율이 39.0%에 이른다. 디지털 성범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여성폭력, 약물이용 성범죄 등 신종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의견 수용률은 2020년 86.6%로 증가한 이후 다소 떨어져, 정체상태로 평가되었다. 우리 사회에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는 정책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이를 위한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 목표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목표 번호	목표명	세부 목표 번호	세부목표	지표	소관부처
목표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11-1	적절하고 부담 가능한 가격의 주택과 기본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2) 공공임대주택 공급호수 (3) 주거급여 수급가구수 및 재정 집행액	국토부
		11-2	안전하고 부담 가능한 가격의 교통 시스템을 제공하고,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고려한 대중교통을 확대한다.	(1)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2) 저상버스 보급률 (3) 자전거 수단분담률	국토부 행안부
		11-3	도시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며, 주거지에 대한 참여적, 통합적 계획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1) 시가화구역 내 이용토지면적 비율 (2) 시민참여 활성화 예산율	국토부 행안부
		11-4	세계유산 보호를 강화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1) 세계유산 등재건수 (2)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 예산	국가유산청
		11-5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현저히 감소시키며, 통합적 도시재난 위기관리를 개발, 이행한다.	(1) 인구 십만 명당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인구 (2)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 대비 국가복구예산액	행안부 국토부
		11-6	대기질 및 폐기물 관리 등 도시가 가지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감소시킨다.	(1) 미세먼지 나쁨일수 (2)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3)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환경부 산업부 행안부 해수부
		11-7	여성, 아동, 장애인,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이에게 공공 녹지공간으로의 안전하고 용이한 접근을 보장한다.	(1) 1인당 도시공원 면적 (2) 공원시설 접근이 용이한 인구 비중	환경부 국토부

세부 목표 번호	지표명	2040 목표	2022 순향도	2024 평가결과						
				지표값(최신 5년 가용지표)					평가대상 기간	2024 순향도
11-1	(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지속 감소		2018 (%)	2019	2020	2021	2022	2013-2022 주1)	
	(2) 공공임대주택 공급호수	지속 확대		2018	2019	2020	2021	2022	2013-2022 주1)	
	(3) 주거급여 수급가구수 및 재정 집행액	지속 확대		주거급여 가구 (만 가구)	2018	2019	2020	2021	2022	2018-2022
11-2	(1)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지속 확대		2017 (%)	2018	2019	2020	2021	2017-2021	

세부 목표 번호	지표명	2040 목표	2022 순황도	2024 평가결과							평가대상 기간	2024 순황도
				지표값(최신 5년 가용지표)								
	(2) 저상버스 보급률	50			2017	2018	2019	2020	2021		2017-2021	
				(%)	22.4	23.4	26.5	27.8	30.6			
	(3) 자전거 수단분담률	지속 확대			2010		2016		2021		2010-2021	
				(%)	1.7		1.55		1.53			
11-3	(1) 시가화구역 내 이동토지 면적 비율	-	-	가용통계 없음							-	-
	(2) 시민참여 활성화 예산율	-	-	가용통계 없음							-	-
11-4	(1) 세계유산 등재건수	지속 확대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18-2023	
				세계유산 신규등재 건수	1	1	0	1	1	3		
	(2)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 예산	지속 확대			2019	2020	2021	2022	2023		2019-2023	
				(백만원)	36,267	45,253	42,391	46,636	39,783			
11-5	(1) 인구 십만 명당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인구	0.1			2018	2019	2020	2021	2022		2018-2022	
					0.19	0.13	1.94	9.85	51.47			
	(2)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 대비 국가복구예산액	일정 비율 유지	-		2018	2019	2020	2021	2022		-	-
				(%)	313.7	623.8	273.8	415.3	280.7			
11-6	(1) 미세먼지 나쁨일수	지속 감소			2018	2019	2020	2021	2022		2015-2022 주2)	
				초미세먼지 나쁨일수	59	47	26	23	17			
				* PM-2.5 "나쁨" 또는 "매우나쁨" 발령일수								
	(2)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10		〈연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 (µg/m³)							2018-2022	
					2018	2019	2020	2021	2022			
				전국	23	23	19	18	18			
				서울	23	25	21	20	18			
				부산	23	21	17	15	15			
				대구	22	22	20	17	16			
				인천	22	23	19	20	19			
				광주	24	23	18	18	17			
				대전	22	22	18	16	17			
				울산	23	20	17	15	16			
	(3)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지속 감소			2018	2019	2020	2021	2022		2018-2022	
				(톤/일)	430,713	481,682	518,732	524,399	493,927			
				* 생활폐기물, 사업장 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발생량의 합이며, 지정폐기물(의류 포함)은 제외								

세부 목표 번호	지표명	2040 목표	2022 순향도	2024 평가결과					평가대상 기간	2024 순향도
				지표값(최신 5년 가용지표)						
11-7	(1) 1인당 도시공원 면적	15		2018	2019	2020	2021	2022	2018- 2022	
	(m <sup>2</sup> /인)	10.1	10.5	11.0	11.6	12.3				
11-7	(2) 공원시설 접근이 용이한 인구 비중	지속 확대	-	〈생활권공원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					2018- 2021	
	(%)	2018	2019	2020	2021					
				65.3	63.11	63.25	64.78			
* 생활권공원으로부터 도보이동 10분 거리(750m) 내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										

주1) 목표순향도 평가방법(목표방향만 명시, 맑음 또는 맑/흐)에 따라 장기시계열(10년차)의 추세를 함께 고려함

주2) 가용한 장기시계열(8년차)의 추세를 함께 고려함

사회 부문의 마지막 목표인 K-SDG 11번 목표는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를 조성하는 것을 추구한다. 순향도 평가가 실시된 14개 지표 중 8개 지표가 2040 목표 달성이 가능하도록 순향 중(‘맑음’)이고, 3개 목표는 정체상태(‘흐림’), 3개 목표는 오히려 악화(‘뇌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공공임대주택 공급, 저상버스 보급률, 세계유산 등재, 미세먼지 나쁨 일수 및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1인당 도시공원 면적 지표는 지난 평가와 마찬가지로 ‘맑음’ 등급을 유지하여, 2040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한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급여 관련 지표는 지난 평가에서는 정체상태로 나타났으나 2018년 이후 5년간 수급 가구수 및 집행액이 모두 계속 증가하여, 이번 평가에서는 ‘맑음’으로 평가되었다.

대중교통과 자전거 수단분담률은 지난 평가에서 정체상태로 나타났는데, 2021년까지의 수치를 반영한 이번 평가에서는 목표방향과 반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뇌우’) 평가되었다. 단 40%대를 유지 하던 대중교통 분담률이 2020년 27.8%로 급락한 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대중교통 기피의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되며, 코로나19 회복 이후의 수치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약 5년마다 조사되는 자전거 수단분담률은 2010년 이후 두 번 연속 감소하였다.

또한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 인구도 크게 늘어, ‘뇌우’로 평가되었다. 여기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피해가 크게 작용했으며, 동시에 이태원 참사 등 다양한 유형의 사회재난도 빈발하였다. 사회재난에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상상황에 대한 지휘·조정·통제 개선, 재난안전 관리 인력들과 전문성과 대응 역량 확충 등의 제도개선과 함께 위험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도시자연의 확충과 접근성 강화를 위한 11-7 세부목표와 관련하여,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최근 꾸준히 증가하여 2040년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도시자연의 접근성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생활권 공원으로부터 도보 10분 거리 내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소폭의 등락을 보이며 정체상태로 평가되었다.

**전략 2 번영(경제) | 혁신적 성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목표 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목표 번호	목표명	세부 목표 번호	세부목표	지표	소관부처
목표 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8-1	모두가 행복해지는 경제성장을 한다.	(1) 연간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기재부
		8-2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	(1) 인구집단별 고용률(성별, 연령별, 장애여부별) (2)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	고용부
		8-3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장을 촉진한다.	(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취업자 수 (2) 창업기업 수	중기부
		8-4	동일한 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1) 남녀 임금격차	고용부 여가부
		8-5	이주노동자, 연소근로자 등 취약그룹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확대한다.	(1) 이주노동자 고용 비율 (2) 연소근로자 고용 비율	고용부 법무부
		8-6	모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한다.	(1) 사고사망만인율 (2) 전체 재해율	고용부

세부 목표 번호	지표명	2040 목표	2022 순향도	2024 평가결과					평가대상 기간	2024 순향도																																																																										
				지표값(최신 5년 가용지표)																																																																																
8-1	(1) 연간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지속 확대			2019	2020	2021	2022	2023	2019-2023																																																																										
				(%)	2.0	-0.8	4.3	2.6	1.4																																																																											
8-2	(1) 인구집단별 고용률 (성별, 연령별, 장애여부별)	지속 확대		<b>&lt;성별 및 연령집단별 고용률&gt;</b>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2019</th> <th>2020</th> <th>2021</th> <th>2022</th> <th>2023</th> </tr> </thead> <tbody> <tr> <td>전체*</td> <td>66.8</td> <td>65.9</td> <td>66.5</td> <td>68.5</td> <td>69.2</td> </tr> <tr> <td rowspan="2">성</td> <td>남성*</td> <td>75.7</td> <td>74.8</td> <td>75.2</td> <td>76.9</td> <td>76.9</td> </tr> <tr> <td>여성*</td> <td>57.8</td> <td>56.7</td> <td>57.7</td> <td>60.0</td> <td>61.4</td> </tr> <tr> <td rowspan="6">연령</td> <td>15-19</td> <td>7.6</td> <td>6.6</td> <td>7.4</td> <td>8.0</td> <td>7.2</td> </tr> <tr> <td>20-29</td> <td>58.2</td> <td>55.7</td> <td>57.4</td> <td>60.4</td> <td>60.9</td> </tr> <tr> <td>30-39</td> <td>76.0</td> <td>75.3</td> <td>75.3</td> <td>77.3</td> <td>78.9</td> </tr> <tr> <td>40-49</td> <td>78.4</td> <td>77.1</td> <td>77.3</td> <td>78.1</td> <td>78.6</td> </tr> <tr> <td>50-59</td> <td>75.4</td> <td>74.3</td> <td>75.1</td> <td>77.1</td> <td>77.7</td> </tr> <tr> <td>60-64</td> <td>59.8</td> <td>60.4</td> <td>59.9</td> <td>62.6</td> <td>63.9</td> </tr> </tbody> </table> * 15~64세 <b>&lt;장애인 고용률&gt;</b>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2019</th> <th>2020</th> <th>2021</th> <th>2022*</th> <th>2023*</th> </tr> </thead> <tbody> <tr> <td></td> <td>34.9</td> <td>34.9</td> <td>34.6</td> <td>36.4</td> <td>36.1</td> </tr> </tbody> </table> * 2022, 2023년은 반기별 조사로, 상반기 기준					(%)	2019	2020	2021	2022	2023	전체*	66.8	65.9	66.5	68.5	69.2	성	남성*	75.7	74.8	75.2	76.9	76.9	여성*	57.8	56.7	57.7	60.0	61.4	연령	15-19	7.6	6.6	7.4	8.0	7.2	20-29	58.2	55.7	57.4	60.4	60.9	30-39	76.0	75.3	75.3	77.3	78.9	40-49	78.4	77.1	77.3	78.1	78.6	50-59	75.4	74.3	75.1	77.1	77.7	60-64	59.8	60.4	59.9	62.6	63.9	(%)	2019	2020	2021	2022*	2023*		34.9	34.9	34.6	36.4	36.1	2014-2023 주1)	 전체 고용률 맑음, 장애인 고용률 흐림
(%)	2019	2020	2021	2022	2023																																																																															
전체*	66.8	65.9	66.5	68.5	69.2																																																																															
성	남성*	75.7	74.8	75.2	76.9	76.9																																																																														
	여성*	57.8	56.7	57.7	60.0	61.4																																																																														
연령	15-19	7.6	6.6	7.4	8.0	7.2																																																																														
	20-29	58.2	55.7	57.4	60.4	60.9																																																																														
	30-39	76.0	75.3	75.3	77.3	78.9																																																																														
	40-49	78.4	77.1	77.3	78.1	78.6																																																																														
	50-59	75.4	74.3	75.1	77.1	77.7																																																																														
	60-64	59.8	60.4	59.9	62.6	63.9																																																																														
(%)	2019	2020	2021	2022*	2023*																																																																															
	34.9	34.9	34.6	36.4	36.1																																																																															

세부 목표 번호	지표명	2040 목표	2022 순향도	2024 평가결과					평가대상 기간	2024 순향도	
				지표값(최신 5년 가용지표)							
8-2	(2)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	지속 감소		<b>&lt;비정규직 근로자 비율&gt;</b>					2019-2023		
				2019	2020	2021	2022	2023			
				36.4	36.3	38.4	37.5	37.0			
				<b>&lt;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총액 비율&gt;</b>							
				2019	2020	2021	2022	2023			
				69.7	72.4	72.9	70.6	70.9			
				* 정규직 시간당 임금총액(=100) 대비 비정규직 임금총액 수준							
8-3	(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취업자 수	안정적 유지	-	<b>&lt;중소기업 종사자 수&gt;</b>					-	-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6,301,013	6,643,756	6,893,706	7,295,451	7,723,867		
				기업 중소기업 체수 (비중 %)	6,296,210 (99.9)	6,638,694 (99.9)	6,888,435 (99.9)	7,286,082 (99.9)	7,713,895 (99.9)		
				(개) 기타 (비중 %)	4803 (0.1)	5062 (0.1)	5271 (0.1)	9369 (0.1)	9972 (0.1)		
				전체	20,094,913	20,591,641	21,076,582	21,935,003	22,865,491		
				중소기업 종사자 수 (비중 %)	16,689,525 (83.1)	17,103,938 (83.1)	17,439,595 (82.7)	17,791,969 (81.1)	18,492,614 (80.9)		
				(명) 대기업 (비중 %)	3,405,388 (16.9)	3,487,703 (16.9)	3,636,987 (17.3)	4,143,034 (18.9)	4,372,877 (19.1)		
				* 1인 이상, 전 산업 기준							
				<b>&lt;소상공인 종사자 수&gt;</b>							
				2019	2020	2021	2021	2021			
				기업체 수 (개)	전체 6,898,958	7,295,393	7,723,867	7,723,867			
				소상공인 (비중%)	6,445,316 (93.4)	6,842,959 (93.8)	7,335,397 (95.0)	7,335,397 (95.0)			
				종사자 수 (명)	전체 21,254,650	21,580,496	28,558,354	28,558,354			
				소상공인 (비중%)	9,223,529 (43.4)	9,461,073 (43.8)	10,461,890 (36.6)	10,461,890 (36.6)			
				* 1인 이상, 전 산업 기준							
	(2) 창업기업 수	안정적 유지	-	2018	2019	2020	2021	2022	-	-	
				1,344,366	1,285,259	1,484,667	1,417,973	1,317,479			
				* 1인 이상, 전 산업 기준							
8-4	(1) 남녀 임금격차	(2030) 85.5 이후 지속증가		<b>&lt;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gt;</b>					2019-2023		
				2019	2020	2021	2022	2023			
				69.4	69.6	69.8	70.0	71.0			
				* 남성(=100)의 시간당 임금총액 대비 여성 임금							
8-5	(1) 이주노동자 고용 비율	안정적 유지		2019	2020	2021	2022	2023	2019-2023		
	(2) 연소근로자 고용 비율	지속감소	-	외국인 귀화허가자	65.3 64.8	63.7 59.1	64.2 63.6	64.8 65.3	64.5 67.4	-	-
8-6	(1) 사고사망만인율	(2030) 0.22 이후 지속감소		<b>&lt;근로자 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gt;</b>					2019-2023		
	(2) 전체 재해율	지속감소		2019	2020	2021	2022	2023	2019-2023		
				0.46	0.46	0.43	0.43	0.39			
				0.58	0.57	0.63	0.65	0.66			
				* 산재보험적용 근로자수 100명당 (산업재해) 재해자수의 비율							

주1) 목표순향도 평가방법(목표방향만 명시, 맑음 또는 맑/흐)에 따라 장기시계열(10년치)의 추세를 함께 고려함

K-SDG 8번 목표인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포용적 성장을 추구한다. 주로 경제지표인 만큼 코로나19의 부정적인 영향을 정면으로 받은 목표이기도 하다. 이번에 순항도 평가가 실시된 7개 지표 중 2040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맑음’) 평가된 지표는 1개뿐이며, 개선 추세이나 2040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평가된(‘맑거나 흐림’) 지표가 3개, 정체상태(‘흐림’)가 2개, 그리고 악화 추세(‘뇌우’)인 지표가 1개로 평가되었다.

1인당 실질 GDP 성장률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지난번 ‘뇌우’로 평가되었다가 이번에 정체상태(‘흐림’)로 소폭 개선되었다. 고용률 지표는 2020년 소폭 감소하였다가 이후 2023년까지 연속으로 증가하였으며, 남성보다 여성의 고용률이 더 큰 폭으로 늘었다. 장애인 고용률은 2021년까지 34%대에 머무르다 2022년부터 36%대로 개선되었으나, 목표순향도 상으로는 ‘흐림’으로 평가된다.

남녀 임금격차와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 만인율은 지난번 평가와 동일하게 ‘맑거나 흐림’, 즉 바람직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여전히 목표 달성에는 미치지 못하는 추세로 평가되었다. 남녀 임금격차는 매해 조금씩 개선되어 2022년에는 여성 임금이 남성의 70% 수준에 이르렀으나, 2030년 85.5%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사고사망 만인율은 근로자 수 대비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데, 2013년 이후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23년 기준 아직 근로자 만 명당 0.39명으로, 2030년 0.22명이라는 목표 달성을 어려워 보인다.

근로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에서 주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산업재해, 인권침해 및 성범죄, 경제·육체적 부당행위로부터의 보호와 구제에서도 제도적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어 취업이민자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K-SDG에서는 이주노동자 고용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률은 2019년 이래 63~65%대를 유지하고 있다.

목표 9 산업의 성장과 혁신 활성화 및 사회기반시설 구축



목표 번호	목표명	세부 목표 번호	세부목표	지표	소관부처
목표 9	산업의 성장과 혁신 활성화 및 사회기반시설 구축	9-1	대다수 국민에게 정보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도로 보급률 (2) 일반국민대비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	국토부 통계청 과기부
		9-2	산업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지속가능한 기업 활동의 기반마련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	(1) 부채가 있거나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소규모 산업 비율 (2) 데이터산업 시장 규모 (3) 산업집중도	중기부 금융위 산업부 과기부
		9-3	기술 역량을 구축하고 고도화된 기술 상용화를 촉진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	(1) WEF 세계경쟁력보고서 혁신역량부문 10개 지표의 점수 (2) 세계혁신지수(GII)의 종합점수 또는 혁신산출점수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9-4	국가 연구 인력과 자원을 확충하고 적절한 연구의 기획과 실행을 통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1) GDP 대비 연구개발비 (2) 경제활동 천 명당 (전일제) 연구자 수	과기부 산업부
		9-5	환경 친화적인 산업 활동과 기술 혁신을 통해 자원효율성이 높은 산업화를 추구한다.	(1)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2)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재활용 비율	산업부 환경부

세부 목표 번호	지표명	2040 목표	2022 순향도	2024 평가결과					평가대상 기간	2024 순향도																													
				지표값(최신 5년 가용지표)																																			
9-1	(1) 도로보급률	지속 증가		<b>&lt;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gt;</b>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2019</th> <th>2020</th> <th>2021</th> <th>2022</th> <th>2023</th> </tr> </thead> <tbody> <tr> <td></td> <td>1.54</td> <td>1.57</td> <td>1.57</td> <td>1.59</td> <td>1.61</td> </tr> </tbody> </table> * 도로연장(km) / √ {국토면적(km²) × 인구(천명)}						2019	2020	2021	2022	2023		1.54	1.57	1.57	1.59	1.61	2014-2023 주1)																		
		2019	2020	2021	2022	2023																																	
	1.54	1.57	1.57	1.59	1.61																																		
(2) 일반국민대비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	지속 증가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2019</th> <th>2020</th> <th>2021</th> <th>2022</th> <th>2023</th> </tr> </thead> <tbody> <tr> <td></td> <td>69.9</td> <td>72.7</td> <td>75.4</td> <td>76.2</td> <td>76.9</td> </tr> </tbody> </table> * 일반국민(=100) 대비 취약계층(장애인·저소득층·농어민·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						2019	2020	2021	2022	2023		69.9	72.7	75.4	76.2	76.9	2014-2023 주1)																			
	2019	2020	2021	2022	2023																																		
	69.9	72.7	75.4	76.2	76.9																																		
9-2	(1) 부채가 있거나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소규모 산업 비율	-	-	<b>&lt;소상공인 부채 비율&gt;</b>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2018</th> <th>2019</th> <th>2020*</th> <th>2021*</th> <th>2022*</th> </tr> </thead> <tbody> <tr> <td>(%)</td> <td>48.4</td> <td>51.9</td> <td>57.3</td> <td>59.2</td> <td>59.3</td> </tr> </tbody> </table> * 소상공인 사업체 중 부채가 있는 비율. 2019년까지는 조사기반, 이후는 등록기반,						2018	2019	2020*	2021*	2022*	(%)	48.4	51.9	57.3	59.2	59.3	-	-																	
		2018	2019	2020*	2021*	2022*																																	
(%)	48.4	51.9	57.3	59.2	59.3																																		
(2) 데이터산업 시장 규모	지속 증가		<table border="1"> <thead> <tr> <th>(억 원)</th> <th>2018</th> <th>2019</th> <th>2020</th> <th>2021</th> <th>2022*</th> </tr> </thead> <tbody> <tr> <td>전체</td> <td>155,684</td> <td>168,693</td> <td>200,024</td> <td>228,986</td> <td>250,527</td> </tr> <tr> <td>데이터 솔루션</td> <td>18,617</td> <td>20,409</td> <td>25,133</td> <td>29,843</td> <td>32,723</td> </tr> <tr> <td>데이터 구축/컨설팅</td> <td>61,290</td> <td>64,922</td> <td>76,999</td> <td>85,274</td> <td>92,570</td> </tr> <tr> <td>데이터판매/서비스</td> <td>75,778</td> <td>83,361</td> <td>97,891</td> <td>113,869</td> <td>125,235</td> </tr> </tbody> </table>					(억 원)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155,684	168,693	200,024	228,986	250,527	데이터 솔루션	18,617	20,409	25,133	29,843	32,723	데이터 구축/컨설팅	61,290	64,922	76,999	85,274	92,570	데이터판매/서비스	75,778	83,361	97,891	113,869	125,235	2015-2022 주2)	
(억 원)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155,684	168,693	200,024	228,986	250,527																																		
데이터 솔루션	18,617	20,409	25,133	29,843	32,723																																		
데이터 구축/컨설팅	61,290	64,922	76,999	85,274	92,570																																		
데이터판매/서비스	75,778	83,361	97,891	113,869	125,235																																		

세부 목표 번호	지표명	2040 목표	2022 순향도	2024 평가결과						평가대상 기간	2024 순향도
				지표값(최신 5년 가용지표)							
				*추정치							
	(3) 산업집중도	지속 감소			2017	2018	2019	2020	2021	2017-2011	
				산업 집중도(%)	단순평균	41.8	41.8	41.4	41.9		
					가중평균	50.6	50.8	50.5	50.0	51.3	
9-3	(1) WEF 세계경쟁력보고서 혁신역량부문 10개 지표의 점수	지속 순위 상승	-					2018	2019	-	-
				혁신역량 (평가국 중 순위)				8	6		
				인력의 다양성		설문	82	86			
				혁신클러스터 발전 정도		설문	30	25			
				이해관계자 간 협력		설문	31	31			
				구매자의 성숙도		설문	2	1			
				인구 백만 명당 국제 공동 발명 건수		정량	15	15			
				과학 논문의 영향력 지수		정량	18	18			
				인구 백만 명당 특허출원 건수		정량	3	2			
				GDP 대비 R&D 투자		정량	2	2			
연구기관 역량 지수		정량	11	11							
인구 백만 명당 상표출원 건수		정량	23	22							
	(2) 세계혁신지수(GII)의 종합점수 또는 혁신산출점수	지속 상승			2019	2020	2021	2022	2023	2019-2023	
				GII 국가순위	11	10	5	6	10		
9-4	(1) GDP 대비 연구개발비	지속 상승			2018	2019	2020	2021	2022	2013-2022 주1)	
	(%)	4.52	4.63	4.80	4.91	5.21					
	(2) 경제활동 1천 명당(전일제) 연구자 수	지속 상승		2018	2019	2020	2021	2022	2013-2022 주1)		
				14.7	15.4	16.0	16.7	17.4			
9-5	(1)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지속 감소			2017	2018	2019	2020	2021	2012-2021 주1)	
	(톤/GDP 10억 원)	402.9	400.1	377.4	355.8	352.7					
	(2)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재활용 비율	지속 상승			2018	2019	2020	2021	2022	2013-2022 주1)	
				(%)	81.6	82.6	84.3	84.4	84.1		

주1) 목표순향도 평가방법(목표방향만 명시, 맑음 또는 맑/흐)에 따라 장기시계열(10년치)의 추세를 함께 고려함  
 주2) 가용한 장기시계열(8년치)의 추세를 함께 고려함

K-SDG 9번 목표는 산업의 성장과 혁신 활성화 및 사회기반시설 구축을 지향한다. 순향도 평가가 실시된 9개 지표 중 ‘맑음’이 6개, ‘맑거나 흐림’이 1개, 그리고 ‘흐림’이 2개로 평가되었다.

도로보급률,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 데이터산업 시장 규모, 연구개발비 및 연구자 수,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지난번 평가와 마찬가지로 2040 목표 달성이

가능한 추세(‘맑음’)로 평가되었다.

산업 집중도는 안정적인 감소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지난 평가에 이어 정체상태(‘흐림’)를 유지하고 있다. 세계혁신지수(GII) 국가 순위는 2021년 5위까지 상승하였으나 2023년 다시 10위까지 떨어져, 지난 평가에서의 ‘맑음’ 등급이 ‘흐림’으로 떨어졌다.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률은 2020년 84.3%까지 조금씩 늘고 있었으나 이후 거의 정체 증으로, ‘맑음’ 등급에서 ‘맑거나 흐림’으로 떨어졌다.

**목표 10**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목표 번호	목표명	세부 목표 번호	세부목표	지표	소관부처
목표 10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10-1	하위 40% 인구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국가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달성하고 유지한다.	(1) 전체 인구의 균등화한 가구소득 대비 소득하위 40% 인구의 균등화한 가구소득의 비율 (2) 소득격차비율	복지부 기재부
		10-2	나이, 성별, 장애여부, 지위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 대한 사회·경제·정치적 포용성을 확대한다.	(1) 소득 5분위 배율 (2) 소득 1, 2분위 가구의 순자산 점유율	복지부 고용부 기재부
		10-3	나이, 성별, 장애여부에 따른 차별적 대우를 철폐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	(1) 인구집단별 고용률 (2) 장애인의무고용률	복지부 고용부 기재부
		10-4	재정정책, 임금정책, 사회보호정책을 강화하여 더 높은 수준의 평등을 달성한다.	(1) GDP 대비 노동소득 분배율	고용부 기재부 중기부
		10-5	내·외국인 권익을 균형적으로 보장하는 이민정책을 통한 상호문화 이해 환경을 조성한다.	(1) 이주민 권리보장에 관한 국제/국내 인권기구 권고에 대한 적극적 수용 (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통합조례 제정률 (3) 국민 다문화 수용성 지표 (4)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이민/다문화 교육 이수율	법무부 여가부

세부 목표 번호	지표명	2040 목표	2022 순향도	2024 평가결과					평가대상 기간	2024 순향도																		
				지표값(최신 5년 가용지표)																								
10-1	(1) 전체 인구의 균등화한 가구소득 대비 소득하위 40% 인구의 균등화한 가구소득의 비율	55			2018	2019	2020	2021	2022	2018-2022																		
	(2) 소득격차비율	25		(%)	46.4	47.3	48.8	48.5	49.1																			
				〈평균 빈곤갭 (중위소득 50% 이하)〉																								
10-2	(1) 소득 5분위 배율	안정적 유지	-		2018	2019	2020	2021	2022	2018-2022																		
	(2) 소득 1, 2분위 가구의 순자산 점유율	지속 증가			2019	2020	2021	2022	2023																			
				* 평균 빈곤갭 = {(빈곤선) - (빈곤선 이하에 속한 사람들의 평균소득)} / (빈곤선) x 100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th> <th>2018</th> <th>2019</th> <th>2020</th> <th>2021</th> <th>2022</th> </tr> </thead> <tbody> <tr> <td>시장소득 5분위 배율</td> <td>11.15</td> <td>11.56</td> <td>11.37</td> <td>11.52</td> <td>10.99</td> </tr> <tr> <td>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td> <td>6.43</td> <td>6.17</td> <td>5.75</td> <td>5.83</td> <td>5.76</td> </tr> </tbody> </table>						2018	2019	2020	2021	2022	시장소득 5분위 배율	11.15	11.56	11.37	11.52	10.99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6.43	6.17	5.75	5.83	5.76		
	2018	2019	2020	2021	2022																							
시장소득 5분위 배율	11.15	11.56	11.37	11.52	10.99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6.43	6.17	5.75	5.83	5.76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th> <th>2019</th> <th>2020</th> <th>2021</th> <th>2022</th> <th>2023</th> </tr> </thead> <tbody> <tr> <td>순자산 점유율</td> <td>17.9</td> <td>18.4</td> <td>18.8</td> <td>18.1</td> <td>18.1</td> </tr> </tbody> </table>						2019	2020	2021	2022	2023	순자산 점유율	17.9	18.4	18.8	18.1	18.1	2019-2023							
	2019	2020	2021	2022	2023																							
순자산 점유율	17.9	18.4	18.8	18.1	18.1																							

세부 목표 번호	지표명	2040 목표	2022 순향도	2024 평가결과					평가대상 기간	2024 순향도																																				
				지표값(최신 5년 가용지표)																																										
10-3	(1) 인구집단별 고용률	여성 67%		<b>&lt;성별 고용률&gt;</b>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2019</th> <th>2020</th> <th>2021</th> <th>2022</th> <th>2023</th> </tr> </thead> <tbody> <tr> <td>전체</td> <td>66.8</td> <td>65.9</td> <td>66.5</td> <td>68.5</td> <td>69.2</td> </tr> <tr> <td rowspan="2">성</td> <td>남성</td> <td>75.7</td> <td>74.8</td> <td>75.2</td> <td>76.9</td> <td>76.9</td> </tr> <tr> <td>여성</td> <td>57.8</td> <td>56.7</td> <td>57.7</td> <td>60.0</td> <td>61.4</td> </tr> </tbody> </table>					(%)	2019	2020	2021	2022	2023	전체	66.8	65.9	66.5	68.5	69.2	성	남성	75.7	74.8	75.2	76.9	76.9	여성	57.8	56.7	57.7	60.0	61.4	2019-2023												
	(%)	2019		2020	2021	2022	2023																																							
전체	66.8	65.9	66.5	68.5	69.2																																									
성	남성	75.7	74.8	75.2	76.9	76.9																																								
	여성	57.8	56.7	57.7	60.0	61.4																																								
(2) 장애인 의무고용률	지속 확대		<b>&lt;장애인 고용률&gt;</b>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2019</th> <th>2020</th> <th>2021</th> <th>2022</th> <th>2023</th> </tr> </thead> <tbody> <tr> <td>(%)</td> <td>34.9</td> <td>34.9</td> <td>34.6</td> <td>34.3</td> <td>34.0</td> </tr> </tbody> </table>						2019	2020	2021	2022	2023	(%)	34.9	34.9	34.6	34.3	34.0	2014-2023 주1)																										
	2019		2020	2021	2022	2023																																								
(%)	34.9	34.9	34.6	34.3	34.0																																									
		*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국가·지자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10-4	(1) GDP 대비 노동소득 분배율	57	-	<b>&lt;ILO 기준 GDP 대비 노동소득 분배율&gt;</b>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2017</th> <th>2018</th> <th>2019</th> <th>2020</th> <th>2021</th> </tr> </thead> <tbody> <tr> <td>(%)</td> <td>57.1</td> <td>58.3</td> <td>59.9</td> <td>60.5</td> <td>59.8</td> </tr> </tbody> </table>						2017	2018	2019	2020	2021	(%)	57.1	58.3	59.9	60.5	59.8	2017-2021																									
	2017	2018	2019	2020	2021																																									
(%)	57.1	58.3	59.9	60.5	59.8																																									
10-5	(1) 이주민 권리보장에 관한 국제/국내 인권기구 권고에 대한 적극적 수용	(국제) 100 (국내) 100 유지	-	<b>&lt;이주민 권리보장에 관한 국제/국내 인권기구 권고 수용률&gt;</b> - <국제> 2023년 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서 이주민 관련 국제권고 59.1% 수용 (총 22개 권고 중 13개 수용) <table border="1"> <thead> <tr> <th>&lt;국내&gt;</th> <th>2019</th> <th>2020</th> <th>2021</th> <th>2022</th> <th>2023</th> </tr> </thead> <tbody> <tr> <td>권고(건)</td> <td>4</td> <td>-</td> <td>5</td> <td>4</td> <td>4</td> </tr> <tr> <td>수용</td> <td>-</td> <td>-</td> <td>-</td> <td>2</td> <td>-</td> </tr> <tr> <td>일부수용</td> <td>4</td> <td>-</td> <td>4</td> <td>2</td> <td>1</td> </tr> <tr> <td>검토중</td> <td>-</td> <td>-</td> <td>-</td> <td>-</td> <td>3</td> </tr> <tr> <td>수용률(%)</td> <td>100.0</td> <td>-</td> <td>80.0</td> <td>100.0</td> <td>100.0</td> </tr> </tbody> </table>					<국내>	2019	2020	2021	2022	2023	권고(건)	4	-	5	4	4	수용	-	-	-	2	-	일부수용	4	-	4	2	1	검토중	-	-	-	-	3	수용률(%)	100.0	-	80.0	100.0	100.0	-	-
	<국내>	2019	2020	2021	2022	2023																																								
권고(건)	4	-	5	4	4																																									
수용	-	-	-	2	-																																									
일부수용	4	-	4	2	1																																									
검토중	-	-	-	-	3																																									
수용률(%)	100.0	-	80.0	100.0	100.0																																									
(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통합조례 제정률	100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2020 이전</th> <th>2021</th> <th>2022</th> <th>2023</th> <th>2024 .8월</th> </tr> </thead> <tbody> <tr> <td>(%)</td> <td>9.88</td> <td>12.76</td> <td>18.93</td> <td>29.63</td> <td>32.92</td> </tr> </tbody> </table>						2020 이전	2021	2022	2023	2024 .8월	(%)	9.88	12.76	18.93	29.63	32.92	2020-2024																										
	2020 이전	2021	2022	2023	2024 .8월																																									
(%)	9.88	12.76	18.93	29.63	32.92																																									
		* 총 243개 지자체(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중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통합조례를 제정한 지자체 비율, 공포 일 기준, 통합조례 제정 기준으로,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 및 다문화 가족 지원조례를 각각 제정한 경우는 미포함																																												
(3) 국민 다문화 수용성 지표	80		<table border="1"> <thead> <tr> <th>다문화수용성 지수</th> <th>2015</th> <th>2018</th> <th>2021</th> </tr> </thead> <tbody> <tr> <td>성인</td> <td>53.95</td> <td>52.81</td> <td>52.27</td> </tr> <tr> <td>청소년</td> <td>67.63</td> <td>71.22</td> <td>71.39</td> </tr> </tbody> </table>					다문화수용성 지수	2015	2018	2021	성인	53.95	52.81	52.27	청소년	67.63	71.22	71.39	2015-2021																										
다문화수용성 지수	2015	2018	2021																																											
성인	53.95	52.81	52.27																																											
청소년	67.63	71.22	71.39																																											
(4)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이민/다문화 교육 이수 시간	100	-						-	-																																					

주1) 목표순향도 평가방법(목표방향만 명시, 맑음 또는 맑/흐)에 따라 장기시계열(10년치)의 추세를 함께 고려함

K-SDG 10번 목표는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를 지향한다. 순향도 평가가 실시된 9개 지표 중 4개 지표가 목표 순향(‘맑음’), 3개는 개선 중이나 목표 달성에는 부족(‘맑거나 흐림’), 2개는 정체(‘흐림’)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지난 평가에 이어 계속해서 목표달성이 가능한 추세(‘맑음’)를 유지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주민 통합조례 제정률이 더욱 크게 개선되어 현 추세가 유지된다면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수치가 조금씩 줄어들며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득격차 비율과 전체 인구 대비 소득 하위 40%의 균등화된 가구 소득 비율은 지난 평가에서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번 평가에서는 개선세가 둔화되어 순향도 평가가 ‘맑음’에서 ‘맑거나 흐림’으로 소폭 하락하였다.

소득 불평등이 누적되면 자산 불평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득 1,2분위 가구의 순자산 점유율은 불평등의 고착이 나타나는지를 점검하는 지표가 되는데, 지속적으로 저감한다는 목표와 달리 정체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한국 사회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다문화 수용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문화수용성 지수를 개발하고 주기적 조사를 통해 한국 사회의 다문화수용성 기준과 전개방향을 파악해왔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수준별, 단계별로 체계화하고 참여를 촉진시켜 이민자의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나, 성인의 다문화수용성 지수는 2015년 이래 큰 변화없는 정체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 목표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목표 번호	목표명	세부목표 번호	세부목표	지표	소관부처
목표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12-1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통합적인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1) 자원순환기본계획 및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건수 (2) 국가 지속가능생산·소비기본계획 수립 여부	기재부 환경부 산업부 중기부
		12-2	모든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1) 국내 1인당 자원소비량 (2) 물질흐름분석(MFA) 구축 대상 자원수	환경부 산업부
		12-3	식품의 생산·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 손실과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폐기물을 감소시킨다.	(1) 식품 손실 지수 (2) 1인당 식품폐기물 발생량	환경부
		12-4	화학물질과 유해폐기물의 친환경적 관리를 통해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1)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확보율 (2) 사고대비 화학물질 수 (3) 1인당 유해폐기물 발생량	환경부
		12-5	폐기물의 원천예방과 감량, 재사용과 재활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감소한다.	(1)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 (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재활용 비율	환경부
		12-6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활동의 관리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기업 수 (2) 녹색경영 참여 기업수	산업부 중기부
		12-7	녹색 제품 인증 및 녹색 구매의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녹색 소비를 촉진한다.	(1) 공공분야(지방자치단체) 녹색제품 구매율 (2) 생활용품의 녹색제품 인증 건수	환경부 행안부 기재부
		12-8	모든 국민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의식을 갖도록 환경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1) 인구대비 환경교육 수혜자 비율 (2) 일반 국민의 환경의식 수준	환경부
		12-9	플라스틱이 선순환하도록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증가시키고, 친환경재료 개발을 통해 플라스틱의 환경으로 유출을 방지한다.	(1)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2)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률	환경부
		12-10	지속가능한 관광의 확대를 통해 환경보전에 기여한다	(1) 지속가능관광의 참여자수	환경부 문체부
		12-11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1) GDP 대비 화석연료 보조금 비율	산업부

세부목표 번호	지표명	2040 목표	2022 순황도	2024 평가결과		
				지표값(최신 5년 가용지표)	평가대상 기간	2024 순황도
12-1	(1) 자원순환기본계획 및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건수	18건		현재 국가기본계획(국가) 및 자원순환시행계획(17개 시·도)이 수립되어 있음	2024	
	(2) 국가 지속가능생산·소비기본계획 수립 여부	수립	-	-	-	-

세부목표 번호	지표명	2040 목표	2022 순항도	2024 평가결과					평가대상 기간	2024 순항도																							
				지표값(최신 5년 가용지표)																													
12-2	(1) 국내 1인당 자원소비량	-	-	<b>&lt;1인당 국내물질소비량(DMC)&gt;</b>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2018</th> <th>2019</th> <th>2020</th> <th>2021</th> <th>2022</th> </tr> </thead> <tbody> <tr> <td>(톤/인)</td> <td>17.19</td> <td>17.23</td> <td>16.26</td> <td>16.78</td> <td>16.97</td> </tr> </tbody> </table>						2018	2019	2020	2021	2022	(톤/인)	17.19	17.23	16.26	16.78	16.97	2018-2022												
		2018	2019	2020	2021	2022																											
(톤/인)	17.19	17.23	16.26	16.78	16.97																												
(2) 물질흐름분석(MFA) 구축 대상 자원수	100개	-	<b>&lt;금속자원 물질흐름분석 통계구축 현황&gt;</b>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2018</th> <th>2019</th> <th>2020</th> <th>2021</th> <th>2022</th> </tr> </thead> <tbody> <tr> <td>통계 구축 금속자원 수 (개, 누적)</td> <td>63</td> <td>63</td> <td>63</td> <td>63</td> <td>63</td> </tr> <tr> <td>통계 갱신 금속자원 수 (개)</td> <td>8</td> <td>8</td> <td>8</td> <td>8</td> <td>4</td> </tr> </tbody> </table> <p>* 2015년까지 63개 금속자원에 대한 물질흐름분석 통계구축 완료 후, 매년 금속별 갱신주기에 따라 통계 갱신 중</p>						2018	2019	2020	2021	2022	통계 구축 금속자원 수 (개, 누적)	63	63	63	63	63	통계 갱신 금속자원 수 (개)	8	8	8	8	4	2018-2022							
	2018	2019	2020	2021	2022																												
통계 구축 금속자원 수 (개, 누적)	63	63	63	63	63																												
통계 갱신 금속자원 수 (개)	8	8	8	8	4																												
12-3	(1) 식품 손실 지수	지속 감소	-	-					-	-																							
(2) 1인당 식품폐기물 발생량	210		<b>&lt;1인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gt;</b>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2011</th> <th>2016</th> <th>2021</th> </tr> </thead> <tbody> <tr> <td>(g/인/일)</td> <td>311.3</td> <td>367.95</td> <td>310.92</td> </tr> </tbody> </table>						2011	2016	2021	(g/인/일)	311.3	367.95	310.92	2016-2021																	
	2011	2016	2021																														
(g/인/일)	311.3	367.95	310.92																														
12-4	(1)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확보율	100	-	<b>&lt;유해성 정보 등록 화학물질 수&gt;</b>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2024.06</th> </tr> </thead> <tbody> <tr> <td>(종)</td> <td>2,352</td> </tr> </tbody> </table>						2024.06	(종)	2,352	-	-																			
		2024.06																															
	(종)	2,352																															
(2) 사고대비 화학물질 수	200	-	<b>&lt;사고대비 화학물질 수&gt;</b>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2019</th> <th>2020</th> <th>2021</th> <th>2022</th> <th>2023</th> </tr> </thead> <tbody> <tr> <td></td> <td>97</td> <td>97</td> <td>97</td> <td>97</td> <td>97</td> </tr> </tbody> </table> <b>(참고)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물질 수)</b>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2019</th> <th>2020</th> <th>2021</th> <th>2022</th> <th>2023</th> </tr> </thead> <tbody> <tr> <td></td> <td>415</td> <td>415</td> <td>415</td> <td>415</td> <td>415</td> </tr> </tbody> </table>						2019	2020	2021	2022	2023		97	97	97	97	97		2019	2020	2021	2022	2023		415	415	415	415	415	2019-2023	
	2019	2020	2021	2022	2023																												
	97	97	97	97	97																												
	2019	2020	2021	2022	2023																												
	415	415	415	415	415																												
(3) 1인당 유해폐기물 발생량	80		<b>&lt;1인당 지정폐기물 발생량&gt;</b>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2018</th> <th>2019</th> <th>2020</th> <th>2021</th> <th>2022</th> </tr> </thead> <tbody> <tr> <td>(kg/인)</td> <td>108.94</td> <td>109.72</td> <td>108.23</td> <td>115.57</td> <td>119.50</td> </tr> </tbody> </table>						2018	2019	2020	2021	2022	(kg/인)	108.94	109.72	108.23	115.57	119.50	2018-2022													
	2018	2019	2020	2021	2022																												
(kg/인)	108.94	109.72	108.23	115.57	119.50																												
12-5	(1)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	75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2018</th> <th>2019</th> <th>2020</th> <th>2021</th> <th>2022</th> </tr> </thead> <tbody> <tr> <td>(%)</td> <td>62.0</td> <td>59.7</td> <td>59.5</td> <td>56.7</td> <td>59.8</td> </tr> </tbody> </table>						2018	2019	2020	2021	2022	(%)	62.0	59.7	59.5	56.7	59.8	2018-2022												
		2018	2019	2020	2021	2022																											
(%)	62.0	59.7	59.5	56.7	59.8																												
(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재활용 비율	90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2018</th> <th>2019</th> <th>2020</th> <th>2021</th> <th>2022</th> </tr> </thead> <tbody> <tr> <td>(%)</td> <td>81.6</td> <td>82.6</td> <td>84.3</td> <td>84.4</td> <td>84.1</td> </tr> </tbody> </table>						2018	2019	2020	2021	2022	(%)	81.6	82.6	84.3	84.4	84.1	2018-2022													
	2018	2019	2020	2021	2022																												
(%)	81.6	82.6	84.3	84.4	84.1																												
12-6	(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기업 수	400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2018</th> <th>2019</th> <th>2020</th> <th>2021</th> <th>2022</th> </tr> </thead> <tbody> <tr> <td></td> <td>134</td> <td>134</td> <td>142</td> <td>206</td> <td>318</td> </tr> </tbody> </table>						2018	2019	2020	2021	2022		134	134	142	206	318	2018-2022												
	2018	2019	2020	2021	2022																												
	134	134	142	206	318																												

세부목표 번호	지표명	2040 목표	2022 순향도	2024 평가결과						평가대상 기간	2024 순향도	
				지표값(최신 5년 가용지표)								
	(2) 녹색경영 참여 기업수	1000		<b>&lt;녹색기업 지정 현황&gt; (업체수)</b>						2018-2022		
				2018	2019	2020	2021	2022				
				139	131	127	117	102				
12-7	(1) 공공분야(지방자치단체) 녹색제품 구매율	75%	-	<b>(참고) &lt;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액&gt;</b>						-	-	
					2018	2019	2020	2021	2022			
				(억원)	33,073	38,797	38,080	38,533	42,684			
	(2) 생활용품의 녹색제품 인증 건수	100	-	-						-	-	
12-8	(1) 인구대비 환경교육 수혜자 비율	50	-	<b>&lt;환경교육 경험 및 만족도&gt;</b>						2018-2023		
				구분	환경교육 경험			만족도				
					'18	'23	증감	'18	'23			증감
				일반국민	19.2	27.4	8.2	27.6	33.2			5.6
전문가	76.1	76.8	0.7	18.5	38.8	19.8						
	(2) 일반 국민의 환경의식 수준	75		일반 국민		본인			2018-2023			
				환경의식수준 평가								
				'13	'18	'23	'13	'18			'23	
				일반국민	50.3	53.7	56.9	65.5			57.1	59.7
전문가	53.7	43.9	60.6	79.2	70.7	78.3						
12-9	(1)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98	-		2019	2020	2021	2022	2023	2019-2023		
				(kg/인)	125.97	126.72	128.53	126.73	124.33			
				* 합성수지 국내수요량/주민등록연앙인구								
	(2)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률	100	-		2018	2019	2020	2021	2022	2018-2022		
					(%)	55.9	56.8	55.8	57.1			57.4
				* 폐합성수지류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 2018년 통계는 플라스틱으로 별도 구분								
12-10	(1) 지속가능관광의 참여자수	(방문자수) 칠백만 명 (해설사) 칠천 명	-	-						-	-	
12-11	(1) GDP 대비 화석연료 보조금 비율	0			2018	2019	2020	2021	2022	2018-2022		
					(%)	0.09	0.09	0.09	0.15			0.43

K-SDG 12번 목표는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추구한다. 이번 평가에서 순향도 평가가 실시된 15개 지표 중 5개만이 목표달성이 가능한 '맑음'으로 평가되고, '맑거나 흐림'이 2개, 정체상태인 '흐림'과 목표와 반대방향으로 진행되는 '뇌우'가 각각 4개로 평가되었다. 지난 2022년 평가 당시

9개 중 6개가 '뇌우'로 평가되었던 데 비하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뇌우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특히 1인당 유해폐기물 발생량,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그리고 녹색경영 참여기업수의 3개 지표는 지난 평가와 동일하게 '뇌우' 상태를 유지하였다. 반면 지난 평가에서 '뇌우'였지만 이번에 '맑음'으로 개선된 지표가 2개인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기업 수와 일반국민의 환경의식 수준이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의 경우 최근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투자자들이 관련 정보를 요구하면서 크게 늘고 있다.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84%대로, '맑음' 평가를 유지하였다. 또한, 자원순환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국가 및 17개 광역 시·도 단위에서 모두 수립되어 있어, 목표를 달성한 상태이다.

자원 효율성과 관련된 지표인 1인당 국내물질소비량과 물질흐름분석(MFA) 구축 자원 수는 이번 평가에서 모두 정체상태로 평가되었다. 사고대비 화학물질 수도 97종에서 최근 더 이상 늘지 않고 있다. GDP 대비 화석연료 보조금 비율은 2020년까지 0.09% 수준이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에 따라 2022년 0.43%까지 급격히 증가하였다.

한편 플라스틱에 관한 국제협약의 협상이 진행 중으로, 향후 플라스틱 감량 및 순환성 증대를 위한 더 강화된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K-SDG 지표로는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과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률이 있으며, 두 지표 모두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나 2040년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추세로 평가되었다.

전략 3 환경 |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리는 깨끗한 환경

목표 6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목표 번호	목표명	세부 목표 번호	세부목표	지표	소관부처
목표 6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6-1	모두를 위한 안전한 식수를 공평하게 공급한다.	(1) 수돗물 만족도 (2) 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급률	환경부
		6-2	모두에게 편리한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1)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 (2) 하수도 정비중점관리지역 정비대책수립 개소수	환경부
		6-3	수질오염 물질의 수계 유입을 최소화하여 수질개선을 담보한다.	(1) 유역별 물순환율 (2) 수질목표기준 달성도 (3) 신규 오염물질 관리 항목 수	환경부
		6-4	물공급 안정성 도모를 위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1) 상수도 누수율 (2) 지방상수도 자급률 (3) 하수처리수 재이용율	환경부
		6-5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다양성을 확대한다.	(1) 서식 및 수변환경 평가지수 (HRI) (2) 어류건강성 평가지수 (FAI) (3) 습지와 습지보호지역 면적 증감	환경부
		6-6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를 위해 지역공동체 참여를 지원하고 강화한다.	(1) 물 관련 행정기관위원회 운영 실적 (2) 수질보전활동지원 예산 반영 비율	환경부

세부 목표 번호	지표명	2040 목표	2022 순향도	2024 평가결과				평가대상 기간	2024 순향도		
				지표값(최신 5년 가용지표)							
6-1	(1) 수돗물 만족도	지속 증가	단기증가 장기정체	(%)	2013 59.2	2017 46.6	2021 58.3	2013-2021			
	(2) 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급률	지속 증가		(%)	2018 77.0	2019 78.6	2020 80.2	2021 81.6	2022 82.8	2013-2022 주1)	
6-2	(1)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	90		(%)	2018 71.8	2019 73.3	2020 74.6	2021 75.9	2022 76.6	2018-2022	
	(2) 하수도 정비중점관리 지역 정비대책수립 개소수	200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건수〉				2019-2023			
6-3	(1) 유역별 물순환율	90	-	〈전국 물순환율〉				2017-2022			
				(%)	2017 87.52	2021 88.54	2022 88.88				

세부 목표 번호	지표명	2040 목표	2022 순향도	2024 평가결과							평가대상 기간	2024 순향도																		
				지표값(최신 5년 가용지표)																										
	(2) 수질목표기준 달성도	70		<table border="1"> <tr> <th>목표달성도(%)</th> <th>2018</th> <th>2019</th> <th>2020</th> <th>2021</th> <th>2022</th> </tr> <tr> <td>하천 (BOD 기준)</td> <td>69.6</td> <td>75.7</td> <td>80.0</td> <td>78.3</td> <td>70.4</td> </tr> <tr> <td>호소 (TOC 기준)</td> <td>32.7</td> <td>36.7</td> <td>46.9</td> <td>49.0</td> <td>49.0</td> </tr> <tr> <td>달성도 종합*</td> <td>51.15</td> <td>56.2</td> <td>63.4</td> <td>63.65</td> <td>59.7</td> </tr> </table> <p>* 하천과 호소의 단순평균</p>	목표달성도(%)	2018	2019	2020	2021	2022	하천 (BOD 기준)	69.6	75.7	80.0	78.3	70.4	호소 (TOC 기준)	32.7	36.7	46.9	49.0	49.0	달성도 종합*	51.15	56.2	63.4	63.65	59.7	2018-2022	
	목표달성도(%)	2018	2019	2020	2021	2022																								
하천 (BOD 기준)	69.6	75.7	80.0	78.3	70.4																									
호소 (TOC 기준)	32.7	36.7	46.9	49.0	49.0																									
달성도 종합*	51.15	56.2	63.4	63.65	59.7																									
(3) 신규 오염물질 관리 항목 수	76		<p>〈수질오염물질 관리항목 수〉</p> <table border="1"> <tr> <th></th> <th>2019</th> <th>2020</th> <th>2021</th> <th>2022</th> <th>2023</th> </tr> <tr> <td>수질오염물질(종)</td> <td>56</td> <td>59</td> <td>59</td> <td>59</td> <td>59</td> </tr> <tr> <td>특정수질유해물질(종)</td> <td>32</td> <td>32</td> <td>32</td> <td>32</td> <td>32</td> </tr> </table>		2019	2020	2021	2022	2023	수질오염물질(종)	56	59	59	59	59	특정수질유해물질(종)	32	32	32	32	32	2019-2023								
	2019	2020	2021	2022	2023																									
수질오염물질(종)	56	59	59	59	59																									
특정수질유해물질(종)	32	32	32	32	32																									
6-4	(1) 상수도 누수율	8		<table border="1"> <tr> <th></th> <th>2018</th> <th>2019</th> <th>2020</th> <th>2021</th> <th>2022</th> </tr> <tr> <td>(%)</td> <td>10.8</td> <td>10.5</td> <td>10.4</td> <td>10.2</td> <td>9.9</td> </tr> </table>		2018	2019	2020	2021	2022	(%)	10.8	10.5	10.4	10.2	9.9	2018-2022													
		2018	2019	2020	2021	2022																								
	(%)	10.8	10.5	10.4	10.2	9.9																								
(2) 지방상수도 자급률	지속 증가		<table border="1"> <tr> <th></th> <th>2018</th> <th>2019</th> <th>2020</th> <th>2021</th> <th>2022</th> </tr> <tr> <td>(%)</td> <td>53.9</td> <td>52.4</td> <td>51.5</td> <td>50.8*</td> <td>49.8</td> </tr> </table> <p>* 2021 상수도통계 기준으로 지표값 산출 = (자체취수량/연간총처리수량) X (연간총생산량실적/총급수량) X 100</p>		2018	2019	2020	2021	2022	(%)	53.9	52.4	51.5	50.8*	49.8	2018-2022														
	2018	2019	2020	2021	2022																									
(%)	53.9	52.4	51.5	50.8*	49.8																									
(3)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25.5		<table border="1"> <tr> <th></th> <th>2018</th> <th>2019</th> <th>2020</th> <th>2021</th> <th>2022</th> </tr> <tr> <td>(%)</td> <td>15.5</td> <td>16.1</td> <td>15.5</td> <td>15.4</td> <td>15.4</td> </tr> </table>		2018	2019	2020	2021	2022	(%)	15.5	16.1	15.5	15.4	15.4	2018-2022														
	2018	2019	2020	2021	2022																									
(%)	15.5	16.1	15.5	15.4	15.4																									
6-5	(1) 서식 및 수변환경 평가지수 (HRI)	70		<p>〈서식 및 수변환경 평가지수(HRI) 상시지점〉</p> <table border="1"> <tr> <th></th> <th>2018</th> <th>2019</th> <th>2020</th> <th>2021</th> <th>2022</th> </tr> <tr> <td>B등급( 좋음 ) 이상 /총측정지점</td> <td>70 /218</td> <td>56 /220</td> <td>55 /220</td> <td>62 /219</td> <td>73 /219</td> </tr> <tr> <td>B등급( 좋음 ) 이상의 비율(%)</td> <td>32.1</td> <td>25.5</td> <td>25.0</td> <td>28.3</td> <td>33.3</td> </tr> </table> <p>※ 하천 수생태계 조사 지점 중 3년 주기의 일반지점은 제외한 상시지점에 대한 연단위 분석결과</p>		2018	2019	2020	2021	2022	B등급( 좋음 ) 이상 /총측정지점	70 /218	56 /220	55 /220	62 /219	73 /219	B등급( 좋음 ) 이상의 비율(%)	32.1	25.5	25.0	28.3	33.3	2018-2022							
		2018	2019	2020	2021	2022																								
	B등급( 좋음 ) 이상 /총측정지점	70 /218	56 /220	55 /220	62 /219	73 /219																								
B등급( 좋음 ) 이상의 비율(%)	32.1	25.5	25.0	28.3	33.3																									
(2) 어류건강성 평가지수(FAI)	70		<p>〈어류건강성 지수(FAI) 상시지점〉</p> <table border="1"> <tr> <th></th> <th>2018</th> <th>2019</th> <th>2020</th> <th>2021</th> <th>2022</th> </tr> <tr> <td>B등급( 좋음 ) 이상 /총측정지점</td> <td>36 /218</td> <td>37 /220</td> <td>39 /219</td> <td>42 /218</td> <td>42 /219</td> </tr> <tr> <td>B등급( 좋음 ) 이상의 비율(%)</td> <td>16.5</td> <td>16.8</td> <td>17.8</td> <td>19.3</td> <td>19.2</td> </tr> </table> <p>※ 하천 수생태계 조사 지점 중 3년 주기의 일반지점은 제외한 상시지점에 대한 연단위 분석결과</p>		2018	2019	2020	2021	2022	B등급( 좋음 ) 이상 /총측정지점	36 /218	37 /220	39 /219	42 /218	42 /219	B등급( 좋음 ) 이상의 비율(%)	16.5	16.8	17.8	19.3	19.2	2018-2022								
	2018	2019	2020	2021	2022																									
B등급( 좋음 ) 이상 /총측정지점	36 /218	37 /220	39 /219	42 /218	42 /219																									
B등급( 좋음 ) 이상의 비율(%)	16.5	16.8	17.8	19.3	19.2																									
(3) 습지와 습지보호 지역 면적 증감	지속 확대		<p>〈습지보호지역 면적〉</p> <table border="1"> <tr> <th></th> <th>2018</th> <th>2019</th> <th>2020</th> <th>2021</th> <th>2022</th> </tr> <tr> <td>(km<sup>2</sup>)</td> <td>1,522.7</td> <td>1,522.8</td> <td>1,558.1</td> <td>1573.1</td> <td>1634.6</td> </tr> </table> <p>※ 내륙·연안 습지보호지역 총합 면적</p>		2018	2019	2020	2021	2022	(km <sup>2</sup> )	1,522.7	1,522.8	1,558.1	1573.1	1634.6	2013-2022 주1)														
	2018	2019	2020	2021	2022																									
(km <sup>2</sup> )	1,522.7	1,522.8	1,558.1	1573.1	1634.6																									

세부 목표 번호	지표명	2040 목표	2022 순향도	2024 평가결과						평가대상 기간	2024 순향도	
				지표값(최신 5년 가용지표)								
6-6	(1) 물 관련 행정기관위원회 운영 실적	지속 확대	-	(건/년)	2019	2020	2021	2022	2023	2019- 2023		
				국가물관리위원회	0	25	24	13	12			
				(댐)사전검토협의회	0	0	0	0	0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3	19	16	11	5			
				친수구역조성위원회	1	1	2	2	1			
				합계	4	45	42	26	18			
	* 전년도 7월~해당년도 6월, 출석·서면 합계											
	(2) 수질보전활동지원 예산 반영 비율	지속 확대		(억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2018- 2022		
				한강	수질보전활동 지원비	17.10	17.06	18.44	18.49			16.73
					기금 총계	6,157	6,722	6,843	6,817			6,392
					비율(%)	0.28	0.25	0.27	0.27			0.26
				금강	수질보전활동 지원비	9.61	8.65	7.67	9.10			8.17
					기금 총계	1,233	1,277	1,270	1,326			1,313
					비율(%)	0.78	0.68	0.60	0.69			0.62
				낙동강	수질보전활동 지원비	12.87	12.85	13.03	11.08			9.26
기금 총계					2,676	2,699	2,507	2,441	2,415			
비율(%)					0.48	0.48	0.52	0.45	0.38			
영산강 / 섬진강				수질보전활동 지원비	6.45	5.95	5.45	4.91	4.41			
				기금 총계	922	1,044	1,146	1,318	1,528			
				비율(%)	0.70	0.57	0.48	0.37	0.29			

주1) 목표순향도 평가방법(목표방향만 명시, 맑음 또는 맑/흐)에 따라 장기시계열(10년치)의 추세를 함께 고려함

K-SDG 6번 목표는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를 지향하며, 안전한 식수 공급, 하수도 인프라 강화, 수질 개선 및 수생태계 선진상성 제고, 안정적인 물 공급과 수자원 효율화, 안전한 수변환경 제고,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등을 추진한다. 총 15개 지표 중 6개는 ‘맑음’, 2개는 ‘맑거나 흐림’, 5개는 ‘흐림’, 2개는 ‘뇌우’로 평가되었다.

농어촌 지역 상수도 및 하수도 보급률 지표들은 지난 평가와 마찬가지로 ‘맑음’ 등급을 유지하였다. 농어촌 상·하수도 보급률은 꾸준히 늘어, 2022년 기준 각각 82.8%, 76.6%를 기록하였다. 물순환율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며, 2040 목표인 90%의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맑음’으로 평가되었다.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은 2022년 연간 38건이 지정되며 최고치를 나타냈는데, 5년치의 추세로는 등락을 보이며 ‘맑거나 흐림’으로 평가되었다. 수돗물 만족도는 2021년까지의 수치를 바탕으로 지난 평가에서 ‘맑거나 흐림’(단기 증가, 장기 정체)으로 평가되었는데, 3년마다 실시하는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아 지난번 평가결과가 유지되었다.

하천(BOD 기준)과 호소(TOC 기준)의 수질목표기준 달성도는 최근 정체 증으로, 지난번 평가에서 '맑음'이었던 것이 '흐림'으로 변경되었다. 신규 오염물질 관리항목 수도 2020년 이후 늘어나고 있지 않아, 정체상태('흐림')으로 평가되었다. 지방상수도 자급률은 수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 악화('뇌우') 추세이다.

수생태계 관련 지표인 서식 및 수변환경 평가지수와 어류 건강성 평가지수는 2020년 수치까지 반영되었던 지난번 평가에서 B등급(좋음) 이상의 비율이 떨어지는 추세로 '뇌우'로 평가되었으나, 최근 추세가 다소 회복되어 각각 '흐림'과 '맑음'으로 평가되었다. 습지보호지역 면적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 '맑음'으로 평가되었다.

## 목표 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목표 번호	목표명	세부목표 번호	세부목표	지표	소관부처
목표 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7-1	에너지 서비스에 대해 안정적이고 적절한 접근을 보장한다.	(1)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수	산업부
		7-2	국가 에너지원에서 청정에너지 공급을 증대한다.	(1)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 1차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	산업부
		7-3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킨다.	(1) 국가에너지효율지표 (2) 건물에너지효율지표	산업부 국토부
		7-4	운송분야의 에너지소비로 인한 대기오염을 최소화한다.	(1) 친환경차 확대 수 (2) 운송부문 에너지 총소비량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세부 목표 번호	지표명	2040 목표	2022 순향도	2024 평가결과						평가대상 기간	2024 순향도
				지표값(최신 5년 가용지표)							
7-1	(1)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수	200만 가구			2019	2020	2021	2022	2023	2019-2023	
				발급가구수 (만 가구)	64.2	66.1	77.7	113.3	122.5		
7-2	(1)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5			2018	2019	2020	2021	2022	2018-2022	
				(%)	4.99	5.81	7.44	8.29	9.22		
	(2) 1차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	17.6			2018	2019	2020	2021	2022	2018-2022	
				(%)	3.36	3.56	4.34	4.66	5.17		
7-3	(1) 국가에너지효율 지표	목표치 추후 보완	-		2018	2019	2020	2021	2022p	-	-
				최종에너지 소비량 (백만toe)	214.0	211.7	203.7	215.6	214.5		
				실질GDP (조원)	1812.0	1852.7	1839.5	1918.7	1968.8		
	국가에너지효율 (백만toe/조원)	0.118	0.114	0.111	0.112	0.109					
				※ 국가에너지효율 = 최종에너지 소비량 / 실질GDP							

세부 목표 번호	지표명	2040 목표	2022 순향도	2024 평가결과						평가대상 기간	2024 순향도
				지표값(최신 5년 가용지표)							
	(2) 건물에너지효율지표	지속 저감			2019	2020	2021	2022	2023	2019-2023	
				연간에너지 사용량 (toe)	33,572,203	33,186,507	34,343,898	36,362,029	35,888,375		
				연면적(㎡)	3,218,713,467	3,261,897,151	3,363,172,239	3,467,238,906	3,578,941,022		
				건물에너지 효율 (toe/㎡)	0.0104303	0.0101740	0.0102118	0.0104876	0.0100277		
7-4	(1) 친환경차 확대수	2030년 300만대 (누적) 이후 안정적 유지		〈친환경차 등록대수〉						2019-2023	
					2019	2020	2021	2022	2023		
				친환경차 등록대수 (천대, 누적)	601	820	1,159	1,590	2,120		
				※ 전기·수소·하이브리드 등록대수 합계							
			〈참고〉 〈전기·수소차 보급대수〉								
				2019	2020	2021	2022	2023			
			전기·수소차 등록대수 (천대, 누적)	95	146	258	432	600			
			※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3.4월, 탄녹위)'에 따른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목표는 2030년 450만대임								
	(2) 운송부문 에너지 총소비량	2030: 2017 대비 14.4% 저감 2040: 2030 대비 50% 저감			2018	2019	2020	2021	2022	2018-2022	
				(천toe)	36,227	37,194	34,746	36,636	36,294		

K-SDG 7번 목표는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를 지향한다. 순향도 평가가 실시된 6개 지표 중 운송부문 에너지 총소비량의 1개 지표를 제외한 5개 지표에 대해 2040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맑음') 나타났다.





에너지 바우처 수급 가구는 2019년 64.2만 가구에서 2023년 122.5만 가구로 크게 늘어 에너지 복지 서비스가 강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2040 목표인 200만 가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과 1차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도 꾸준히 늘고 있어 K-SDG 2040 목표인 35%와 17.6% 달성이 가능해 보인다. 친환경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 누적 등록대수도 2023년 200만 대를 넘어섰으며, 최근에는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목표를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건물 에너지효율 지표도 개선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운송 부문 에너지 총소비량의 5년치 추세를 보면 2020년 코로나19 초기에 일시 감소 후 3천6백만 toe대로 다시 늘어나, 정체상태로 평가된다.

목표 13 기후변화와 대응



목표 번호	목표명	세부 목표 번호	세부목표	지표	소관부처
목표 13	기후변화와 대응	13-1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을 감소시키고,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 및 적응 능력을 강화한다.	(1) 방재시설 집행 비율	환경부 행안부 해수부 기상청 농진청
		13-2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계획을 지방정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1)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 비율	환경부 산업부
				(2) 기후·에너지 전담기관 설치 지자체 비율	
				(3) 적응대책 이행 모니터링 파트너십 운영 지자체 비율	
13-3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역량을 강화한다.	(1) 공공기관 적응대책 수립·이행 비율	환경부 산업부		
		(2) 기후변화 교육 의무화 학교 비율			
13-4	지구의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에 비하여 2℃보다 아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을 1.5℃ 까지 제한하도록 노력한다.	(1)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MtCO <sub>2</sub> eg)	환경부 국조실 산업부 농식품부 국토부 해수부 농진청 산림청		

세부목표 번호	지표명	2040 목표	2022 순향도	2024 평가결과					평가대상 기간	2024 순향도
				지표값(최신 5년 가용지표)						
13-1	(1) 방재시설 집행 비율	98.5		2018 (%)	2019	2020	2021	2022	2018-2022	
				95.2	95.3	95.9	96.3	96.42		
13-2	(1)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 비율	지속 증가	-	- 관련법 개정에 따라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으로 대체 - '24년 5월 17개 시·도 계획 제출 완료. 향후 시군구 계획 수립 예정					-	-
	(2) 기후·에너지 전담기관 설치 지자체 비율	100	-	-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22년부터 지자체 탄소중립지원 센터 설립·지정 - '22.10월 17개 시·도 센터 설립·지정 완료. '23년부터 기초지자체 확대 중					-	-
	(3) 적응대책 이행 모니터링 파트너십 운영 지자체 비율	-	-	- 이행모니터링 파트너십 제도 미운영 - 적응대책 이행 절차: 지자체에서 환경부에 이행실적을 제출 → 환경부는 이를 종합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					-	-

세부목표 번호	지표명	2040 목표	2022 순향도	2024 평가결과							
				지표값(최신 5년 가용지표)			평가대상 기간	2024 순향도			
13-3	(1) 공공기관 적응대책 수립·이행 비율	100% 유지			2023	2024	2024				
				적응대책 수립 대상 공공기관수 (개소)	62	62					
				적응대책 수립·이행 공공기관 수 (개소)	52	62					
				적응대책 수립·이행 공공기관 비율 (%)	84	100					
	(2) 기후변화 교육 의무화 학교 비율	100% 유지	-	-			-	-			
13-4	(1)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2030: 2017 대비 24.4% 감축		(MtCO2eq)						2017-2022	
		2040: 2017 대비 33.6% 감축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잠정)		
				709.4	725.0	699.2	654.4	676.6	652.8		

K-SDG 목표 13은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맞서기 위한 대응과 관련된 목표이다.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 강화와 제도 정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이행,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등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총 7개 지표 중 정량적 추세에 기반한 순향도 평가가 실시된 지표는 3개이며, 그중 1개가 ‘맑음’, 나머지 2개는 ‘맑거나 흐림’으로 평가되었다.

도시·군 계획시설 중 하천, 우수지, 저수지, 방수설비, 방조설비, 사방설비 등 방재시설로 결정된 면적 중 집행된 면적의 비율은 매년 조금씩 개선되고 있어 2022년 96.42%에 이르렀으나, 2040년 98.5%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추세를 보여 지난번 평가와 마찬가지로 ‘맑거나 흐림’으로 평가되었다. 방재시설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도시계획 시설로서, 자연재해 회복 능력을 평가하는 대리 지표로서 의의를 갖고 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그간 매년 증가를 반복하여 2018년 정점을 찍었고, 2019년 감소세가 나타났으나 이후 코로나19의 충격과 회복에 따라 등락이 발생하였다. 2022년 잠정 배출량은 다시 전년 대비 감소하였는데, 향후 추세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잠정치를 제외한 2021년까지의 수치를 기준으로 순향도를 평가하면 ‘맑거나 흐림’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대상인 62개 공공기관 중 모두가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어, 순향도는 ‘맑음’으로 평가되었다.

## 목표 14 해양생태계 보전



목표 번호	목표명	세부 목표 번호	세부목표	지표	소관부처
목표 14	해양생태계 보전	14-1	육상과 해상의 오염물질로부터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1) 수질평가 지수값(WQI)을 이용한 생태기반 해역별 해수수질 기준 달성률 (2) 해양쓰레기 수거량	해수부 환경부
		14-2	바다의 생태환경과 수산자원의 서식처를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1) 갯벌복원면적 (2) 바다숲 조성 누적면적	해수부 환경부
		14-3	과학기술 협력 강화 등을 통한 해양 산성화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한다.	(1) 외해 평균 pH 농도 적정 범위(8.0~8.2) 유지	해수부
		14-4	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과도한 어업을 지양한다.	(1) 총허용어획량(TAC) 할당 비율	해수부
		14-5	해양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면적을 확대한다.	(1) 해양보호구역 지정 면적	해수부 환경부
		14-6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확보한다.	(1)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어가소득	해수부
		14-7	해양과학 연구역량 제고와 해양과학기술 이전을 확대한다.	(1) 정부연구개발예산 대비 해양수산 연구개발 투자비중 (2) 국내 해양수산과학 기술이전 건수 (3) 정부의 ODA 중 해양수산분야 무상원조 규모	해수부
		14-8	소규모 영세어업인의 안정적 어업행위를 지원한다.	(1) 국내 3톤 이상 4톤 미만 어선의 어선원 보험 가입률	해수부
		14-9	해양과 해양 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국제법을 국내법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해양과 해양 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강화한다.	(1) 관련 협약 국내적 수용을 위한 국내 입법 진행률	해수부

세부 목표 번호	지표명	2040 목표	2022 순향도	2024 평가결과					평가대상 기간	2024 순향도																								
				지표값(최신 5년 가용지표)																														
14-1	(1) 수질평가 지수값(WQI)을 이용한 생태기반 해역별 해수수질 기준 달성률	(2030) 90% (2040) 지속 확대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2019</th> <th>2020</th> <th>2021</th> <th>2022</th> <th>2023</th> </tr> </thead> <tbody> <tr> <td>해수수질 평가결과 (%)</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좋은 (I, II)</td> <td>81.4</td> <td>75.8</td> <td>82.4</td> <td>81.2</td> <td>80.9</td> </tr> <tr> <td>  나쁨 (IV, V)</td> <td>3.8</td> <td>4.5</td> <td>4.2</td> <td>2.8</td> <td>3.5</td> </tr> </tbody> </table>						2019	2020	2021	2022	2023	해수수질 평가결과 (%)						좋은 (I, II)	81.4	75.8	82.4	81.2	80.9	나쁨 (IV, V)	3.8	4.5	4.2	2.8	3.5	2019-2023	
		2019	2020	2021	2022	2023																												
해수수질 평가결과 (%)																																		
좋은 (I, II)	81.4	75.8	82.4	81.2	80.9																													
나쁨 (IV, V)	3.8	4.5	4.2	2.8	3.5																													
	(2) 해양쓰레기 수거량	지속 증가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2019</th> <th>2020</th> <th>2021</th> <th>2022</th> <th>2023</th> </tr> </thead> <tbody> <tr> <td>(톤)</td> <td>108,644</td> <td>138,362</td> <td>120,736</td> <td>126,035</td> <td>131,931</td> </tr> </tbody> </table>						2019	2020	2021	2022	2023	(톤)	108,644	138,362	120,736	126,035	131,931	2014-2023 주1)													
	2019	2020	2021	2022	2023																													
(톤)	108,644	138,362	120,736	126,035	131,931																													
14-2	(1) 갯벌복원면적	지속 확대	-	- '21~'23 사업 완료된 갯벌복원면적 0.195km <sup>2</sup> (3개소)					-	-																								
	(2) 바다숲 조성 누적면적	(2030) 54,000 (2040) 지속확대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2019</th> <th>2020</th> <th>2021</th> <th>2022</th> <th>2023</th> </tr> </thead> <tbody> <tr> <td>(km<sup>2</sup>)</td> <td>214.90</td> <td>242.58</td> <td>266.44</td> <td>291.80</td> <td>317.21</td> </tr> </tbody> </table>						2019	2020	2021	2022	2023	(km <sup>2</sup> )	214.90	242.58	266.44	291.80	317.21	2019-2023													
	2019	2020	2021	2022	2023																													
(km <sup>2</sup> )	214.90	242.58	266.44	291.80	317.21																													

세부 목표 번호	지표명	2040 목표	2022 순향도	2024 평가결과						
				지표값(최신 5년 가용지표)	평가대상 기간	2024 순향도				
14-3	(1) 외해 평균 pH 농도 적정 범위(8.0~8.2) 유지	pH 8.1		-	-	-				
14-4	(1) 총허용어획량(TAC) 할당 비율	지속 확대	-	(참고) <총허용어획량 소진율>		-				
				2018	2019	2020	2021	2022		
				(%)	68	54	53	76	54	
14-5	(1) 해양보호구역 지정 면적	(2030 목표) 4,300		2019	2020	2021	2022	2023	2019-2023	
				(km <sup>2</sup> )	1,780.449	1,782.292	1,798.692	1,861.920	1,865.622	
14-6	(1)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어가소득	지속 확대		2019	2020	2021	2022	2023	2019-2023	
				어가소득 (천원)	48,415	53,187	52,392	52,911	54,779	
				도시근로자 소득 대비 비율 (%)	69.7	73.5	70.3	67.7	65.2	
				* 도시근로자 소득 기준: 도시의 가구원 2인 이상인 일반가구 (농어가 제외) 중 가구주 직업이 임금 근로자가 일 년 동안 벌어들인 명목 소득						
14-7	(1) 정부연구개발예산 대비 해양수산 연구개발 투자비중	5		2019	2020	2021	2022	2023	2019-2023	
				(%)	3.10	2.85	2.86	2.86	2.95	
	(2) 국내 해양수산과학 기술 이전 건수	200		2018	2019	2020	2021	2022	2018-2022	
				87	148	114	120	130		
	(3) 정부의 ODA 중 해양수산분야 무상원조 규모	지속 확대		<해양수산부 자료제출 기준 ODA 지출액> (백만달러)					2019-2023	
				2019	2020	2021	2022	2023		
				7.50	11.82	10.71	10.49	20.71		
14-8	(1) 국내 3톤 이상 4톤 미만 어선의 어선원 보험 가입률	지속 확대		2019	2020	2021	2022	2023	2016-2023 주2)	
				(%)	45.1	50.0	49.8	53.8	53.3	
14-9	(1) 관련 협약 국내적 수용을 위한 국내 입법 진행률	100	-	-	-	-	-	-	-	-

주1) 목표순향도 평가방법(목표방향만 명시, 맑음 또는 맑/흐)에 따라 장기시계열(10년치)의 추세를 함께 고려함

주2) 가용한 장기시계열(8년치)의 추세를 함께 고려함

K-SDG 목표 14는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지향하며, 해양생태계 서식지와 해양생물 보호, 해양·수산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 해양과학 역량 제고, 영세어업인의 안정적 어업 등에 관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순향도 평가가 실시된 총 9개 지표 중 5개는 ‘맑음’, 1개는 ‘맑거나 흐림’, 그리고 2개는 ‘흐림’, 1개는 ‘뇌우’로 평가되었다.

먼저, 바다숲 조성, 국내 해양수산과학 기술이전, 해양수산 분야 무상원조, 어선원 보험 가입에 관한 지표들은 목표 달성이 가능한 추세를 유지하여 지난 평가와 마찬가지로 '맑음' 등급을 유지하였다. 해양쓰레기 수거량의 경우 2022년 평가에서 목표 달성에 부족한 추세('맑거나 흐림')로 평가되었으나, 최근 상승세를 유지하여 이번 평가에서 '맑음'으로 평가되었다.














해수 수질기준 달성률과 해양수산 연구개발 투자비중 지표는 2022년 평가에서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뇌우') 평가되었으나, 이후 지표가 다소 개선되며 이번에는 정체상태('흐림')로 평가되었다. 도시근로자 대비 어가소득은 악화('뇌우')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목표 15** 육상생태계 보전



목표 번호	목표명	세부 목표 번호	세부목표	지표	소관부처
목표 15	육상생태계 보전	15-1	육상과 내륙담수의 생태계 다양화를 위해 보전과 복원 활동을 활성화한다.	(1) 육상 및 담수 생물다양성을 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비율 (2) 총 육지면적 중 산림면적 비율	환경부 산림청
		15-2	산림파괴 중단, 황폐화 된 산림복원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강화한다.	(1) 국가 산림경영 지표 확장	산림청
		15-3	가뭄·홍수·개발 등으로 황폐화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한다.	(1) 총 토지면적 중 황폐화된 토지 비율	환경부 국토부 산림청
		15-4	생물다양성 손실을 예방하고 멸종위기종을 보호한다.	(1)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2) 주요 멸종위기종 복원율 (3) 산악지역녹색피복지수 (4) 종보호지수 (Species Protection Index) (5) 전국 야생동물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스테이션의 수(1000) 대비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스테이션의 비율	환경부 산림청 국가유산청
		15-5	동식물 보호종의 포획과 불법거래를 없애도록 노력한다.	(1)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실적 (2) 관리제도가 필요한 야생동물·가축·인간 사이 고위험 접촉점 대비 관리제도가 확립된 접촉점 수의 비율	환경부 기재부 국가유산청
		15-6	침입외래종의 유입을 예방하고 이들이 육지및수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1) 외래생물 관리 대상종수 (2) 산림병해충에 의한 연간 산림피해 면적	환경부 농식품부 산림청 농진청
		15-7	개발사업 등 인간활동으로 단절된 생태축의 복원과 생태네트워크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1) 백두대간 등 산림복원 면적 (2) 도심/생활권 복원	산림청 환경부

세부목표 번호	지표명	2040 목표	2022 순향도	2024 평가결과				평가대상 기간	2024 순향도												
				지표값(최신 5년 가용지표)																	
15-1	(1) 육상 및 담수 생물다양성을 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비율	2030 17% 이후 안정적 유지		<table border="1"> <tr> <th></th> <th>2014</th> <th>2020</th> <th colspan="2">2024</th> </tr> <tr> <td>(%)</td> <td>6.94</td> <td>16.85</td> <td colspan="2">17.45</td> </tr> </table>					2014	2020	2024		(%)	6.94	16.85	17.45		2024			
		2014	2020	2024																	
(%)	6.94	16.85	17.45																		
	(2) 총 육지면적 중 산림면적 비율	지속 확대		<table border="1"> <tr> <th></th> <th>2018</th> <th>2019</th> <th>2020</th> <th>2021</th> <th>2022</th> </tr> <tr> <td>(%)</td> <td>62.82</td> <td>62.74</td> <td>62.72</td> <td>62.67</td> <td>62.63</td> </tr> </table>					2018	2019	2020	2021	2022	(%)	62.82	62.74	62.72	62.67	62.63	2018-2022	
	2018	2019	2020	2021	2022																
(%)	62.82	62.74	62.72	62.67	62.63																
15-2	(1) 국가 산림경영 지표 확장	안정적 관리	-	-				-	-												
15-3	(1) 총 토지면적 중 황폐화된 토지 비율	지속 감소	-	-				-	-												
15-4	(1)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지정 수 및 개정 수)	500	-	<table border="1"> <tr> <th></th> <th>2012</th> <th>2017</th> <th colspan="2">2022</th> </tr> <tr> <td></td> <td>246</td> <td>267</td> <td colspan="2">282</td> </tr> </table>					2012	2017	2022			246	267	282		2017-2022			
	2012	2017	2022																		
	246	267	282																		

세부목표 번호	지표명	2040 목표	2022 순향도	2024 평가결과					평가대상 기간	2024 순향도
				지표값(최신 5년 가용지표)						
	(2) 주요 멸종위기종 복원율	100	-	〈멸종위기종 증식·복원율〉					-	-
				2021	2022	2023				
				(%)	50.6	51.6	51.1			
	(3) 산악지역 녹색피복지수	99 유지		2015		2018			-	-
				(%)	99.86	99.86				
	(4) 종보호지수 (Species Protection Index)	100		2016		2020			2016-2020	
	(5) 전국 야생동물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스테이션의 수 (1000) 대비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스테이션의 비율	100% 유지	-	-					-	-
15-5	(1)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실적(건)	지속 확대		2018	2019	2020	2021	2022	2018-2022	
				(건)	258	133	241	141	129	
	(2) 관리제도가 필요한 야생동물·가족·인간 사이 고위험 접촉점 대비 관리제도가 확립된 접촉점 수의 비율	100%	-	-					-	-
15-6	(1) 외래생물 관리 대상종수	1,500		〈유입주의 생물 지정현황〉					2019-2023	
				2019	2020	2021	2022	2023		
	(2) 산림병해충에 의한 연간 산림피해 면적	지속 감소		〈일반병에 의한 산림피해면적〉					2013-2022 주1)	
				2018	2019	2020	2021	2022		
				(ha)	80,565	69,812	63,446	60,966	58,451	
15-7	(1) 백두대간 등 산림복원 면적	3,000		2017		2021			2017-2021	
				(ha)	315	419				
	(2) 도심/생활권 복원	지속 확대		2017		2021			2017-2021	
				(ha)	150	271				

주1) 목표순향도 평가방법(목표방향만 명시, 맑음 또는 맑/흐)에 따라 장기시계열(10년치)의 추세를 함께 고려함

K-SDG 목표 15는 육상생태계의 보전을 지향하며, 육상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 생물다양성을 위한 멸종위기종 보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침입외래종의 관리, 생태축의 복원과 생태네트워크 유지·관리 등을 과제로 한다. 순항도 평가가 실시된 9개 지표 중 4개는 ‘맑음’, 2개는 ‘맑거나 흐림’, 1개는 ‘흐림’, 2개는 ‘뇌우’로 평가되었다.

육상 및 담수 보호지역 비율은 이제 17.45%로, K-SDG에서 2030 목표로 삼았던 17%를 넘어서 ‘맑음’으로 평가되지만, 국제사회의 새로운 목표치인 30%를 감안하면 향후 더욱 노력이 요구된다. 외래생물 관리를 위한 유입주의 생물 지정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 2023년 706종을 기록하였고, 현 추세로 2040년 목표인 1,500종의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산림병해충(일반병)에 의한 산림 피해 면적은 2018년 이래 매년 줄어들어, ‘맑음’으로 평가가 개선되었다.

한편 산림면적 비율은 매년 조금씩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 지난번 평가에 이어 또다시 ‘뇌우’로 평가되었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실적은 연도별 등락이 있으나 최근 연간 129건까지 크게 줄어들어 이번 평가에서 ‘뇌우’로 분류되었다. 종보호지수, 산림 및 도시/생활권 복원면적은 지난번 평가 이후 수치가 업데이트되지 않아 평가등급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산악 녹색피복지수의 경우 FAO의 데이터가 2018년 이후 업데이트되지 않아 이번에는 평가를 보류하였다.

## 전략 4 평화·협력 | 지구촌 평화와 협력강화

## 목표 16 평화·정의·포용



목표 번호	목표명	세부 목표 번호	세부목표	지표	소관부처
목표 16	평화·정의·포용	16-1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을 대폭 감소시킨다.	(1) 범죄율(살인, 강도, 폭력, 성범죄) (2) 학교폭력 피해 경험	경찰청 교육부
		16-2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을 종식한다.	(1) 아동학대피해아동 발견율 (2) 실종아동 미발견 건수	경찰청 복지부
		16-3	국내·국제적 차원에서 법치를 증진하며, 모두가 평등하게 사법제도의 보호를 받도록 보장한다.	(1) 법률구조건수 증감률	법무부 경찰청 행안부 인권위
		16-4	불법 자금 및 무기거래를 감소시키고, 불법취득자산의 환수와 반환조치를 강화하며, 모든 형태의 조직범죄를 퇴치한다.	(1) 범죄은닉자산 환수보전 평균액 (2) 마약범죄건수	법무부 경찰청 국정원 권익위
		16-5	부정부패와 뇌물수수를 감소시킨다.	(1) 부패경험지수	권익위
		16-6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는 정부정책과 제도를 수립·이행한다.	(1) 정부 기관 업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전부처
		16-7	포용적이며 사회 각계각층의 시민참여도가 높은 의사결정을 보장한다.	(1) 국민의 정치적 효능감 수준	전부처
		16-8	모든 사람에게 출생 등록을 포함하여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1)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존재 여부	복지부 법무부
		16-9	국내법과 국제협정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기본적 자유를 보호한다.	(1) 정보공개 청구 및 공개건수 (2) 기본적 자유 침해 경험 비율	전부처
		16-10	개도국 내 폭력, 테러 및 범죄 퇴치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한다.	(1) ODA 중 개도국 내 폭력 예방 및 테러·범죄 방지를 위한 국가기관 역량강화 지원 비중	외교부 인권위
		16-11	차별을 지양하기 위한 법과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1) 개별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존재 여부와 이행 (2) 차별 경험 비율	인권위
		16-12	디지털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1) 사이버 침해범죄 발생 대비 검거율 (2) 디지털정보격차 감소율	인권위 법무부 경찰청



세부 목표 번호	지표명	2040 목표	2022 순향도	2024 평가결과							평가대상 기간	2024 순향도
				지표값(최신 5년 가용지표)								
16-6	(1) 정부 기관 업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지속 증가			2019	2020	2021	2022	2023	2019-2023		
				중앙부처	2.3	2.4	2.6	2.4	2.5			
				국회	1.9	1.9	2.2	2.0	2.0			
				법원	2.2	2.3	2.5	2.4	2.4			
				검찰	3.7	2.3	2.5	2.4	2.4			
				경찰	2.2	2.4	2.5	2.5	2.5			
				지자체	2.4	2.6	2.6	2.6	2.6			
				평균	2.45	2.32	2.48	2.38	2.4			
※ 기관별 신뢰 정도. 6개 정부기관(중앙부처, 국회, 법원, 검찰, 경찰, 지자체)의 평균. 4점 척도 (①전혀 믿지 않는다 ~ ④매우 믿는다)의 평균 점수.												
16-7	(1) 국민의 정치적 효능감 수준	지속 증가			2019	2020	2021	2022	2023	2019-2023		
					1.9	1.6	1.7	1.6	1.6			
※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정치 효능감. "나와같은 사람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부정 문항에 대한 4점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 ~ ④매우 그렇다)의 평균 점수를 긍정적으로 변환함(5-점수)												
16-8	(1)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존재 여부	제도 도입	-	-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도입('24.7) -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미도입					-	-		
16-9	(1) 정보공개 청구 및 공개건수	지속 증가	-	〈행정자료 정보공개 청구건수 및 공개건수〉					2018-2022			
					2018	2019	2020	2021			2022	
				청구건수	671,504	846,953	836,080	891,831			882,693	
				전부공개	555,598	690,557	670,086	690,554			662,696	
				부분공개	83,128	109,836	121,521	154,261			171,702	
공개율	95.1	94.5	94.7	94.7	94.5							
16-9	(2) 기본적인 자유 침해 경험 비율	목표치 추후 보완	-	(참고)〈공공기관으로부터 인권침해 경험률 - 시민, 정치적 권리〉					-	-		
					2020	2021	2022	2023				
				(%)	8.4	9.8	10.3	9.2				
				(참고)〈사회·경제·문화적 권리의 침해 경험률〉								
					2020	2021	2022	2023				
(%)	22.1	14.6	14.2	13.9								
* 지난 1년동안 침해를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												
16-10	(1) ODA 중 개도국 내 폭력 예방 및 테러·범죄 방지를 위한 국가기관 역량강화 지원 비중	지속 증가	-	-					-	-		
16-11	(1) 개별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존재 여부와 이행	제도 도입	-	-					-	-		

세부 목표 번호	지표명	2040 목표	2022 순향도	2024 평가결과					평가대상 기간	2024 순향도
				지표값(최신 5년 가용지표)						
	(2) 차별 경험 비율	지속 감소		2019	2020	2021	2022	2023	2019-2023	
				(%)	28.2	29.5	19.4	14.3		
16-12	(1) 사이버 침해범죄 발생 대비 검거율	지속 증가		2018	2019	2020	2021	2022	2018-2022	
				(%)	75.0	73.4	67.5	63.7		
	(2) 디지털정보격차 감소율	지속 증가		<b>&lt;일반국민 대비 취약계층 디지털정보화 종합수준&gt;</b>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68.9    69.9    72.7    75.4    76.2    76.9 ※ 일반국민(=100) 대비 4대 취약계층(장애인·저소득층·농어민·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					2014-2023 주1)	

주1) 목표순향도 평가방법(목표방향만 명시, 맑음 또는 맑/흐)에 따라 장기시계열(10년치)의 추세를 함께 고려함

K-SDG 목표 16은 평화, 정의, 포용을 증진하고자 하며, 폭력의 감소, 특히 아동에 대한 폭력의 종식, 법치 증진과 사법적 보호의 보장, 불법자산의 환수 강화와 조직범죄 퇴치, 부정부패와 뇌물수수 감소,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는 정부와 제도, 포용적인 의사결정 보장 등을 과제로 한다. 순향도 평가가 실시된 13개 지표 중 2개만이 ‘맑음’으로 평가되었고, 2개는 ‘맑거나 흐림’, 7개가 정체상태인 ‘흐림’으로 평가되었으며, 나머지 2개는 ‘뇌우’로 평가되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발견율과 디지털정보격차 감소율은 지난번 평가와 같이 ‘맑음’을 유지하였다. 취약계층의 디지털정보격차는 매년 조금씩 개선추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일반국민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둘 때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고령층의 취약계층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76.9로 평가되었다. 한편 범죄은닉자산 환수보전액과 차별을 경험한 국민의 비율은 연도별 등락이 다소 큰 가운데 약한 개선 추세를 나타내 ‘맑거나 흐림’으로 평가되었다.

범죄 발생비의 경우 살인, 강도, 폭행·상해 범죄는 전반적으로 감소세인 가운데 성폭력 범죄가 최근 뚜렷이 증가하였다.

정부 업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국민의 정치적 효능감, 그리고 부패경험지수는 지난번 평가에 개선 추세로 평가되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정체상태(‘흐림’)으로 평가되었다. 정부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단 부패경험지수는 최근 측정방식이 변경된 바 있어 추세에 대한 해석은 주의를 요한다.

마약범죄 건수와 사이버침해범죄 검거율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지난번 평가에 이어 ‘뇌우’가 유지되었다. 법률구조 실적의 경우 2000년대 이래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연간 19만여 건에 이르렀으나 이후 코로나19에 따른 대면상담 제약 등으로 몇 년간 크게 줄다가 2023년에는 전년 대비 6.6% 증가하였다. 지난번 평가에는 ‘뇌우’로 평가되었으나 이번에는 ‘흐림’으로 평가되었다.

목표 17 지구촌 협력 강화



목표 번호	목표명	세부 목표 번호	세부목표	지표	소관부처
목표 17	지구촌 협력 강화	17-1	ODA를 확대하고 개발재원을 다양화한다.	(1) ODA/GNI 비율(%)	외교부 기재부 국조실
		17-2	다자무역체제를 촉진하고 개도국의 교역 및 투자증대를 지원한다.	(1) 개도국과의 교역비중 (2) 개도국에 대한 투자규모	기재부 지속위
		17-3	개도국의 과학기술혁신시스템 강화를 지원한다.	(1) 개도국의 과학기술혁신 지원 내용이 포함된 ODA 전략·정책 건수	외교부 기재부 과기부 지속위
		17-4	전략적인 개발협력을 추진한다.	(1) 신남방, 신북방 등과 같은 주요 대외 정책과 연계된 ODA 사업 비율	외교부 기재부 국조실
		17-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일관성을 강화한다.	(1) PCSD 원칙의 전략적·입법적 명시, SDG 목표와 국가예산의 연계, SDG 이행을 위한 정책조정기구 등 정책일관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여부 (2) 전년 대비 개선된 K-SDGs 지표 비율	지속위
		17-6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1) 다자간 국제협력협의체 운영 및 다자간 협력대화 건수	외교부 지속위
		17-7	효과적인 공공, 공공-민간 및 시민사회간 파트너십을 권장하고 촉진한다.	(1) SDGs 이행을 위한 민관협의체 참여기관 및 정례회의 건수 (2) ODA 민관협력 재원의 비율	외교부 지속위

세부 목표 번호	지표명	2040 목표	2022 순향도	2024 평가결과							평가대상 결과	2024 순향도
				지표값(최신 5년 가용지표)								
17-1	(1) GNI 대비 ODA	지속 증가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잠정치)	2013-2022 주1)	
				(%)	0.14	0.15	0.14	0.16	0.17	0.18		
17-2	(1) 개도국과의 교역비중	지속 증가	-		2019	2020	2021	2022	2023		2018-2023	
				(%)	57.0	55.2	54.8	55.7	54.7			
	(2) 개도국에 대한 투자규모	지속 증가	-		2019	2020	2021	2022	2023		2018-2023	
				(%)	52.4	48.6	43.9	42.4	34.0			
17-3	(1) 개도국의 과학기술혁신 지원 내용이 포함된 ODA 전략·정책 건수	지속 증가	-		-						-	-
17-4	(1) 신남방, 신북방 등과 같은 주요 대외 정책과 연계된 ODA 사업 비율	지속 증가	-		-						-	-

세부 목표 번호	지표명	2040 목표	2022 순향도	2024 평가결과									
				지표값(최신 5년 가용지표)	평가대상 결과	2024 순향도							
17-5	(1) PCSD 원칙의 전략적·입법적 명시, SDG 목표와 국가 예산의 연계, SDG 이행을 위한 정책조정기구 등 정책 일관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여부	증가	-	-	-	-							
	(2) 전년 대비 개선된 K-SDGs 지표 비율	증가	-	<2022년 평가 대비 순향도 등급 변화 비율>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개선</th> <th>등급 유지</th> <th>악화</th> </tr> </thead> <tbody> <tr> <td>(%)</td> <td>20.4</td> <td>57.9</td> <td>21.7</td> </tr> </tbody> </table> - 2022년 및 2024년 평가 모두 순향도 등급이 제시된 K-SDG 152개 지표 중 31개(20.4%) 지표의 순향도 평가 등급이 지난해 대비 개선되었고, 33개(21.7%)는 악화됨				개선	등급 유지	악화	(%)	20.4	57.9
	개선	등급 유지	악화										
(%)	20.4	57.9	21.7										
17-6	(1) 다자간 국제협력협의체 운영 및 다자간 협력대화 건수	지속 증가	-	-	-	-							
17-7	(1) SDGs 이행을 위한 민관협의체 참여기관 및 정례회의 건수	지속 증가	-	(참고) <유엔글로벌컴팩트에 가입한 COP/COE 수>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2018</th> <th>2020</th> </tr> </thead> <tbody> <tr> <td>가입 COP/COE</td> <td>256개</td> <td>238개</td> </tr> </tbody> </table>			구 분	2018	2020	가입 COP/COE	256개	238개	
	구 분	2018	2020										
가입 COP/COE	256개	238개											
	(2) ODA 민관협력 재원의 비율	지속 증가	-	-	-	-							

주1) 목표순향도 평가방법(목표방향만 명시, 맑음 또는 맑/흐)에 따라 장기시계열(10년치)의 추세를 함께 고려함

K-SDG 17번 목표는 지구촌 협력 강화를 지향하며, 공적개발원조(ODA)의 확대 및 다양한 측면에서의 개발협력 강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일관성 강화,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십과 공공-민간 파트너십의 강화를 과제로 한다. 정량적 추세를 바탕으로 순향도 평가가 실시된 3개 지표 중 1개는 '맑음', 1개는 '흐림', 1개는 '뇌우'로 평가되었다.

한국은 200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ODA 규모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2022년 기준 GNI 대비 ODA 비율은 0.17%에 이르렀으며, 장·단기 모두 증가 추세로('맑음') 평가되었다. 다만, 이 수치는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0.7% 및 OECD DAC 회원국 평균인 0.32%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한편, 개도국과의 교역 비중은 정체상태('흐림')로, 투자 규모는 뚜렷이 줄어들어 '뇌우'로 평가되었다.

한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정합성(PCSD,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원칙을 국내 정책과 제도에 반영하는 것도 K-SDG 지표 중 하나이다.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수평적(부문/부처간) 및 수직적(국가-지방 및 국제-국내) 정책정합성 원칙이 법령에 반영되었고,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가 그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SDG 및 국내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국가예산의 연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제3절 요약 및 총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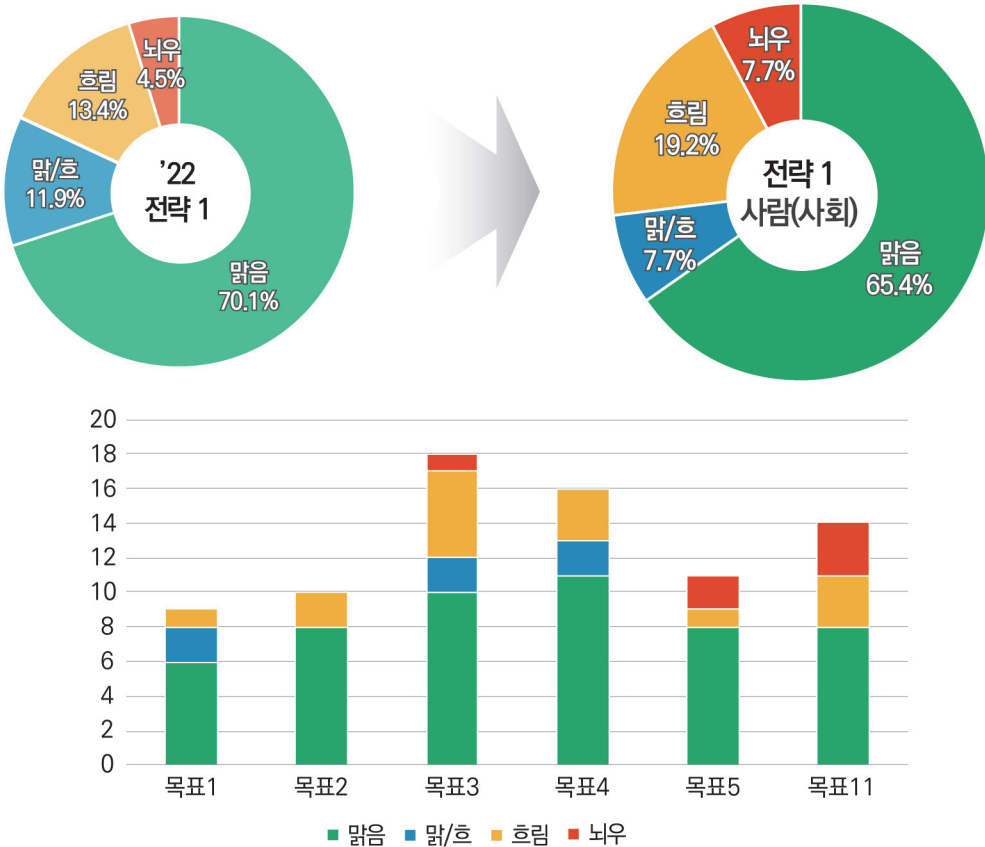
## 1. K-SDG 목표순향도 평가 결과: 전략별 요약

이번 2024년도 평가에서는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서 수립된 K-SDG 총 236개 지표 중 목표순향도 평가에 필요한 시계열자료가 확보된 176개 지표에 대해 정량적 추세분석에 기반한 목표순향도 평가가 실시되었다. K-SDG 각 지표에 대한 목표순향도 평가결과를 4대 전략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전략 1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

구분	맑음 	맑거나 흐림 	흐림 	뇌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1) 중위가처분소득 50%기준 상대빈곤율</li> <li>- 1-1.(2) 복지급여 (소득보장) 예산 및 GDP 대비 비율</li> <li>- 1-2.(2) 고용보험 가입률</li> <li>- 1-3.(1) GDP 대비 공적사회 지출 비중</li> <li>- 1-3.(2)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li> <li>- 1-4.(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사망률의 비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1) 의료비 가계 직접 본인부담률</li> <li>- 1-2.(3)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1) 취약계층 긴급복지지원 예산 및 비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1) 소득수준 하위가구 식품안정성 확보가구</li> <li>- 2-2.(2)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li> <li>- 2-3.(2) 농경지 토양유기물 함량</li> <li>- 2-3.(3) 밭토양 산도</li> <li>- 2-4.(1) 중장기 보존시설에 확보된 식물유전자원 점수</li> <li>- 2-4.(2) 중장기 보존시설에 확보된 동물유전자원 점수</li> <li>- 2-4.(3)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개발된 품종 수</li> <li>- 2-5.(1) 정부비축미 평균재고량 (만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1) 농가소득</li> <li>- 2-3.(1) 유기농업 인증면적 비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1.(3) 성인 흡연율</li> <li>- 3-2.(2) 15세이상인구 1인당 알코올 섭취량(ℓ)</li> <li>- 3-4.(1) 인구 십만 명당 결핵신고 신원자율</li> <li>- 3-5.(1) 모성사망비</li> <li>- 3-6.(1) 출생아 1천 명당 신생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1.(1) 심혈관질환, 암, 당뇨,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li> <li>- 3-3.(1) 인구 1천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1.(2) 당뇨병 조절률</li> <li>- 3-2.(1)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li> <li>- 3-4.(2) 인구 십만 명당 말라리아 발생률</li> <li>- 3-6.(3) 아동 청소년 비만 유병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1.(4) 장애인 만성질환 유병률</li> </ul>

구분	맑음	맑거나 흐림	흐림	뇌우
				
	사망률 - 3-6.(2)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 - 3-7.(1) 인구가중 초미세먼지 (PM2.5) 농도 - 3-7.(2) 인체 내 환경유해물질 농도 수준 - 3-8.(1) 영아사망률 - 3-8.(4) 기능제한 없는 노인인구 비율		- 3-8.(3)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	
	- 4-1.(1) 취학률 - 4-1.(2) 국제학업성취도 평가 (PISA 2~6수준 학생비율) - 4-2.(2) 초등학교 취학 전 체계적인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 이용률 - 4-2.(3)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 - 4-3.(1) 고등교육 이수율 - 4-8.(1)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율 - 4-8.(2) 학교 내진보강률 - 4-8.(3) Wee 클래스 설치 비율 - 4-10.(1) 교사1인당 학생 수 - 4-10.(2) 보육교사 중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비율 - 4-10.(4) 초·중등 전문상담교사 배치 비율	- 4-6.(2) 성인 문해율 - 4-10.(3) 특수교사 1인당 특수학생 수	- 4-3.(2) 학생 1인당 국가장학금 수혜 금액 - 4-4.(1) 평생학습 참여율 - 4-4.(2) 직업교육 훈련 경험 비율	
	- 5-1.(1)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률 - 5-3.(1) 맞벌이가구 여성대비 남성의 가정 내 무보수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 시간 비율 - 5-4.(1) 의회와 지방의회의 여성 비율 - 5-4.(2)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과제 목표 달성률 - 5-4.(3) 민간부문 여성 관리자 비율 - 5-5.(2) 초·중·고등학교에서 성교육을 수행한 비율 - 5-5.(3) 피임 실천율 - 5-6.(1) 성별 스마트폰 보유율		- 5-7.(1)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의견 수용률	- 5-2.(2) 성폭력 발생 사건 및 미검거율 - 5-2.(3) 디지털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 및 미검거율
	- 11-1.(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11-1.(2) 공공임대주택 공급호수 - 11-1.(3) 주거급여 수급가구수 및 재정 집행액 - 11-2.(2) 저상버스 보급률 - 11-4.(1) 세계유산 등재건수 - 11-6.(1) 미세먼지 나쁨일수 - 11-6.(2)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 11_7.(1) 1인당 도시공원 면적		- 11-4.(2)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 예산 - 11-6.(3)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 11-7.(2) 공원시설 접근이 용이한 인구 비중	- 11-2.(1)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 11-2.(3) 자전거 수단분담률 - 11-5.(1) 인구 십만명당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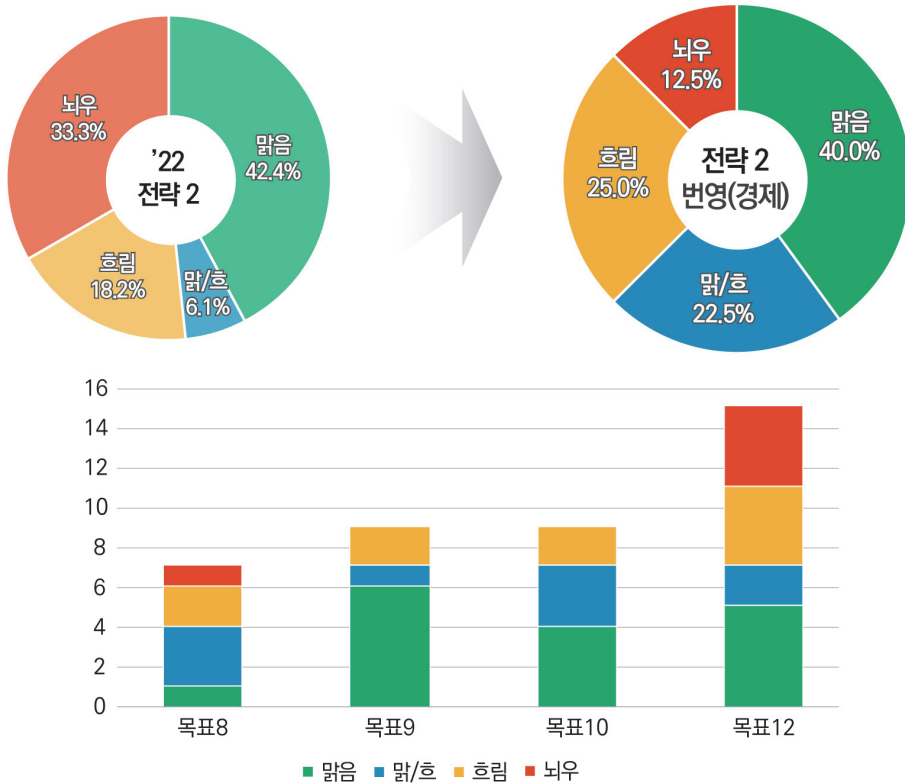
[그림 2-3] 사회 부문(전략1) 평가결과 요약 -평가등급별 비중

사회(사람) 부문의 K-SDG 전략인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는 “(목표 1)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목표 2)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목표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목표 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목표 5) 성평등 보장”, 그리고 “(목표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으로 구성된다. 6개 목표에 걸쳐 총 78개의 지표가 순항도 평가되었으며, 51개(65.4%) 지표가 ‘맑음☀️’, 6개(7.7%) 지표가 ‘맑거나 흐림☁️’, 15개(19.2%) 지표가 ‘흐림☁️’, 6개(7.7%) 지표가 ‘뇌우⚡’로 평가되었다.

사회 부문은 이번 평가에서 4대 전략 중 ‘맑음’(65.4%)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맑거나 흐림’(7.7%)을 더하면 약 3/4에 해당하는 지표(73.1%)들이 목표방향으로 진행 중인 것이다. 다만 이전의 2022년 평가에 비해서는 ‘맑음’(70.1→65.4%)의 비중이 줄고 ‘뇌우’(4.3→7.7%)가 증가한 양상이다. 사회 부문에서 평가된 총 78개 지표 중 6개(7.7%)는 ‘뇌우’, 15개(19.2%)는 ‘흐림’으로 평가되었다.

**전략 2 혁신적 성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구분	맑음	맑거나 흐림	흐림	뇌우
				
<p><b>8</b>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5.(1) 이주노동자 고용 비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2.(1) 인구집단별 고용률(성별, 연령별, 장애여부별)</li> <li>- 8-4.(1) 남녀임금격차</li> <li>- 8-6.(1) 사고사망 만인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1.(1) 연간 1인당 실질 GDP 성장률</li> <li>- 8-2.(2)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6.(2) 전체 재해율</li> </ul>
<p><b>9</b> 산업의 성장과 혁신 활성화 및 사회기반시설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1.(1) 도로보급률</li> <li>- 9-1.(2) 일반국민대비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li> <li>- 9-2.(2) 데이터산업 시장 규모</li> <li>- 9-4.(1) GDP 대비 연구개발비</li> <li>- 9-4.(2) 경제활동 1천 명당 (전일제) 연구자 수</li> <li>- 9-5.(1)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5.(2)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재활용 비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2.(3) 산업집중도</li> <li>- 9-3.(2) 세계혁신지수(GII)의 종합점수 또는 혁신산출점수</li> </ul>	
<p><b>10</b>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2.(1) 소득 5분위 배율</li> <li>- 10-3.(2) 장애인 의무고용률</li> <li>- 10-4.(1) GDP대비 노동소득 분배율</li> <li>- 10-5.(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통합조례 제정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1.(1) 전체 인구의 균등화한 가구소득 대비 소득하위 40% 인구의 균등화한 가구소득의 비율</li> <li>- 10-1.(2) 소득격차 비율</li> <li>- 10-3.(1) 인구집단별 고용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2.(2) 소득 1, 2분위 가구의 순자산 점유율</li> <li>- 10-5.(3) 국민 다문화 수용성 지표</li> </ul>	
<p><b>12</b>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1.(1) 자원순환기본계획 및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건수</li> <li>- 12-5.(2) 사업장폐기물의 재활용률</li> <li>- 12-6.(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기업 수</li> <li>- 12-8.(1) 인구대비 환경교육 수혜자 비율</li> <li>- 12-8.(2) 일반 국민의 환경의식 수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9.(1)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li> <li>- 12-9.(2)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2.(1) 국내 1인당 자원소비량</li> <li>- 12-2.(2) 물질흐름분석(MFA) 구축 대상 자원수</li> <li>- 12-3.(2) 1인당 식품폐기물 발생량</li> <li>- 12-4.(2) 사고대비 화학물질 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4.(3) 1인당 유해폐기물 발생량</li> <li>- 12-5.(1)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li> <li>- 12-6.(2) 녹색경영 참여기업 수</li> <li>- 12-11.(1) GDP 대비 화석연료 보조금 비율</li> </ul>



[그림 2-4] 경제 부문(전략2) 평가결과 요약 -평가등급별 비중

경제(변영) 부문의 K-SDG 전략인 “혁신적 성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는 “(목표 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목표 9) 산업의 성장과 혁신 활성화 및 사회기반시설 구축”, “(목표 10)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목표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가 포함된다. 4개 목표에 걸쳐 순항도 평가가 실시된 지표는 총 40개이며, 이 중 16개(40.0%) 지표가 ‘맑음☀️’, 9개(22.5%) 지표가 ‘맑거나 흐림☁️’, 10개(25.0%) 지표가 ‘흐림☁️’, 5개(12.5%) 지표가 ‘뇌우⚡️’로 평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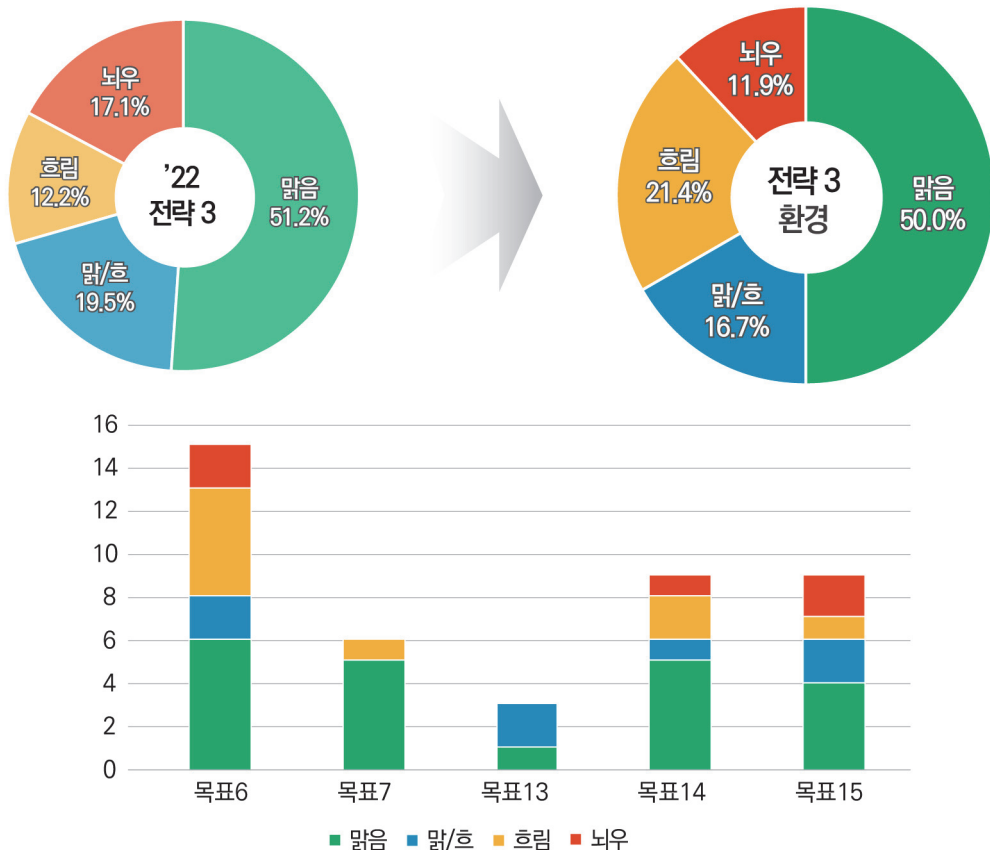
경제 부문은 4대 전략 중 맑음(40.0%)의 비중이 비교적 적은 편이나, 2022년 평가에 비하면 ‘뇌우’(33.3→12.5%)가 크게 줄고 대신 ‘흐림’(18.2→25.0%)과 ‘맑거나 흐림’(6.1→22.5%)이 늘어나 전반적으로 순항도는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인당 실질GDP 성장률(8-1(1))의 경우 코로나19 당시 위축되었던 경기가 회복세에 들어서면서 ‘뇌우’였던 평가가 ‘흐림’으로 한 단계 상승하였다.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발간기업 수(12-6(1))의 경우 최근 ESG 경영이 부상하면서 급격히 늘어나 ‘뇌우’에서 ‘맑음’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경제 부문에서 평가대상 총 40개 지표 중 5개(12.5%)는 ‘뇌우’, 10개(25.0%)는 ‘흐림’으로 나타났다.

**전략 3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리는 깨끗한 환경**

구분	맑음 	맑거나 흐림 	흐림 	뇌우 
<b>6</b>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1.(2) 농어촌 지역 상수도 보급률</li> <li>- 6-2.(1)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li> <li>- 6-3.(1) 유역별 물순환율</li> <li>- 6-4.(1) 상수도 누수율</li> <li>- 6-5.(2) 어류건강성 평가지수 (FAI)</li> <li>- 6-5.(3) 습지와 습지보호지역 면적 증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1.(1) 수돗물 만족도</li> <li>- 6-2.(2) 하수도 정비중점관리지역 정비대책수립 개소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3.(2) 수질목표기준 달성도</li> <li>- 6-3.(3) 신규오염물질 관리항목수</li> <li>- 6-4.(3) 하수처리수 재이용율</li> <li>- 6-5.(1) 서식 및 수변 환경 평가지수 (HRI)</li> <li>- 6-6.(2) 수질보전활동 지원 예산 반영 비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4.(2) 지방 상수도 지급률</li> <li>- 6-6.(1) 물 관련 행정기관위원회 운영 실적</li> </ul>
<b>7</b>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1.(1)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수</li> <li>- 7-2.(1)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li> <li>- 7-2.(2) 1차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li> <li>- 7-3.(2) 건물에너지 효율 지표</li> <li>- 7-4.(1) 친환경차 확대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4.(2) 운송부문 에너지 총소비량</li> </ul>	
<b>13</b> 기후변화와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3.(1) 공공기관 적응대책 수립·이행 비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1.(1) 방재시설 집행 비율</li> <li>- 13-4.(1)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li> </ul>		
<b>14</b> 해양생태계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1.(2) 해양쓰레기 수거량</li> <li>- 14-2.(2) 바다숲 조성 누적 면적</li> <li>- 14-7.(2) 국내 해양수산과학 기술이전 건수</li> <li>- 14-7.(3) 정부의 ODA 중 해양수산분야 무상원조 규모</li> <li>- 14-8.(1) 국내 3톤 이상 4톤 미만 어선의 어선원 보험 가입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5.(1) 해양보호구역 지정 면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1.(1) 수질평가 지수값(WQI)을 이용한 생태기반 해역별 해수수질 기준 달성률</li> <li>- 14-7.(1) 정부연구개발예산 대비 해양수산연구개발 투자비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6.(2)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어가소득</li> </ul>
<b>15</b> 육상생태계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1.(1) 육상 및 담수 생물다양성을 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비율</li> <li>- 15-6.(1) 외래생물 관리 대상종수</li> <li>- 15-6.(2) 산림병해충에 의한 연간 산림피해 면적</li> <li>- 15-7.(2) 도심/생활권 복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4.(1)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지정 수 및 개장 수</li> <li>- 15-7.(1) 백두대간 등 산림복원 면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4.(4) 종보호지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1.(2) 총 육지면적 중 산림면적 비율</li> <li>- 15-5.(1)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실적</li> </ul>







환경 부문의 K-SDG 전략인 “미래 세대가 누리는 깨끗한 환경”은 “(목표 6)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목표 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목표 13) 기후변화와 대응”, “(목표 14) 해양생태계 보전”, “(목표 15) 육상생태계 보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략 3에서는 5개 목표에 걸쳐 총 42개의 지표가 목표순향도 평가에 활용되었다. 이 중 21개(50.0%) 지표가 ‘맑음☀️’, 7개(16.7%) 지표가 ‘맑거나 흐림☁️’, 9개(21.4%) 지표가 ‘흐림☁️’, 5개(11.9%) 지표가 ‘뇌우⚡’로 평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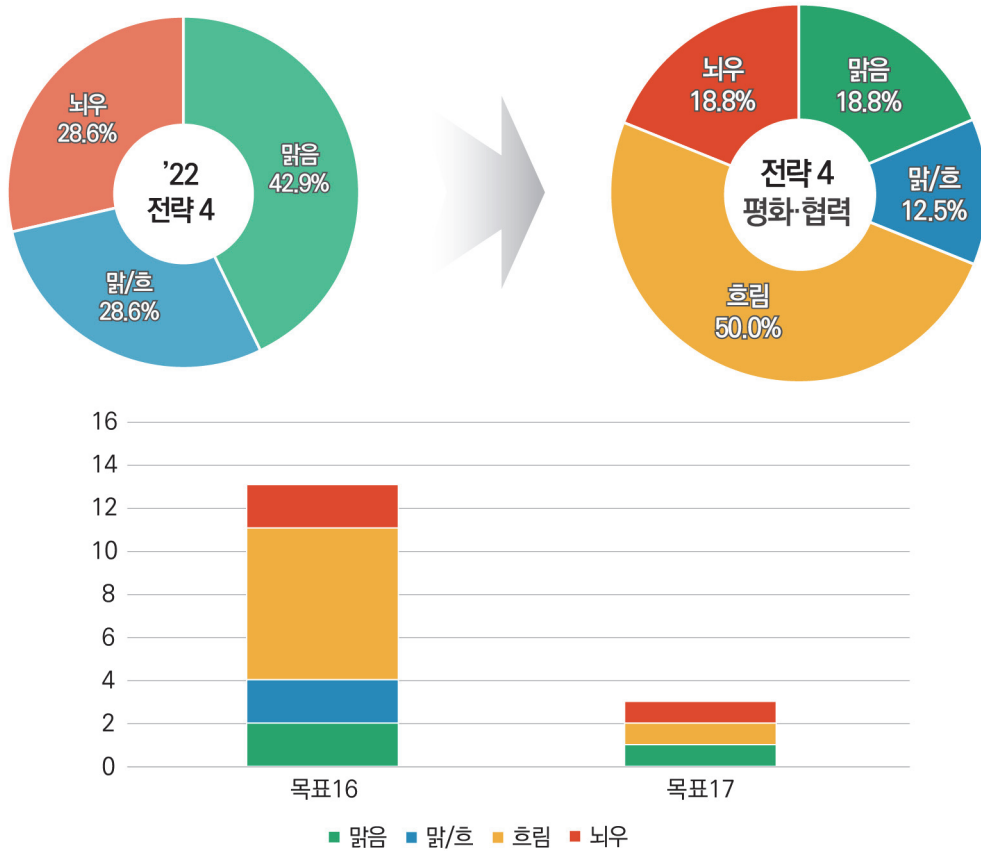
환경부문 중 절반(50.0%)의 지표가 ‘맑음’으로 평가되었고, 여기에 맑거나 ‘흐림’(16.7%)을 더하면 환경부문 지표의 2/3가 목표방향으로 진행 중(66.7%)인 것이다. 2022년과 비교하면 ‘뇌우’(17.1→11.9%)가 줄고 ‘흐림’(12.2→21.4%)이 늘어난 편이다. 환경 부문의 평가대상 총 42개 지표 중 5개(11.9%)는 ‘뇌우’, 9개(21.4%)는 ‘흐림’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2-5] 환경 부문(전략3) 평가결과 요약 -평가등급별 비중

**전략 4 지구촌 평화와 협력강화**

구분	맑음 	맑거나 흐림 	흐림 	뇌우 
<b>16</b> 평화·정의·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2.(1) 아동학대피해아동 발견율</li> <li>- 16-12.(2) 디지털정보격차 감소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4.(1) 범죄은닉자산 환수보전 평균액</li> <li>- 16-11.(2) 차별 경험비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1.(1) 범죄 발생비(살인, 강도, 폭력, 성범죄)</li> <li>- 16-1.(2) 학교폭력 피해 경험</li> <li>- 16-3.(1) 법률구조건수 증감률</li> <li>- 16-5.(1) 부패경험자수</li> <li>- 16-6.(1) 정부 기관 업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li> <li>- 16-7.(1) 국민의 정치적 효능감 수준</li> <li>- 16-9.(1) 정보공개 청구 및 공개건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4.(2) 마약범죄건수</li> <li>- 16-12.(1) 사이버 침해범죄 발생 대비 검거율</li> </ul>
<b>17</b> 지구촌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1.(1) GNI 대비 ODA 비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2.(1) 개도국과의 교역 비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2.(2) 개도국에 대한 투자규모</li> </ul>



[그림 2-6] 평화·협력 부문(전략4) 평가결과 요약 -평가등급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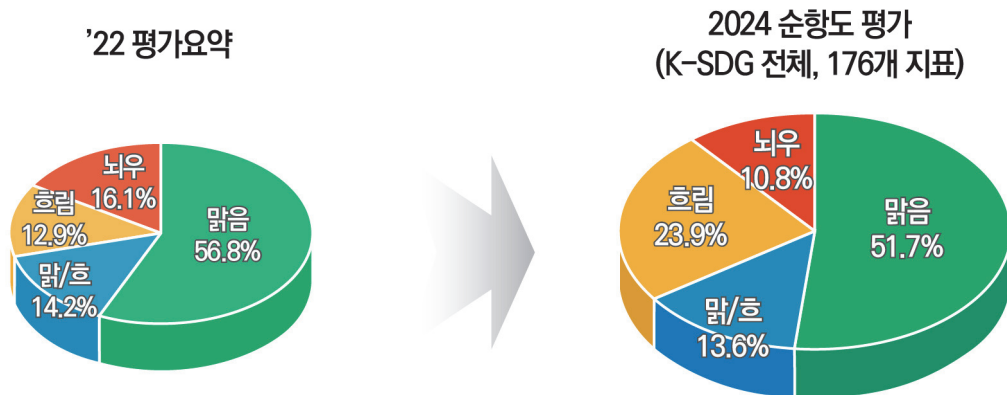
평화·협력 부문의 K-SDG 전략인 “지구촌 평화와 협력 강화”는 “(목표 16) 평화·정의·포용”, 그리고 “(목표 17) 지구촌 협력 강화”로 구성된다. 이 2개 목표에서 순향도 평가가 실시된 16개 지표 중 ‘맑음☀️’이 3개(18.8%), ‘맑거나 흐림☁️’이 2개(12.5%), ‘흐림☁️’이 8개(50.0%), ‘뇌우⚡’가 3개(18.8%)이다.

평화·협력 부문은 지표 및 목표의 수가 다른 부문에 비해 크게 적지만, 이번 평가에서 ‘흐림’(50.0%)이 절반을 차지하여 목표를 향한 순향도가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 ‘뇌우’와 ‘흐림’을 합하면 평화·협력 부문 지표의 2/3 이상이 목표달성이 어려울 전망이다(68.8%)이다. 2022년과 비교하면 ‘뇌우’(28.6→18.8%)뿐 아니라 ‘맑음’(42.9→18.8%)과 ‘맑거나 흐림’(28.6→12.5%) 모두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흐림’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 2. 주요 결과 및 시사점

K-SDG 17개 목표 전체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면, 목표순향도 평가체계의 4단계 평가등급 중 ‘맑음’으로 평가된 지표가 절반 정도(5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 다음 등급인 ‘맑거나 흐림’이 13.6%, ‘흐림’은 23.9%, ‘뇌우’는 10.8%로 집계된다. 지난번인 2022년 평가결과와 비교하면, 당시 56.8%에 해당하던 ‘맑음’ 지표의 비중이 다소 줄어들었고 동시에 당시 16.1%이던 ‘뇌우’도 줄어든 한편, 정체를 나타내는 ‘흐림’ 지표는 당시 12.9%로부터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목표순향도 평가체계에서 현 추세가 유지된다면 2040 목표가 달성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 등급이 ‘맑음’(51.7%)뿐임을 고려하면, K-SDG 지표 중 약 절반 정도에 대해 현재의 추세가 유지된다면 목표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맑거나 흐림’으로 평가된 13.6%를 더하면 ‘맑음’ 또는 ‘맑거나 흐림’은 65.3%를 차지하여, K-SDG의 약 2/3 정도가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흐림’(23.9%)으로 평가된 약 1/4의 지표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정체 중이며, ‘뇌우’로 평가된 10.8%의 지표는 목표와 반대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다만 구득가능한 최근 5년치 통계의 추세를 바탕으로 평가하므로 2022년 평가와 마찬가지로 이번 평가에서도 다수의 지표들이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림 2-7] 전체 평가결과 요약 -평가등급별 비중

〈표 2-2〉 2022년 평가와의 비교- 평가등급별 비중

	2022년 평가	2024년 평가
맑음	56.8%	51.7%
맑거나 흐림	14.2%	13.6%
흐림	12.9%	23.9%
뇌우	16.1%	10.8%

평가결과를 통해 국가 지속가능성의 취약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뇌우’와 ‘흐림’ 등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 지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평가에서 ‘뇌우’(목표와 반대방향으로 진행 중)로 평가된 총 19개 지표(표 2-3)는 사회 부문에 6개, 경제 부문 5개, 환경 부문 5개, 평화·협력 부문 3개이다. 이 중 산업재해율(8-6-(2)), 생활폐기물 재활용률(12-5-(1)), 지방상수도 자급률(6-4-(2)), 산림면적 비율(15-1(2)), 사이버범죄 검거율(16-12-(1))을 비롯한 9개는 2022년과 이번 평가에서 연속으로 뇌우로 평가되어(표 2-4), 더욱 주의를 요한다.

〈표 2-3〉 2024 평가결과: 악화 추세(“뇌우”)인 지표

	전략1: 사람 (사회)	전략2: 번영 (경제)	전략3: 환경	전략4: 평화·협력
	6개	5개	5개	3개
뇌우 (19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1(4) 장애인 만성질환 유병률</li> <li>- 5-2(2) 성폭력 발생사건 및 미검거율</li> <li>- 5-2(3) 디지털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 및 미검거율</li> <li>- 11-2(1) 대중교통 수단분담률</li> <li>- 11-2(3) 자전거 수단분담률</li> <li>- 11-5(1) 인구 십만 명당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인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6(2) 전체 재해율</li> <li>- 12-4(3) 1인당 유해폐기물 발생량</li> <li>- 12-5(1)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li> <li>- 12-6(2) 녹색경영 참여 기업 수</li> <li>- 12-11(1) GDP 대비 화석연료 보조금 비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4(2) 지방 상수도 자급률</li> <li>- 6-6(1) 물 관련 행정기관위원회 운영 실적</li> <li>- 14-6(2)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어가소득</li> <li>- 15-1(2) 총 육지면적 중 산림면적 비율</li> <li>- 15-5(1)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실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4(2) 마약범죄건수</li> <li>- 16-12(1) 사이버 침해범죄 발생 대비 검거율</li> <li>- 17-2(2) 개도국에 대한 투자규모</li> </ul>

〈표 2-4〉 지속적으로 악화 추세인 지표(2022, 2024 평가결과 연속으로 “뇌우”)

	전략1: 사람 (사회)	전략2: 번영 (경제)	전략3: 환경	전략4: 평화·협력
	0개	4개	3개	2개
지속 악화 (9개)		- 8-6(2) 전체 재해율 - 12-4(3) 1인당 유해폐 기물 발생량 - 12-5(1)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 - 12-6(2) 녹색경영 참 여 기업 수	- 6-4(2) 지방상수도 자 급률 - 14-6(2)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어가소득 - 15-1(2) 총 육지면적 중 산림면적 비율	- 16-4(2) 마약범죄건수 - 16-12(1) 사이버 침해 범죄 발생 대비 검거율

한편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정체 중인 ‘흐림’ 지표는 총 42개로(표 2-5), 이 중 사회 부문이 15개, 경제 부문이 10개, 환경 부문 9개, 평화·협력 부문 8개이다. 이 중 자살률(3-2-(1)), 취약계층 긴급복지지원 예산(1-4-(1)), 비정규직 비율(8-2-(2)) 지표 등이 여기 포함된다.

〈표 2-5〉 2024 평가결과: 정체(“흐림”) 중인 지표

	전략1: 사람 (사회)	전략2: 번영 (경제)	전략3: 환경	전략4: 평화·협력
	15개	10개	9개	8개
흐림 (44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1) 취약계층 긴급 복지지원 예산 및 비율</li> <li>- 2-2(1) 농가소득</li> <li>- 2-3(1) 유기농업 인증 면적 비율</li> <li>- 3-1(2) 당뇨병 조절률</li> <li>- 3-2(1)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li> <li>- 3-4(2) 인구 십만 명당 말라리아 발생률</li> <li>- 3-6(3) 아동 청소년 비만 유병률</li> <li>- 3-8(3)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li> <li>- 4-3(2) 학생 1인당 국가장학금 수혜 금액</li> <li>- 4-4(1) 평생학습 참여율</li> <li>- 4-4(2) 직업교육 훈련 경험 비율</li> <li>- 5-7(1)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건의 수용률</li> <li>- 11-4(2)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 예산</li> <li>- 11-6(3)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발생량</li> <li>- 11-7(2) 공원시설 접근이 용이한 인구 비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1(1) 연간 1인당 실질 GDP 성장률</li> <li>- 8-2(2)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li> <li>- 9-2(3) 산업집중도</li> <li>- 9-3(2) 세계혁신지수(GII)의 종합점수 또는 혁신산출점수</li> <li>- 10-2(2) 소득 1, 2분위 가구의 순자산 점유율</li> <li>- 10-5(3) 국민 다문화 수용성 지표</li> <li>- 12-2(1) 국내 1인당 자원소비량</li> <li>- 12-2(2) 물질흐름분석(MFA) 구축대상자원수</li> <li>- 12-3(2) 1인당 식품폐기물 발생량</li> <li>- 12-4(2) 사고대비 화학물질 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3(2) 수질목표기준 달성도</li> <li>- 6-3(3) 신규오염물질 관리항목수</li> <li>- 6-4(3) 하수처리수 재이용율</li> <li>- 6-5(1) 서식 및 수변환경 평가지수(HRI)</li> <li>- 6-6(2) 수질보전활동 지원 예산 반영 비율</li> <li>- 7-4(2) 운송부문 에너지 총소비량</li> <li>- 14-1(1) 수질평가 지수값(WQI)을 이용한 생태기반 해역별 해수수질 기준 달성률</li> <li>- 14-7(1) 정부연구개발 예산 대비 해양수산 연구개발 투자비중</li> <li>- 15-4(4) 종보호지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1(1) 범죄 발생비(살인, 강도, 폭력, 성범죄)</li> <li>- 16-1(2) 학교폭력 피해 경험</li> <li>- 16-3(1) 법률구조건수 증감률</li> <li>- 16-5(1) 부패경험지수</li> <li>- 16-6(1) 정부 기관 업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li> <li>- 16-7(1) 국민의 정치적 효능감 수준</li> <li>- 16-9(1) 정보공개 청구 및 공개건수</li> <li>- 17-2(1) 개도국과의 교역 비중</li> </ul>

〈표 2-6〉에는 2022년 평가에는 목표를 향해 진행되고 있었으나(‘맑음’ 또는 ‘맑거나 흐림’) 2024년 평가에서 ‘흐림’ 또는 ‘뇌우’로 평가된, 최근 추세가 악화된 지표들을 나타내었다. 취약계층 긴급복지 지원 예산(1-4-(1)), GDP 대비 화석연료 보조금 비율(12-11(1)), 학교폭력 피해 경험(16-1-(2))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표 2-6〉 최근 추세가 악화된 지표(2022 평가 “맑거나 흐림” 또는 “맑음”→2024 평가 “흐림” 또는 “뇌우”)

	전략1: 사람 (사회)	전략2: 번영 (경제)	전략3: 환경	전략4: 평화·협력
	6개	2개	3개	5개
좋았다가 나빠짐 (1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1) 취약계층 긴급 복지지원 예산 및 비율</li> <li>- 2-2(1) 농가소득</li> <li>- 2-3(1) 유기농업 인증 면적 비율</li> <li>- 3-1(2) 당뇨병 조절률</li> <li>- 5-7(1)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의견 수용률</li> <li>- 11-4(2)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예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3(2) 세계혁신지수(GII)의 종합점수 또는 혁신산출점수</li> <li>- 12-11(1) GDP 대비 화석연료 보조금 비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3(2) 수질목표기준 달성도</li> <li>- 6-3(3) 신규오염물질 관리항목 수</li> <li>- 7-4(2) 운송부분 에너지 총소비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1(1) 범죄발생비</li> <li>- 16-1(2) 학교폭력 피해 경험</li> <li>- 16-5(1) 부패경험지수</li> <li>- 16-6(1) 정부기관 업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li> <li>- 16-7(1) 국민의 정치적 효능감 수준</li> </ul>

4대 전략별로 비교하면, 사회 부문(전략1)이 다른 부문에 비해 맑음(65.4%)의 비중이 가장 크고 뇌우(7.7%)가 가장 적어, 2022년도 평가와 마찬가지로 K-SDG 목표를 향한 순향도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당시 맑음이 70.1%, 뇌우가 4.5%였던 데 비하면 순향도가 다소 후퇴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경제 부문(전략2)의 경우 맑음의 비중은 40.0%로 비교적 적은 편이다. 2022년 평가에서 경제 부문(전략2)의 33.3%를 차지했던 뇌우의 비중은 12.5%로 줄어들어,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경 부문(전략3)은 등급별 비중이 전체 양상과 유사한 편이고, 평화·협력 부문(전략4)은 평화·협력 부문의 경우 지표 수가 적긴 하지만 절반이 정체 중(‘흐림’)으로 나타나 순향도가 가장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7〉 전략별 평가결과 비교 - 평가등급별 비중

	맑음	맑/흐	흐림	뇌우
전략1: 사람(사회)	65.4%	7.7%	19.2%	7.7%
전략2: 번영(경제)	40.0%	22.5%	25.0%	12.5%
전략3: 환경	50.0%	16.7%	21.4%	11.9%
전략4: 평화·협력	18.8%	12.5%	50.0%	18.8%
총계	51.7%	13.6%	23.9%	10.8%

### 3. K-SDG 지표 평가의 한계 및 개선방향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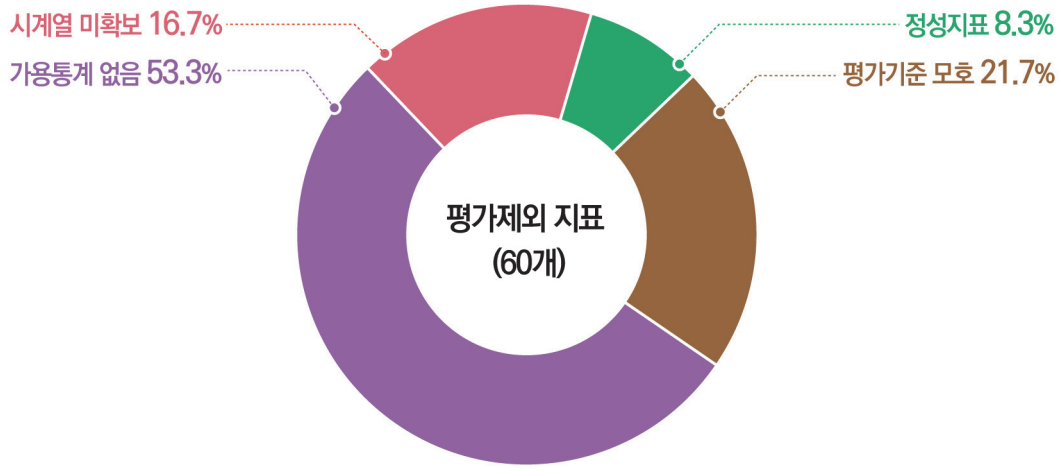
이번 평가에서 드러난 K-SDG 지표 평가의 한계를 정리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무엇보다도 국가정책과의 정합성 측면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K-SDG는 유엔 글로벌 SDG의 17개 목표 체계를 따라 국내화하여 구성된 지표이다. 유엔의 SDG는 기본적으로 개도국의 발전과 이를 위한 선진국의 지원·협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한국의 고유한 여건과 국가·사회발전을 위한 도전과제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한국의 국가의제, 분야별 정책 및 지자체 전략 등과 체계적으로 연계·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저출산, 지방소멸과 같은 한국이 당면한 중요 의제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한편 성별 스마트폰 보유율(5-6(1))과 같이 한국적 여건이나 발전과제와의 정합성이 미흡한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지표(K-SDG)는 유엔의 SDG뿐 아니라 국내의 경제·사회·환경적 여건과 지역적 균형에 대한 고려 등을 반영하여 수립되어야 하며(기본법 제2조 6호), 기본법에 명시된 지속가능발전의 추진에 관한 기본원칙(제3조), 국가기본전략 수립을 위한 10대 고려사항(제7조 2항), 경제·사회·환경·협력 분야 24대 시책(제23조~26조)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수립되고, 유엔 SDG에 따른 국제적 요구뿐 아니라 한국의 국가 의제와 분야별 정책, 지자체 전략 등과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활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표평가를 위한 통계의 구축과 지표 관리 측면이다. 이번 2024년도 평가에서는 K-SDG 총 236개 지표 중 176개 지표(74.6%)에 대해 정량적 추세분석에 기반한 목표순향도 평가가 실시되었다. 평가에서 제외된 나머지 60개 지표는 추세분석을 정량화할 수 없는 정성지표이거나, 평가기준이 모호하거나, 지표에 해당하는 가용통계가 구축되지 않았거나, 통계가 존재하지만 추세분석에 필요한 시계열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예를 들어 “시민참여 활성화 예산율”(11-3(2)), “긍정적인 가정학습 및 양육환경을 경험하는 영유아 비율”(4-2(4)) 등은 기준이 모호하고 이에 해당하는 통계가 구축되지 않은 경우이며, “교육과정내 세계시민/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요소 반영비율”(4-7(3)) 등도 관련 통계가 확보되지 않아 순향도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K-SDG는 수립 당시 현행 정책을 답습하기보다 미래 지향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구성·구축해 나간다는 접근이어서, 미래지향적 목표관리를 위해 당시 통계자료가 구축되지 않은 도전적인 지표도 포함시켰는데,<sup>22)</sup> 이 중 일부 지표는 현재까지도 통계나 측정방식이 마련되지 않았다. 향후 새로운 국가전략 및 지표 수립·평가 시에는 지표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구축과 지표관리 계획도 마련·이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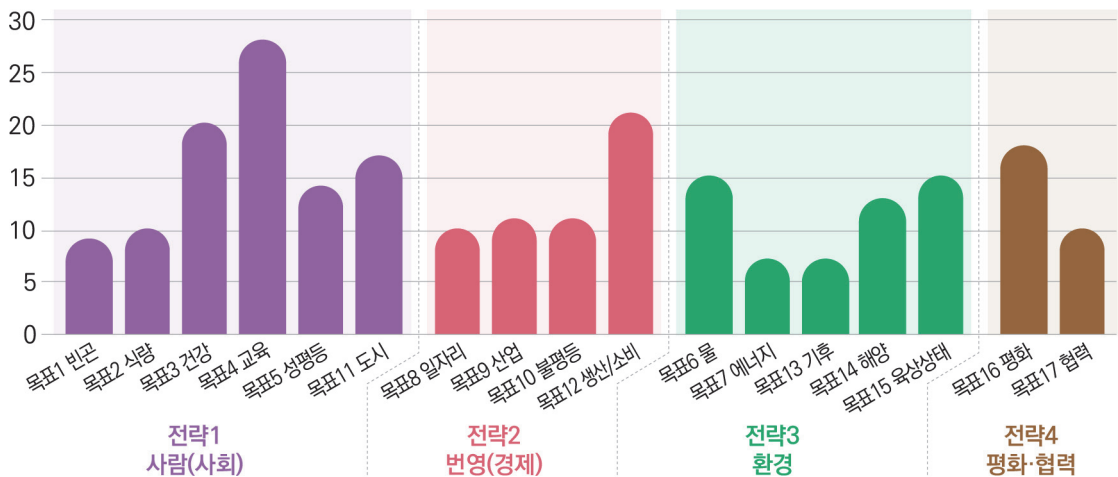
덧붙여, 다수의 지표에 대해 목표연도에 대한 명확한 목표치가 설정되는 대신 목표의 방향(“지속증가”, “지속감소” 등)만 설정되었는데, 이 경우 목표치 달성을 위해 충분한 추세인지 판단을 할 수 없고 증가하는지 혹은 감소하는지만으로 평가하게 되므로 평가결과에 의미를 부여하는 데 한계가 있다.

22)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제1부 p.14 참고



[그림 2-8] 목표순항도 평가 제외지표

셋째, 평가지표의 수적 균형 측면이다. 제4차 기본계획에서 수립된 K-SDG는 전략부문간 및 목표간 지표수의 편차가 매우 커, 전체 결과에 일부 목표가 과도하게 반영되거나, 부문간 혹은 목표간 평가 결과를 비교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일례로 전략1(사회 부문)의 경우 6개 목표에 걸쳐 총 98개의 지표로 구성되는 반면 전략4(평화·협력 부문)는 2개 목표에 걸쳐 총 28개 지표로 구성된다. 또한 목표 4(교육)은 총 28개의 지표로 구성되는 반면 목표7(에너지)과 목표13(기후)는 각 7개씩의 지표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9] 전략별·목표별 지표수

마지막으로, 개별 지표 단위에서 지표가 측정하려는 정책과제의 반영 정도, 관련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표의 구성을 검토·개선해야 할 지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제3장의 심층평가에서 자세히 설명되지만, 취약계층 긴급복지 예산(1-4(1)) 지표의 경우 긴급복지지원금과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라는 두 하위지표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구성요소의 규모가 크게 달라 합산할 경우 정작 긴급복지 예산의 추세가 거의 드러나지 않고, 일자리 사업에는 취약계층 지원 목적이 아닌 신산업 선제 대응 등 목적의 사업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 비정규직 비율(8-2(2)) 지표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이분법에 따른 수치적 규모만으로는 다양한 근로형태와 일자리의 질 측면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하며, 디지털화 등 산업의 변화, 일하는 방식의 다양화 등 미래 여건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지표의 개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제3장

#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및 과제

- 제1절 심층평가의 개요
- 제2절 주요 지표별 심층평가
- 제3절 요약 및 향후 과제



## 제3장 |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및 과제



### 제1절 심층평가의 개요

이번 보고서에서는 앞서 실시한 K-SDG 지표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진·중요·시급한 주요 과제에 대한 심층평가를 실시하여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및 과제를 도출하는 데 활용한다. K-SDG 지표평가 자체는 지표에 따른 수치의 정량적 추세에만 의존하므로 그러한 추세가 발생한 원인이나 배경, 그리고 지표가 나타내고자 하는 정책적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부문별 주요 지표에 대한 정성적 심층평가를 통해 지표의 추세에 대한 더욱 정확한 분석과 함께 정책적 배경과 향후 개선과제 등을 제공하고자 한다.

심층평가 지표의 선정에는 각 지표의 수치적 평가결과뿐 아니라 국가·사회 발전 관점에서의 중요성, 정책적 시급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으며, 각 4대 전략별로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표 3-1>과 같이 총 11개의 지표를 선정하였다.<sup>23)</sup> 덧붙여, 심층평가 지표는 지표의 부진 여부(평가결과)만을 기준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므로, 심층평가 대상이라고 해서 가장 부진한 지표인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목표순항도 체계에서 가장 부진한 지표를 선정한다면 '뇌우'로 평가된 지표들을 선정하는 등의 방안이 있겠으나, 목표의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지 않고 정체상태('흐림') 등이더라도 개선이 어렵고 지속가능발전에 위협이 되는 지표들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지표 부진의 정도에만 기계적으로 의존하기보다 지표가 나타내는 정책과제의 지속가능발전 맥락에서의 중요성, 심층평가의 4대 전략별 배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및 과제 도출 관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 지표들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선정된 총 11개 지표에 대해서는 해당 세부분야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지표 현황 및 원인 분석(지표의 의의, 현황 및 추이, 그 원인 등), 관련 정책 현황, 그리고 지표 개선을 위한 향후 정책과제를 분석하였다.

23) 심층평가의 대상지표 선정을 위해 17개 목표에 대응하는 각 1인의 전문가를 선정하고, 목표수가 단 2개뿐인 전략4(평화·협력)의 경우에는 1인을 추가로 선정(목표16)하여 총 18인의 심층평가 선정 자문단을 구성하였다. 각 전문가들은 K-SDG 지표평가 초안과 지표의 부진·중요·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본인이 속한 전략부문 내에서 우선순위로 5개의 심층평가 후보 지표를 선정하였고, 후보선정 빈도와 우선순위를 종합하여 각 전략별 심층평가 지표를 최종 선정하였다.

〈표 3-1〉 심층평가 대상지표 선정 - 요약

전략부문	지표번호	지표명	'24 평가결과	선정 수
1. 사람 (사회)	1-4(1)	취약계층 긴급복지지원 예산 및 비율	흐림	3
	3-2(1)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	흐림	
	11-5(1)	인구 십만 명당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인구	뇌우	
2. 번영 (경제)	8-2(2)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	흐림	3
	8-6(2)	전체 재해율 (산업재해)	뇌우	
	12-5(1)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	뇌우	
3. 환경	6-4(2)	지방 상수도 자급률	뇌우	3
	13-4(1)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맑거나 흐림	
	15-1(2)	총 육지면적 중 산림면적 비율	뇌우	
4. 평화·협력	16-12(1)	사이버 침해범죄 발생 대비 검거율	뇌우	2
	17-1(1)	GNI 대비 ODA	맑음	
합계				11

〈표 3-2〉 심층평가 대상지표 - 정책적 중요성/시급성 요약


전략 부문	지표명	정책적 중요성/시급성
1. 사람 (사회)	1-4(1) 취약계층 긴급복지지원 예산 및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극화는 사회안정에 대한 잠재적 위험요소이며, 경제·사회·환경적 충격에 대응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는 지속가능한 포용사회를 위한 최소 조건</li> <li>지표를 구성하는 긴급복지지원금과 일자리사업의 세부분석과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영향 등 심층분석 필요. 정부 재정전망 등을 고려한 향후 목표 및 추세 점검과 지표 구성 자체의 검토 필요.</li> </ul>
	3-2(1)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살률은 삶의 질과 사회의 불안정성을 나타내며, 팬데믹 이후 더욱 부각되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현 추세의 원인·실태·방안의 심층분석 필요.</li> <li>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등 최근 정책과 관련한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심층평가 필요</li> </ul>
	11-5(1) 인구 십만 명당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근 대형 사회재난이 빈발하고 국가적 갈등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재난 대응체계에 대한 점검과 심층분석 필요</li> <li>기후위기, 감염병, 각종 사고 등 자연·사회 재난의 피해가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추세 및 원인의 심층분석 및 대응체계 진단과 개선방안 모색 필요</li> </ul>
2. 번영 (경제)	8-2(2)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한국사회 양극화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며, 갈등 유발 및 사회통합의 장애로 작용할 수 있음</li> <li>미래 산업, 디지털기술 및 인구구조의 변화, 일자리의 질과 형태의 다양화 등을 고려한 넓은 관점의 정책과제 모색 필요</li> </ul>
	8-6(2) 전체 재해율(산업재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대재해처벌법, 산재보험 가입 확대 등 정책 동향과 함께 현 추세의 원인·실태 심층분석 필요</li> <li>소규모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재해에 주목하며 업종별, 규모별 등 취약영역 분석과 대책 점검 필요</li> </ul>

전략 부문	지표명	정책적 중요성/시급성
	12-5(1)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로나 이후 일회용품 급증으로 생활폐기물의 절대적 배출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활용률 점검 및 대책 모색 필요</li> <li>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추진 중으로, 국제규범 강화에 따라 플라스틱 등에 대한 자원순환 체계 강화 요구 전망</li> </ul>
3. 환경	6-4(2) 지방 상수도 자급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물공급의 안정성 확보와 효율적 이용을 위해 자체 취수원 확충과 물 자급률 점검이 필요. 관련 추세, 원인 및 문제점 분석과 지표 및 목표 점검 필요</li> </ul>
	13-4(1)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후위기 대응의 정책적 시급성과 중요성이 매우 높음</li> <li>코로나19 영향, 부문별 분석, 국제비교 등 심층분석과 함께 분야별 정책 동향 및 추진과제에 관한 분석 필요</li> </ul>
	15-1(2) 총 육지면적 중 산림면적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간에 걸쳐 산림면적 감소가 지속되고 있음</li> <li>생물다양성 보전, 탄소흡수 등의 기반이 되는 산림면적 감소에 대한 심층평가와 장기적 대책 필요</li> </ul>
4. 평화 협력	16-12(1) 사이버 침해범죄 발생 대비 검거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이버공격을 통한 첨단기술 유출, 핵심인프라 무력화, 허위정보 유포에 의한 여론조작 등이 국가안보의 심각한 위협 요인. 의료기관 등을 겨냥한 랜섬웨어 공격, IT 서비스 장애는 사회적 혼란을 유발</li> <li>기술발달에 따른 범죄의 지능화 속도에 경찰력 대응 한계로, 현황 분석 및 과제 도출 필요</li> </ul>
	17-1(1) GNI 대비 OD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선 추세에도 불구하고 DAC 권고수준(0.7%)에 비해 현재(0.18%, '23년 잠정치) 저조하며, 양적 규모와 더불어 개도국 SDG 역량 지원 등 체계적 협력방안 점검 필요</li> </ul>

**제2절**

**지표별 심층평가**

**1. 취약계층 긴급복지지원 예산**

K-SDG 지표명		1-4(1) 취약계층 긴급복지지원 예산 및 비율						
관련 목표	목표1: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세부목표 1-4: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경제·사회·환경적 충격 및 재난에 대한 노출을 감소하고, 회복력을 강화한다.						
2024 지표평가 결과:	지표값:	<b>〈긴급복지와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 및 GDP 대비 비중〉</b>						
		(억 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긴급복지 지원금 (a)	(억원)	1,422	1,656	1,856	2,156	3,155
			비중(%)	0.007	0.008	0.008	0.009	0.013
		재정지원 일자리 (b)	(억원)	212,374	254,998	305,131	315,809	303,481
			비중(%)	1.041	1.239	1.373	1.359	1.264
		합계 (a+b)	(억원)	213,796	256,654	306,987	317,965	306,636
			비중(%)	1.048	1.247	1.382	1.368	1.277
		* 본예산 기준, 명목GDP(2020년 기준)						
※ 긴급복지 예산 = 긴급복지지원금(보건복지부) + 재정지원일자리사업(고용노동부) ● 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장기실업자, 위기청소년, 여성가장, 노숙자 등)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순향도:	“흐림” 							

**가. 지표의 현황 및 의의**

K-SDG 1-4(1)번 “취약계층 긴급복지지원 예산 및 비율” 지표는 빈곤하고 취약한 대상의 안정적 삶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탈수급, 탈빈곤을 촉진하기 위한 지표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현대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다양한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누구나 언제든 소득상실을 경험할 수 있고, 본인의 소득상실은 자신과 더불어 가족의 생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이 지표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K-SDG에서 설정한 “취약계층 긴급복지지원 예산 및 비율”은 두 개의 하위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지표명 자체에 나타난 긴급복지지원제도(a)와 관련된 것이며, 또 하나는 빈곤층 및 취약계층이

스스로 일을 통해 탈빈곤하고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b)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a)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공공부조 제도 중 하나로 장기실업, 사업실패, 가족 해체, 중한 질병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개인과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위기 조건과 더불어 소득 및 재산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동 조건에 적합할 경우 관련 급여를 긴급히 지원받음으로써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된다.

한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b)은 노동시장 취약계층, 일반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일자리,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및 교육, 창업지원, 고용장려금, 지원고용·재활 등을 지원하는 적극적 서비스와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등의 소극적 서비스로 구분된다. 이와 같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여러 정책적 지원을 통해 노동자 및 노동 취약계층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 노동시장 참여의 지속가능성을 지원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a)과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b) 예산을 합산한 “취약계층 긴급복지지원 예산”의 GDP 대비 비중을 최근 5년간 추세로 평가하면, 2019년 GDP 대비 1.048%에서 2021년 1.382%까지 증가하다 감소세로 돌아서 2023년 1.277%에 이르러, 목표순항도에 따르면 ‘흐림’(정체 중)으로 평가되었다. 예산규모로는 2019년 21조 2,396억 원에서 2022년 31조 7,965억 원까지 크게 증가한 뒤 2023년 30조 6,636억 원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며, 2023년 예산 규모는 2019년 대비 43.4% 증가한 규모이다.

본 지표를 구성하는 두 하위 지표로 나누어보면, 둘 중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b)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며, 본 지표의 위와 같은 추세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b) 예산이 나타내는 추세와 거의 일치한다.

먼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b)의 변화를 보면 코로나19 시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 고용장려금 등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고용장려금은 취업취약계층 채용 촉진, 실직위험이 있는 재직자의 계속 고용 지원, 근로자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사업이다.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노동자가 해고에 직면할 수 있어, 계속해서 일자리에 남아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등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2023년 이후 경제상황이 개선되고 고용상황도 회복세를 보이면서 지원수요가 크게 줄어 고용장려금 등의 규모가 줄어들었으며, 동 요인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이 2023년 이후 감소하는 데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등의 예산이 줄어들면서 전반적으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규모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비해서는 축소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표 3-3〉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 변화

(단위: 억 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254,998	305,131	315,809	303,481	291,914
직접일자리	28,587	31,599	33,932	32,244	35,569
직업훈련	22,434	22,648	25,491	27,301	26,112
고용서비스	11,994	17,330	20,207	17,745	16,389
고용장려금	64,950	84,106	80,496	50,634	43,123
창업지원	23,585	24,071	28,433	31,484	31,147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103,447	125,377	127,249	134,404	129,172

자료: 고용노동부(각년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 현황, 재인용

한편 긴급복지지원(a) 예산(본예산 기준)의 경우 최근 5년간 증가세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2040 목표로 설정된 0.009%를 2022년부터 이미 넘어섰다. 긴급복지지원 예산만으로 목표순향도 평가를 해본다면 ‘맑음’으로 평가된다.

추경예산을 포함해 본다면, 2020년 7,69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배 이상 급증했다가 이후 크게 줄어드는 추세를 나타낸다. 이는 한국에서 2020년 2월 시작되었던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경제가 shutdown 되면서 빈곤 및 취약계층, 불안정 고용층(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등) 등의 사회적 위기가 크게 증가하여, 위기상황에 직면한 계층을 돕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긴급히 편성하였던 배경이다.

〈표 3-4〉 긴급복지지원 예산 추이 (본예산 및 추경포함)

		2019	2020	2021	2022	2023	
긴급복지 지원금 (a)	본예산 기준	(억원)	1,422	1,656	1,856	2,156	3,155
		비중(%)	0.007	0.008	0.008	0.009	0.013
	추경 포함	(억원)	1,626	7,692	2,771	3,030	3,155
		비중(%)	0.0080	0.0374	0.0125	0.0130	0.0131

자료: 보건복지부, “(각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 나. 관련 정책 현황

### 1) 긴급복지지원제도 정책 현황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업, 자영업자 등의 휴·폐업 등으로 인한 생계능력 부족, 상실 등에 직면한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하나는 긴급한 생계유지의 필요성이라는 점에서 위기 조건(표 3-5)에 부합되어야 하며, 두 번째로 소득 및 재산기준(표 3-6)에 적합해야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또한 금융재

산은 가구원수별 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기준중위소득)에 6백만 원을 합산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수급권자로 선정이 되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급여를 각 급여별로 정해진 기간에 한해 지원받도록 하고 있다. 무엇보다 민간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위기대상이 계속해서 빈곤층으로 남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 〈표 3-5〉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0. 타 법률
  -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자료: 보건복지부(2024),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재인용(p.2)

#### 〈표 3-6〉 긴급복지지원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기준 (가구규모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1,671,334	2,761,957	3,535,992	4,297,434	5,021,801	5,713,777

재산 기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단위: 만원)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24,100 (~31,000)	15,200 (~19,400)	13,000 (~16,500)

자료: 보건복지부(2024),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재인용

〈표 3-7〉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내용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금전 · 현물 지원	위기 상황 주지원 ①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비 · 가구원수별 생계급여 (713,1천 원(월, 1인) 1,833.5천 원(월, 4인))	6회
		의료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300만 원 이내 · 3,000천 원 이내	2회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소유의 임시거 소 제공 · 지원상한액 내 실비지원 · 398.9천 원(월, 대도시 1인) · 662.5천 원(월, 대도시 4인)	12회
		복지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 지원상한액 내 실비지원 · 552천 원/(월, 1인) · 1,494.1원/(월, 4인)	6회
	부가 지원 ②	교육	-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 초 127.9천 원/분기 · 중 180천 원/분기 · 고 214천 원/분기 및 수업료· 입학금	2회 (최대4회)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연료비, 해산비 등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150천 원/월 · 해산비(700천 원), 장제비(800천 원), 전기요금(500천 원 이내): 각 1회	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자료: 보건복지부(2024),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재인용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도입된 이후 위기 국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 점은 분명하다. 일생을 살다보면 여러 사유로 언제든 위기상황에 직면했을 때,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점은 분명한 장점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제도 운영과정이 다소 복잡하고 까다로운 선정조건(특히 위기조건, 재산 기준 등)을 두고 있어, 위기 상황에 직면했지만 위기 조건에 부합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청산할 수 없는 재산 등을 보유한 경우에는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급여 측면에서도 수급권자로 선정되어도 위기 조건이 단기간에 해소되면 문제가 없지만, 장기화될 경우 현재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 설정하고 있는 지원기간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K-SDG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제도가 가진 일부 조건에 대한 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2)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정책 현황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일자리 사업과 복지사업이 함께 포함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일을 통한 복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의 구조 확립을 위한 주요한 정책으로 평가될 수 있다.

〈표 3-8〉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사업예시
직접일자리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지원·소득보조를 위해 정부가 한시적·경과적으로 일자리를 제공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등 (보건복지부)
직업훈련	실업자의 취업 및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의 실업위험 감소를 위해 직무능력 향상 훈련을 제공	내일배움카드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	취업알선, 직업상담 및 진로지도, 노동시장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구직자의 직업탐색과 고용주의 인력확보를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취업 취약계층의 채용 촉진, 실직위험 재직자의 계속 고용지원,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
창업지원	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이 창업을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현금·용자·시설·컨설팅 등을 제공	창업기업자금 (중소기업벤처부)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실업보험, 취업촉진수당, 체당금 지급,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등 공적자금으로 실직자의 임금보전을 지원	구직급여 (고용노동부)

자료: 김윤수(2020), 최근 고용동향 및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분석. nabo 포커스 11호. 국회예산정책처 재인용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3-8). 이중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은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즉 실업급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자리에서 벗어난 실업자의 생활유지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앞서 〈표 3-4〉에서 보았듯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서 점유하는 비중 역시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용장려금은 취업취약계층 채용 촉진, 실직위험이 있는 재직자의 계속고용지원, 근로자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지원 사업이며, 세부적으로는 〈표 3-9〉과 같이 고용창출형, 고용유지형, 고용안정형, 모성보호형 사업으로 구성된다.

〈표 3-9〉 고용장려금의 세부 유형

유형	사업 내용
고용창출형	사용자나 구직자에게 인건비를 보조해 실업자 등 목표집단의 신규채용을 촉진하려는 목적의 사업
고용유지형	산업구조조정, 경제위기 등의 이유로 실직위험에 처한 재직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장려금 지원사업
고용안정형	정규직 전환, 시간선택제,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고용불안을 경험하는 재직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모성보호형	출산·육아 중인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력단절 방지를 지원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를 위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사업

자료: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직접일자리 사업은 대표적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노인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노동시장 참여 및 소득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최근 고령화 심화로 늘어날

수 있는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일자리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편, 일자리 사업에는 취약계층 지원과 복지 목적이 아닌 사업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변화 선제 대응, 신산업 창업 등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 발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도 일자리 사업에 포함되며, 신산업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약 4천억 원 규모의 K-Digital Training 사업 외에도 게임전문학교 운영, 일터혁신 및 기업컨설팅 사업 등이 있다.<sup>24)</sup>

2024년도 정부 일자리사업의 추진방향<sup>25)</sup>을 보면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엄격한 사업평가를 통해 지출을 효율화하되,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미래세대와 취약계층 맞춤형 취업 지원, 민간일자리 창출 여건 조성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취업역량 및 구직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모성보호 지원 확대, 외국인력 등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산업분야 중심으로 창업을 계속 해서 지원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다. 지표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

전술했듯이 K-SDG의 “취약계층 긴급복지지원 예산 및 비율” 지표는 긴급복지지원금과 재정지원 일자리의 두 개 하위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긴급복지지원금의 경우 그 예산규모는 최근 5년간 증가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2040 목표로 설정된 GDP 대비 0.009%를 이미 넘어선 수준이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위기 상황에 직면한 가구를 지원하는 데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제도 운영이 복잡하고 위기조건, 재산기준 등 선정기준이 까다로우며 지원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점 등은 K-SDG가 목적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위기 대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경우 고용장려금 등에서 코로나19 시기 위기 대응을 위해 급격히 증액되었던 예산이 정상화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전술했듯이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 규모가 긴급복지지원금에 비해 절대적으로 큰 규모여서, 이 두 하위지표를 합산한 K-SDG 취약계층 긴급복지지원 예산 지표의 추이는 일자리 사업 예산의 추이와 거의 일치한다.

이에 따라 본 지표는 목표순향도 상 정체 상태로 평가되었는데, 이를 해석할 때 지표의 구성과 코로나19로 인한 변동성 및 기저효과를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 즉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급증하였다가 정상화되는 추세가 목표순향도 상 정체 상태로 분류되었지만, 2019년에 비해 2023년 예산규모는 43.4% 증가하였으며, GDP 대비 비중도 2019년 1.048%에서 2023년 1.277%로 0.229%p 증가한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24) 관계부처 합동(2024.1.16) 「'24년 정부 일자리사업 추진방향」 및 내부자료

25) 관계부처 합동(2024.1.16) 「'24년 정부 일자리사업 추진방향」

다만 정부 재정전망을 감안하면 향후 관련 예산의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 지표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정부의 재정에 대한 적자규모가 심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재정에 대한 지출 효율화가 진행되고 있다. 노동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일자리,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등의 사업은 예산의 감소폭이 적을 수 있지만, 다른 사업에 대한 재정규모는 전반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포함한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K-SDG 측면에서 동 지표의 목표와 추세를 점검 및 검토해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지표 자체에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 본 지표를 구성하는 두 하위지표의 규모가 크게 달라, 이를 합산할 경우 정장 긴급복지 지원금 예산의 추이는 거의 드러나지 않은 채 일자리 예산의 추이를 따르고 있다. 더욱이 일자리 사업에는 취약계층 지원 및 복지 목적이 아닌, 미래대응 신산업 인재양성과 같은 사업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세부목표가 지향하는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더욱 직결된 지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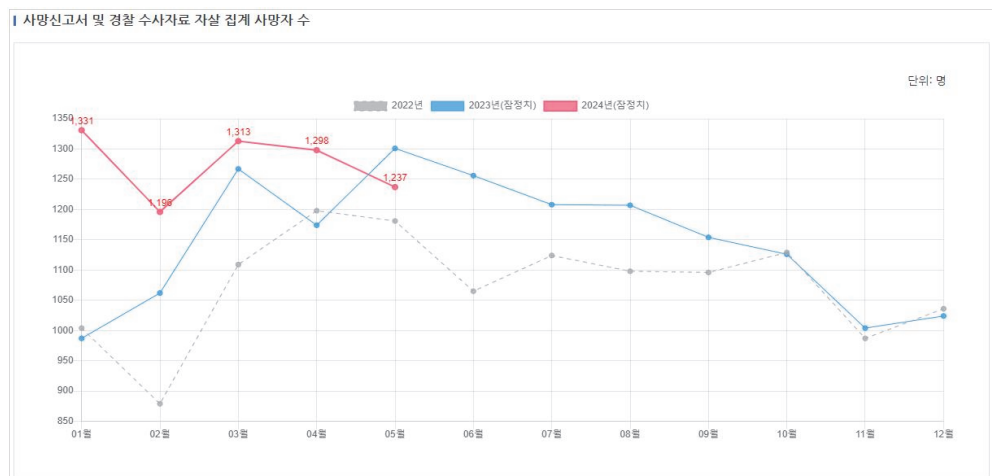
덧붙여, 현재 본 지표는 본예산 기준으로 평가되는데, 위기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을 어떻게 고려하는 것이 좋은지도 검토할 여지가 있다. 일견 본 지표가 긴급복지지원과 일자리 사업 예산의 증장기적 확대 추세를 점검하려는 목적이라 본다면, 일시적인 위기상황이나 내외부 환경 변화로 인한 단기적 예산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편, 위기극복을 위해 추가적으로 증액된 예산은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보아 별도의 항목이나 가점 등을 통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2. 자살률

K-SDG 지표명		3-2(1)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				
관련 목표	목표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세부목표 3-2: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약물오남용을 예방한다				
2024 지표평가 결과:	지표값:	(단위: 십만 명당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순향도:	26.6	26.9	25.7	26.0	25.2
		“흐림” 				

### 가. 지표의 현황 및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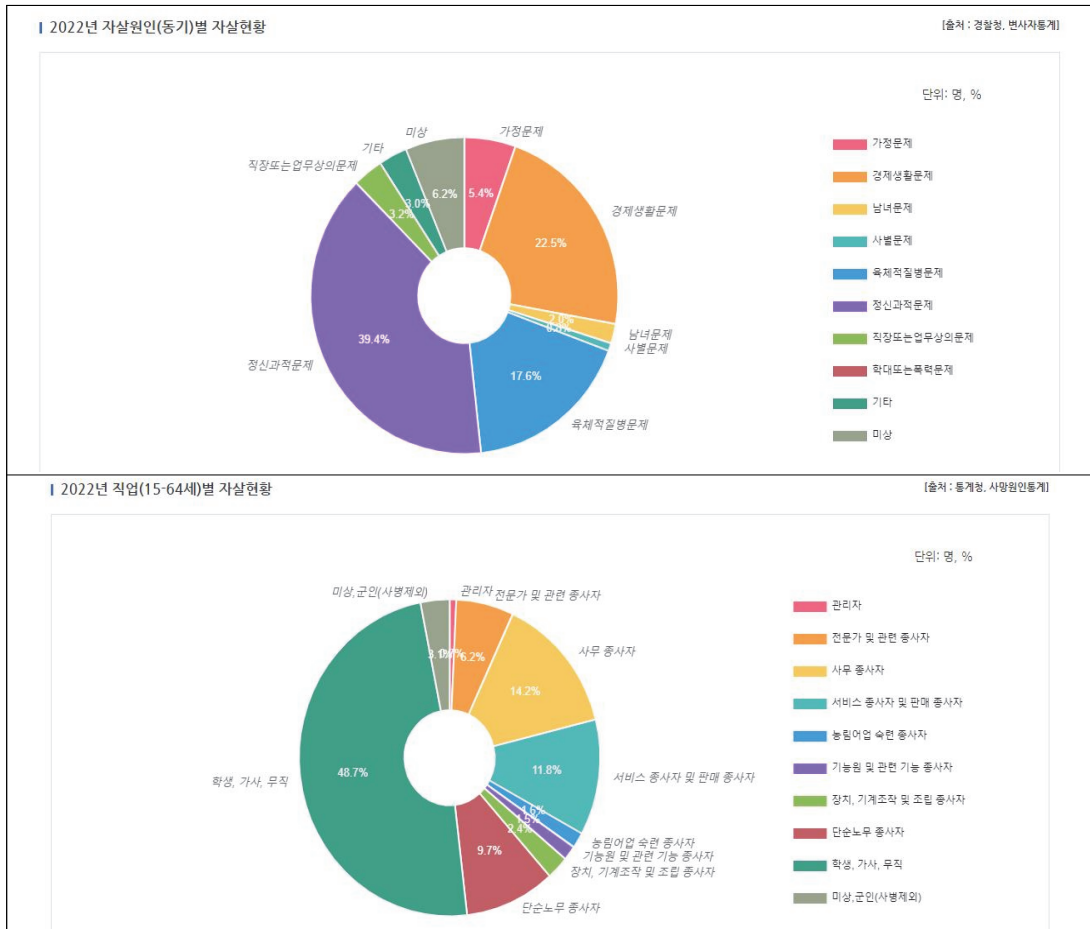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률은 2022년 기준 25.2명으로, 매년 등락이 있으나 5년 전과 비교하면 다소 감소한 수치이다. 성별로 보면 자살사망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으며(2022년 기준 남성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35.3명, 여성의 경우 15.1명), 성별 격차는 유지되고 있다.



주: (위) 자살률 추이(2018~2022, 전국); (아래) 월별 자살사망자 수 추이(2022~2024.5)  
 자료: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http://kfsp-datazoom.or.kr>

[그림 3-1] 자살률 및 월별 자살사망자 수 추이

자살사망자의 특성을 살펴본다. 2022년 기준 자살원인(동기)별 자살현황을 보면, 정신과적 문제가 39.4%로 가장 많으며, 경제생활 문제가 22.5%, 육체적 질병 문제가 17.6%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2022년 기준 직업(15~64세)별 자살 현황을 보면, 자살사망자 중 학생, 가사, 무직인 경우가 48.7%로 가장 많으며, 그다음으로 사무종사자(14.2%), 서비스 및 판매업 종사자(11.8%) 순으로 많았다.



주: (위) 2022년 자살원인(동기)별 자살현황; (아래) 2022년 직업별(15-64세) 자살현황  
 자료: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http://kfsp-datazoom.or.kr>

[그림 3-2] 자살원인(동기)별 및 직업별 자살현황(2022)

자살은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경제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한 복합적인 현상이므로 심리적 고통과 고용, 육체적 건강, 사회적 요인, 개인의 성격 등과 연관이 있다. 더불어 지역, 성별, 연령 등 사회 인구학적 측면에 따른 변동이 많아 성별, 연령별 인구 구조의 차이도 지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1) 인구구조 및 사회구조의 변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임박이라는 3대 인구 리스크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기이다. 특히 고령인구 증가는 부양 부담과 건강권 보장 요구의 확대 등 국가적·사회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령인구는 신체·정신건강 취약성과 더불어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부각되는 1인 가구의 급증과 관련하여 1인 가구는 소통의 결여, 외로움과 고독, 경제적 문제 등을 혼자 부담해야 하는 환경에 처해 있는 만큼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신체·정신건강 위협에

취약하다. 또한 이들 고령인구와 1인 가구의 경우, 제한적인 사회관계망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고립도 높은 수준이다.

### 2) 경제성장과 저성장 구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는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약화하고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로 경제기반이 취약해지는 상황에 놓여있다. 경제성장률 하락과 함께 대내외 산업구조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서비스업 노동자, 사무직 노동자의 새로운 건강문제, 정신건강 문제의 사회적 중요도가 부각되고 있다. 또한 사회에는 다양한 차원에서 집단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양극화 현상은 경제적 격차에서 비롯된다.

### 3) 환경적 여건의 변화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대규모 재난 이후 자살률은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특히 대규모 재난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재난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뿐 아니라 실업 등 사회경제적 기반의 취약성이 증가하여 자살률이 증가하는 경향성은 국내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4) 개인적 여건의 변화

개인의 생활습관 및 개인이 경험하는 다양한 상황(직장, 가정, 연애, 학업 등)에 따라 개인의 정신건강 및 자살위험성에 대한 취약성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3] 자살 영향요인

## 나. 관련 정책 현황

한국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2011 제정)에 따라 국가 단위 자살예방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으며, 자살예방기본계획은 모든 부처가 참여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되고 있다. 즉, 정신건강 정책의 일부 정책으로서 자살예방 정책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처가 함께 자살예방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해외에서도 정신건강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자살예방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부처 협동으로 자살예방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다.

2023년 4월 한국은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였으며, 5대 추진전략으로 생명안전망 구축, 자살위험요인 감소, 사후관리 강화,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그림 3-4). 이들 전략을 통해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고, 자살수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전국민 대상 사전적인 자살예방을 모든 부처가 함께하겠다는 내용, 지역 중심의 맞춤형 자살예방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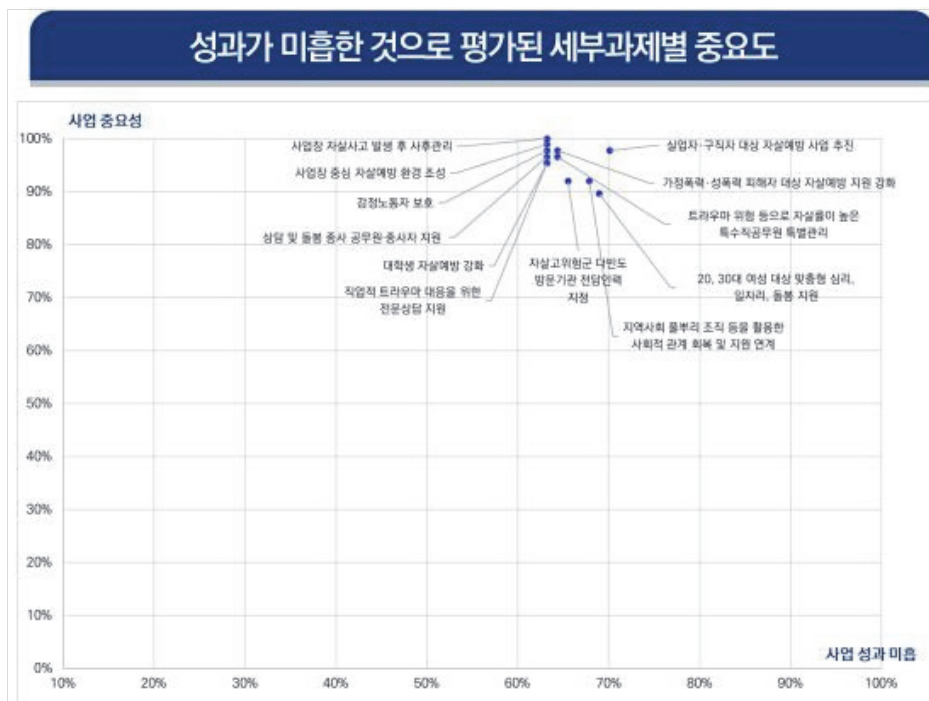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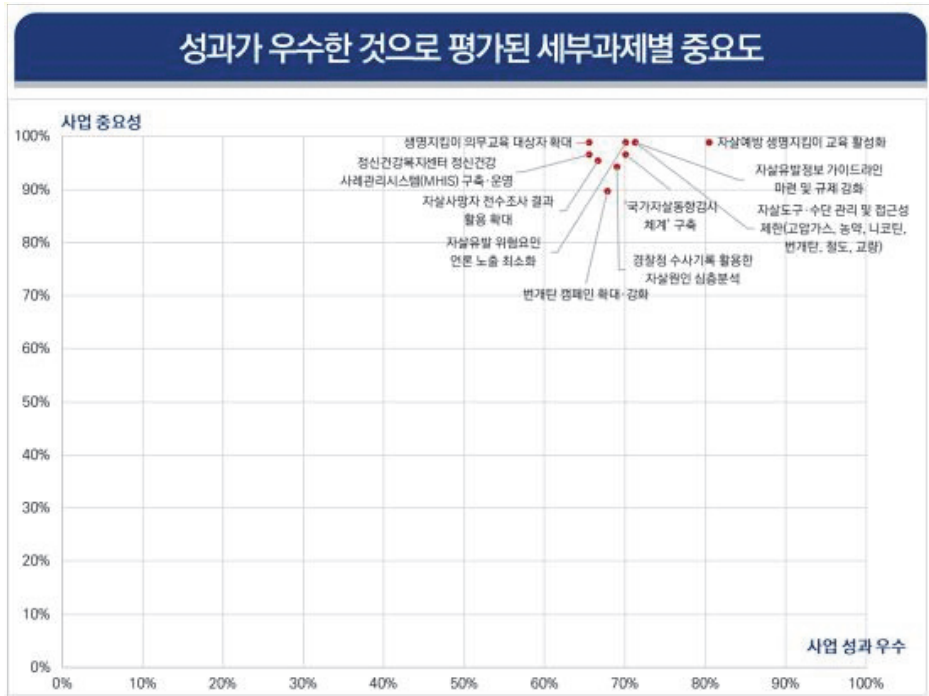
그 외에도 2023년 12월 정부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동 혁신방안에서는 자살예방 교육 실시, 상담전화 109 통합 등 자살예방 강화와 함께 국민 100만 명의 전문심리상담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그간의 자살예방 정책들은 자살률 감소에의 전략적 접근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 자살 수단에 대한 관리, 자살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 유도 등 성과를 내왔으나, 여전히 대상자별 맞춤형 자살예방 지원과 같이 유관부처의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에 대한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전진아 외, 2022, [그림 3-5]).

추진전략	1. 생명안전망 구축	2. 자살위험요인 감소	3. 사후관리 강화	4.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단계별	환경개선	발굴, 개입 치료, 관리	회복지원· 자살 확산 예방	전주기
대상별	전국민	정신건강위험군	자살시도자자살유족	전국민
핵심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맞춤형 자살예방</li> <li>생명존중문화 확산</li> <li>정신건강 검진체계 확대 개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치료 및 관리강화</li> <li>위험요인 관리강화</li> <li>재난 후 대응체계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살시도자 사후관리</li> <li>유족 사후관리</li> <li>사후 대응체계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위기군 맞춤형 지원</li> <li>정신건강위기군 맞춤형 지원</li> <li>생애주기별 <u>생활터널</u> 맞춤형 지원</li> </ul>
추진전략	5.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			
핵심과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살예방 정책 근거기반 마련</li> <li>정책추진 거버넌스 재정비</li> <li>자살예방 인프라 강화</li> </ol>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3,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 p.12

[그림 3-4]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의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



자료: 전진아 외(2022).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27) 수립연구

[그림 3-5] 제4차 자살예방기본계획(자살예방국가행동계획)의 성과 평가

또한 공공부문 자살예방 정책 이행을 위한 예산, 인력 등 인프라 확보가 미흡하다는 한계와 더불어, 기존의 자살예방 정책들이 소통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음에도 정책 참여 주체 간, 부처 간 소통과 협업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전진아 외(2022) 연구에서는 인프라 투자 부족 문제, 부처 간 협업 부족이 자살률 감소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큰 반면, 정책의 대비 수준은 미비하다고 보고했다(그림 3-6).



출처: 전진아 외(2022).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27) 수립 연구.

[그림 3-6] 자살예방정책 문제의 영향력과 대비수준

#### 다. 지표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

2023년 4월에 발표된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에서는 2021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률 26.0명에서 2027년 18.2명으로 30% 감소시킨다는 목표치를 제시하였으며, 2023년 12월에 발표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서는 더 나아가 10년 내 자살사망률을 현재보다 50% 감축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 단위 자살예방기본계획에서 자살률은 정책의 성과를 의미하는 핵심 지표이며, K-SDG의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 지표의 중요성도 확인할 수 있다.

인구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을 경험하면서 자살률이 목표한 것과 달리 느리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것을 고려해 볼 때, 기본계획에서 제시하

는 정책들의 조속한 이행 및 이행을 뒷받침하는 국가의 투자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 자살사망률은 통계적 검증 절차를 통해 2년 전의 자살사망률이 보고되고 있으나, 잠정치들을 고려해 볼 때 최근 들어 자살사망률은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K-SDG에서 모니터링하는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은 현재 ‘흐림’에서 향후 ‘뇌우’ 등급으로 악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더욱 효과적인 자살예방 정책 추진 및 자살사망률 감소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살예방을 위한 중앙과 지방, 공공과 민간의 사회적 연대를 기반으로 전방위적 참여가 이루어지고, 다양한 내용 및 방식으로 이행될 자살예방 정책들을 국민이 체감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이 정신건강 정책의 일환이 아니라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의 과제들을 추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이 담고 있는 정책 간 조율과 정책 성과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계획이므로, 각 부처가 정책을 개별적으로 이행하거나 중복적으로 이행하기보다 정책 조율을 통해 부처 간 역할을 구분하고 소통을 기반으로 정책 이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자살예방정책조정위원회의 정책조정 및 정책 이행 모니터링과 평가 기능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역 중심의 자살예방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자체 단위로 자살 현황 및 특성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각 지자체는 국가 단위의 자살예방 정책과의 부합성을 고려하여 자살예방 정책을 수립 및 이행하되, 지역의 특성에 맞춘 자살예방 사업 역시 기획 및 이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중심의 자살예방 정책이 의미하는 바는 각 지자체에 설치되어있는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이 아닌, 자살예방 사업과 관련된 지자체 여러 부서 전체의 정책이므로 지역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 시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뿐 아니라 관계 부서와 기관이 함께 하는 구조가 우선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자살예방 사업을 수행할 인력, 자살예방 사업을 전담하는 조직, 자살예방 사업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LIVE LIFE 프레임워크(2019)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자살예방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을 확보해야 하며, 자살예방센터와 같은 자살예방 사업 수행 기관과 더불어 지자체 내 자살예방 전담공무원이나 전담조직이 설치되어야 지자체 단위에서 자살예방 사업의 이행력이 확보될 수 있다. 또한 자살예방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과 더불어 해당 인력의 자살예방 및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자살예방 인력에 대한 보호, 소진 방지, 처우에 대한 개선 역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자살예방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자살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옹호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살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미디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살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예. 자살은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라는 점 등)를 갖고 자살예방을 위한 행동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구성 및 확산될 필요가 있다.

### 3.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

K-SDG 지표명		11-5(1) 인구 십만 명당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인구				
관련 목표	목표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세부목표 11-5: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현저히 감소시키며, 통합적 도시재난 위기관리를 개발, 이행한다.				
2024 지표평가 결과:	지표값:	(단위: 10만 명당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순향도:	0.19	0.13	1.94	9.85	51.47
		“뇌우” 				

#### 가. 지표의 현황 및 의의

K-SDG 11-5(1) ‘인구 십만 명당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인구’는 코로나19, 이태원 참사, 아리셀 공장 화재 등 사회재난이 끊이지 않는 현 상황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우리나라의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돌아보고, 특히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제도적 체계나 정책적 준비가 미비한 사회재난(한국행정연구원, 2022)에 관한 정책적 준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환기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있는 지표라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우리나라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0조 제2항<sup>26)</sup>에 근거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관한 통계자료를 구축해오고 있다. 우리나라 재난 관련 공식 통계는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재해연보」(자연재난)와 「재난연감」(사회재난, 1995년 최초 발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재난의 범위와 유형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사회재난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2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0조(재난상황의 기록 관리) 제2항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재난상황 등을 기록한 재해연보 또는 재난연감을 작성하여야 한다.”

**사회재난의 정의:**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 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 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 출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4.7 시행) 제3조(정의) 제1호 나목

동 법률에 따라, 사회재난 통계는 재난관리 주관기관에서 관리하는 28종의 사회재난<sup>27)</sup> 및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사고 발생 유형으로 구성되며, 사회재난 28종의 구체적인 목록은 <표 3-10>와 같다(행정안전부, 2023).

<표 3-10> 사회재난 28종

1	산불재난	10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19	원자안전(방사능 누출사고)
2	화학사고*	11	해양선박사고	20	전력
3	대규모 수질오염	12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21	원유수급
4	대규모 해양오염	13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22	보건의료
5	공동구 재난	14	법무시설 재난 및 사고	23	식용수
6	댐 붕괴	15	가축질병	24	육상화물운송
7	지하철 대형사고	16	감염병	25	GPS 전파 혼신
8	고속철도 대형사고	17	정보통신	26	해양유도선 사고
9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18	금융전산	27	공연장·경기장 안전사고
* 사회재난 표준매뉴얼 개정('21.12월)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에서 '화학사고'로 명칭변경				28	초미세먼지

2013년부터 2022년의 최근 10년간 사회재난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총 183건 발생, 사망 33,306명, 부상 2,171명, 실종 88명으로 피해인구는 총 35,565명이다. 이 중, K-SDG 지표에 해당하는 사망 및 실종인구수(부상인구수 제외)는 33,394명이다(행정안전부, 2023).

가장 많은 사망·실종인구가 분포한 사회재난 유형은 감염병으로, 10년간 총 32,364명이 사망하였다. 그 다음은 해양선박사고로 497명(사망 413명, 실종 84명), 기타 유형 234명(사망 230명, 실종 4명),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177명(사망 177명),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74명(사망 74명), 다중밀집 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17명(사망 1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3-11).

2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조항에 따라 위기관리 매뉴얼이 작성되는 유형, 재난대응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되는 재난이 이에 해당

〈표 3-11〉 최근 10년간 사회재난 발생 현황

재난유형	사망(명)	실종(명)	계(명)
감염병	32,364	.	32,364
해양선박사고	413	84	497
기타*	230	4	234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177	.	177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74	.	74
다중밀집 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19	.	19
공연장경기장 안전사고	16	.	16
산불재난	8	.	8
고속철도대형사고(일반철도포함)	4	.	4
화학사고	1	.	1
합계	33,306	88	33,394

주: 사망·실종인구가 0명인 경우 표에서 제외

\*기타:

(2018년) 장기공단 폭발사고, 가산동 대우현장 흙막이 붕괴사고,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강릉 펜션사고

(2019년) 헝가리 선박 침몰 사고, 강릉 수소탱크 폭발, 수원삼환아파트 배기덕트 탈착 사고, 당진 부곡공단 지반침하

(2020년) 동해 토바펜션 폭발사고, 춘천 의암호 선박사고, 구리 교문동 지반침하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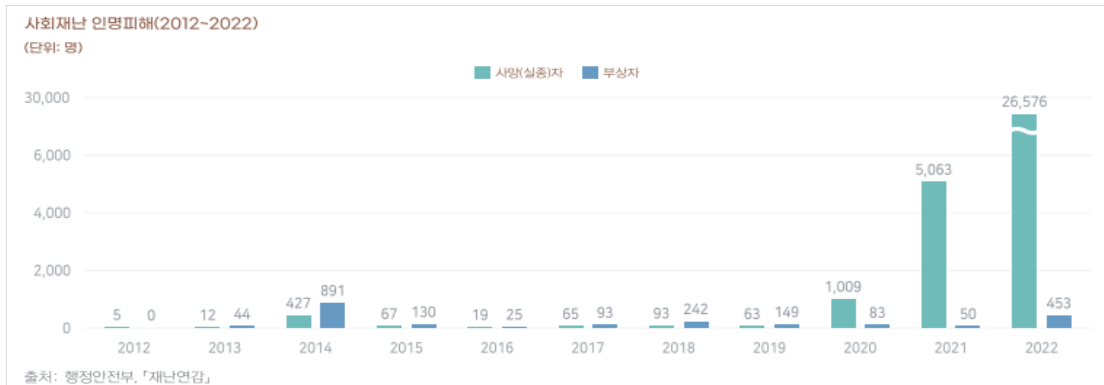
(2021년) 강원 황성군 주택사고, 충남 태안 신진도항 선박화재, 전남 여수시 한재사거리 교통사고, 인천 서구 심곡동 화재, 전남 여수산단 이일산업 화재사고, 경남 통영 옥지도 모노레일 탈선사고

(2022년) 청북읍 고령리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 여수산단 YNCC 3공장 폭발사고, 대만 예안선(KYOTO 1호) 침몰사고, 굴현동 다세대주택 화재, 이태원(10.29.) 참사, 대구 중구 동인동 주택화재,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방음터널) 화재

출처: 행정안전부, 2023 「2022 재난연감(사회재난)」 자료 바탕으로 저자 분석

연도별 사회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사망·실종)를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두 자리수를 유지해오다 2020년 1,009명, 2021년 5,063명, 2022년 26,570명으로 최근 3년간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21년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자수는 전년 대비 401.8% 증가하였으며, 이어 2022년에도 또다시 전년 대비 424.8% 증가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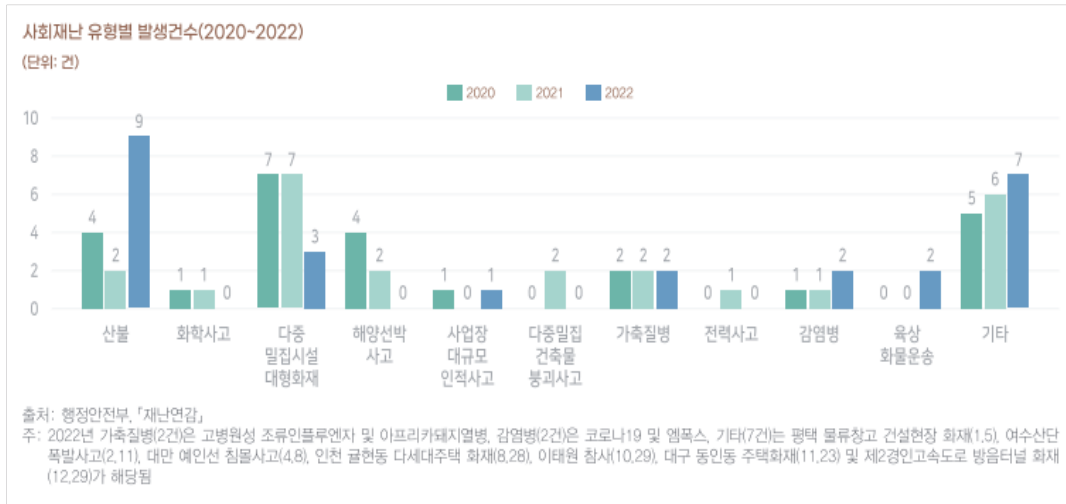
동 3년간의 증가에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2020년 923명(사망·실종자수의 91%), 2021년 5,030명(99%), 2022년 26,373명(99%)으로 나타난다. 감염병을 제외한 사망·실종은 2020년 86명, 2021년 33명, 2022년에는 이태원 참사(사망 159명)를 포함하여 197명이 발생하였다.



출처: 통계청, 2024, p.72 재인용

[그림 3-7] 사회재난 인명피해(2012~2022)

한편, 사회재난의 연도별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2022년 발생한 사회재난은 총 26건으로 전년(24건) 대비 건수로는 소폭 증가하였다. 산불재난(9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3건), 감염병(2건), 가축질병(2건) 등 순으로 발생하였다(통계청, 2024, p.72).



출처: 통계청, 2024, p.72 재인용

[그림 3-8] 사회재난 유형별 발생건수(2020~2022)

동 지표의 2024 평가결과는 ‘뇌우’ 등급으로, 목표와 반대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추세가 나타나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코로나19 신종 감염병 출현과 같이 급격한 재난환경의 변화이다. 2019년 12월 코로나19의 출현으로 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 전에는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정치·경제·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2015년 MERS라는 신종 감염병 확산 경험을 통해, 위험소통 매뉴얼과 음압병상 등 방역시스템을 정비함으로써 코로나19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으나, MERS에 비해 그 파급력이 매우 컸던 코로나19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국가들, 그리고 국가 간 교류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황하 & 한승헌, 2021). 특히, 코로나19는 신종 감염병인 만큼 백신개발과 보급이 신속히 이뤄지기 어려웠던 점, 그리고 호흡기 질환인 점이 주요하게 작용하여 노약자 및 기저질환자 등이 감염될 시 사망으로 이어져 인명피해가 컸다.

둘째, 사회 전반의 위험 인식 부족이다. 2022년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사망 159명, 부상 334명의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으로, 우리나라 전반에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원격·재택근무 등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방역에 있어 모범국으로 회자되었으나, 그동안 누려왔던 일상생활에 있어 많은 제약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재개된 헬러윈 축제에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파의 과도한 밀집으로 인해 대규모 압사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은 간과되었으며, 더욱이 코로나19 이전 헬러윈 당시 인파통제와 동선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거의 경험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였다. 즉, 이태원 참사는 코로나19를 경험한 국민들의 사회적 교류에 대한 열망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발생가능한 위험요인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낳은 인적 재난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회재난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형산불 역시 대부분 입산자의 소각 또는 취사행위 등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고 있어,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위험 인식 부족도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위험에 취약한 물리적 환경도 문제이다. 다중밀집시설의 대형화재는 주로 전통시장 및 상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는 가건물 형태로 지어진 전통시장의 전기시설과 배선이 노후하거나 불량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러한 다중밀집시설의 경우, 노후한 시설을 현대화하거나 시설 정비를 위한 투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코로나19 시기 동안 경험하였듯이 화재 예방과 동시에 밀폐된 공간에서의 감염병 확산과 같은 복합재난에 대한 대응을 고려한 시설 정비가 필요하다.

#### 나. 관련 정책 현황

우리 정부는 사회재난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법·제도적,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먼저, 우리 정부는 재난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조하며, 관련 법률 및 제도의 정비를 지속해 왔다. 무엇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04)」을 제정하고 재난위험 경감을 위한 통합적 재난관리 거버

년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동 법률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통합적인 재난대응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기능 역시 제도적으로 강화하였다. 특히,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우리나라는 그동안 재난안전에 관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함으로 인해 재난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권한이 분산되는 문제 및 사고수습 체계의 미진함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를 계기로 중앙부처 간 협업의 중요성, 지자체 재난관리 역량, 재난안전관리에 있어 총괄조정 기능의 중요성을 확인하게 되었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1995)」 제정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 체계를 더욱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동 법률은 성수대교 붕괴(1994), 삼풍백화점 붕괴(1995), 마우나리조트 붕괴(2014),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2014) 등 연이은 건축물 붕괴사고가 일어나면서 이에 대응할 법률을 제정한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동 법률은 시설물 안전관리 주체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고, 안전점검과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구성, 시설물 관리자에게 그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 부과, 전문기관을 통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한국행정연구원, 2022, p.22). 또한 ‘지역안전지수(2015)’를 통해 지자체의 지역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고, 지역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해 최일선에서 대응하는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제도 역시 운영하고 있다. 지역안전지수는 지자체의 안전수준을 화재, 교통사고,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로 계량화하여, 시도, 시군구별로 구분, 1~5등급으로 발표하는 제도이다(한국행정연구원, 2022, pp.22-23).

다음으로, 범정부 차원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및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대표적으로, 사회재난 중 가장 많은 인구가 사망한 코로나19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통합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방역 중심의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조를 확립·운영하였다. 즉,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 방역체계는 네 단계의 위기경보(관심, 주의, 경계, 심각)에 따라 운영되고,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한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범부처 협력관계가 잘 구축되어 있고, 감염병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의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감염병 대응에 대한 핵심적인 의사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한국행정연구원, 2022, p.27). 더불어, 산불의 경우에도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22년 3월에 발생한 경북·강원 동해안 일대 산불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로서, 당시 울진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인근 지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산불 발생 즉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행안부, 기상청, 교육부, 과기부, 국방부, 문체부, 환경부, 국토부, 울진군, 삼척시, 동해시 등이 참석하였고, 강원도 동해안 산불방지센터 역시 현장대응본부를 설치하여 유관기관의 연락관들과 신속히 소통·구심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한승헌 & 이효주, 2022).

끝으로, 우리사회 전반의 위험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재난안전 관련 교육을 강화해왔다. 세월호 사건 이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이 의무화되었고, 경주 및 포항 지진을 계기로 재난이 일상화될 수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일반 시민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 역시 강조되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감염병이라는 물리적 위험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피해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 고취 및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되었다(한국행정연구원, 2022, p.20).

이렇듯 우리 정부는 대형 재난을 경험하면서 기존 제도의 미진함을 보완·발전시켜 왔고, 사회 전반에 걸쳐 위험에 대한 인식 역시 점차 향상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재난안전관리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이뤄짐으로써, 재난대응의 최일선에 있는 지자체의 역할과 역량은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재난관리 역량에 편차가 있어 중앙정부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역량과 인력 증원, 제도개선 등의 노력도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 더욱이, 향후 위험요인에 대한 세심한 분석과 이에 대한 선제적 예방 차원의 노력은 더욱 개선될 필요가 있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이태원 참사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처음 공식적으로 개최되는 헬러윈 행사에 많은 인파가 집결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상황판단과 예방적 대응이 부족하였다.

#### 다. 지표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

첫째, 신종 감염병은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환경적 위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더욱 빈번히 출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때 구축한 방역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를 개선·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방역에 성공적일 수 있었던 중대한 이유는 MERS 당시 경험하고 구축했던 효과적 위험소통, 그리고 방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때문이다. 코로나19는 MERS보다 더 폭넓고 강력한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를 양산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신종 감염병 출현으로 인한 피해인구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체계로부터의 교훈을 축적하고 환류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둘째, 자연재난을 비롯하여 사회재난 역시 예방이 더욱 중요한 것에 비해, 아직 재난관리에 있어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러한 제도와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위험요인 분석 및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 예측가능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인구를 줄이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위험평가제도 구축에 있어 자연재난 중심으로 발전해왔고<sup>28)</sup>, 주로 시설 중심의 위험평가에 집중하고 있어 사회재난에 대한 위험평가제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한국행정연구원, 2022, p.50). 우리나라의 재난안전과 관련한 제도가 발전해 온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 정부는 대형 재난이 발생한 이후 제도를 개선하는 사후적 조치에 집중해 왔다. 따라서, 사회재난에 대한 예측력과 예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회재난에 대한 위험평가제도 구축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제도의 구축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만큼, 이러한 제도의 안착과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28) 총 26개의 위험평가 제도 중 자연재난 관련 제도가 15개, 사회재난 관련 제도가 8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관련 제도가 3개

셋째,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방역에 매우 성공적이었음을 알려주는 동시에,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 증가, 사회적 취약계층의 물리적·심리적 고립 심화, 아동·청소년들의 교육의 질 저하,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의 취약성 심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심화하는 계기도 되었다(황하 & 한승헌, 2021; 황하 외 2022). 즉, 사회재난은 자연재난과 마찬가지로 재난 이후의 국민들의 삶이 회복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재난 관련 지표는 사망자 또는 실종(부상)자 인구수에 초점을 두으로써, '피해'의 개념을 협소하게 정의하는 한계를 보여왔다. 따라서 K-SDG 목표 달성을 위해 이를 정량적 데이터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정량 지표로 포착하기 어려운 사회경제적·환경적 맥락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이 제안되어야 실제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인구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앞의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현재의 K-SDG 11-5(1) 지표는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과 실종 인구수를 집계하고 부상자는 제외하고 있는데, 부상 역시 재난의 피해이므로 사망자 중심의 피해 통계 집계의 관행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

#### 4.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

K-SDG 지표명		8-2(2)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				
관련 목표	목표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세부목표 8-2:	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 확대와 비정규직 감축				
2024 지표평가 결과:	지표값:	<b>〈비정규직 근로자 비율〉</b>				
			2019	2020	2021	2022
	순향도:	(%)	36.4	36.3	38.4	37.5
		“흐림” 				

##### 가. 지표의 현황 및 의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 지표는 노동시장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 중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세부목표 8-2 "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 확대와 비정규직 감축"에 해당하는 지표이다. 비정규직의 과도한 비율은 노동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유경준, 2009). 따라서, 비정규직 비율의 감소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모든 노동자가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점검해 나가야 할 지표이다. 또한 저출생 및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외국인 이민자 정책(이종관, 2020; 우해봉 외, 2023)과 인공지능,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따른

직무변화 및 일자리 대체 문제(반가운 외, 2021; 한요셉, 2023)가 급부상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 지표는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며 그 중요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sup>29)</sup>, 비정규직의 비율은 2019년 36.4%에서 2021년 38.4%까지 상승했으며, 이후 다소 줄어들어 2023년 현재 37.0%로 집계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5년간의 추세는 정체 중(‘흐림’)으로 평가되었다.

〈표 3-12〉 고용형태별 연도별 임금근로자수

(단위: 만 명, %)

연도	비정규직 규모	정규직 규모	비정규직 비중	정규직 비중	총 임금근로자수
2019	748.1	1,307.8	<b>36.4%</b>	63.6%	2055.9
2020	742.6	1,302.0	<b>36.3%</b>	63.7%	2044.6
2021	806.6	1,292.7	<b>38.4%</b>	61.6%	2099.2
2022	815.6	1,356.8	<b>37.5%</b>	62.5%	2172.4
2023	812.2	1,383.2	<b>37.0%</b>	63.0%	2195.4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23),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비정규직 비중은 2021년 전년 대비 2%p 이상 증가하여 38.4%로 정점을 찍었는데, 이때 정규직 임금근로자 수는 전년 대비 9만 3천 명 줄어든 반면 비정규직은 64만 명 증가하였다. 이는 당시 경기 회복에 따라 늘어난 일자리가 비정규직이 주를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경제적 불안정성과 노동시장의 유연화, 그리고 코로나19 대유행 등 외부 요인들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볼 수 있다(OECD, 2020; 통계개발원, 2021). 한편 이후에는 정규직이 더욱 크게 늘어나 2022년과 2023년에 전년 대비 각각 64만 1천 명, 26만 4천 명 증가하였으며, 이는 같은 기간 비정규직은 2022년 9만 명 증가한 뒤 2023년에는 전년 대비 3만 4천 명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즉 비정규직 비율은 코로나19 당시의 정점(21년 38.4%)으로부터 최근 다소 개선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다만 여전히 임금근로자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비정규직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이 요구되며, 비정규직을 위한 안전망과 사회보장을 확보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표 3-13〉 연도별 한국의 임시고용 비율 및 국가 순위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한국 임시고용 비율	20.62%	21.16%	24.36%	26.05%	28.30%	27.28%
OECD 국가 순위	7	7	4	2	1	2

출처: OECD, "Temporary Employment" <https://www.oecd.org/en/data/indicators/temporary-employment.html>

주: OECD 38개 회원국 중 수치가 가용한 연도별 34-35개국 중의 순위임

29) 경제활동인구조사에 2019년부터 기간제 근로자가 추가로 포착되어, 2018년 이전과는 직접 비교할 수 없음

한국의 비정규직 고용의 특성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점<sup>30)</sup>도 지적되지만(표 3-13), 질적 측면에서 임금수준 격차가 크고, 다른 국가들은 주로 청년층에 집중된 경향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층 외 고령층에서도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여성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은 점도 주목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의 비정규직은 서비스업, 건설업, 소매업 등에서 비중이 높다.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는 양적 측면 외에 질적 측면의 문제도 상존한다(표 3-14). 한편 비정규직 일자리의 질이라는 측면에서는 최근 상대임금 비율, 평균 근속기간, 고용보험 가입률 등이 최근 몇 년간 모두 상승추세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표 3-15).

〈표 3-14〉 한국의 정규직/비정규직 특성 비교

항목	정규직 특성	비정규직 특성
고용형태	정규직의 비율이 비정규직보다 높음	비정규직의 범주(한시적, 시간제, 비전형)별 비율 차이
직업	관리자, 사무종사자 등에서 정규직 비율 높음	서비스업, 판매직, 단순 노무직에서 비정규직 비율 높음
산업	제조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에서 정규직 비율 높음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 비정규직 비율 높음
성별	남성의 정규직 비율이 여성보다 높음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남성보다 높음
지역	세종 및 수도권, 울산, 대전, 인천 등 대도시에서 정규직 비율 높음	중소도시 및 농촌 지역에서 비정규직 비율 높음
연령	중장년층에서 정규직 비율 높음	청년층과 고령층에서 비정규직 비율 높음
교육정도	대졸 이상에서 정규직 비율 높음	고졸 이하에서 비정규직 비율 높음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23)

〈표 3-15〉 비정규직 일자리 관련 지표 추이

	2020	2021	2022	2023
비정규직/정규직 상대임금 비율(%)	52.9	53.0	54.1	54.0
(시간제 제외)	72.4	72.8	75.0	76.2
평균 근속기간(개월)	29	29	30	32
고용보험 가입률(%)	46.1	52.6	54.0	54.2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23) 및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한국의 경우,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중소기업의 높은 비중,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이중구조, 1997년 IMF 이후 노동 유연성 확대, 기술 발전과 글로벌화로 인한 노동시장 양극화, 근속연수에 따른 연공급 임금체계, 기업의 고용 유연성 선호 하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법적제 고용보호 격차 등의 구조적 요인 등과 결합되어 비정규직 비율이 OECD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이런 구조적 요인과 함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요인 등이 더해져 최근의 추세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지표를 둘러싼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의 구조적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30) 다만 국가별 임시직 포함 기준이 다른 점 고려 필요

첫째,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기업들은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선호했다. 이와 더불어, 제조업 공동화 및 탈공업화 현상이 비정규직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유행의 종료 후, 인플레이션 문제와 중국경제 성장의 침체에 따라, 대중국 수출이 침체되면서 관련 산업의 성장이 둔화된 점 등도 원인이 되었다.

둘째, 사회 변화적 요인으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화의 진전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 고용 형태의 다양화도 비정규직 증가에 기여했다. 플랫폼 경제의 확산은 전통적인 정규직 일자리 대신 비정규직 형태의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다. 2020년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15~64세 취업자의 약 0.92%에 해당하는 22만여 명이 플랫폼 노동자로 추산된 바 있다(통계개발원, 2021, p.169). 아울러,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은 비정규직이 많은 신중년 일자리의 확대와 관련되어 있다.

셋째, 정책적 요인, 특히 정부의 비정규직 감축 정책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도 원인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장려하는 정책이 있었으나, 민간 부문에서는 이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으며, 또한 공공부문에서의 정규직 전환도 한정적이었던 지적이 있다.

#### 나. 관련 정책 현황

정부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다각도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선도적으로 실시하며, 민간부문에 이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동시에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법적 제도를 강화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하여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보험 가입 확대와 직업훈련 기회 제공을 통해 비정규직의 사회안전망과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LMPs: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강화를 통하여 일자리 문제 및 비정규직 비율 감소를 꾀하였다. 아울러 이 중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통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노동시장 양극화를 완화 및 근로자의 삶의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고용 및 노동 정책들을 전개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정부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비율을 감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전개하였다. 예를 들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고용개선, 정규직 전환 지원금, 비정규직 차별 완화를 위한 차별 없는 일터 지원 운영 등의 정책과 사업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표 3-16>의 예시와 같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표적 사업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민간 부분으로 확대되지 못하였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역시 사중손실(dead weight loss), 전치효과(displacement effect), 대체효과(substitution effect) 등으로 순고용 효과는 감소하게 된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감소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연공급에서 직무급으로 전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법적 보호 수준 격차 완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임금차별 완화

등의 보다 근본적이며 구조적인 문제와 기업의 고용 문화 개선, 글로벌 경기적 요인과 은퇴노동자의 비정규직 노동시장 진입 등의 복합적 요인이 있으므로 정부의 몇몇 사업이나 정책으로 동 지표의 개선을 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표 3-16>는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비정규직 비율 감소를 위한 주요 정책들을 정리한 것이다.

<표 3-16>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의 비정규직 비율 감소를 위한 정책 예시

정책 명칭	주요 내용	실적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상시·지속 업무 종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17.7) '23년말 기준, 공공부문 1단계* 20.3만여명 정규직 전환 결정, 20만여 명 정규직 전환 완료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시 사전심사 실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18.5.31) 발표, '23년 기준 862개 기관 도입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	비정규직 다수 고용사업장 고용차별 진단 및 상담	2023년 기준, 총 356개사 대상 진단 실시, 300개 사에 대해 고용차별 개선지원(255개사 개선 이행) 차별 예방교육 실시 및 온·오프라인 및 방문상담서비스 제공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2023년 기준, 고용구조개선 컨설팅 사업에 참여한 5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간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 체결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 지원	정규직 전환 기업 대상 정규직 전환 지원금 및 세액공제 지원	2023년 기준, 4,044명, 1,504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금 91억 5천만 원 지원 2022년 기준 약 314억 원 세액공제 지원

\* 공공부문 1단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다수<sup>31)</sup>, 고용노동부 「2024 고용노동백서」,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2024.10)

## 다. 지표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

### 1) 정책 강화 방향 및 향후 과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 지표와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한 향후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 가) 민간 부문의 정규직 확산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 개혁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 지표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시작된 정규직 전환 정책의 민간 부문 확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이중노동시장 구조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평등한 구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이다. 예를

3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0.11.20). “바람직한 고용구조의 자율적 조성을 위한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1.3.6). “17년 7월 이후 공공부문 상시·지속 업무 종사 비정규직 199,538명 정규직 전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3.4.16). “2023년도 비정규직 차별개선은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이 합니다”

들어, 원청과 하청 간의 교섭력 불균형 등은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하나의 원인이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감소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이중노동시장 구조 완화, 연공급에서 직무급으로 임금체계 개편,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법적 고용 보호 격차 완화 등의 구조적 요인이 해결될 때, 민간 부문에서의 정규직 전환이 대폭 확대될 수 있다.

#### 나) 비정규직 처우개선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원칙(Equal pay for equal work)을 강화하고, 법적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파견 및 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법률적 강화가 필요하다. 2010년부터 시행된 '차별 없는 일터 지원단'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의 개정 및 현장 안착을 통해, 비정규직 고용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고용차별을 해소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EU의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지침'과 유사한 방향성을 가지며, 국제노동기구(ILO)의 '양질의 일자리(decent job)' 아젠다와도 부합한다.

#### 다) 유연안정성 제도 보완 및 강화

유연안정성(flexicurity)이란, 노동시장 정책의 한 모델로 유연성(flexibility)과 안정성(security)이 결합한 것이다. 즉 기업의 자유로운 고용 및 해고를 어느 정도 보장하면서, 동시에 근로자의 사회보장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하여 안정성을 강화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덴마크의 '황금 삼각형'(Danish Golden Triangle) 모델은 이러한 유연안정성의 대표적 사례로, 고용 유연성, 관대한 사회보장제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조화를 추구한 정책적 사례 가운데 하나이며, 우리나라도 도입을 논의한 경험이 있으나, 한국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도입되지 않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요점은 한국 상황에 맞는 유연안정성 모델을 개발하고, 다양한 고용 형태를 수용할 수 있는 근로 계약 모델을 도입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이다(장지연 외, 2011). 예를 들어, 유연안정성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유연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라) 비정규직의 직업교육 및 훈련강화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재취업 및 전직 지원, 온라인 교육 플랫폼 확장, 산학 협력 강화, 그리고 정부의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무역량을 향상하고, 고용의 질을 개선하며, 안정적인 직업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2) 지표의 활용과 개선을 위한 제언

우리나라의 복잡다단한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 지표의 의미와 한계, 그리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제언할 수 있다.

우선, 저출생 문제와 관련하여 이 지표는 고용 불안정성과 낮은 임금이 결혼과 출산 기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기능한다. 그러나 단순 비율을 넘어 비정규직의 소득 수준, 고용 안정성, 복지 혜택 등을 세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저출생 문제의 근본 원인을 더욱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둘째, 초고령사회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지표를 심화 분석하여 노인 빈곤 문제와 노인 일자리의 질을 반영하는 중요한 척도로 활용할 수 있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은퇴한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고령자들의 비정규직 재취업 현상을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령대별 고용 형태와 근로조건을 더욱 세분화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공지능과 자동화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의 맥락에서, 이 지표는 일자리 성격의 변화와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창출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직무의 자동화 가능성, 새로운 형태의 고용(예: 킥 이코노미(Gig Economy)) 비율 등을 포함한 더 복합적인 지표 개발이 요구된다. 이는 기술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정확히 측정하고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디지털 전환과 노동 유연성 증대로 인해 원격 근무,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형태의 근로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통적인 정규직/비정규직의 구분은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할 때, 단순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이분법에 기반한 비정규직 비율 지표는 한계가 노정되어 있으며, 근로 형태의 다양성, 근로자의 자율성, 소득 안정성 등을 포괄하는 새로운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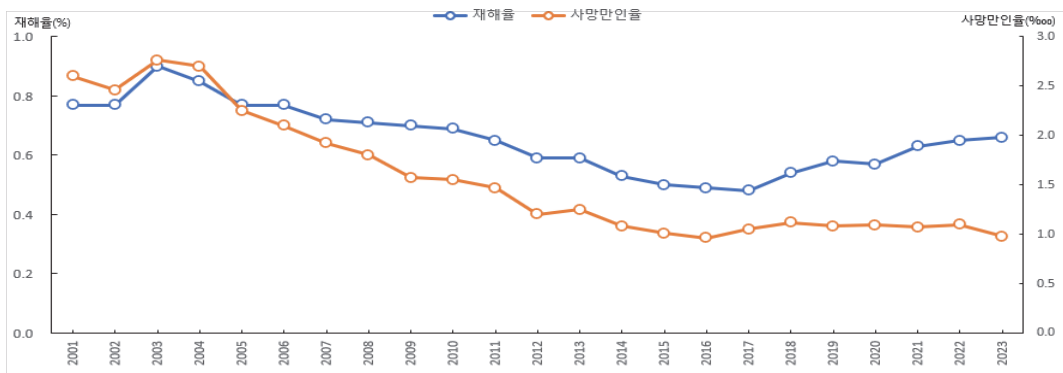
글로벌 경쟁 심화로 인한 노동시장 유연성 요구 증대 측면에서, 이 지표는 여전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근로자의 권리 보호 정도, 고용 안정성, 직무 만족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근로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할 때,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 지표는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새로운 노동 형태와 복잡한 사회 변화를 완전히 포착하기에는 일부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사회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지표의 개발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 5. 산업재해율

K-SDG 지표명		8-6(2) 전체 재해율																
관련 목표	목표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세부목표 8-6:	모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한다																
2024 지표평가 결과:	지표값: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2019</th> <th>2020</th> <th>2021</th> <th>2022</th> <th>2023</th> </tr> </thead> <tbody> <tr> <td>(%)</td> <td>0.58</td> <td>0.57</td> <td>0.63</td> <td>0.65</td> <td>0.66</td> </tr> </tbody> </table>						2019	2020	2021	2022	2023	(%)	0.58	0.57	0.63	0.65	0.66
			2019	2020	2021	2022	2023											
(%)	0.58	0.57	0.63	0.65	0.66													
	순향도:	* 산재보험적용 근로자수 100명당 (산업재해) 재해자수의 비율 “뇌우” ⚡																

## 가. 지표의 현황 및 의의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따르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산업재해의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의 산업재해 통계는 크게 사고재해와 질병재해로 구분된다. 사고재해는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와 부상자의 합이며, 질병재해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와 질병이환자의 합이다. 재해율 산출에 활용되는 근로자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근로자 수를 의미한다. 사망자 수는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 수이며 사업장 외 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박업은 포함), 체육행사, 폭력행위, 통상의 출퇴근에 의한 사망,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고사망자는 제외된다. 이와 같이 산업재해율은 일하는 사람이 노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발생 및 질병 발현에 대한 수준을 의미하므로 사업장의 안전한 수준을 의미하는 지표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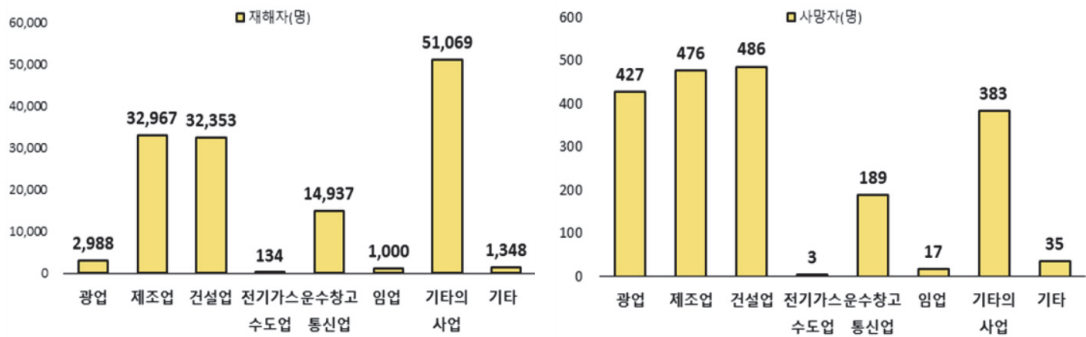


[그림 3-9] 산업재해를 및 사망만인율 추이(2001~2023)

한국은 재해율은 산재보험적용 근로자 100명당 재해자를 의미하며, 2001년 0.77%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7년 0.48%로 감소하였다가 점차 증가하여 2023년에는 0.66%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산업 재해자 수는 2001년 약 81,434명 수준에서 2017년 89,848명에 이르렀다가 증가 추세로 전환되어 2023년에는 136,796명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재해율에서 사고재해와 질병재해를 구분하여 보면 2023년 기준 사고재해자는 113,465명, 질병재해자는 23,331명으로 전체 재해자 중에는 사고재해자 비중이 월등히 높다.

사망만인율은 근로자 10,000명당 재해로 인한 사망자를 의미하며, 2001년 2.36‰수준이었는데 2016년 0.96‰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가장 최근인 2023년에는 0.98‰로 나타났다. 사망자 구성은 2001년에는 총사망자 2,502명 중 질병사망자가 1,197명, 사고사망자가 1,305명이었으나, 질병사망자는 2017년 993명까지 감소하였다가 2023년에는 1,204명으로 증가하였다. 사고사망자는 점차 감소하여 2023년에는 812명 수준을 나타냈다.

재해자를 업종별<sup>32)</sup>로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재해자의 경우 '기타의 사업'에서 51,069명 발생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는 제조업에서 32,967명, 건설업에서 32,353명, 운수창고통신업에서 14,937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의 경우에는 건설업에서 48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제조업 476명, 광업 427명, '기타의 사업'에서 383명, 운수창고통신업에서 189명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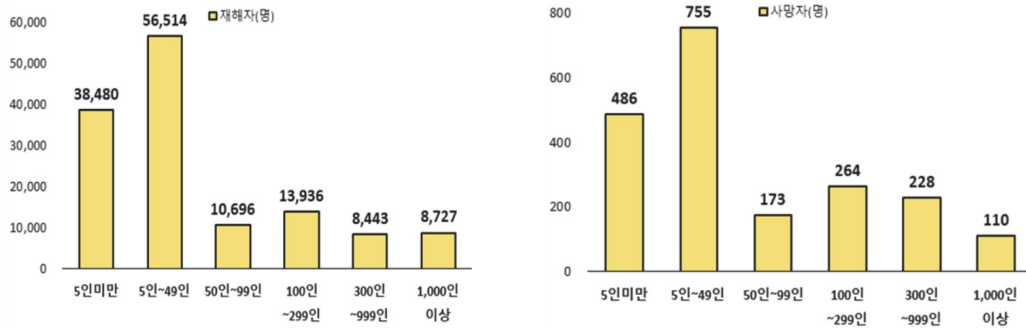
주: '기타의 사업': 통상 서비스업으로 지칭되는 도·소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음식·숙박업 등이 포함.

'기타': 어업, 농업, 금융보험업

출처: 고용노동부(2024) 「2023년 산업재해 현황」

[그림 3-10] 업종별 산업재해 현황

32) 산업재해 통계는 표준산업분류가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업종 구분을 사용하여, 이 둘 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출처: 고용노동부(2024) 「2023년 산업재해 현황」

[그림 3-11] 사업장 규모별 산업재해 현황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총 재해자는 5인~49인 규모의 사업장에서 연간 56,514명,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8,480명 발생하여,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재해자 발생이 집중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사망자의 경우에도 5인~49인 규모에서 755명, 5인 미만 사업장에서 486명으로 가장 많아, 산업재해는 소규모 사업장이 취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산재도 빈발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전체 근로자 사고사망자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2.2%로 나타난 바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유해위험 요인이 많고 작업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로 근무하며, 낯선 환경과 언어소통 장애로 재해예방에 어려움이 있어 산재발생 위험이 더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sup>33)</sup>

우리나라의 재해자 수 및 재해율이 증가 추이를 나타내는 이유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 현황에 포함되는 재해는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을 때 통계에 산입한다.<sup>34)</sup> 이 산재보험의 가입범위는 수차례에 걸쳐 지속해서 확대되었다.<sup>35)</sup> 1987년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었지만, 1988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고, 2000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2018년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으로 기준이 대폭 확대되었고, 근로자 외에 특례 가입 대상으로 2020년부터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의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사업주가 원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2021년에는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무급 가족종사자까지 가입 대상이 확대되고, 그 후 매년 다양한 특수형태종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입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즉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가입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재해율 지표가 정체되는 데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있다. 가입범위가 확대되면서 재해율 통계에 포함되는 범위가 늘어나고, 더구나 소규모 사업장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역이 통계에 더 많이 잡히게 되면서

33) 전용일 외(2023)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현황 파악 및 제도개선 연구」 (고용노동부 주관; 한국고용복지지원금연구원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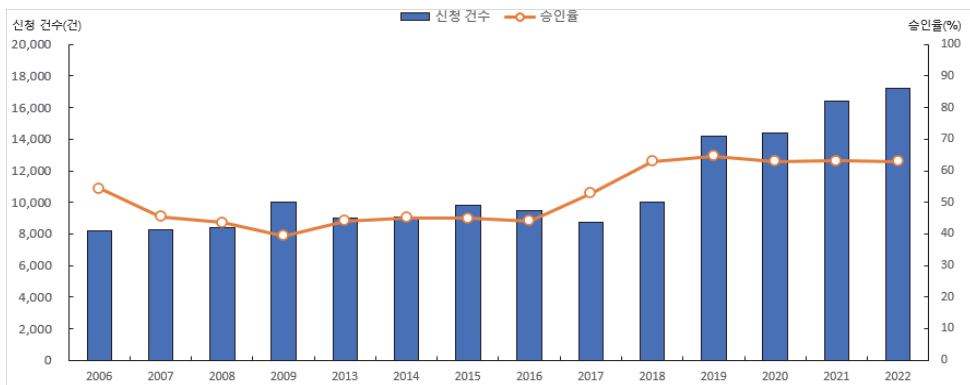
34)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후 보상을 위해 산재보험에 가입했을 수도 있다.

35) 추정된 원칙도입('17.9), 사업주확인제도 폐지('18.1), 산재보험 적용 직종 확대(~'23(매년)), 전속성 요건 폐지('23.7) 등

재해율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재해 자체가 더 많이 발생했다기보다 이전에 통계에 잡히지 않던 영역이 통계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또한 산업재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재해 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 급여를 신청하고 업무상 재해로 승인이 나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최근 들어 승인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현황(2022년)을 보면 사고재해의 경우에는 약 90%, 질병재해의 경우에는 약 63% 승인율을 나타낸다. 질병재해의 경우 2017년 이후 승인율이 증가하였고, 높은 승인율은 많은 신청건수를 유인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산업재해 증가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산재보험 가입범위 확대와 승인율 증가와 같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들이 오히려 재해율 지표에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출처: 통계청(2023) 한국의 사회동향, 지난 20년의 산업재해 발생 추이 및 구조

[그림 3-12] 업무상 질병 신청 건수 및 승인율

또한 일부 학자들은 경제수준이 올라가면서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산업재해 발생 특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경영상에 취약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사회보장적 성격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sup>36)</sup>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재해율보다는 사고사망재해자 및 사고사망자에 집중하여 산업안전보건정책을 수립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총괄 실행하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도 사고사망자 발생에 집중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 K-SDG에서도 사고사망만인율(8-6-(1))은 본 지표인 전체 재해율(8-6-(2))과 함께 세부목표 8-2 “모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한다”에 대한 두 지표 중 하나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재해율 지표는 사고사망만인율 지표와 함께 점검하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6) 물론, 건강보험 보장과 중복수혜가 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고용부, 건강보험공단 등)들은 협업하여 이를 방지하고 있다.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사고사망자는 1,134명(2012년) 수준에서 1,090명(2013년) → 992명(2014년) → 955명(2015년) → 969명(2016년) → 964명(2017년) → 971명(2018년) → 855명(2019년) → 882명(2020년) → 828명(2021년) → 874명(2022년) → 812명(2023년)으로 점차 감소하였다. 이에 사고사망만인율도 2012년 0.73‰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9년 0.46‰, 2023년 0.39‰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선진국에 비하면 높은 수준으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사고사망자 감소에 노력하고 있다. 목표순향도 상으로도 사고사망만인율은 “맑거나 흐림”으로 평가되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2030년 목표치로 설정된 0.22‰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었다.

〈표 3-17〉 OECD 국가별 사고사망 만인율

[참고] OECD 국가별(38개) 사고사망만인율(%) 현황 \* ILO에 보고된 최신연도 기준('14~'21 중)

국가	만인율	국가	만인율	국가	만인율	국가	만인율
콜롬비아	1.80('15)	포르투갈	0.27('20)	아일랜드	0.18('19)	벨기에	0.13('19)
코스타리카	0.97('16)	프랑스	0.26('20)	호주	0.16('17)	폴란드	0.11('20)
멕시코	0.75('17)	라트비아	0.25('20)	아이슬란드	0.16('20)	노르웨이	0.11('19)
터키	0.60('20)	오스트리아	0.25('19)	일본	0.15('21)	핀란드	0.11('19)
한국	0.43('21)	체코	0.23('20)	슬로바키아	0.15('21)	그리스	0.09('19)
미국	0.35('19)	뉴질랜드	0.23('15)	이스라엘	0.14('20)	영국	0.08('18)
이탈리아	0.34('20)	에스토니아	0.22('20)	헝가리	0.14('20)	독일	0.07('20)
리투아니아	0.32('20)	스페인	0.21('20)	덴마크	0.14('20)	스웨덴	0.07('19)
룩셈부르크	0.31('19)	캐나다	0.20('14)	스위스	0.14('19)	네덜란드	0.05('19)
칠레	0.31('18)	슬로베니아	0.19('20)	평균		0.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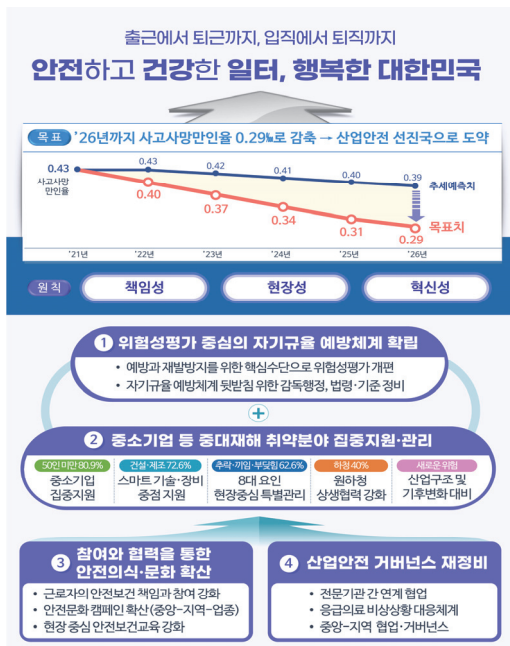
출처: 고용노동부(2022),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 나. 관련 정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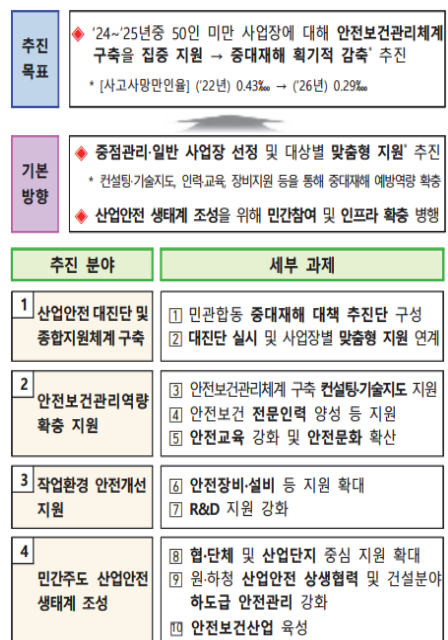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는 5년마다 수립되어 시행되는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이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제5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2020~2024)을 살펴보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5개의 정책과제와 13개의 세부과제를 발굴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법과 제도의 현장 안착 지원이라는 정책과제에는 ① 의무 주체와 보호대상 확대, ② 원청과 하청이 함께하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③ 화학물질 관리기준의 정립 및 실행이 포함되어 있고 산재 사망사고 감축이라는 정책과제에는 ④ 주요 사고 사망 요인 집중관리, ⑤ 안전보건 주체별 역할 강화, ⑥ 빅데이터(Big-Data) 기반의 사업장 지도·감독이라는 세부과제가 있다. 산업보건 사각지대 해소라는 정책과제에는 ⑦ 업무상 질병 발생 단계별 관리 강화, ⑧ 유해요인별 사각지대 해소 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⑨ 자율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현장 작동성 강화, ⑩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지원을 세부과제로 수행 중이다. 마지막으로 안전·보건 인프라 확충 및 문화 확산을 위해 ⑪ 안전보건 정보 등에 관한 공유와 참여 확대, ⑫ 안전·보건 교육 실효성 제고, ⑬ 안전보건 문화 확산이 세부과제로 시행되고 있다.

중장기 산재예방 정책인 5개년 계획 이외에 현 정부 출범으로 수립된 정책으로는 2022년에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있다. 해당 정책에서 사고사망만인을 감축을 위한 4대 핵심과제로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이후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통한 사업장 안전역량 및 수준 향상을 설정하였고, 중소기업 등 취약분야 집중지원관리를 위한 5개 세부과제로는 ① 중소기업 집중 지원, ② 스마트 기술장비 지원, ③ 8대 요인 현장중심 특별관리, ④ 원하청 상생협력, ⑤ 산업구조 및 기후변화 대비를 주요 활동으로 계획하였다. 자기규율 예방체계와 취약분야 집중지원 관리를 위해,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과 문화 확산, 그리고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를 핵심기반으로 선정하고 산재예방 5개년 계획에서 직접 드러나지 않은 근로자의 안전보건 책임과 참여 강화를 지목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기 전 2023년 말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안)이 발표되었는데 상대적으로 산업재해 발생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에 특화된 지원대책이었다.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집중지원을 위한 추진분야 선정 및 세부과제가 도출되었는데 자발적인 산업안전진단 선추진, 맞춤형 후지원 연계를 통한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기본을 지키면서, 전문역량 확충과 작업환경 안전개선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민간 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 확보를 통한 정부-지자체-민간 거버넌스 구축을 하고자 하며 민간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생태계를 정부 지원하에 구축하려는 시도를 계획하였다.



[그림 3-13] 중대재해감축로드맵 추진방향




[그림 3-14]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대책

#### 다. 지표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

앞서 재해율의 현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규모로는 소규모 사업장,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에서 많은 재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주요 산재예방 정책목표인 사고사망자의 경우에도 소규모 사업장, 건설업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에도 산업재해에 취약한 규모 및 산업에 관련 지원정책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자금 소요는 특히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에게는 사고예방을 위한 투자라기보다 비용으로 인식하기가 쉽다. 사고에 대한 투자는 바로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우며 사고의 특성상 예방되어 발생하지 않은 사고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효과성을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사업장에서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보다는 적은 수준에서의 안전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 정책은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재해율은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여 일하는 사람의 사고를 예방하고 질병이 발생하지 않게 한다는 의미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정책 지표임에는 분명하다. 단 지표를 측정·구성할 때 산재보험의 승인 여부를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사고나 질병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전술했듯이 보상이 많이 이루어짐에 의해서도 지표에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가입범위나 보상범위를 지속해서 확대하는 추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최근 재해율 지표에 나타난 증가 추세는 이 영향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고용부 등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기관의 정책목표는 사고사망자 수 및 만인율에 집중하고 있으며, K-SDG 지표 해석에서도 전체 재해율(8-6-(2), 뇌우)과 함께 사고사망만인율(8-6-(1), 맑거나 흐림) 지표를 함께 고려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 6.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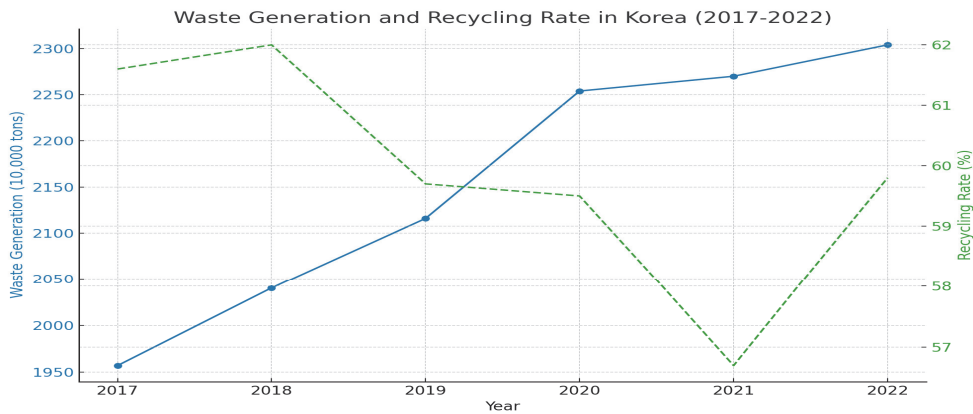
K-SDG 지표명		12-5(1)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					
관련 목표	목표12: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증진					
	세부목표 12-5:	폐기물의 원천예방과 감량, 재사용과 재활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감소한다.					
2024 지표평가 결과:	지표값:		2018	2019	2020	2021	2022
		(%)	62.0	59.7	59.5	56.7	59.8
	순향도:	“뇌우” 					

#### 가. 지표의 현황 및 의의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 지표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자원 절약 및 효율성 증대로, 천연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기존 자원의 재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고갈을 방지하고, 미래

세대가 이용할 자원을 보존하는 데 기여하며, 새로운 제품을 제조하는 데 드는 에너지보다 적은 에너지를 소모하므로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다. 두 번째는 환경 오염의 저감으로, 재활용은 매립시설과 소각시설로 보내지는 폐기물의 양을 줄여 토양, 수질, 대기 오염을 줄이며,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기후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세 번째는 경제적 측면으로, 재활용 산업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네 번째는 교육 및 지역사회 영향으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재활용의 실천을 통해 시민들의 환경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를 촉진하여 커뮤니티의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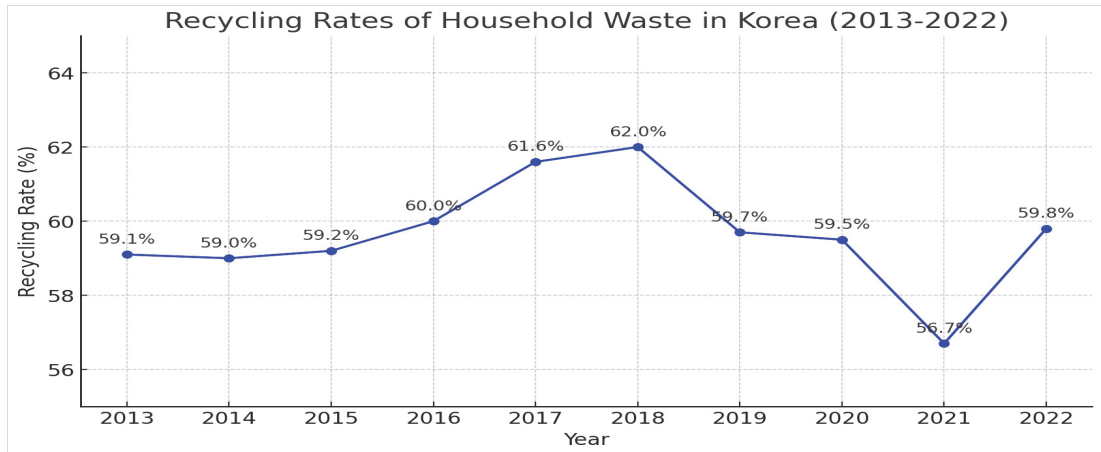
[그림 3-15]를 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생활계 폐기물의 발생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재활용률은 증가, 감소 후 다시 증가하는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출처: 환경부(2023), 「2022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주: 생활계 폐기물의 발생량(파란색)과 재활용률(초록색)

[그림 3-15] 생활폐기물의 연도별 발생량 및 재활용률 추이

[그림 3-16]에서는 시계열을 확장하여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의 생활계 폐기물 재활용률을 나타낸다. 2013~2015년 동안 재활용률은 59.0~59.2%로 거의 변동이 없었으나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62.0%에 이르렀었다. 그러나 2019~2021년까지는 재활용률이 다시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 시기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고 재활용 처리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에 기인한다. 여기에 더해 1인 가구의 증가, 복합재료의 사용 증가, 중국의 재활용 쓰레기 수입 금지, 배달음식의 증가, 온라인쇼핑의 증가에 따른 일회용 포장재 사용 증가 등도 원인일 수 있다. 2021년 56.7%까지 떨어졌던 재활용률은 2022년에는 59.8%로 증가하였다.



출처: 환경부(2023), 「2022년 전국 폐기를 발생 및 처리현황」

[그림 3-16]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 변화 추이

## 나. 관련 정책 현황

생활폐기물 재활용에 관련된 정책 방향은 4R(Reduce, Reuse, Recycle, & Recovery)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Reduce는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통한 감량으로, 원료 및 제품 제조 단계에서 감량하는 원천적인 억제와 쓰레기 종량제 등 소비 단계에서의 발생을 억제하는 발생원 감량으로 구분된다. Reuse는 재사용의 활성화로, 나눔장터, 재활용센터 등의 활성화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 Recycle은 재생이용의 확대로, 분리배출 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시행을 통해서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Recovery는 에너지 회수 및 활용 정책으로, 폐기물 제로화(Zero Waste), 매립 제로화, 자원순환 사회 등의 목표를 지향한다.

4R 정책에 근거한 우리나라의 폐기물 관리 중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폐기물 소비 및 폐기 단계에서 재활용에 초점을 맞춘 정책과 제도를 시행 중이다. 쓰레기 종량제 개선, 재활용 센터 설치, 분리수거 강화, 분리배출표시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자원순환기본계획 등이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주요 정책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순환사회 구축의 목표를 위해 2018년에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재활용을 장려하고 자원 효율성을 높이며, 순환자원 인정제 도입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함으로써 폐기물을 자원으로 전환시켜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둘째, 재활용 인프라의 강화이다. 재활용 선별장 및 처리시설을 확충하여 재활용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며, 재활용 기술 개발 및 지원으로 첨단 재활용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셋째,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재사용 가능한 제품 사용을 장려한다. 넷째, 플라스틱 사용 저감 정책을 시행하여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


관련 정책의 주요 성과 및 한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자원순환기본법을 바탕으로 자원순환사회 구축과 나아가 순환경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각 지자체에서의 후속조치도 마련되고 있다. 둘째,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평가하면서 개선해나가고 있다. 종량제의 성과는 여러 연구를 통해 분석된 바 있는데, 현재는 종량제 봉투 가격의 인상의 어려움으로 그 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순환자원 인정제 도입으로 기존에 발생하는 많은 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되어 폐기물 발생이 줄고 재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넷째, 재활용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으로 첨단 재활용 기술이 개발되었고, 화학적 재활용 기술도 활발히 적용되고 있으며 관련 산업도 육성되고 있다. 재활용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전처리 단계에서 주민들의 협조를 통한 엄격한 분리배출이 요구되는 한편, 분리배출의 어려움과 효능감에 관련된 주민들의 피로도를 고려하여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일관성있게 시행해나갈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다회용기 사용 등을 장려하고 있다. 다만 관련 정책의 일관성 부족으로 주민들과 관련 산업계의 신뢰를 얻지 못한 한계 또한 지적되고 있다. 여섯째, 플라스틱 사용 저감 정책으로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현재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인 INC-5가 협약문이 완성되는 최종회의가 될 전망으로, INC-5 이후에는 국가원수들이 협약에 공식적으로 서명할 외교 회의가 예상된다. 일곱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강화로 제품 제조사에게 제품의 폐기물 처리 책임을 부여하여 재활용을 촉진하는 제도를 강화하여 생산자들이 친환경적인 제품 설계를 하도록 유도하며, 재활용 의무 대상 품목을 확대하여 더 많은 제품들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활용 기술의 발전과 여러 여건에 따라 대상 품목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는데 관련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이루어나가야 한다.

#### 다. 지표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 지표, 그리고 관련 세부목표 차원에서 폐기물의 예방, 감량, 재활용을 통한 폐기물 감소를 위해서는 향후 다음의 정책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첫째,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 지표의 향상은 소비·폐기 단계에서 가정에서의 분리배출 강화가 바탕이 된다. 이를 위해 분리배출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교육·홍보하여 분리배출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재활용센터 등 재활용의 지역거점을 더욱 활성화하여 주민들의 재활용품 배출과 이후의 수거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생산 단계, 나아가 제품의 설계 단계에서 재활용과 자원순환이 고려되도록 하여,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과 설계의 제품들이 생산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제품설계를 늘리고,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을 계속해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재활용 시설을 확충하고 현대화하며, 화학적 재활용 능력을 증대시켜야 한다. 넷째, 일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는 정책을 강력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카페와 음식점 등에서 일회

용 컵, 빨대, 비닐봉투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다회용기의 사용 등 대안적인 방식을 유도·활성화해야 한다. 특히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대비하여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집중적으로 저감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재활용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활용 제품의 구매를 촉진한다.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재활용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인센티브를 시행해야 한다. 일곱째, 국제플라스틱 협약에 대응하여 플라스틱의 순환성을 강화하는 정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체들이 재활용 플라스틱을 제품 생산에 더 많이 사용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예를 들면 자동차 제조에서 플라스틱을 사용할 때 일정 비율의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하거나, 폐차에서 재활용된 플라스틱을 일정 비율 사용하도록 한다.

## 7. 지방상수도 자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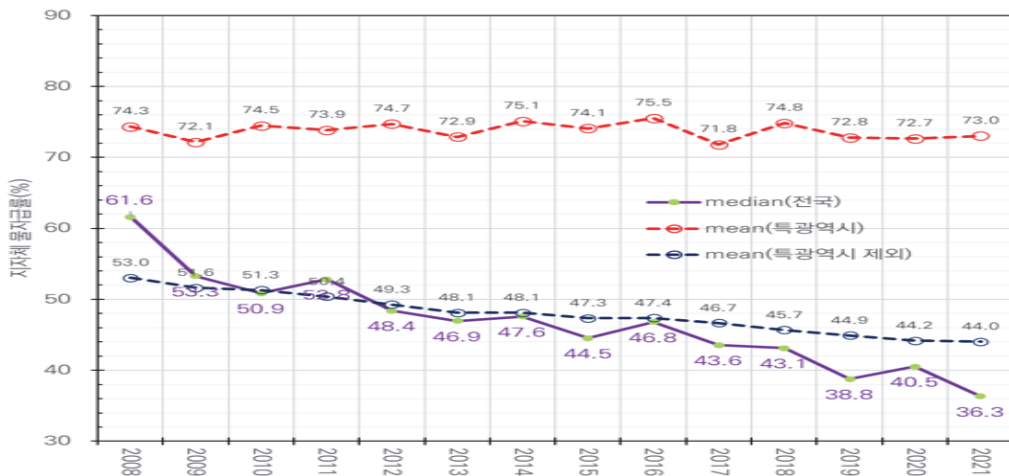
K-SDG 지표명		6-4(2) 지방상수도 자급률					
관련 목표	목표6: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세부목표 6-4:	물공급 안정성 도모를 위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2024 지표평가 결과:	지표값:		2018	2019	2020	2021	2022
		(%)	53.9	52.4	51.5	50.8*	49.8
		*2021 상수도통계 기준으로 지표값 산출 = (자체취수량/연간총처리수량) X (연간총생산량실적/총급수량) X 100					
	순향도:	“뇌우” 					

### 가. 지표의 현황 및 의의

정부(환경부)는 심화되는 기후변화 영향에 대비하고 상수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2017년 상수도 통계」(2018년 발행)에서 ‘지방상수도 자급률’을 시범지표로 산정·공개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 자급률의 모니터링과 개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물 자급률 향상’ 노력을 규정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같은 해 발의하였다(2018.10.25). 이처럼 정부가 정책 추진 상황의 계량화와 법적 근거 확보를 동시에 추진한 배경에는 충분한 양의 깨끗한 상수원의 확보가 국민 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2020년 마련된 제4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및 개정 K-SDG에 ‘물 자급률’이 신규 지표로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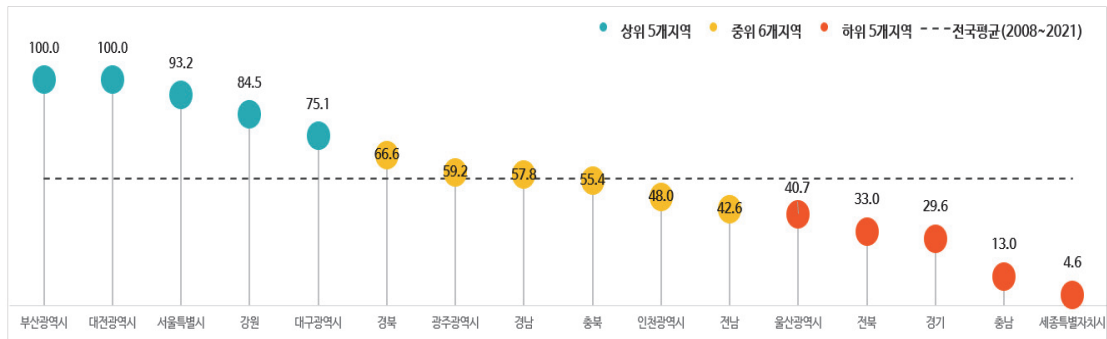
최근 상수도 통계에 나타난 ‘지방상수도 자급률’ 수치는 매년 조금씩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자급률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자 하는 K-SDG의 목표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최근 한국환경연구원(김익재 외, 2024)에서 수행한 지자체 물자급률 계산에 따르면, 더 긴 시계열로 보아도 전국 지자체 자급률(2008-2021)은 계속 감소 중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특·광역시는 소폭 감소하였으

나, 그 외 지자체의 자급률은 큰 폭으로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7). 이러한 감소 추세는 전국 취수시설 및 상수원보호구역이 감소하고 광역상수도 시설이 이를 대체하는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특·광역시 중에서 평균적으로 자급률(2008-2021)이 가장 낮은 곳은 세종시와 울산시로 분석되었고, 기타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충청남도, 경기도, 전라북도로 분석되었다.



출처: 김익재 외(2024, 한국환경연구원) p.31

[그림 3-17] 전국 지자체 물자급률 추이, 2008-2021



출처: 김익재 외(2024, 한국환경연구원), p.31

[그림 3-18] 전국 지자체 물자급률 상·중·하위 지역(2008-2021년 평균)

‘지방상수도 자급률’ 통계는 2017년 기준 「상수도 통계」의 시범지표로서 최초로 공식 산정된 이후 2019년판까지 3년간 생산·공개되었으나, 「2021년 상수도 통계」에는 해당 통계가 포함되지 않아,<sup>37)</sup> 정책 지표로서의 모니터링이 한계에 직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물 자급률 향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37) 2021년과 2022년판 「상수도 통계」의 부록에는 지방상수도 자급률(M38) 산식이 소개되어 있지만, 자급률 수치는 책자에 수록되지 않았다. 2022년판 상수도통계의 엑셀 버전에는 수치와 산식이 수록되어 있다.

있음에도, 관련 계획 등에서 구체적인 정책 목표가 부재했던 점도 그 배경으로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목표연도와 정량적 목표(예시: 00시 2021년 물 자급률 현황 40.0% → 2030년 물 자급률 목표 65.5%)가 부재하면, 법적 근거가 있더라도 정책적 이행력은 담보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K-SDG가 목표하는 지방상수도 자급률의 향상은 달성이 어려워 보이며, 더구나 지표의 계량화도 멈추어서 이행 모니터링도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다. 물 자급률이 낮아진 지자체는 자신들이 관할하는 구역 또는 취수시설이 아닌 외부로부터 일정 비율의 상수원 수량 혹은 전체 물량을 수입하기 때문에, 용수 확보의 자체 대응력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전술했듯이 취수시설은 전국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지만, 연간 취수량은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편중화된 물공급 시설 대비 커져가는 취수량은 운영효율적이라고 볼 여지도 있겠으나, 기후위기 시대에 강수 변동에 대한 민감성은 대폭 커질 수 있고, 안정적 용수 확보의 취약성이 악화될 수 있다. 또한 취수시설이 있으면 통상적으로 상수원 규제가 적용되지만, 실제 용수를 급수받는 지역은 상수원 규제가 미적용되는 지역이므로, 인근 및 상하류 간 지자체 간 물분쟁 빈도는 올라가고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는 국가적 사안이 될 수 있다.

#### 나. 관련 정책 현황

지방상수도 자급률을 정책적으로 관리하는 데 대한 법적 근거는 2019년 신설된 수도법 제12조(수도사업의 경영원칙)의 ‘물 자급률’ 향상에서 찾을 수 있다. 2015년 충남 서북권 8개 시군에서 가뭄과 물부족 사태를 겪은 뒤 지역단위 물 자급률 관리와 안정적인 용수 확보의 필요성을 절감한 정부(환경부)가 2018년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 수도법

[시행 2024. 8. 17.] [법률 제19662호, 2023. 8. 16., 일부개정]

- 제12조(수도사업의 경영 원칙)** ①수도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신하여 민간 사업자에 의하여 수도물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합리적인 원가산정에 따른 수도 요금 체계를 확립하고, 수도시설의 정비·확충 및 수도에 관한 기술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 체계를 확립하는 경우에 수요자의 물 절약을 유도하고 수요자가 물을 공급받는 데에 드는 비용과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요금수입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다른 수도사업자와의 연계운영 등을 통하여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관할구역 내 취수원 확보 및 보전을 통하여 물 자급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당시 수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 개정안의 사유는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해 지자체 관할구역에 취수원(상수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자급률 향상이다. 이에 대한 국회 검토의견은 지자체(지역)별 여건에 따라 광역상수도의 경제성과 연계성이 합리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지만, 지자체의 물 자급률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지자체의 광역상수도 의존이 높아지는 데 우려를 표하였다. 환경부도 지자체의 과도한 광역상수도 의존은 지양해야 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자체의 광역상수도 의존율은 1995년 12.4%에서 2016년 28.3%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분석된다.

### 「수도법」 물자급률 개정의 사유 및 검토 의견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2019.3)

- **(제안 사유)** “이상 고온현상과 가뭄의 장기화 등 기후 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관할구역 내 취수원을 확보하고 보전함으로써 물 자급률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등 수도사업의 경영원칙을 명시함”
- **(검토 의견)** “지방자치단체의 물 자급률을 높인다는 것은 외부 유입량에 대한 의존보다는 자체 취수원의 보전과 확충을 통해 수돗물을 생산·공급한다는 의미로,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상수도 의존 비율이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진 점을 고려하면 가뭄에 대한 지역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물 자급률 향상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성이 인정됨.” “지역별 여건에 따라 자체 취수원의 확보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광역상수도와 연계하는 방식이 경영 효율성 제고에 더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도 합리성이 있다고 보임. 다만, 이에 대해서는 입법취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상수도에만 의존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환경부의 의견이 있음.”

물 자급률 향상을 위한 정부 정책의 살펴보기 위해 관련 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 자급률에 관한 법적 근거가 수도법에 마련된 2019년 11월은 국토교통부의 수량 및 광역상수도에 관한 사무가 환경부로 이관된(2018.6) 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이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국가수도기본계획, 유역물관리기본계획 등과 같은 물 자급률 향상과 연관된 법정 계획들이 순차적으로 마련되었는데, 이들 계획에서 물 자급률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와 목표 수립은 미흡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점은 물 자급률에 대한 용어의 문제이다.<sup>38)</sup> 전술했듯이 2017년 상수도 통계에서는 ‘지방상수도 자급률’, 수도법 제12조 4항에서는 ‘물 자급률’로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비록 수도법에서 ‘물 자급률’의 정의와 산식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 두 개념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후 연달아 수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 4대강 유역물관리종합계획(2021-2030), 국가수도기본계획(2022-2031) 등에서는 ‘유역 물자급률’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물론 각 유역 단위에서 자급률 향상을 준비하는 것도 의미있지만, 수도법 제12조 4항에서의 물 자급률 향상의 대상은 지방상수도이며 주관자는 지자체라는 점에서 ‘지자체/지방상수도의 물자급률’에 정책의 기초를 두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지표수-지하수 통합·연계관리 기반 마련

- 유역 물자급률 제고를 위한 지표수-지하수 통합공급관리 체계 구축
- 유역 내 지표수-지하수 연계이용 최적화를 통한 물공급의 효율 극대화 및 지하수원 발굴 추진, 지하수저류지 및 분산형 또는 중대형 공공관정 보급을 통한 유역 내 물자급률 제고
- 유역별 하천 기저유출량, 오염부하량 등 하천-지하수 연계관리 기반 마련
- 하천 기저유출량 조사평가 추진, 기저유출을 고려한 공공수역 수질관리, 유역 지하수 수요 및 할양 관리 강화, 하천변 지하수 적정관리체계 마련

분야별 전략	현행 지표	차세대 지표*
물환경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천-호소의 목표수질 달성률</li> <li>- 하천(BOD): 69.6%, '18년 기준</li> <li>하천(T-P): 53.0%, '18년 기준</li> <li>호소(TOC): 32.7%, '18년 기준</li> <li>• 수생태계 건강성 B등급 이상 비율</li> <li>- FAI 40%, '18년 기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물환경지표</li> <li>- 수질, 수생태, 수량, 천수 등 종합평가지표</li> <li>• 하천유지유량 달성률</li> <li>- 환경 생태유량과 통합된 하천유지유량 목표 달성률</li> </ul>
지속가능한 물 이용 체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돗물 만족률</li> <li>- 61.5%, '13년 기준</li> <li>• 수돗물 직·간접 음용률</li> <li>- 43.8%, '17년 기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역 이수안전도</li> <li>- 유역의 물수요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물공급의 안전성</li> <li>• 유역의 물결약량 및 탄소저감량, 유역의 물 자급률</li> </ul>

출처: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 p.63(좌), p141(우)

[그림 3-19]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물자급률 관련 내용(예시)

■ 유역 물 자급률 ■

- 물 이용 여건은 일약해지는 반면 유역 물 자급률 지속 저하
- 취수원 등 시설관리 어려움과 지역 개발을 위한 상수원 규제 해제를 위한 광역상수도 전환 등으로 지방상수도 물 자급률 지속 저하 추세
- 지자체 물 자급률은 '08년 58.4%에서 '20년 51.5%로 지속 감소하였으며, 특광역시(79.5%) 대비 시(27.5%)·군(46.9%) 지역 자급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
- 반면 '06년 이후 10년간 40개 지자체 65개 취수시설 폐쇄 및 광역상수도 전환(40만㎡/인 9.5)에 따라, 광역상수도 의존률 지속 증가
- 과거 지방→광역상수도 전환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52,75㎢ 해제('06~'16년)
- 기후변화에 따라 가뭄 및 이상수질 발생 등 물 공급 리스크가 증대됨에 따라, 안정적 물 이용을 위한 유역 물 자급률 향상 노력 필요

- 전국 물 안전 확보 및 물 자급률 향상을 위해 하수재이용 외 강변여과수, 해수담수화 등 지역 맞춤형 대체수자원 개발·이용 활성화
- (강변여과수) 낙동강 통합물관리사업과 연계한 광역 상수원 개발
- 부산·경남지역 맑은물 공급을 위해 낙동강 강변여과수 개발(45만㎡/일) 이용
- (지하수저류지) 지하수기본계획에 의거, 도서-해안(11개소) 중심 단계적 확대
- 도서-해안지역 사업과 연계, '22년부터 내륙지역을 대상으로 지하수저류지 기본조사 병행 추진
- (해수담수화) 대산 등 임해지역 및 물 부족 도서지역 대상 공급 확대

출처: 국가수도기본계획(2022-2031), p.32(좌), p51(우)

[그림 3-20] 국가수도기본계획 상의 물자급률 관련 내용(예시)


38) 용어(정의)와 개념을 정확하게 살피는 것은 정책 방향의 설정뿐만 아니라 정책 목표와 성과를 도출함에 있어서 매우 중대하므로 면밀하게 제시되어야 함

### 다. 지표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

‘지방상수도 자급률’은 기후변화에 대비한 안정적 상수원 확보를 위해 중요한 정책 가늠자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4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에서는 물 자급률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자급률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여 목표와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는 ‘뇌우’ 등급으로 평가되었고, 이대로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표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물 자급률에 대한 정책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통계를 꾸준하고 일관성있게 산정·활용하여야 한다. 즉 먼저, 상수도 통계에서 물 자급률 지표를 핵심지표로 운영하여 꾸준히 산정·공개하고, 관련 정책에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상수도 통계상의 ‘물자급률’ 산정식은 정수장 또는 급수시설의 관점에서 제시되어 있는데, 이를 ‘취수 자급률’과 ‘급수 자급률’로 세분화하여 산정하고, 필요에 따라 통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sup>39)</sup> 또한, ‘지방상수도 자급률’ 지표명을 수도법에 부합하는 ‘지자체 물자급률’로 변경하고 용어적 혼란을 최소화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물 자급률에 대한 지자체별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관련 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유역물관리종합계획, 국가수도기본계획, 물재이용관리계획 등과 같은 상위 계획과 지자체가 수립하는 수도정비계획에 물자급률 목표가 정량적으로 수립되고 모니터링되도록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

## 8. 온실가스 배출량

K-SDG 지표명		13-4(1)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MtCO <sub>2</sub> eq)					
관련 목표	목표13:	기후변화 대응					
	세부목표 13-4:	지구의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에 비하여 2°C보다 아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을 1.5°C까지 제한하도록 노력한다.					
2024 지표평가 결과:	지표값:	(단위: MtCO <sub>2</sub> eq)					
	순향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잠정)
		709.4	725.0	699.2	654.4	676.6	652.8
		“맑거나 흐림” 					

### 가. 지표의 현황 및 의의

K-SDG 13-4(1) 지표인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세계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에 비해 2°C보다 아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을 1.5°C까지 제한하도록 노력하는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국내 온실가스 감축 이행 경과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이다.

39) 김익재 외(2024) 참고

IPCC 6차 평가보고서(2021)에 따르면, 관측된 기후변화의 증가와 인간의 경제활동 간에 평가를 통해 인간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전지구 지표 온도는 1950~1990년 대비 현재(2011~2020년) 평균 1.1℃ 상승했으며, 2019년 전세계 온실가스 연간 배출량은 2010년 대비 약 12% 증가한 59GtCO<sub>2</sub>-eq로 추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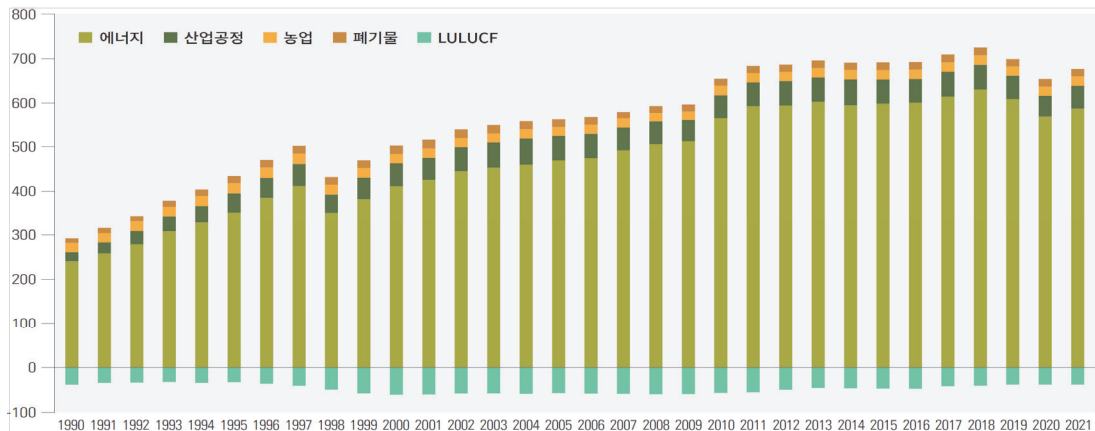
이처럼 전세계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원인물질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가는 것이 한국의 기후 변화 영향의 최소화 및 적응 비용 최소화를 위한 수단이므로,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량 추세를 확인하고 2030년과 2040년 감축 목표 달성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후 위기의 문제는 미래세대의 생존 보장을 위해 현 세대가 져야 할 책임이라는 세대 간 형평성 및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에 입각하여 목표가 관리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한국이 K-SDG 지표에서 설정한 목표는 기준년도(2017) 배출량 7.09억 톤에 대하여 2030년에는 24.4% 감축한 5.36억 톤으로, 그리고 중장기 목표인 2040년에는 33.6% 감축한 4.71억 톤으로 감축하는 것이다.

순향도에 따른 지표평가 결과는 “맑거나 흐림”을 나타내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2021년 다시 증가하였다. 최근 5년치(잠정치 제외) 통계에 나타난 추세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추세로 평가된 것이다.

2021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 7,665만 톤CO<sub>2</sub>eq.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하였다. [그림 3-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정점을 찍고 2년 연속 감소하다가 2021년에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갔다. 2019~2020년의 감소는 전세계 팬데믹 코로나 시기로 산업활동과 교통량이 모두 감소한 것에 원인이 있지만, 이후 2021년에는 다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였다. 2022년 잠정치는 다시 전년 대비 3.5% 감소하여 2020년과 가까운 수준으로 돌아갔는데, 실측치가 발표된 이후 증가세를 다시 점검해 봐야 한다.



자료: 통계청(2024),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4

[그림 3-21]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1990~2021(단위: 100만톤CO<sub>2</sub>eq.)

2021년 배출량을 보면 분야별로는 에너지 분야가 86.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산업 공정 7.6%, 농업 분야 3.2%, 폐기물 분야 2.4%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2020년과 비교하면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분야 모두 3.5%, 5.9%, 1.1% 증가하였고, 폐기물 분야만 3.5% 감소하였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제조업, 발전, 수송 부문 모두에서 배출량이 3.5% 증가하였다. 이 중 제조업 분야에서는 대표적 다배출 업종인 석유화학에서 726만 톤 CO<sub>2</sub>eq.과 철강 381만 톤CO<sub>2</sub>eq. 등을 포함하여 제조업 전체 에너지 사용 부문에서 총 1,264만 톤CO<sub>2</sub>eq.의 온실가스를 더 배출하면서 전년 대비 7.0% 증가하였다. 발전 부문도 전년 대비 2.6% 증가하였다. 수송 부분도 코로나 이후 연료 소비 증가로 전년 대비 274만 톤 증가하였다.

산업공정 분야는 시멘트, 반도체 등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5.9% 증가하였다. 농업 분야도 전년 대비 1.1% 증가하였다. 폐기물 분야만 재활용률, 소각열 회수, 매립지 회수 증가 등의 이유로 전년 대비 3.5% 감소하였다. 한편 탄소흡수원 분야에서는 산림지 면적의 감소로 인해 총흡수량은 0.3% 감소하였다.

OECD 국가 중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기준 다섯 번째로 많이 배출하고 있다. 미국이 약 60억 톤으로 배출량이 가장 많고, 일본 약 11억 톤, 독일 약 7억 톤, 캐나다 약 6억 톤이며 한국이 6억 5,622만 톤을 배출하였다. 1인당 배출량으로 보아도 한국은 OECD 국가 중 6위, GDP 당 배출량으로도 6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나. 관련 정책 현황

카야 항등식(Kaya Identity)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인구, 1인당 GDP, 에너지 집약도, 탄소집약도에 따라 결정된다. 앞의 두 가지 요인(인구증가율과 1인당 GDP 증가율)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의도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정책적으로 취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다. 그러나 에너지 집약도와 탄소집약도를 낮추는 정책은 충분히 선택 가능한 대안이다. 에너지 집약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에너지 효율 개선 기술이나 정책으로 고효율 가전제품의 확대, 건물의 단열효과 개선, 고효율 자동차와 전기차나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자동차의 확대 그리고 제조업 분야의 공정효율 개선, 에너지 절약 실천 등이 영향을 미친다. 탄소집약도를 낮추는 정책은 재생에너지 등 저탄소에너지 보급, CCUS나 육상 및 해양 흡수원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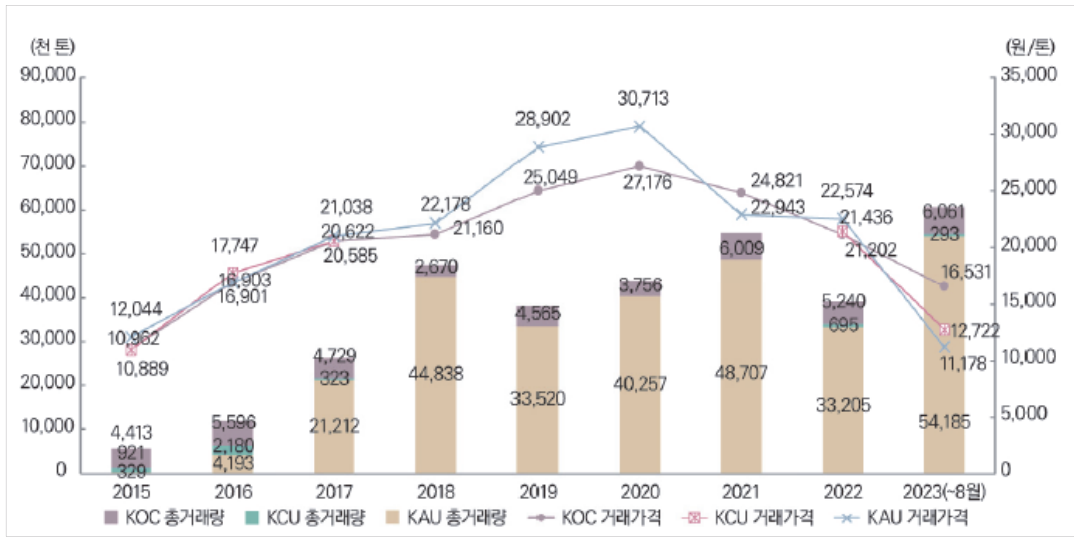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에 정점을 찍고 감소하다가 코로나 안정세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1인당 GDP 증가로 나타나는 경제활동 증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는 에너지 집약도를 낮추는 정책인 배출권거래제도, 건물효율화제도, 친환경차 확대, 그리고 탄소집약도를 낮추는 정책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산림면적 확대 등이 더욱 강력히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반증한다.

우선 산업부문과 발전부문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도가 기업들의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저감 노력에 충분한 유인이 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아래 <표 3-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출권거래제도에 포함되는 업체수는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최종할당량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업체별 할당량은 감소하고 있다. 한편 [그림 3-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출권 가격은 최근 하락하고 있다. 전체 배출권의 연도별 평균 거래가격은 2015년 11,013원에서 2020년 30,411원으로 크게 상승하였으나, 이후 매년 하락을 거듭하여 2023년(8월) 다시 11,721원에 이르렀다. 기업당 할당량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배출권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코로나19와 경기둔화 등에 따라 배출량이 감소하면서 잉여 배출권의 매도가 증가한 것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그러나 낮은 배출권 가격은 기업의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저감 노력에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기 어렵다.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한 배출허용 총량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기업 할당량을 좀 더 과감하게 줄여갈 필요가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배출권 시장 전반의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표 3-18> 배출권거래제 이행연도별 최종할당량 및 업체 수 (단위: 백만 톤)

계획기간	연도	최종할당량	증감률	업체수
제1차	2015	540.1	-	522
	2016	560.7	3.8%	564
	2017	585.5	4.4%	592
제2차	2018	593.5	1.4%	587
	2019	563.3	-5.1%	611
	2020	562.5	-0.2%	637
제3차	2021	584.8	4.0%	687
	2022	582.7	-0.4%	714

자료: 온실가스정보센터(2024) 2023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



주: (위) 총 거래량(천 톤) 및 거래가격(원/톤), 2015~2023.8  
 (아래) KAU22 장내 거래량(천 톤) 및 거래가격(원/톤), '22.7~'23.9  
 자료: 온실가스정보센터(2024) 2023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

[그림 3-22]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량 및 거래가격 추이

건물 분야에서는 낡은 건물 증가 및 도시화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도시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가 건물에서 발생한다. 정부는 신축건물의 제로에너지화 및 기존 건물의 그린리모델링 등 에너지 효율 강화 및 건물 성능 정보 공개 등을 통해 효율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건축물에 대한 의무적인 규제 이외에 민간 건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제나 지원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못한 것이 배출량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수송 분야는 정부의 전기차·수소차 보급사업에도 불구하고,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구매량 증가와 총 운전시간 증가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였다. 정부는 2030년까지 기존 내연차 중 450만 대를 전기·수소차 보급을 통해 대체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sup>40)</sup> 그러나 전기차의 상용화를 위한 기술적 문제 및 충전소 보급이 속도를 못 내면서 친환경자동차로의 전환이 더뎠고 있다. 또한 대중교통수단 확대, 친환경 철도·항공·해운으로의 전환도 재정적 한계와 비용상의 문제로 충분한 온실가스 저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탄소집약도를 낮추기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은 꾸준히 증가하여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율이 2000년 0.7%에서 2020년에는 3.63%까지 증가하였다. 특히 연평균 성장률이 2000~2010년 기간에 6.6% 증가하였지만 2010~2020년 기간에는 10.7% 증가하여 성장률도 증가하였다. 하지만 국제적 비교에서 한국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20년 기준 OECD 회원국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율 평균은 14.9%이고, 가장 높은 수준인 아이슬란드는 82.8%에 달한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 신재생에너지법에 근거하여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RPS)을 시행하여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제3자 간 전력거래계약(PPA) 도입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1.6%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의 수준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처럼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으면 화석연료의 연소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하지 않게 된다.

CCUS는 상용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 아직 만족할 만한 온실가스 감축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육상 탄소흡수원인 산림분야는 산림면적의 감소를 막고 단위 면적 당 더 많은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효율적 관리와 경영이 필요하다.

폐기물 분야는 비록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했지만, 자원순환기본법(‘18)과 자원순환기본계획(‘18)에 따라 재활용률 증진과 가연성 폐기물 에너지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다. 지표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

첫째, 한국은 2023년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을 설정<sup>41)</sup>하고,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sup>42)</sup> 2020년 수립된 현재의 K-SDG 목표는 2017년(7.09억 톤) 대비 2030년 5.36억 톤으로 24.4%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40)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41) 본 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에 따라 2023년 4월 10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됨.


42) 이는 기존 2021년에 설정한 2030년 감축 목표와 동일하지만 산업부문의 부담은 낮추는 대신 CCUS와 국제감축의 부담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후에 발표된 2030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 기본계획에서는 2018년 대비 2030년 4.37억 톤으로 40%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향후 새롭게 수립된 국가 기본계획 목표에 따라 K-SDG 목표도 2030년 4.37억 톤으로 목표를 재수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코로나 이후 다시 증가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세로 바꾸기 위해서는 부문별 구체적인 규제와 지원을 동시에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산업과 전환부문 등 다배출업 부문에 대한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3차 계획기간의 할당량을 재조정하여, 기업들의 에너지효율개선과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강하게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건물 부문에 대해서는 신축건물 외에도 노후건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물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공개와 더불어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정부 보조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수송 분야는 전기차·수소차 확대를 위해 정부 보조금 사업과 더불어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하는 부담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충전소 등의 부족으로 인한 시장 확대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충전소 건설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더욱 강력한 정부 주도 정책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석탄발전소 단계적 감축과 미래형 전력망 구축 등 전원 믹스 합리화에 노력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부문은 기존 태양광 발전에 더불어 해상풍력을 확대하여 대형 재생발전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미래형 전력망 구축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등 분산발전원 확대 전에 계통을 보강하고, 계통불안정성 완화를 위해 공공주도 대형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분산발전원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 문제와 주민 수용성 개선을 위해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에 대한 적절한 금융적 인센티브가 함께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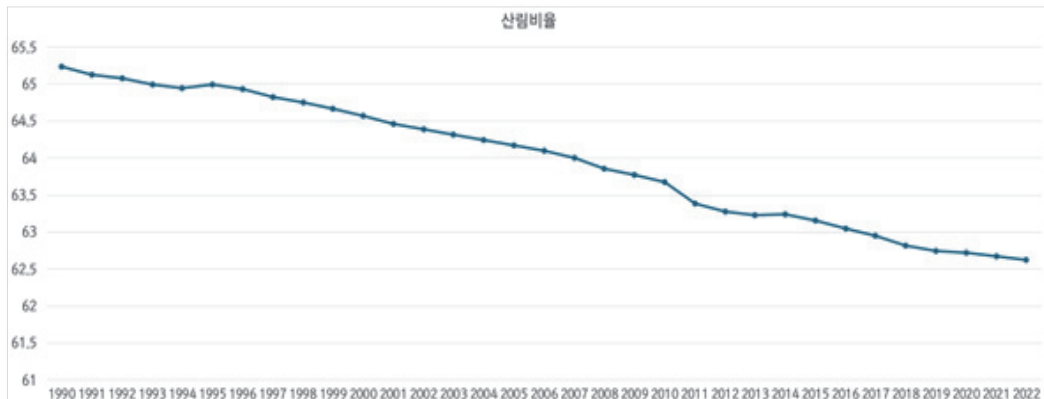
## 9. 산림면적 비율

K-SDG 지표명		15-1(2) 총 육지면적 중 산림면적 비율																
관련 목표	목표15:	육상생태계 보전																
	세부목표 15-1:	육상과 내륙담수의 생태계 다양화를 위해 보전과 복원 활동을 활성화한다.																
2024 지표평가 결과:	지표값: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2018</th> <th>2019</th> <th>2020</th> <th>2021</th> <th>2022</th> </tr> </thead> <tbody> <tr> <td>(%)</td> <td>62.82</td> <td>62.74</td> <td>62.72</td> <td>62.67</td> <td>62.63</td> </tr> </tbody> </table>						2018	2019	2020	2021	2022	(%)	62.82	62.74	62.72	62.67	62.63
		2018	2019	2020	2021	2022												
(%)	62.82	62.74	62.72	62.67	62.63													
	순향도:	“뇌우” 																

### 가. 지표의 현황 및 의의

산림은 기후, 담수 체계와 토양,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제적 차원에서 탄소 관리, 종과 생태계의 보전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지역적 차원에서는 대기오염을 조절하고, 산림 유출수에서 오염물질과 퇴적물질을 걸러내어 수질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또한 산림은 농경지의 토양 침식조절에 영향을 주고 있다. 깨끗한 물과 대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산림은 지역의 환경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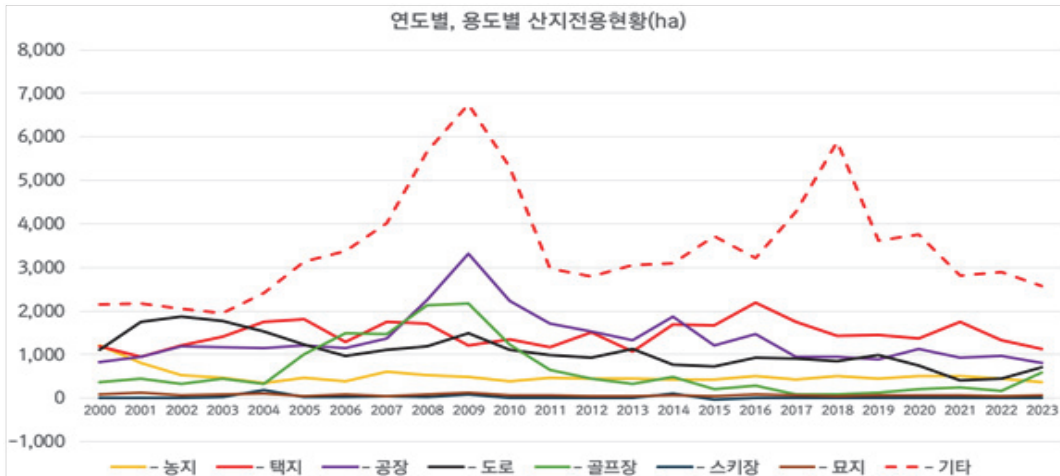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산림면적은 2020년 말 기준 6,298천ha로, 국토면적 10,041천ha(국토교통부 지적통계연보, 2021) 대비 62.7%를 차지하고 있다. 산림비율은 OECD 국가 중 핀란드(73.7%), 스웨덴(68.7%), 일본(68.4%)에 이어 4위이다. 지역별로 보면 국토면적과 대비한 산림면적 비율(산림률)은 강원도가 81.2%로 가장 높고 경상북도가 70.1%로 그 다음이며, 광역시 중에서는 울산광역시 64.0%로 우리나라 전체 산림률(62.7%)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전국에서 산림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특별시로 전체 면적의 약 25.3%가 산림이다.



출처: 산림청, 「2023 산림임업통계연보」

[그림 3-23] 연도별 산림면적 비율

산림은 인구의 사회적·자연적 증가로 인한 도시개발(택지),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공장), 지역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 개발 등이 이루어지면서 축소되어 왔다. 도로 체계는 전국 어디서나 간선도로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남북 방향의 10개축과 동서 방향의 10개축으로 재편되면서 많은 도로 개발이 이루어졌다. 또한, 골프장, 스키장 등 레저산업의 확대에 따라 많은 산림이 타용도로 전용되었다. 도로의 신설 및 주택건설, 산업단지 조성 등 타용도로 지목이 변경되면서 2015년부터 5년간 연평균 약 7,296ha씩 산림면적이 감소하였다.



출처: 산림청, 산림입업통계연보

[그림 3-24] 산지전용 현황 (2000-2023)

또한, 2010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본격화한 이후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이 확대되기도 하였다. 산지 태양광 허가면적은 2015년 522ha, 2016년 529ha, 2017년 1,435ha, 2018년 2,443ha로 수년간 급증하였고, 산지 태양광 규제에 따라 2019년 1,024ha, 2020년 229ha로 줄어든 바 있다.

### 나. 관련 정책 현황

우리나라는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018년 나고야의정서 국내 발효에 따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이에 따른 육상생태계 보전 활동을 하고 있다. 육상과 내륙 담수의 생태계 다양화를 위해 보전과 복원 활동을 활성화하였다. 멸종위기종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 국내 산림유전 자원 보호구역 관리, DMZ 생태축 보전 사업, 황폐화된 산림 복원,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 등의 정책은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보호지역 확대 및 산림면적 증가를 유인하고 있다.

개발사업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개발계획이 산림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분석하여, 잠재적인 환경피해를 예방한다. 이를 통해 산림파괴, 생물다양성 감소, 토양침식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개발 사업이 산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대체 부지를 검토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개발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일 수 있다.

산지전용 허가 제도는 산림 지역을 특정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제도로, 산림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산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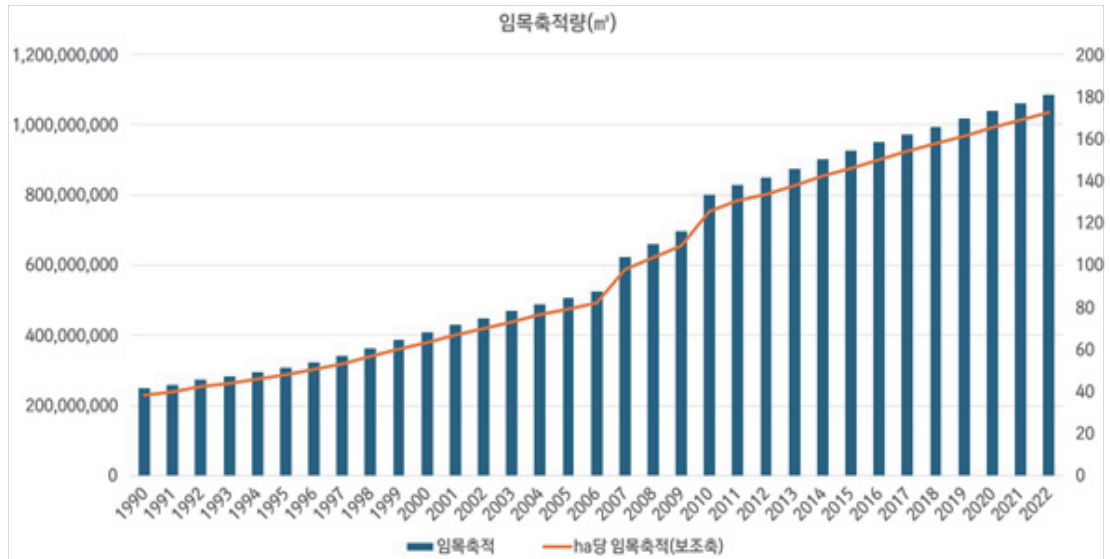
용을 통한 태양광 설비 설치로 산림면적 축소가 야기되어 왔는데, 정부는 2018년 10월 제6차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산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감면기간 설정 및 감면대상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의 면제대상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제외한 것이다. 같은 해 11월에는 산림자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해 지목변경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20년간 발전시설로 사용한 뒤 시설 부지를 다시 기존 임목 상태로 돌려놔야 한다. 또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평균 경사도 허가기준을 기존 25도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했다. 이 정책의 시행 이후 산림이 태양광으로 개발되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었다.

#### 다. 지표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

훼손된 자연환경·생태기능의 회복을 위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세부 기준과 절차를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2년 통과되었다. 환경부는 생물다양성 보전·관리를 위한 사업, 야생생물 서식지 복원사업, 생태통로 설치사업 등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됐던 사업들을 이번 개정을 통해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예산 범위에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산림면적을 확대하고, 개발대상지의 자연생태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산정할 때 생태·자연도 등급별 계수를 반영함으로써, 생태 가치가 우수한 지역은 부담금이 증액돼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산림유전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기후변화 등의 위협요인으로부터 희귀·특산·유용식물 등 산림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산림 생물다양성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보호구역의 확대, 그리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유도하고 있다.

최근에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한 규제 완화와 기후위기 영향으로 산림보호를 통한 생물다양성 보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시행될 때, 생태계 다양화를 위한 보전 및 원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역을 피해서 개발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과 기후위기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 산불, 외래종 확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잘 관리하여 생물다양성 보전과 복원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면적(ha)당 임목축적은 2020년 165.2m<sup>3</sup>로 2015년의 146m<sup>3</sup> 대비 19.2m<sup>3</sup>(13.2%) 증가하였다. 임목축적량의 증가는 산림녹화 사업('62~'72) 및 치산녹화 사업('73~'87)을 통해 조림한 나무들이 31~50년생인 성숙림에 도달하였고, 숲가꾸기 등의 산림자원관리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추정되고 있다. 임목축적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탄소흡수량이 많아진다. 수목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출 수 있어 기후변화의 완화에 기여한다. 임목축적량은 수질개선, 토양건강, 생물서식지 제공과 많은 관련성이 있다. 따라서 육상생태계 보전에 대한 평가는 산림면적 외에도 총임목축적량의 변화나, 단위면적당 임목축적량 등으로 평가하거나, 보호지역 선정, 복원면적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출처: 산림청, 「2023 산림임업통계연보」

[그림 3-25] 국가 임목축적량

## 10. 사이버 침해범죄 검거율

K-SDG 지표명		16-12(1) 사이버 침해범죄 발생 대비 검거율					
관련 목표	목표16:	평화·정의·포용					
	세부목표 16-12:	디지털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2024 지표평가 결과:	지표값:		2018	2019	2020	2021	2022
	순향도:	(%)	75.0	73.4	67.5	63.7	62.5
		“뇌우”					

### 가. 지표의 현황 및 의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토대로 일상이 디지털화되면서 안전한 디지털 환경의 조성과 인권 보호는 지속가능발전에 필수적 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K-SDG 목표 16(평화·정의·포용) 하에 “디지털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한다”는 세부목표가 설정되었다. 이 세부목표 하에는 ①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탐지·적발 강화, ② 불법영상물 유포·신고 체계 정비, ③ 디지털 불평등/정보 격차 해소가 정책과제로 제시

되어 있다. 또한 그 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서 16-12(1) '사이버 침해 범죄 발생 대비 검거율' 과 16-12(2) '디지털정보격차 감소율'이 제시되고 있다. 이 중 본 심층평가의 대상인 '사이버 침해 범죄 발생 대비 검거율' 지표는 불법촬영의 탐지·적발의 강화와 불법영상물 유포·신고 체계의 정비 현황은 물론이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국가사법권의 대응 현황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사이버 침해범죄 발생 대비 검거율' 지표의 현황 및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사이버범죄 발생 및 검거' 통계표를 보면 <표 3-19>와 같다. 증감을 반복하던 사이버범죄는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21년 일시적으로 감소한 후 2022년 다시 소폭 증가하였다. 2018년부터 사이버범죄 검거 건수도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2017년부터 검거율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표 3-19> 사이버범죄 발생 및 검거

(단위: 건,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발생건수	110,109 (-29.1%)	144,679 (31.4%)	153,075 (5.8%)	131,734 (-13.9%)	149,604 (13.6%)	180,499 (20.7%)	234,098 (29.7%)	217,807 (-7.0%)	230,355 (5.8%)
검거건수	71,950 (-16.4%)	104,888 (45.8%)	127,758 (21.8%)	107,489 (-15.9%)	112,133 (4.3%)	132,559 (18.2%)	157,909 (19.1%)	138,710 (-12.2%)	143,885 (3.7%)
발생대비 검거율	65.3 (17.9%)	72.5 (11.0%)	83.5 (15.2%)	81.6 (-2.3%)	75.0 (-8.1%)	73.4 (-2.1%)	67.5 (-8.0%)	63.7 (-5.6%)	62.5 (-1.9%)

출처: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08](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08)

본 지표상 사이버 침해범죄는 정보통신망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의미하며, ① 정보통신망 침해범죄와 ②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및 ③ 불법콘텐츠 범죄로 구분된다. 정보통신망 침해범죄는 컴퓨터 및 정보통신망 자체에 대한 공격행위를 수반하는 범죄로서 해킹, DDoS, 악성프로그램 및 기타 범죄로 분류된다. 정보통신망 이용범죄는 전통적인 범죄를 행하기 위해 컴퓨터 시스템이 이용되는 것으로서 사이버 사기, 사이버 금융범죄, 개인위치정보 침해, 사이버 저작권 침해 및 기타 범죄로 분류된다. 불법콘텐츠 범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 자체가 불법적인 경우로서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도박,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및 기타 범죄로 분류된다.

해당 지표의 부진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범죄유형별 발생 및 검거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표 3-20>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 동안의 범죄유형별 사이버범죄 발생 및 검거 통계표를 정리한 것이다. 사이버범죄 발생건수 중 정보통신망 이용범죄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불법콘텐츠 범죄가 잇고 있으며,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비율은 1~2%에 불과하다. '사이버

침해범죄 발생 대비 검거율' 측면에서 볼 때 정보통신망 침해범죄의 경우 전체 사이버범죄에 비해 검거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범죄로 인한 피해나 파급효과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발생건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본 지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본 지표는 사이버범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범죄의 검거율과 유사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 바, 해당 유형에 포함된 세부범죄들의 검거율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3-20〉 범죄유형별 사이버범죄 발생 및 검거

(단위: 건, %)

구분	총계		정보통신망이용범죄		불법콘텐츠범죄		정보통신망침해범죄	
	발생건수 (구성비)	검거건수 (검거율)	발생건수 (구성비)	검거건수 (검거율)	발생건수 (구성비)	검거건수 (검거율)	발생건수 (구성비)	검거건수 (검거율)
2018	149,604 (100%)	112,133 (75.0%)	123,677 (82.7%)	93,926 (75.9%)	23,039 (16.4%)	17,305 (75.1%)	2,888 (1.9%)	902 (31.2%)
2019	180,499 (100%)	132,559 (73.4%)	151,916 (84.2%)	112,398 (74.0%)	24,945 (13.8%)	19,154 (76.8%)	3,638 (2.0%)	1,007 (27.7%)
2020	234,098 (100%)	157,909 (67.5%)	199,594 (85.3%)	134,969 (67.6%)	30,160 (12.9%)	22,302 (73.9%)	4,344 (1.8%)	911 (21.0%)
2021	217,807 (100%)	138,710 (63.7%)	174,684 (80.2%)	111,172 (63.6%)	39,278 (18.0%)	26,284 (66.9%)	3,845 (1.8%)	1,254 (32.6%)
2022	230,355 (100%)	143,885 (62.5%)	190,958 (82.9%)	119,473 (62.6%)	35,903 (15.6%)	23,683 (66.0%)	3,494 (1.5%)	729 (20.9%)

출처: 경찰청 통계자료

〈표 3-20〉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 동안의 범죄유형별 사이버범죄 발생 및 검거 통계표를 정리한 것이다. 전체 사이버범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부유형은 사이버 사기이다. 사이버 사기의 검거율은 전체 사이버범죄의 검거율을 상회하나, 2018년 78.3%였던 검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2년에는 70.1%를 기록하고 있는 바, 이는 본 지표의 악화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파악된다. 사이버 사기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이버 금융범죄의 검거율은 2018년 41.9%였으나, 최근 3년 동안은 20% 초반대에 머무르고 있다. 전체 사이버범죄 중 10% 이상을 차지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검거율의 감소가 지표 악화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표 3-21〉 전체 사이버범죄 대비 정보통신망이용범죄 발생 및 검거

(단위: 건, %)

구분	전체 사이버 범죄	정보통신망이용범죄						
		소계	사이버 사기	사이버 금융범죄	사이버 저작권 침해	개인위치정 보침해	기타	
2018	발생 (구성비)	149,604 (100%)	123,677 (82.7%)	112,000 (74.9%)	5,621 (37.6%)	3,856 (2.6%)	246 (0.2%)	1,954 (1.3%)
	검거 (검거율)	112,133 (75.0%)	93,926 (75.9%)	87,714 (78.3%)	2,353 (41.9%)	2,467 (64.0%)	142 (57.7%)	1,250 (64.0%)
2019	발생 (구성비)	180,499 (100%)	151,916 (84.2%)	136,074 (75.4%)	10,542 (5.8%)	2,562 (1.4%)	179 (0.1%)	2,559 (1.4%)
	검거 (검거율)	132,559 (73.4%)	112,398 (74.0%)	105,651 (77.6%)	3,387 (32.1%)	1,772 (69.1%)	78 (43.6%)	1,510 (59.0%)
2020	발생 (구성비)	234,098 (100%)	199,594 (85.3%)	174,328 (74.5%)	20,248 (8.6%)	2,183 (0.9%)	241 (0.1%)	2,594 (0.1%)
	검거 (검거율)	157,909 (67.5%)	134,969 (67.6%)	127,233 (73.0%)	4,621 (22.8%)	1,493 (68.4%)	95 (39.4%)	1,254 (48.3%)
2021	발생 (구성비)	217,807 (100%)	174,684 (80.2%)	141,154 (64.8%)	28,123 (13.0%)	2,423 (1.1%)	217 (0.1%)	2,767 (1.3%)
	검거 (검거율)	138,710 (63.7%)	111,172 (63.6%)	101,950 (72.2%)	6,390 (22.7%)	1,493 (61.6%)	76 (35.0%)	1,263 (45.6%)
2022	발생 (구성비)	230,355 (100%)	190,958 (82.9%)	155,715 (67.6%)	28,546 (12.4%)	3,302 (1.4%)	247 (0.1%)	3,148 (1.4%)
	검거 (검거율)	143,885 (62.5%)	119,473 (62.6%)	109,250 (70.1%)	6,729 (23.6%)	1,815 (55.0%)	113 (45.7%)	1,566 (49.7%)

출처: 경찰청 통계자료

「사이버 침해범죄 발생 대비 검거율」이 저조한 이유로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가속화로 인한 플랫폼의 다변화와 발전된 기술의 범죄 악용 및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사이버 범죄의 특성을 들 수 있다. 예컨대, 사이버 사기의 대표적인 수법은 중고거래 카페나 앱에서 개인 간 거래를 빙자하여 이루어지는 ‘직거래 사기’인데, 플랫폼이 다양해지고 활성화되면서 이를 통한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조직을 구성해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르는 해외 직거래의 경우 그 검거가 한층 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딥페이크나 큐알 등을 이용한 피싱범죄가 이루어지는 등 신종기법이 등장하는 것도 검거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한편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사이버범죄의 발생건수 자체가 늘어나 연간 200,000건을 상회하고 있는 것도 지표 부진의 또 다른 원인으로 분석될 수 있다. 아울러 수사인력의 부족도 지표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파악된다. 참고로 2022년 10월, 제21

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 258개 경찰서 중 사이버수사팀이 설치된 경찰서는 157개(61%)에 그쳤고, 수사관 1인당 연간 200건의 사이버범죄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43)</sup>

## 나. 관련 정책 현황

정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이라는 국정과제를 제시하면서 서민이나 소상공인을 올리는 경제범죄를 엄단하고자 하는데, 사이버 사기나 사이버 금융범죄도 그 대상이 된다. 또한 “국가 사이버 안보 대응역량 강화”를 또 다른 국정과제로 설정하면서 국민 생활에 밀접한 IT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특히, 해당 과제는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사이버 방어체계 및 국제공조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확고한 국가안보 태세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이나 기업에게 안전한 사이버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023년에 사회적 약자나 청년 등의 민생을 위협하는 사기를 근절하고자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를 발족하여 운영한 후 주요 정책을 발표하였다. 그중 검거율 제고를 위해 제안된 정책으로는 국제공조 네트워크 확충, 사기범죄 내부고발자 및 공익신고자 포상 확대, 도주한 다액·다수 사기 피의자 대상 공개수배 적극 활용 등이 있다.

또한 2023년 6월, 유럽평의회로부터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Budapest Convention on Cybercrime, COC)의 정식 가입 초청서를 받은 우리 정부는 협약 가입 의사 및 준비상황 등을 발표하고, 유럽평의회 사무국과 협약 가입 절차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 2024년 8월 8일 유엔 임시위원회 회의에서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이 만장일치로 타결되었다. 초국경적인 사이버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국제공조를 목표로 하는 등 협약은 사이버범죄 규정과 사이버범죄 처벌 대상의 정의, 협약 가입국 간 국제협력 절차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향후 서명 및 비준 절차가 남아있지만,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은 사이버범죄 검거율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될 수 있다.

나아가 2024년 2월 1일 국가안보실은 국가정보원, 외교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마련한 ‘국가 사이버 안보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국가 차원의 사이버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사이버안보 분야의 최상위 지침서로서 변화된 안보환경과 국정 기조를 담아 수립되었다. 특히, ‘국가 사이버 안보전략’에는 ‘글로벌 공조체계 구축’이 5대 전략과제 중 하나로 설정되었는데, 사이버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다자간 사이버범죄 대응 공조협약 가입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사이버범죄 대응 강화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경찰에서는 사이버범죄 집중단속이 이루어졌다. 일례로 2022년의 경우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3월에서 6월까지 4개월 동안 사이버 사기와 사이버 금융범죄

43) 헤럴드경제(2022.10.8.) “사이버범죄 늘어나는데 인력 부족…수사관 1명이 200건 처리”, <https://biz.heraldcorp.com/view.php?ud=20221007000696> (2024.8.10. 접속)

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12,070명의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또한 3월에서 10월까지 8개월 동안 사이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루어지면서 1,694명의 피의자가 검거된 바 있다. 또한 경찰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lectronic Cybercrime Report & Management system, ECRM)을 개편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사이버범죄 검거율을 높이고자 하였다. 한편 2023년 해양경찰청은 창설된 지 70년 만에 사이버범죄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 AI 기반의 무인선박이 도입되는 등 해양 분야의 사이버 범죄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해커들의 항만 시스템 침입, 인터넷을 이용한 해상밀수, 마약 등 해상 사이버 범죄를 수사하고 검거하고자 사이버 수사체계가 구축된 것이다.


그러나 특정 범죄군에 대한 집중단속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해외 사이트 증가로 인한 대응의 난항도 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더라도 유해 콘텐츠가 있거나 불법 소지가 있을 경우 국내에서 접속을 차단할 수 있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치면 길게는 2주 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속한 차단이 어렵다. 또한 수사를 통해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서버가 있는 외국과의 사법공조가 필수적이다. 우리 정부가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수사공조가 요구되는 주요국인 중국이나 러시아는 동 협약의 가입국이 아닌 바, 개별 국가들과의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 다. 지표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

사이버 침해범죄 검거율의 개선을 위해서는 사이버범죄 수사인력의 충원이 필수적이다. 또한 날로 복잡해지고 증가하는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사인력의 전문성도 제고되어야 한다. 한편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의 발전은 사이버범죄 분야에 신종기법을 등장시켜 그 검거율을 떨어뜨릴 것인 바, 기술의 발전에 주목하며 사이버범죄의 발생 양상을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정책도 수립되어야 한다. 아울러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사이버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표 개선을 위해서는 국제수사 공조가 중요하므로,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을 위한 후속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는 한편, 동 협약의 비가입국들과의 사법공조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정책도 모색되어야 한다.

해당 지표는 “디지털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한다”는 세부목표 하에 설정된 과제 중 ①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탐지·적발 강화, ② 불법영상물 유포·신고 체계 정비의 이행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사이버범죄로는 해킹을 통한 불법촬영이나 불법영상물 유포 등을 상정할 수 있는데, 주지하다시피 해당 지표는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검거율이 반영된 것이라는 점에서 해당 과제와 연관된 지표의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예컨대, 사이버범죄 중 불법콘텐츠 범죄의 경우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도박,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및 기타 범죄로 분류되는 바, 지표 설정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불법영상물 유포에 대한 검거율을 측정하는 것으로 그 대상을 좁히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성평등에 관한 5번 목표에 “디지털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 및 미검거율”(5-2(2)) 지표가 있으므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 11. GNI 대비 ODA

K-SDG 지표명		17-1(1) GNI 대비 ODA																			
관련 목표	목표17:	지구촌 협력 확대																			
	세부목표 17-1:	ODA를 확대하고 개발재원을 다양화한다.																			
2024 지표평가 결과:	지표값: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2018</th> <th>2019</th> <th>2020</th> <th>2021</th> <th>2022</th> <th>2023 (잠정치)</th> </tr> </thead> <tbody> <tr> <td>(%)</td> <td>0.14</td> <td>0.15</td> <td>0.14</td> <td>0.16</td> <td>0.17</td> <td>0.18</td> </tr> </tbody> </table>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잠정치)	(%)	0.14	0.15	0.14	0.16	0.17	0.18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잠정치)													
(%)	0.14	0.15	0.14	0.16	0.17	0.18															
	순향도:	“맑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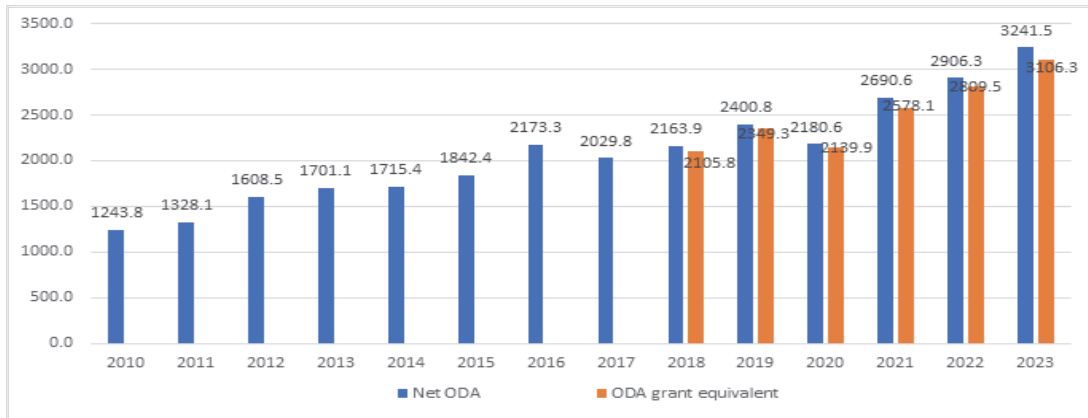
### 가. 지표의 현황 및 의의

국제사회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포함한 개발재원을 확충하고, 지구촌 협력 확대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해 왔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ODA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원조정책의 선진화를 통해 개발도상국과의 협력기반을 확대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이후 신흥공여국으로서 원조 규모를 크게 늘려왔지만, 그동안 정부예산 및 재정규모의 제약 때문에 선진공여국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데 많은 한계와 제약요인을 갖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원을 위한 원조규모(순지출액 기준)는 2010년 DAC 가입 당시 12.4억 달러에서 2022년에는 29.1억 달러로 크게 확대되었고, 2023년에는 32.4억 달러(잠정치)로 증가하였다. 증여등가액(ODA grant equivalent)<sup>44)</sup> 기준으로도 2018년 21.1억 달러에서 2023년에는 31.1억 달러로 지난 6년간 전체 ODA 규모가 약 10억 달러 증가한 것이다.

국제사회와 비교해 볼 때 2023년 ODA 잠정통계(순지출 기준)에 따르면,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들의 ODA 규모는 전년 대비 1.8% 상승한 2,237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였다. ODA 규모가 큰 공여국은 미국(660.4억 달러), 독일(366.8억 달러), 일본(196억 달러), 영국(191.1억 달러), 프랑스(154.3억 달러) 등의 순이다. 한국의 경우 OECD DAC의 32개 회원국 중 지원 규모 순위가 2023년 14위를 기록하였다.

44)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서는 ODA 재무 조건을 소득그룹과 무관하게 10% 할인율을 적용하여 증여율 25% 이상으로 적용해 왔으나, 2018년 이후 ODA로 인정하는 증여율을 소득그룹별로 차등화하고 측정 방식을 순지출(총지출액-총상환액) 방식에서 증여등가액(총지출×증여율) 방식으로 변경함. 변경된 소득그룹별 증여율 기준은 최저개발국을 포함한 저소득국 45% 이상, 하위 중소득국(LMICs) 15% 이상, 상위 중소득국(UMICs) 10% 이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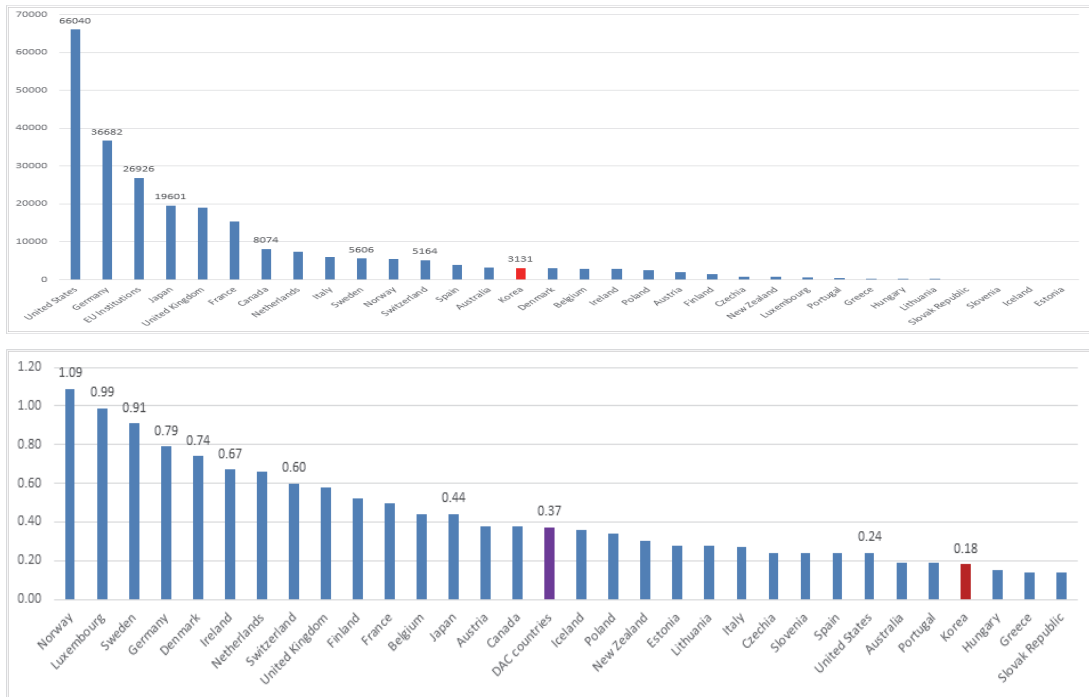


주: 2023년 잠정치

자료: OECD(2024) "Korea" in Development Co-operation Profiles (<https://doi.org/10.1787/2dcf1367-en>)

[그림 3-26] 한국의 ODA 연도별 규모, 2010-2023

경제규모를 고려해서 비교해 보면, GNI 대비 ODA 비율은 2023년 OECD DAC 회원국들의 평균은 0.37%를 기록하였지만, 유엔의 권고치인 0.7% 이상을 기록한 국가는 노르웨이(1.09), 룩셈부르크(0.99), 스웨덴(0.91), 독일(0.79), 덴마크(0.74) 등 5개국에 불과하다. 한국의 경우 OECD DAC에 가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ODA의 양적 규모를 늘려왔음에도 불구하고 GNI 대비 ODA 비율은 2023년 0.18% 수준이어서, DAC 32개 회원국 중에서 28위로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주: (위) ODA 규모(백만 달러); (아래) GNI 대비 ODA 비율(%). 증여등가액 기준, 2023년 잠정치  
 자료: OECD(2024) "Korea" in Development Co-operation Profiles (<https://doi.org/10.1787/2dcf1367-en>)

[그림 3-27] OECD/DAC 회원국의 ODA 규모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경제체제 재편에 대응하여 국제적 협력과 연대를 주도하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개도국과의 파트너십 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 K-SDG 목표 관점에서 보면 성과지표로 제시된 GNI 대비 ODA 비율이 UN이 제시한 0.7% 권고치에 크게 못미치고,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평균인 0.37%에도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ODA 양적 규모의 확대와 함께 개도국의 SDG 이행 역량을 지원하고, 무역, 투자, 기술이전 등 주요 협력분야에서 원조 및 비원조 정책 간 정책일관성을 갖도록 더욱 체계적인 협력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지구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발재원 확충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전환(green transition)을 위해 ODA 재원을 적극 활용하고 부족한 재원을 민간으로부터 동원해야 한다.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한국경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략적 대외정책을 수립하고 개발금융 확대가 시급하다. 우선 고양허성 차관 중심의 개발협력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국가재정 부담이 크므로 개도국 지원을 위한 민간지원수단(PSI)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 개발재원의 원천과 지원조건에 따라 지원방식을 구분하고 수익성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양허성 차관을 적극 운용해 나가야 한다. 필요하

다면 시장재원을 활용하여 개발자금을 조달하고 정부재정 비중을 적정하게 조정해야 한다.

## 나. 관련 정책 현황

최근에는 자국 중심주의 확산과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이후 사회경제적 취약성 심화로 개도국의 성장기반과 경제·사회적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국가 간 분쟁,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재난·재해로 인도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식량, 에너지 등 글로벌 복합 위기로 취약국가와 취약계층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물론 가자지구 등 국가간 분쟁이 격화됨에 따라 인도적 지원이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sup>45)</sup>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제성장의 둔화와 긴축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를 목표로 경제적 위상에 걸맞는 ODA 규모 세계 10위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2024년 ODA 예산(확정액 기준)을 6.3조 원으로 크게 늘렸다. 이에 따라 2023년에 비해 1조 4,858억 원이 증가하여 2024년 ODA 예산은 전년대비 31.1% 증가하고, 총 46개 기관이 1,97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3-22〉 한국의 ODA 예산규모(확정액 기준) 추이와 현황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총ODA(십억원)	3,048.2	3,200.3	3,427.0	3,754.3	3,938.3	4,777.1	6,262.9
양자간원조 비중(%)	2,387.7 (78.3)	2,493.8 (77.9)	2,775.0 (81.0)	2,926.1 (77.9)	3,115.7 (79.1)	3,673.9 (76.9)	5,128.2 (81.9)
유상원조 비중(%)	1,058.1 (44.3)	1,141.2 (45.8)	1,148.9 (42.7)	1,258.2 (43.0)	1,230.5 (39.5)	1,503.0 (40.9)	2,032.0 (39.6)
무상원조 비중(%)	1,329.6 (55.7)	1,352.6 (54.2)	1,590.1 (57.3)	1,667.9 (57.0)	1,885.2 (60.5)	2,170.9 (59.1)	3,096.2 (60.4)
다자간원조 비중(%)	660.5 (21.7)	706.5 (22.1)	651.9 (19.0)	828.2 (22.1)	822.6 (20.9)	1,103.2 (23.1)	1,134.7 (18.1)

자료: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24.2),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p.9 참조.

그러나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정책 공조와 협력기반 확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대외정책과의 정합성 제고 및 전략적 ODA를 위한 추진체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동안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ODA 통합과 조정을 강화해 왔으나, 부처별로 예산 편성과 집행이 독립적으로 수행되어 사업의 중복 가능성이 높고 사업조정 및 연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절화된 ODA 사업추진으로 국가차원

45) 2019년 이후 ODA는 1,600억 달러에서 2,140억 달러(2022년 불변 가격)로 34% 증가했는데, DAC 회원국 대부분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해 ODA 예산을 유지하거나 늘렸기 때문이다. 동 기간 인도적 지원은 37.4%(18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 증가했지만 총 ODA의 10~12%를 유지했고, 기부자 내 난민 비용은 100억 달러에서 290억 달러로 184%나 급증하였다. DAC 회원국의 ODA는 우크라이나 지원뿐만 아니라 난민 처리 및 수용에 대한 지출을 늘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ODA는 2023년에 9% 증가하여 200억 달러에 달했으며, 여기에는 32억 달러의 인도적 지원이 포함된다. 또한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에 대한 ODA도 증가했으며, 잠정치 기준으로 2022년에 비해 12% 증가하여 14억 달러에 달한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oecd.org/en/about/news/press-releases/2024/04/international-aid-rises-in-2023-with-increased-support-to-ukraine-and-humanitarian-needs.html> 참조.

의 전략적 접근 미흡, 수원국의 신뢰와 협력관계가 취약해지고 있는바, ODA 사업의 집행점검과 현지 사업 관리 내실화 등 ODA 성과 제고를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수원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개발 파트너십을 제고하기 위해 더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제적 보편가치(international value)와 국가적 이해관계(national interest)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적 관점이 중요하다. 최근 재정여건은 악화되고 있으나, 국제사회에서 한국경제의 위상과 역할을 고려하여 GNI 대비 ODA 규모를 0.3%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또한 글로벌 경기침체와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ODA 예산의 확대와 전략적 운용을 위해서는 양허성 차관과 정책금융을 연계한 민관협력(PPP), 혼합신용을 통해 인프라, 기후변화 관련 개발수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 다. 지표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

K-SDG 17번 목표인 “지구촌 협력 확대”는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목표로 경제적 위상에 걸맞는 ODA 규모를 세계 10위 수준으로 목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GNI 대비 ODA 비율’은 2023년 기준으로 0.18%에 불과하여 국제기준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국제적으로 기후변화, 국제분쟁 등으로 개발재원 수요가 확대되면서 글로벌 공동 대응과 함께 해외직접투자를 포함하는 개도국과의 교역 및 투자기반 확충이 중요하고, ODA와 연계한 민관협력(PPP)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K-SDG 17-7의 지표로 제시된 ‘SDG 이행을 위한 민관협의체 참여기관 및 정례회의 건수’와 ‘ODA 민관협력 재원의 비율’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달성을 위한 재원소요가 확대되면서 코로나19 확산 등 급격한 대외환경 변화 영향 등으로 UNCTAD는 2022년 SDG 달성을 위한 개발재원 부족분이 2.5조 달러에서 3.6조 달러로 확대되었다고 밝혔으며, OECD의 경우에는 이를 더욱 상회하는 4.2조 달러로 추정한다.<sup>46)</sup> 2023년 기준 국제사회의 ODA 규모가 2,237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개발재원 소요 규모는 공적 재원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이 정부 재정만으로 막대한 개발도상국의 투자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에 선진공여국들은 과거부터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다. 개발협력을 위한 재원 수요와 공급간 격차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그 격차를 민간재원 조달없이 충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재정여건 악화에 따라 ODA 재원 확대를 위한 국제기구와 민간부문과의 협력사업 발굴 등 재원조달 및 지원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즉, 신흥국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민간자본과 연계한 PPP 사업 지원을 통해 대형·유망사업을 발굴하고 ODA 사업에 민간 참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지원방식에서도 정부를 대상으로 한 고양허성 차관<sup>47)</sup>외에도 수익성 있는

46) 권율(2024),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정책 추진현황과 과제」, 『예산춘추』, 2024년 2호 Vol 74, 국회예산정책처, p.45 참조.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성 차관, 보증 지원, 지분 투자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공공재 중요성이 확대되고 ODA 지원 여력이 감소함에 따라 민간재원과 정부재정을 적절히 조합하여 위험에 따라 상업금융 지원이 어려운 개도국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전통적 ODA로는 공여국 재정부담이 가중되므로 개도국과의 경제협력 등 정책적 목적하에 개도국 사업의 위험을 정부 지원으로 커버하여 상업금융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다각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국제사회 공동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을 위한 개발재원 부족 문제는 글로벌 복합위기로 인해 더욱 심화될 것이므로 더욱 효과적인 개발재원 확대 전략을 마련하는 데 더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개도국의 성장 기반과 사회경제적 회복력(resilience)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SDG의 이행 수단과 협력분야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개발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 간의 일관성 제고가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포용적 파트너십(inclusive partnership)을 추구하면서 SDG 17번 목표는 개발을 위한 자원, 기술, 능력배양, 무역뿐 아니라 시스템 이슈로서 정책과 제도의 일관성, 다자간 파트너십, 데이터 모니터링과 책무성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분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뢰받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제고를 위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가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47) 양허성 차관은 소득그룹별로 증여율 기준이 최저개발국을 포함한 저소득국 45% 이상, 하위 중소득국(LMICs) 15% 이상, 상위 중소득국(HLMICs) 10% 이상임. 일반적으로 고양허성 차관은 증여율 50% 이상이고 저양허성 차관은 10~40% 수준임.

### 제3절 요약 및 향후 과제

국가지속가능성 평가는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되고 있는데, 이번 2024년도 국가지속가능성 평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된 이래 처음 실시된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동 법률(기본법 제15조 2항)에 따라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서 수립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K-SDG)에 따른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와 함께 주요 지표에 대한 심층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국가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과제를 도출하였다.

또한 본 보고서에서는 K-SDG에 따른 본격적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앞서, UN이 수립한 글로벌 SDG에 대한 각국의 이행 현황을 분석한 SDSN(2024)의 방법론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치를 파악해 보았다.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의 글로벌 SDG 이행에 관한 종합점수는 77.3점으로, OECD 국가별 수치의 평균(79.1점) 대비 약간 낮은 편으로 나타난다. 17개 목표별로 보면 SDG-2(기아 종식), SDG-9(사회기반시설 산업화 및 혁신)의 두 목표에서는 OECD 국가 중 가장 우수한 점수로 나타났으며, OECD 평균을 큰 폭으로 앞선다. SDG-12(소비·생산)에서도 OECD 평균 대비 10점 이상 높은 점수로 나타난다. 반면 SDG-15(육상생태), SDG-14(해양생태)의 두 목표는 절대 점수가 50점대에 불과하며, OECD 평균에 비해 10점 이상 낮고, OECD 최우수국과 비교하면 30점 이상 격차가 드러나,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더욱 강력한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SDG-17(글로벌 파트너십), SDG-5(성평등), SDG-13(기후변화 대응)의 세 목표도 절대 점수가 60점대에 불과하여 글로벌 목표에 기여하기 위해 더욱 노력이 필요하다. SDG-15(육상생태), SDG-5(성평등), SDG-6(물·위생), SDG-11(도시·주거지), SDG-14(해양생태)의 5개 목표는 OECD 평균보다 10점 이상 낮아, 주요국 대비 더욱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의 지표별 평가는 2020 국가지속가능성 평가부터 계속 활용되어 온 ‘목표순향도’ 평가체계에 따라 실시되었다. 목표순향도 평가는 각 지표별 가용통계에 기반한 추세 분석을 통해 2040 목표를 향해 얼마나 잘 나아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현재의 수준(현황)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미래의 목표달성 전망을 고려하여 현재의 추세가 바람직한지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K-SDG 17개 목표 전체를 통틀어 보면, 4단계 평가등급 중 ‘맑음’으로 평가된 지표는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51.7%)로, K-SDG 지표 중 절반 정도에 대해 현재의 추세가 유지된다면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여기에 ‘맑거나 흐림’으로 평가된 13.6%를 더하면 ‘맑음’ 또는 ‘맑거나 흐림’은 65.3%를 차지하여, K-SDG의 약 2/3 정도가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흐림’(23.9%)으로 평가된 약 1/4의 지표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정체 중이며, ‘뇌우’로 평가된 10.8%의 지표는 목표와 반대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2022년 평가와 비교하면, ‘맑음’(56.8% ⇒ 51.7%)과 ‘뇌우’(16.1% ⇒ 10.8%) 지표의 비중이 각각

줄어든 한편 ‘흐림’(12.9% ⇒ 23.9%)의 비중이 두 배 정도 늘어났는데, 구득가능한 최근 5년치 통계의 추세를 바탕으로 평가하므로 2022년 평가와 마찬가지로 이번 평가에서도 다수의 지표들이 코로나 19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평가결과를 통해 국가 지속가능성의 취약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뇌우’와 ‘흐림’ 등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 지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평가에서 목표순항도 평가가 실시된 176개 지표 중 19개가 ‘뇌우’로 평가되었는데, 이 중 산업재해율, 생활폐기물 재활용, 지방상수도 자급률, 산림면적 비율, 사이버 범죄 검거율을 비롯한 9개의 지표는 지난 2022년과 이번 평가에서 연속으로 ‘뇌우’로 평가되었다. 한편 ‘흐림’(정체 중) 지표도 총 42개로 전체의 약 1/4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자살률, 취약계층 긴급복지지원, 비정규직 비율 등의 지표가 여기에 포함되었다.

이번 평가에서는 K-SDG 지표에 대한 정량적 추세평가와 더불어 주요 지표에 대한 정성적 심층평가를 실시하였다. K-SDG 지표평가는 정량적 수치에만 의존하므로 그러한 추세가 발생한 원인이나 배경, 지표가 나타내는 정책적 맥락 등을 깊게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부문별 주요 지표에 대한 심층평가를 통해 지표의 추세에 대한 더욱 정확한 분석과 함께 정책적 배경과 향후 개선과제 등을 도출하였다. 심층평가 지표의 선정에는 지표별 평가결과뿐 아니라 지표의 중요성, 정책적 시급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으며,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 총 11개의 지표를 선정하였다.

사회(사람) 부문에서는 취약계층 긴급복지지원, 자살률, 사회재난 인명피해에 관한 3개 지표가 심층 분석되었다. 취약계층 긴급복지지원 지표는 긴급복지지원금 예산과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이라는 두 하위지표의 합(GDP 대비 비중)으로 구성된다. 동 지표의 5년치 추세분석 결과는 정체 중(흐림)으로 평가되었는데, 고용장려금 등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예산이 코로나19 취약계층의 위기대응 지원을 위해 급격히 증액되었다가 정상화되는 시기임을 감안하여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 2019년에 비해 2023년 예산규모는 43.4% 증가하였으며, GDP 대비 비중도 같은 기간 0.229%p 증가하였다. 두 하위지표 중 긴급복지지원금의 경우 예산규모는 최근 5년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2040 목표로 설정된 GDP 대비 0.009%를 이미 넘어섰다. 다만 정부 재정전망을 고려하면 향후 관련 예산의 확보가 어려울 수 있어 지표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취약계층 위기대응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복잡성과 운영기준 등을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지표 자체에도 개선의 여지가 드러나,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더욱 직결된 지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살률의 경우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뚜렷한 개선을 보이지 않은 채 정체 중(‘흐림’)으로 평가되었다. 2022년 기준 자살사망률은 10만 명당 25.2명 수준으로, 연간 약 1만 3천 명의 자살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자살률은 성별, 연령, 지역 등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변동이 크고 경제·사회·심리·생물학적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는데, 특히 제한적인 사회관계망과 높은 사회적

고령도를 가지는 고령인구, 1인가구의 증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발표된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4)과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23.12)에서는 현재(‘22) 10만 명당 25.2명인 자살사망률을 ‘27년까지 18.2명으로, 혹은 10년 내 50%로 감축하겠다는 도전적 목표와 함께 생명안전망 구축, 자살위험요인 감소, 사후관리 강화,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와 자살 예방 교육 실시, 전문심리상담 지원 등의 다각적인 정책을 제시하였다. 그간의 정책은 자살률 감소를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 자살 수단에 대한 관리, 자살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 유도 등에 성과를 거두었으나, 맞춤형 자살예방 지원과 같이 유관부처의 협업이 요구되는 정책의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 바 있으며, 정책 이행을 위한 예산, 인력 등의 인프라 확보와 함께 유관부처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살예방 정책은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정책간 조율과 성과점검을 위한 메커니즘 구축, 지역 중심의 정책추진 기반 강화, 인력·조직·예산 등 인프라 투자 강화, 인식개선 및 옹호 활동의 강화를 중점 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사회재난은 이태원 참사, 아리셀 공장 화재 등 최근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 자연재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정책적 준비가 시급하다.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자수는 특히 최근 3년간 급격히 증가하면서 목표와 반대방향으로 진행 중(‘뇌우’)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사회재난 사망·실종자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두 자리수를 유지해오다 2020년 1,009명, 2021년 5,063명, 2022년 26,570명으로 최근 3년간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여기에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감염병을 제외한 사망·실종은 2022년 기준 이태원 참사(사망 159명)를 포함하여 197명 발생하였다. 사회재난 인명피해를 둘러싼 원인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급격한 재난환경의 변화, 사회 전반의 위험인식 부족, 물리적 환경의 취약성을 꼽을 수 있으며, 자연재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책적·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사회재난 정책을 조속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개선과제로 코로나19 경험의 교훈을 축적·환류한 방역 중심 거버넌스 체계의 발전, 사회재난의 위험평가제도 구축 등 예방력 향상, 사회적 맥락과 피해자 삶의 회복을 위한 폭넓은 접근 등을 제시하였다.

경제(번영) 부문에서는 비정규직 비율, 산업재해율, 그리고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의 3개 지표가 심층 분석되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노동시장의 안정성과 공정성,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중요한 지표이며, 향후 외국인 이민노동자의 증가,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직무변화와 일자리 대체를 고려하면 이 지표의 새로운 의미와 활용을 고민할 시점이다. 비정규직 비율 추이를 보면 2021년 전년 대비 2%p 이상 증가하여 38.4%로 정점을 찍었고, 이후 다소 줄어들어 지난 5년간의 추세는 정체 중(‘흐림’)으로 평가되었다. 2021년 비정규직 비율이 급증할 당시 경기회복에 따라 늘어난 일자리에 비정규직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후 2년간은 정규직이 더욱 크게 늘어나 비정규직 비율은 코로나19 당시의 정점에 비해 최근 다소 개선된 상태이다. 그러나 여전히 임금근로자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비정규직에 대해 모니터링과 함께 안전망과 사회보장을 확보할 필요가 크다. 한국의 비정규직은 임금 격차가

크고, 청년층 외 고령층도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여성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은 등 질적 측면의 문제와 얽혀 있는데, 한편 최근 상대임금 비율, 평균 근속기간, 고용보험 가입률 등 일자리의 질 측면의 지표들이 최근 몇 년간 상승세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향후과제로는 정규직 확대 정책의 민간부문 확산 등 양적 정책과 함께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질적 정책을 병행하고, 유연안정성(flexicurity) 모델 개발 등 다양한 접근의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기술·산업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비정규직 비율 지표의 의미와 활용에 변화가 오고 있다. 저출생 문제와 관련하여 고용 불안정이 결혼과 출산 기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로서, 그리고 초고령사회와 관련하여 노인 빈곤과 노인 일자리의 질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심층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인공지능과 자동화, 플랫폼 노동, 킥 이코노미 등 노동시장 변화의 맥락을 감안하면 단순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이분법에 기반한 지표에 한계가 드러나며, 근로형태의 다양성, 근로자의 자율성, 소득 안정성 등을 포괄하는 새로운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 100명 당 산업재해자수로 측정되는 산업재해율은 2023년 기준 100명당 0.66명으로 집계된다. 연간 약 13만 7천 명의 산업재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사고재해자가 약 11만 3천 명, 그중에서도 사고사망자는 874명이다. 재해율은 2000년대 들어 점차 감소하고 있었으나 2017년 0.48%를 기록한 뒤 점차 증가하여, 최근 5년치의 추세는 '뇌우'로 평가되었다. 다만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해 최근 산재보험 가입 범위가 다양한 특수형태를 포함하도록 수차례에 걸쳐 확대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의 재해 승인율도 증가하였는데, 오히려 이러한 요인들이 재해율 지표에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났을 수 있어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재해발생 현황을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과 서비스업, 건설업, 제조업, 광업 등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재해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취약한 영역에 정책 지원을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62.0%에 도달했으나 이후 50%대로 떨어졌고 가장 최근인 2022년에는 59.8%로 기록되었다. 특히 2021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일회용품 사용의 증가, 재활용시설 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56.7%까지 떨어졌었다. 재활용률의 확대는 미래 세대가 이용할 자원을 보존하고 자원의 순환을 바탕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경제체제에 기여하며,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등 지속가능발전에 연관성이 높다. 특히 플라스틱은 현재 추진 중인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따라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국제규범이 강화될 전망이며, 이에 대비하여 재활용률의 확대뿐 아니라 더 넓은 범위의 자원순환 체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환경 부문에서는 각각 수자원 공급, 기후대응, 생태계 보전에 관한 지표로 지역단위 물 자급률, 온실가스 배출량, 산림면적에 관한 세 지표가 심층 분석되었다. 먼저 지방상수도 자급률은 간단히 말해 지역 상수도에 공급될 물 중 해당 지역에서 자체 취수되는 비율에 관한 지표로, 기후변화 등으로 안정적 물 공급이 어려워지는 여건에서 각 지자체가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역할과 책임을 나타낸다. 전국의 취수시설과 상수원보호구역이 감소하면서 광역상수도 시설이 이를 대체하는 가운데 지방상수

도 자급률은 최근 5년간 하락 추세이며, 2008년부터의 더 긴 시계열로 보아도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자급률이 떨어지면 상수원 규제로 취수의 비용을 감당하는 지역과 취수의 혜택을 받는 지역이 달라져 지자체 간 물분쟁의 여지도 커진다. 기후변화 대비 안정적 상수원 확보의 관점에서 물 자급률에 관한 정책 및 목표수립과 모니터링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5년 전에 비해 감소를 보였지만,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더욱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맑거나 흐림).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정점 이후 코로나19 등에 따라 2년 연속 감소한 뒤 2021년에는 다시 증가세를 나타냈다. 2022년 잠정치는 다시 전년대비 감소하여 2020년과 가까운 수준으로 돌아갔는데, 향후 추세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2020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5위에 해당하는 다배출국이며, 1인당 및 GDP당 총배출량 기준으로도 모두 6위에 해당한다. 배출 저감을 위한 정책 대안으로 에너지 집약도를 낮추는 배출권거래제도, 건물효율화제도, 친환경차 확대와 탄소집약도를 낮추는 재생에너지 확대, 산림면적 확대 등을 더욱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이후 다시 증가하는 배출량을 감소세로 전환하여 이어가기 위해서는 산업, 전환, 건물, 수송 등 각 부문별 전방위적으로 규제와 지원을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도 강력한 정부 주도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산림은 생물다양성뿐 아니라 담수 체계와 토양, 기후 등의 환경요소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2년 기준 총 육지면적 중 산림면적 비율은 62.63%로,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산림면적은 도로개발, 골프장·스키장의 개발, 주택 건설, 산업단지 조성 등 타용도로 지목이 변경되면서 감소하며, 연평균 약 7,300ha의 산림면적이 줄어들고 있다. 최근에는 산지 태양광 시설이 늘어나,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림보전이라는 두 종류의 환경적 가치가 충돌하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훼손된 자연에 대한 자연환경복원사업 등 생물다양성 보전과 복원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면적당 임목축적량은 늘어나고 있는 점은 탄소흡수원 관점에서 긍정적인 신호이다.

평화·협력 부문에서는 사이버 범죄와 함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에 관한 지표를 심층 분석하였다. 사이버 침해범죄는 해킹, 사이버 금융범죄,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도박, 사이버 명예훼손 등 다양한 유형을 포함한다. 사이버 범죄 전체의 발생 건수는 5년 전 대비 크게 늘었으며, 2016년 83.5%에 달했던 발생 대비 검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2년 현재 62.5%에 불과하다(‘뇌우’). 사이버 범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이버 사기와 사이버 금융범죄의 검거율이 최근 계속 하락하고 있어, 지표의 악화 추세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 금융범죄의 경우 검거율이 23.6%에 불과하다. 지표 부진의 원인으로 디지털 플랫폼의 빠른 변화와 발전된 기술이 범죄에 악용되고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특성을 들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라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사이버 범죄의 발생 자체가 늘어나고, 수사인력은 부족한 점도 꼽을 수 있다. 사이버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서는 수사인력의 충원과 함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이버 범죄 양상의 선제적 모니터링, 국제수사 공조

등 다각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한편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이에 포커스된 지표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구촌 협력이라는 국제적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늘려갈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2010년 이래 전반적으로 계속 ODA 규모를 늘려오고 있으나, 2023년 기준(잠정치) GNI 대비 0.18%라는 현 수치는 유엔 권고치인 0.7%에 크게 못미치며, OECD DAC 회원국 평균인 0.37%과 비교해도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ODA의 양적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더불어 개도국의 SDG 이행역량 지원, 무역·투자·기술이전 등 주요 협력분야에서의 정책일관성 등 체계적인 협력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 [국내문헌/자료]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법률 제18708호, 2022.1.4. 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 law.go.kr/e-나라지표\(2022\)](https://law.go.kr/e-나라지표(2022)), “사이버범죄 발생 및 검거”,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08](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08).
- 경찰청(2023), “전체 사이버범죄 발생·검거 현황”, <https://www.police.go.kr/www/open/public/public0208.jsp>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7.3.5), “17년 7월 이후 공공부문 상시·지속 업무 종사 비정규직 199,538명 정규직 전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3.4.16), “2023년도 비정규직 차별개선은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이 합니다”.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7.11.29),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현장에서 확산한다”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0.11.20), “바람직한 고용구조의 자율적 조성을 위한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8.6.15), “플리텍 용역직 100% 정규직 전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8.1.29), “근로복지공단, 422명 대규모 정규직 전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8.1.2), “장애인고용공단, 비정규직 173명 정규직 전환 완료”.
- 고용노동부(2022),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 고용노동부(2022.2) “공공부문 1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 실적자료(8차)”
- 고용노동부(2024), 「2023 산업재해 현황」.
- 고용노동부(2024), 「2024 고용노동백서」.
- 고용노동부(각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현황.
- 관계부처 합동(2021), 「국가물관리 기본계획(2021-2030)」.
- 관계부처 합동(2023),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 관계부처 합동(2023),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
- 관계부처 합동(2024),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 관계부처 합동(2024.1.16) 「'24년 정부 일자리사업 추진방향」 (비상경제장관회의 24-1-4)
- 권율(2023), “2024년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전망: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와 개발 금융의 역할” 「지식공유 브리프」, 한국개발연구원.
- 권율(2024),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정책 추진현황과 과제”, 『예산춘추』, 2024년 2호 Vol 74, 국회예산정책처.
- 김윤수(2020), “최근 고용동향 및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분석”, NABO 포커스 11호, 국회예산정책처.
- 김익재 외 (2024), 「지속가능한 상수원 수질 보전 정책 방향: 상수원보호구역과 취수시설 중심으로」, 한국환경연구원.
- 대한민국(2012), 「국가 지속가능발전 평가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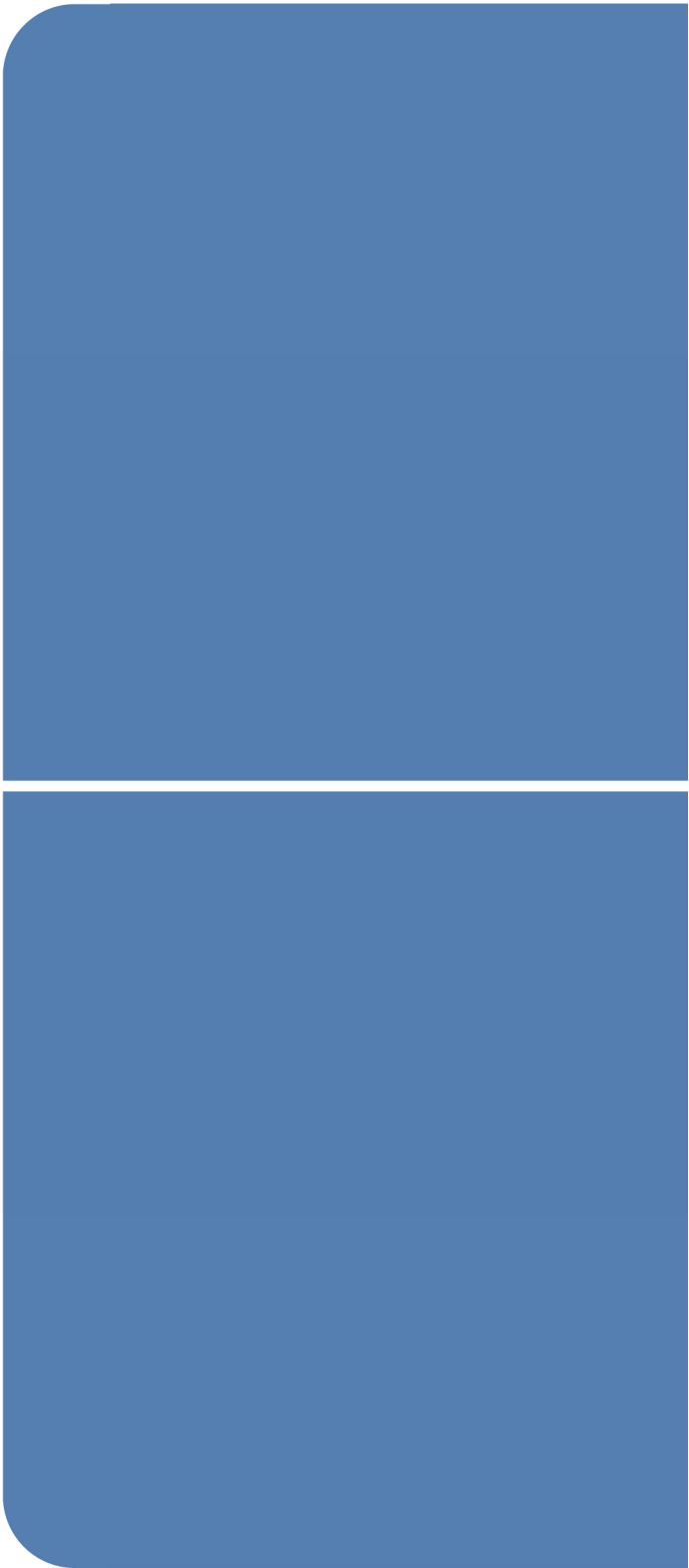
- 문태훈(2024) “한국 환경정책의 변화와 과제, 1960s~2020s” 『환경정책』 32(2):1~41.
- 반가운 외(2021), 「AI 시대, 미래의 노동자는 어떠한 역량이 필요할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보건복지부(2024),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각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 산림청(2023), 「2023 산림임업통계연보」.
- 산림청 보도자료(2020.8.19), “정부는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태양광시설 설치에 따른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우해봉, 임지영 (2023), 「이민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와 정책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유경준(2009), 「비정규직 문제 종합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이종관(2020), 「외국인 및 이민자 유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개발연구원.
- 장지연 외(2011), 「노동시장 구조와 사회보장체계의 정합성」. 한국노동연구원.
-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http://www.sdkorea.org/>. (검색일: 2024.08.04.)
- 전용일 외(2023)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현황 파악 및 제도개선 연구」(고용노동부 주관; 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 수행)
- 전진아 외(2022),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27) 수립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선비즈(2022.4.23), “[탈원전 5년]② 여의도 17배 면적 산림 베고 태양광 설치”,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2/04/22/WAPBZVCHMNCTZPWF25MHWSC71Q/>, 검색일: 2024.8.17.
- 통계개발원(2021), 「한국의 사회동향 2021」.
- 통계개발원(2023), 「한국의 사회동향 2023」.
- 통계청(2023),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조사”. <https://kostat.go.kr/ansk/>
- 통계청(2023),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2」.
- 통계청(2024),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4」.
- 통계청(2024),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개인 특성별 자살현황”, <http://kfsp-datazoom.or.kr>,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월별 자살사망 통계(잠정치)”, <http://kfsp-datazoom.or.kr>,
- 한국행정연구원(2022), 「센다이프레임워크 중간이행점검을 위한 한국의 자발적 국가 보고서」.
- 한승현, 이효주(2022), 「재난대응 과정에서의 협업체계 강화방안 연구: 조정기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 한요셉(2023), 「인공지능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와 정책방향」, 한국개발연구원.
- 행정안전부(2023), 「2022 재난연감(사회재난)」.
- 헤럴드경제(2022.10.8), “사이버범죄 늘어나는데 인력 부족…수사관 1명이 200건 처리”, <https://biz.heraldcorp.com/view.php?ud=20221007000696>, 검색일: 2024.8.10.
-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16), 「국가지속가능성 보고서(‘12~’14):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점검 및 지표 평가 결과」.
-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18), 「2018 국가지속가능성 보고서」.

-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20), 「2020 국가지속가능성 보고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점검 및 지표평가 결과」.
-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22), 「2022 국가지속가능성 보고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점검 및 지표평가 결과」.
- 환경부(2014), 「14년도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점검 및 지표 평가 결과」.
- 환경부(2022), 「국가수도기본계획(2022-2031)」.
- 환경부(2023), 「2022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환경부(2024), 「2023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황하 외(2022), 「더 나은 대한민국(The Better Korea):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포용적 회복 전략」,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황하, 한승현(2021), 신종 감염병 취약성 분석 및 스마트 대응 정책사례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국외문헌/자료]

- Lafortune et al. (2018) “SDG Index and Dashboards: Detailed Methodological paper”  
<https://github.com/sdsna/2018GlobalIndex/raw/master/2018GlobalIndexMethodology.pdf> 검색일: 2024.12.2.
- OECD (2019) 「Measuring Distance to SDG Targets 2019: An Assessment of Where OECD Countries Stand」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a8caf3fa-en>
- OECD (2020),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0』. OECD. <https://www.oecd.org/en/data/indicators/temporary-employment.html?oecdcontrol-00b22b2429-var3=2016>
- OECD (2024), “International aid rises in 2023 with increased support to Ukraine and humanitarian needs”, Press release.
- OECD (2024), Development Co-operation Profile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2dcf1367-en>.
- OECD, “Temporary Employment” <https://www.oecd.org/en/data/indicators/temporary-employment.html>, 검색일: 2024.12.27
- SDSN (2024)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4」, <https://dashboards.sdindex.org/>, 검색일: 2024.8.19.
- UN SDG, <https://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news/communications-material/>
- UN,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nd Beyond 2015, <https://www.un.org/millenniumgoals/>, 검색일: 2024.11.26
- WCED (1987), “Report of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ur Common Future”,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5987our-common-future.pdf>, 검색일: 2024.10.13
- Yale University,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EPI): Sustainable Nitrogen Management Index, <https://epi.yale.edu/epi-results/2022/component/snm>, 검색일: 2024.9.25

# 2024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 부록

- 부록 I . K-SDG 지표평가 세부자료
- 부록 II . 2024 K-SDG 지표별 평가  
결과 요약



## 부록 | K-SDG 지표평가 세부자료(산식, 출처 등)

## 목표 1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세부 목표 번호	지표	출처/상세정보
1-1	(1) 중위 가처분소득 50% 기준 상대빈곤율 (성별, 연령집단별, 장애집단여부별)	지표누리-국민삶의질지표, 상대적 빈곤율, <a href="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8005">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8005</a>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24. 12.9 갱신자료) ※ 균등화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이며, 처분가능소득 기준임.
	(2) 복지 급여(소득보장) 예산 및 GDP 대비 비율	산식: 복지 급여(소득보장) 예산=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근로·자녀장려금+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GDP\text{대비 비율} = \frac{\text{복지급여(소득보장) 예산총액}}{\text{명목 GDP}} \times 100(\%)$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예결산 ( <a href="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s.jsp?PAR_MENU_ID=03&amp;MENU_ID=0323">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s.jsp?PAR_MENU_ID=03&amp;MENU_ID=0323</a> ) 근로·자녀장려금: 국가통계포털(KOSIS)→국내통계→주제별통계→정부·재정→국세통계→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 <a href="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amp;menuld=M_01_01#content-group">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amp;menuld=M_01_01#content-group</a>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정책 자료실→주제별 정책자료→기타 정책→“예산” 검색 ( <a href="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o?mid=plc505">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o?mid=plc505</a> ) 명목 GDP: 국가통계포털(KOSIS)→국내통계→주제별통계→국민계정→국민계정(2015년기준)→주요지표→연간지표 ( <a href="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amp;menuld=M_01_01#content-group">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amp;menuld=M_01_01#content-group</a> )
1-2	(1) 의료비 가계직접 본인 부담률	본인부담률 = 100% - 건강보험 보장률 지표누리-e나라지표, “건강보험 재정 및 급여율” ⇒ 건강보험 보장률, <a href="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3">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3</a>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2) 고용보험 가입률	국가통계포털(KOSIS)→국내통계→주제별 통계→노동→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고용형태별 사회보험가입률, 상여금·퇴직(연)금 적용(가입)률, 노조가입률 ( <a href="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amp;tblId=DT_118N_LCE0008&amp;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amp;tblId=DT_118N_LCE0008&amp;conn_path=I2</a> )

세부 목표 번호	지표	출처/상세정보
	(3)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율	$\text{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율} = \frac{\text{국민연금 가입자 중 보험료 납부자}}{\text{경제활동인구}} \times 100(\%)$ <p>국민연금가입자 및 보험료 납부자: 국가통계포털(KOSIS)→국내통계→주제별 통계→복지→국민연금통계→종별 가입자 현황 (<a href="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22&amp;tblId=DT_32202_A100">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22&amp;tblId=DT_32202_A100</a>)</p> <p>경제활동인구: 국가통계포털(KOSIS)→국내통계→주제별 통계→노동→경제활동인구조사→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a href="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amp;tblId=DT_1DA7002S&amp;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amp;tblId=DT_1DA7002S&amp;conn_path=I2</a>)</p>
1-3	(1) GDP 대비 공적사회 지출 비중	$GDP\text{대비 공적 사회복지지출 비중} = \frac{\text{공적사회복지지출}}{\text{국내총생산}} \times 100(\%)$ <p>통계청 KOSIS→국제·북한 통계→국제통계→국제기구 회원국별 통계→OECD가입국→보건, 복지→공공사회복지 지출 (<a href="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amp;tblId=DT_2KAAD21_OECD&amp;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amp;tblId=DT_2KAAD21_OECD&amp;conn_path=I2</a>)</p> <p>OECD 전체 데이터 (<a href="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a>)</p>
	(2)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	<p>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 수: 국가통계포털, “[사회복지 서비스업] 시도/산업/직능별 종사자 현황”, <a href="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amp;tblId=DT_2KB9027&amp;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amp;tblId=DT_2KB9027&amp;conn_path=I2</a> (통계청, 『서비스업조사』)</p> <p>전체산업 종사자 비중: 국가통계포털, “보건 및 사회복지 종사자비율(등록기반)”, <a href="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amp;tblId=DT_1YL13102&amp;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amp;tblId=DT_1YL13102&amp;conn_path=I2</a> (통계청 경제총조사과)</p>
1-4	(1) 취약계층 긴급복지지원 예산 및 비율	$GDP\text{대비 긴급복지 예산 비중} = \frac{\text{긴급복지 예산}}{\text{명목 GDP}} \times 100(\%)$ <p>※긴급복지 예산 = 긴급복지지원금(보건복지부)+재정지원일자리사업(고용노동부)</p> <p>긴급복지지원제도: 보건복지부, “2023년(및 각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보건복지부 →예산서(긴급복지), <a href="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s.jsp?PAR_MENU_ID=03&amp;MENU_ID=0323">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s.jsp?PAR_MENU_ID=03&amp;MENU_ID=0323</a>)</p> <p>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고용노동부, “23년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 현황” 및 각년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목록→고용정책(총괄) 및 통계→재정지원 일자리 사업현황, <a href="https://www.moel.go.kr/info/publicct/publicctDataList.do?searchSeq=99&amp;searchMasterSeq=4">https://www.moel.go.kr/info/publicct/publicctDataList.do?searchSeq=99&amp;searchMasterSeq=4</a>)</p>

세부 목표 번호	지표	출처/상세정보
		<p>명목GDP(2020기준): 한국은행, 『국민계정』 (국가통계포털(KOSIS), 국민계정(2020년 기준), 주요지표(연간지표), 국내총생산(명목, 원화표시, 십억원), <a href="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amp;tblId=DT_200Y101&amp;conn_path=1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amp;tblId=DT_200Y101&amp;conn_path=12</a>)</p>
	(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사망률의 비중	<p>어린이, 노인 안전사고 사망률 비중: 국가통계포털(KOSIS)→국내통계→주제별통계→보건→사망원인통계→사망원인(103항목)/성/연령(5세)별 사망자수, 사망률 (<a href="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amp;menuId=M_01_01#content-group">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amp;menuId=M_01_01#content-group</a>)</p> <p>장애인 안전사고 사망률 비중: 국가통계포털(KOSIS)→국내통계→주제별통계→보건→장애인건강보건통계→장애인 사망원인→장애인 사망원인별 조사사망률 (<a href="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amp;menuId=M_01_01#content-group">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amp;menuId=M_01_01#content-group</a>)</p> <p>연앙인구: 국가통계포털(KOSIS)→국내통계→주제별통계→인구→주민등록인구현황→시군구/성/연령(5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a href="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amp;menuId=M_01_01#content-group">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amp;menuId=M_01_01#content-group</a>)</p>

**목표 2**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세부 목표 번호	지표	출처/상세정보
2-1	(1) 소득수준 하위가구 식품안정성 확보가구(%)	통계청,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식품안정성 확보가구분율) ( <a href="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amp;tblId=DT_11702_N042&amp;vw_cd=MT_OTITLE&amp;list_id=117_11702_A01_033_004&amp;scrId=&amp;seqNo=&amp;lang_mode=ko&amp;obj_var_id=&amp;itm_id=&amp;conn_path=K2&amp;path=%252Fcommon%252Fmeta_onedepth.jsp">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amp;tblId=DT_11702_N042&amp;vw_cd=MT_OTITLE&amp;list_id=117_11702_A01_033_004&amp;scrId=&amp;seqNo=&amp;lang_mode=ko&amp;obj_var_id=&amp;itm_id=&amp;conn_path=K2&amp;path=%252Fcommon%252Fmeta_onedepth.jsp</a> )
2-2	(1) 농가소득(단위:천원)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2)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업정책보험 실적집계 주요지표 <a href="https://www.apfs.kr/front/contents/sub.do?contId=133&amp;menuId=5365">https://www.apfs.kr/front/contents/sub.do?contId=133&amp;menuId=5365</a>
2-3	(1) 유기농업 인증면적 비율	공공데이터포털 (유기농업 인증면적 - 친환경인증통계) ( <a href="https://www.enviagro.go.kr/portal/info/Info_statistic_cond.do">https://www.enviagro.go.kr/portal/info/Info_statistic_cond.do</a> ) 국가통계포털 (전체 경지면적 - 시군별 논밭별 경지면적) ( <a href="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amp;tblId=DT_1EB002&amp;vw_cd=MT_ZTITLE&amp;list_id=K1_15&amp;seqNo=&amp;lang_mode=ko&amp;language=kor&amp;obj_var_id=&amp;itm_id=&amp;conn_path=MT_ZTITLE">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amp;tblId=DT_1EB002&amp;vw_cd=MT_ZTITLE&amp;list_id=K1_15&amp;seqNo=&amp;lang_mode=ko&amp;language=kor&amp;obj_var_id=&amp;itm_id=&amp;conn_path=MT_ZTITLE</a> )
	(2) 농경지 토양유기물 함량(단위: g/kg)	농촌진흥청, 농업환경 변동조사사업
	(3) 발토양 산도 (단위: pH)	농촌진흥청, 농업환경 변동조사사업
2-4	(1) 중장기 보존시설에 확보된 식물 유전자원 점수 (단위: 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 '씨앗은행' ( <a href="http://genebank.rda.go.kr">http://genebank.rda.go.kr</a> )
	(2) 중장기 보존시설에 확보된 동물 유전자원 점수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종합관리 시스템' ( <a href="https://angr.nias.go.kr">https://angr.nias.go.kr</a> )
	(3)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개발된 품종 수	관계부처 합동, 제3차 국가기후적응 대책
2-5	(1) 정부비축미 평균재고량 (단위: 천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양정자료' 검색 <a href="https://lib.mafra.go.kr/k">https://lib.mafra.go.kr/k</a>

### 목표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세부 목표 번호	지표	출처/상세정보
3-1	(1) 심혈관질환, 암, 당뇨, 만성 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사망률(30~70세)	World Health Organization ( <a href="https://www.who.int/data/gho/data/indicators/indicator-details/GHO/probability-(-)-of-dying-between-age-30-and-exact-age-70-from-any-of-cardiovascular-disease-cancer-diabetes-or-chronic-respiratory-disease">https://www.who.int/data/gho/data/indicators/indicator-details/GHO/probability-(-)-of-dying-between-age-30-and-exact-age-70-from-any-of-cardiovascular-disease-cancer-diabetes-or-chronic-respiratory-disease</a> )
	(2) 당뇨병 조절률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2021 국민건강통계」, p.188 “당뇨병(공복혈당 또는 당화혈색소 기준) 관리수준(조절률(유병자기준))” <a href="https://knhanes.kdca.go.kr/knhanes/sub04/sub04_04_01.do">https://knhanes.kdca.go.kr/knhanes/sub04/sub04_04_01.do</a>
	(3) 성인 흡연율	국가통계포털 현재흡연율 추이 ( <a href="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amp;tblId=DT_11702_N001">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amp;tblId=DT_11702_N001</a> ) 국가지표체계 현재흡연율 ( <a href="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37">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37</a> )
	(4) 장애인 만성질환 유병률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 ( <a href="http://www.mohw.go.kr/upload/viewer/skin/doc.html?fn=1640139318165_20211222111518.pdf&amp;rs=/upload/viewer/result/202201/">http://www.mohw.go.kr/upload/viewer/skin/doc.html?fn=1640139318165_20211222111518.pdf&amp;rs=/upload/viewer/result/202201/</a> ) 공공데이터포털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 ( <a href="https://www.data.go.kr/data/15044551/fileData.do">https://www.data.go.kr/data/15044551/fileData.do</a> )
3-2	(1)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	국가통계포털 인구 십만명당 자살률 ( <a href="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amp;tblId=DT_1YL21121E&amp;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amp;tblId=DT_1YL21121E&amp;conn_path=I3</a> )
	(2)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알코올 섭취량	국가통계포털 1인당 알코올 소비량(OECD) ( <a href="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amp;tblId=DT_2KAAC06_OECD">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amp;tblId=DT_2KAAC06_OECD</a> )
3-3	(1) 인구 1천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 <a href="http://taas.koroad.or.kr/sta/acs/gus/selectPopltnTfcacdSido.do?menuId=WEB_KMP_OVT_MVT_TAC_PTA">http://taas.koroad.or.kr/sta/acs/gus/selectPopltnTfcacdSido.do?menuId=WEB_KMP_OVT_MVT_TAC_PTA</a> ) 국가지표체계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 <a href="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61">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61</a> )
3-4	(1) 인구 십만 명당 결핵신고 신환자율	질병관리청 감염병 포털 결핵환자 신고현황 연보 ( <a href="https://www.kdca.go.kr/npt/biz/npp/portal/nppPblctDtaView.do?pblctDtaSeAt=1&amp;pblctDtaSn=2333">https://www.kdca.go.kr/npt/biz/npp/portal/nppPblctDtaView.do?pblctDtaSeAt=1&amp;pblctDtaSn=2333</a>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신고 결핵 신환자율(10만명당) ( <a href="https://www.khealth.or.kr/hpl/hplIdx/idxPopup.do?pop=Y&amp;idx_ix=242">https://www.khealth.or.kr/hpl/hplIdx/idxPopup.do?pop=Y&amp;idx_ix=242</a> )
	(2) 인구 십만 명당 말라리아 발생률	질병관리본부 감염병포털 전수감시감염병 질병별통계(말라리아) ( <a href="http://www.cdc.go.kr/npt/biz/npp/nppMain.do">http://www.cdc.go.kr/npt/biz/npp/nppMain.do</a> )

세부 목표 번호	지표	출처/상세정보
3-5	(1) 모성사망비(출생아 십만명당)	통계청, 2020년 영아사망·모성사망·출생전후기사망 통계 ( <a href="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amp;menuId=M_01_01">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amp;menuId=M_01_01</a> )
3-6	(1) 출생아 1천 명당 신생아 사망률	지표누리-지속가능발전지표 “3.2.2 신생아 사망률” <a href="https://www.index.go.kr/unity/potal/sdg/3/SDGIndicatorService.do?idxCd=G0031">https://www.index.go.kr/unity/potal/sdg/3/SDGIndicatorService.do?idxCd=G0031</a>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	건강검진 통계연보 ( <a href="https://www.khealth.or.kr/hpl/hplIdx/idxDataOne.do?menuId=MENU00787&amp;idx_ix=88">https://www.khealth.or.kr/hpl/hplIdx/idxDataOne.do?menuId=MENU00787&amp;idx_ix=88</a> )
	(3) 아동·청소년 비만 유병률	교육부, 학생건강검사 자료 중 초·중·고등학생 비만율
3-7	(1) 인구가중 초미세먼지(PM2.5) 농도	대기환경연보 2022, p.63
	(2) 인체 내 환경유해물질 농도 수준	국가통계포털,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결과 - 인체내 환경유해물질 노출 수준” <a href="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6&amp;tblId=DT_106N_99_1100051&amp;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6&amp;tblId=DT_106N_99_1100051&amp;conn_path=I2</a> (환경부,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인체내 환경유해물질 노출 수준)
3-8	(1) 영아사망률	통계청, 2020년 영아사망·모성사망·출생전후기사망 통계 ( <a href="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amp;tblId=DT_1B34E08&amp;vw_cd=MT_ZTITLE&amp;list_id=F_27&amp;seqNo=&amp;lang_mod e=ko&amp;language=kor&amp;obj_var_id=&amp;itm_id=&amp;conn_path=MT_ZTITLE">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amp;tblId=DT_1B34E08&amp;vw_cd=MT_ZTITLE&amp;list_id=F_27&amp;seqNo=&amp;lang_mod e=ko&amp;language=kor&amp;obj_var_id=&amp;itm_id=&amp;conn_path=MT_ZTITLE</a> )
	(2)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OECD better life index ( <a href="https://www.oecdbetterlifeindex.org/countries/korea/">https://www.oecdbetterlifeindex.org/countries/korea/</a> )
	(3)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	주민등록연앙인구(통계청, 각년도), 「2016년 전국 치매역학조사」(보건복지부·중앙치매센터, 2017) 적용  중앙치매센터 ‘대한민국 치매현황’ 보고서 ( <a href="https://www.nid.or.kr/info/dataroom_view.aspx?bid=221">https://www.nid.or.kr/info/dataroom_view.aspx?bid=221</a> ) 공공데이터포털 전국치매센터표준데이터 ( <a href="https://www.data.go.kr/data/15021138/standard.do">https://www.data.go.kr/data/15021138/standard.do</a>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정신건강관리-치매 ( <a href="https://www.khealth.or.kr/hpn/hpnIdx/selectIdxDetailList2030.do?menuId=MENU01437">https://www.khealth.or.kr/hpn/hpnIdx/selectIdxDetailList2030.do?menuId=MENU01437</a> )
	(4) 기능제한 없는 노인인구 비율	국가통계포털, “노인의 기능상태 제한 현황”, <a href="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amp;tblId=DT_117071_027&amp;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amp;tblId=DT_117071_027&amp;conn_path=I2</a>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3-9	(1) 인구 1천 명당 공공병상수	e-나라지표 의료 병상수 추이 ( <a href="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A0007">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A0007</a> )

## 목표 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세부 목표 번호	지표	출처/상세정보
4-1	(1) 취학률	교육통계서비스 유치종등통계 연도별 취학률 ( <a href="https://kess.kedi.re.kr/kessTheme/zipyo?survSeq=0000&amp;survCd=3410&amp;uppCd1=030201&amp;menuId=m_02_03_01&amp;itemCode=03">https://kess.kedi.re.kr/kessTheme/zipyo?survSeq=0000&amp;survCd=3410&amp;uppCd1=030201&amp;menuId=m_02_03_01&amp;itemCode=03</a> ) e-나라지표 교육부 취학률 및 진학률 ( <a href="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20">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20</a> )
	(2) 국제 학업성취도평가 (PISA 2~6수준 학생 비율)	OECD PISA Results ( <a href="https://www.oecd.org/pisa/publications/pisa-2018-results.htm">https://www.oecd.org/pisa/publications/pisa-2018-results.htm</a> ) e-나라지표 국제학업성취도(PISA) 순위 ( <a href="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dNo=2&amp;clasCd=10&amp;idxCd=F0095&amp;upCd=4">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dNo=2&amp;clasCd=10&amp;idxCd=F0095&amp;upCd=4</a> )
	(3) 국가수준 학습성과지표 산출	e-나라지표 학업성취도 평가(교과별 성취수준 비율) ( <a href="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39">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39</a>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학업성취도 평가 정보 서비스 ( <a href="https://naea.kice.re.kr/">https://naea.kice.re.kr/</a> )
4-2	(1) 신체적 건강, 학습, 심리사회적 안녕 (well-being) 측면에서 발달정도가 정상적인 5세 이하 여아와 남아 비율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a href="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amp;MENU_ID=032901&amp;CONT_SEQ=350493&amp;page=1">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amp;MENU_ID=032901&amp;CONT_SEQ=350493&amp;page=1</a> )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발표 보도자료 <a href="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amp;bid=0027&amp;list_no=1481860&amp;act=view&amp;">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amp;bid=0027&amp;list_no=1481860&amp;act=view&amp;</a> 국가통계포털 아동종합실태조사 인지 및 언어발달 수준(0-5세) ( <a href="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amp;tblId=DT_117074_2018_A036&amp;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amp;tblId=DT_117074_2018_A036&amp;conn_path=I2</a> )
	(2) 초등학교 취학 전 체계적인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 이용률	국가지표체계 유아교육 취원율 ( <a href="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dNo=2&amp;clasCd=8&amp;idxCd=8023&amp;upCd=7">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dNo=2&amp;clasCd=8&amp;idxCd=8023&amp;upCd=7</a> ) e-나라지표 유아교육 규모 ( <a href="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35">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35</a> )
	(3)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	국가통계포털 어린이집 보육아동현황 <a href="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amp;tblId=DT_15407_NN002&amp;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amp;tblId=DT_15407_NN002&amp;conn_path=I2</a> ) 국가통계포털 유치원 개황 ( <a href="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4&amp;tblId=DT_1963003_001">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4&amp;tblId=DT_1963003_001</a> )

세부 목표 번호	지표	출처/상세정보
	(4) 긍정적인 가정학습 및 양육환경을 경험하는 영유아 비율	-
4-3	(1) 고등교육 이수율	OECD, 「OECD Education at a Glance」 ( <a href="https://stats.oecd.org">https://stats.oecd.org</a> , Educational attainment of 25-64 years-olds) 국가지표체계 고등교육 이수율 ( <a href="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8024">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8024</a> )
	(2) 학생 1인당 국가장학금 수혜 금액	사회보장위원회 > 자료실 > 발간물 > (연도별)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a href="https://www.ssc.go.kr/home/kor/board.do">https://www.ssc.go.kr/home/kor/board.do</a>
	(3) 고등교육기관에서 성인 학습자의 비 학위 교육과정 참여율	-
4-4	(1) 평생학습 참여율	e-나라지표 평생학습 참여율 ( <a href="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1555">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1555</a> ) 국가통계포털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 <a href="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4&amp;tblId=DT_33409N_001&amp;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4&amp;tblId=DT_33409N_001&amp;conn_path=I2</a> )
	(2)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	국가통계포털 기업직업훈련실태조사 ( <a href="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amp;vwcd=MT_ZTITLE&amp;parmTabId=M_01_01&amp;outLink=Y&amp;parentId=D.1;D_9.2;#D_9.2">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amp;vwcd=MT_ZTITLE&amp;parmTabId=M_01_01&amp;outLink=Y&amp;parentId=D.1;D_9.2;#D_9.2</a> )  e-나라지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현황 ( <a href="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1500">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1500</a> )
	(3) 청소년 및 성인의 ICT 역량수준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IEA) ICILS ( <a href="https://www.iea.nl/data-tools/repository/icils">https://www.iea.nl/data-tools/repository/icils</a> ) OECD PISA Results ( <a href="https://www.oecd.org/pisa/publications/pisa-2018-results.htm">https://www.oecd.org/pisa/publications/pisa-2018-results.htm</a> )
4-5	(1) 모든 지표에 성별, 장애, 취약계층별 분리통계 도입	-
4-6	(1) 활용 가능한 언어역량과 수리역량의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숙련도를 달성한 특정 연령 인구 비율(PIAAC)	한국인의 역량, 학습과 일(2013) 재구성  OECD Skills Surveys ( <a href="https://www.oecd.org/skills/piaac/">https://www.oecd.org/skills/piaac/</a> )
	(2) 성인 문해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인문해능력조사
4-7	(1)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주류화 정도 (교육정책, 교육과정,	통계청, SDG 지표누리 4.7.1, (원출처: 유네스코 통계연구소) <a href="https://www.index.go.kr/unity/potal/sdg/4/SDGIndicatorServi">https://www.index.go.kr/unity/potal/sdg/4/SDGIndicatorServi</a>

세부 목표 번호	지표	출처/상세정보
	교사교육, 학생평가)	ce.do?idxCd=G0064
	(2)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교육정책 사업 비율	-
	(3) 교육과정 내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 능발전교육 관련 요소 반영 비율	-
	(4) 교원 중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 전교육 경험자 비율	-
4-8	(1)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율	e나라지표 특수교육 규모 <a href="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1544">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1544</a>
	(2) 학교 내진보강률	2023년 12월 31일 기준 교육부 내진보강률 통계. 교육부 교육시설과 제공
	(3) Wee 클래스 설치 비율	Wee 프로젝트(wee.go.kr) 위(Wee) 기관현황 위(Wee) 클래스 구축 현황 ( <a href="https://www.wee.go.kr/home/cms/cmsCont.do?cntnts_sn=22">https://www.wee.go.kr/home/cms/cmsCont.do?cntnts_sn=22</a> )
4-9	(1) 교육단계별 GDP 대비 공교육비 정부 부담 비율	교육통계서비스(kess.kedi.re.kr) 교육통계 국제통계 유형별 재원 및 교육 단계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a href="https://kess.kedi.re.kr/stats/school?menuCd=0105&amp;cd=5173&amp;survSeq=2023&amp;itemCode=01&amp;menuId=m_010502_02_01050202&amp;uppCd1=01050202&amp;uppCd2=01050202&amp;flag=B">https://kess.kedi.re.kr/stats/school?menuCd=0105&amp;cd=5173&amp;survSeq=2023&amp;itemCode=01&amp;menuId=m_010502_02_01050202&amp;uppCd1=01050202&amp;uppCd2=01050202&amp;flag=B</a>
4-10	(1) 교사 1인당 학생 수	e-나라 지표 교원 1인당 학생 수 <a href="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1521">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1521</a>
	(2) 보육교사 중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비율	국가통계포털 주제별 통계 보건 보육실태조사 ( <a href="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amp;menuId=M_01_01">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amp;menuId=M_01_01</a> ) 나라 통계 보육실태조사 ( <a href="https://www.narastat.kr/metasvc/index.do?confmNo=331007">https://www.narastat.kr/metasvc/index.do?confmNo=331007</a> )
	(3) 특수교사 1인당 특수학생 수	e-나라지표 특수교육규모 <a href="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1544">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1544</a>
	(4) 초·중등 전문상담교사 배치 비율	교육통계서비스 - 유초중등통계- 교육통계분석자료집-통계로 보는 한국 교육- 학습환경 및 여건- 전문상담교사 배치율 ( <a href="https://kess.kedi.re.kr/publ/publFile?survSeq=2020&amp;menuSeq=3894&amp;publSeq=43&amp;menuCd=86164&amp;menuId=2_4_4&amp;itemCode=02&amp;language=">https://kess.kedi.re.kr/publ/publFile?survSeq=2020&amp;menuSeq=3894&amp;publSeq=43&amp;menuCd=86164&amp;menuId=2_4_4&amp;itemCode=02&amp;language=</a> )

**목표 5**    **성평등 보장**

세부 목표 번호	지표	출처/상세정보
5-1	(1)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률	여성가족부( <a href="http://www.mogef.go.kr">http://www.mogef.go.kr</a> ) 정책 정책자료실 주제별 정책자료 양성평등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 <a href="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0&amp;bbtSn=704894">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0&amp;bbtSn=704894</a> )
5-2	(1) 가정폭력 실신고건수 및 대응률	공공데이터포털- 경찰청 가정폭력 검거 및 조치 현황 <a href="https://www.data.go.kr/data/15037060/fileData.do?recommandDataYn=Y">https://www.data.go.kr/data/15037060/fileData.do?recommandDataYn=Y</a>
	(2) 성폭력 발생사건 및 미검거율	음란물유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경찰청, 성폭력사건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통계DB 성폭력범죄의 발생 및 검거현황 ( <a href="https://gs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amp;tblId=DT_5ED0410N&amp;conn_path=I2">https://gs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amp;tblId=DT_5ED0410N&amp;conn_path=I2</a> ) 국가통계포털 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전국) ( <a href="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amp;tblId=DT_13204_2011_211&amp;vw_cd=MT_ZTITLE&amp;list_id=132_13204_GKIT659_dike256_eii6&amp;seqNo=&amp;lang_mode=ko&amp;language=kor&amp;obj_var_id=&amp;itm_id=&amp;conn_path=MT_ZTITLE">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amp;tblId=DT_13204_2011_211&amp;vw_cd=MT_ZTITLE&amp;list_id=132_13204_GKIT659_dike256_eii6&amp;seqNo=&amp;lang_mode=ko&amp;language=kor&amp;obj_var_id=&amp;itm_id=&amp;conn_path=MT_ZTITLE</a> )
	(3) 디지털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 및 미검거율	국가통계포털 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전국) ( <a href="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amp;tblId=DT_13204_2011_211&amp;vw_cd=MT_ZTITLE&amp;list_id=132_13204_GKIT659_dike256_eii6&amp;seqNo=&amp;lang_mode=ko&amp;language=kor&amp;obj_var_id=&amp;itm_id=&amp;conn_path=MT_ZTITLE">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amp;tblId=DT_13204_2011_211&amp;vw_cd=MT_ZTITLE&amp;list_id=132_13204_GKIT659_dike256_eii6&amp;seqNo=&amp;lang_mode=ko&amp;language=kor&amp;obj_var_id=&amp;itm_id=&amp;conn_path=MT_ZTITLE</a> )
5-3	(1) 맞벌이가구 여성대비 남성의 가정 내 무보수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 시간 비율	국가통계포털, 통계청「생활시간조사」의 맞벌이·외벌이 가구별 평균시간 ( <a href="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amp;tblId=DT_2019_058_1TM1A81X&amp;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amp;tblId=DT_2019_058_1TM1A81X&amp;conn_path=I3</a> ) e-나라 지표 혼인상태별 및 맞벌이상태별 가사노동시간 ( <a href="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3027">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3027</a> )
5-4	(1) 의회와 지방의회의 여성 비율	국가통계포털 여성 국회의원 비율 ( <a href="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amp;tblId=DT_12GAE20&amp;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amp;tblId=DT_12GAE20&amp;conn_path=I2</a>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당선인 당선인 통계 ( <a href="http://info.nec.go.kr/">http://info.nec.go.kr/</a> )
	(2)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과제 목표 달성률	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및 성과 ( <a href="http://www.mogef.go.kr/sp/geq/sp_geq_f003.do">http://www.mogef.go.kr/sp/geq/sp_geq_f003.do</a> )

세부 목표 번호	지표	출처/상세정보
	(3) 민간부문 여성 관리자 비율	고용노동부 주요발간자료 고용노동백서 ( <a href="http://www.moel.go.kr/info/publicdata/majorpublish/majorPublishView.do?bbs_seq=20211000878">http://www.moel.go.kr/info/publicdata/majorpublish/majorPublishView.do?bbs_seq=20211000878</a>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통계DB 여성근로자 및 여성관리자 비율 ( <a href="https://gs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amp;tblId=DT_GE0023_1">https://gs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amp;tblId=DT_GE0023_1</a> )
5-5	(1) 성·재생산권과 건강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을 보장하는 제도마련 여부	-
	(2) 초·중·고등학교에서 성교육을 수행한 비율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a href="https://www.kdca.go.kr/yhs/home.jsp">https://www.kdca.go.kr/yhs/home.jsp</a>
	(3) 피임 실천율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 <a href="https://www.kihasa.re.kr/web/publication/research/view.do?pageIndex=3&amp;keyField=&amp;key=&amp;menuId=44&amp;tid=71&amp;bid=12&amp;division=001&amp;ano=2396">https://www.kihasa.re.kr/web/publication/research/view.do?pageIndex=3&amp;keyField=&amp;key=&amp;menuId=44&amp;tid=71&amp;bid=12&amp;division=001&amp;ano=2396</a> ) ( <a href="http://kostat.go.kr/portal/korea/kor_pi/8/7/index.board?bmode=read&amp;aSeq=379977&amp;pageNo=4&amp;rowNum=10&amp;amSeq=&amp;sTarget=&amp;sTxt=">http://kostat.go.kr/portal/korea/kor_pi/8/7/index.board?bmode=read&amp;aSeq=379977&amp;pageNo=4&amp;rowNum=10&amp;amSeq=&amp;sTarget=&amp;sTxt=</a> )
5-6	(1) 성별 스마트폰 보유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통계실태조사 인터넷이용실태조사 ( <a href="https://www.nia.or.kr/site/nia_kor/ex/bbs/List.do?cbIdx=99870">https://www.nia.or.kr/site/nia_kor/ex/bbs/List.do?cbIdx=99870</a> )
	(2) 대학교 여성과학기술인력 졸업 현황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관(고등교육기관 및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국가통계포털KOSIS, “계열별 졸업상황” <a href="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4&amp;tblId=DT_33403N_005&amp;conn_path=1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4&amp;tblId=DT_33403N_005&amp;conn_path=12</a> )
5-7	(1)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의견 수용률	여성가족부( <a href="http://www.mogef.go.kr">http://www.mogef.go.kr</a> ) 정책 정책자료실 주제별 정책자료 양성평등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 <a href="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0&amp;bbtSn=704894">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0&amp;bbtSn=704894</a> )

**목표 6**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세부 목표 번호	지표	출처/상세정보
6-1	(1) 수돗물 만족도	환경부 2021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결과보고서(2021.10.) <a href="https://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menuId=10261&amp;seq=7776">https://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menuId=10261&amp;seq=7776</a> ※ 2024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조사 중('24.11월 결과 공표)
	(2) 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급률	e-나라지표 상수도 급수현황(보급 및 급수량) 상수도 보급률 추이 ( <a href="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1480">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1480</a> ) 환경부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2020 상수도통계책자(최종) ( <a href="https://www.waternow.go.kr/web/board/STAT/34514">https://www.waternow.go.kr/web/board/STAT/34514</a> )
6-2	(1)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	환경부 국가하수도정보시스템 하수도 통계 ( <a href="http://www.hasudoinfo.or.kr">www.hasudoinfo.or.kr</a> ) 환경부 2022 하수도통계 ( <a href="https://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menuId=10264&amp;seq=7809">https://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menuId=10264&amp;seq=7809</a> )
	(2) 하수도 정비중점관리지역 정비 대책수립 개소수	환경부, 「2023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공고」 및 각년도, <a href="https://www.me.go.kr/home/web/board/read.do?menuId=10524&amp;boardMasterId=39&amp;boardCategoryId=55&amp;boardId=1634010">https://www.me.go.kr/home/web/board/read.do?menuId=10524&amp;boardMasterId=39&amp;boardCategoryId=55&amp;boardId=1634010</a>
6-3	(1) 유역별 물순환율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2) 수질목표기준 달성도	국립환경과학원(2023), 「2022 전국 수질평가」 및 각년도 (물환경정보시스템, 자료실 <a href="https://water.nier.go.kr/web/board/2/1713/?page=2&amp;pMENU_NO=103">https://water.nier.go.kr/web/board/2/1713/?page=2&amp;pMENU_NO=103</a> )
	(3) 신규 오염물질 관리 항목 수	국가법령정보센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a href="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1210&amp;lsiSeq=237709#0000">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1210&amp;lsiSeq=237709#0000</a> )
6-4	(1) 상수도 누수율	환경부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2022 상수도통계책자(최종) ( <a href="https://www.waternow.go.kr/web/board/STAT/34514">https://www.waternow.go.kr/web/board/STAT/34514</a> )
	(2) 지방상수도 자급률	상수도통계 2022 (xls 4-1-1) IV. 수도운영관리현황 1. 수량관리 1)총괄 “지방상수도 자급률”
	(3) 하수처리수 재이용율	환경부 2022 하수도통계 엑셀파일 - 10-1시트 공공하수처리수 재이용 ( <a href="https://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amp;menuId=10264&amp;seq=7809">https://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amp;menuId=10264&amp;seq=7809</a> )
6-5	(1) 서식 및 수변환경 평가지수 (HRI)	환경부, 하천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국가통계포털(KOSIS), <a href="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6&amp;tblId=DT_106T_034756">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6&amp;tblId=DT_106T_034756</a>
	(2) 어류건강성 평가지수 (FAI)	환경부, 하천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국가통계포털(KOSIS), <a href="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6&amp;tblId=DT_106T_034756">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6&amp;tblId=DT_106T_034756</a>

세부 목표 번호	지표	출처/상세정보
	(3) 습지와 습지보호지역 면적 증감	<p>환경부 통계포털 습지보호지역 지정현황 (<a href="http://stat.me.go.kr/portal/stat/envStatYearbookPage.do">http://stat.me.go.kr/portal/stat/envStatYearbookPage.do</a>)</p> <p>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DSL) 습지보전기본계획(제2차, 제3차) (<a href="http://www.ndsl.kr/ndsl/search/detail/report/reportSearchResultDetail.do?cn=TRKO201900003793">http://www.ndsl.kr/ndsl/search/detail/report/reportSearchResultDetail.do?cn=TRKO201900003793</a>)</p> <p>e-나라지표 국토현황(행정구역별, 소유자별, 지목별) 국토 면적 추이(연도별) (<a href="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2728">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2728</a>)</p>
6-6	(1) 물 관련 행정기관위원회 운영 실적	<p>행안부, (2019-2023) 행정기관위원회 현황 “행정기관위원회 운영 현황” <a href="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2&amp;nttlId=103325">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2&amp;nttlId=103325</a></p>
	(2) 수질보전활동지원 예산 반영 비율	<p>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2020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통계 (<a href="https://www.me.go.kr/hg/web/board/read.do?menuId=3470&amp;boardMasterId=136&amp;boardCategoryId=538&amp;boardId=1644610">https://www.me.go.kr/hg/web/board/read.do?menuId=3470&amp;boardMasterId=136&amp;boardCategoryId=538&amp;boardId=1644610</a>)</p> <p>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금강수계관리기금통계개요 (<a href="https://www.me.go.kr/gg/web/board/read.do?menuId=2246&amp;boardMasterId=228&amp;boardCategoryId=259&amp;boardId=1646190">https://www.me.go.kr/gg/web/board/read.do?menuId=2246&amp;boardMasterId=228&amp;boardCategoryId=259&amp;boardId=1646190</a>)</p> <p>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낙동강수계관리기금 통계(2002-2020) (<a href="https://www.me.go.kr/ndg/web/board/read.do?menuId=3418&amp;boardMasterId=264&amp;boardCategoryId=&amp;boardId=1641910">https://www.me.go.kr/ndg/web/board/read.do?menuId=3418&amp;boardMasterId=264&amp;boardCategoryId=&amp;boardId=1641910</a>)</p> <p>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영산강 · 섬진강수계관리기금 통계('02~'19) (<a href="https://www.me.go.kr/ysg/web/board/read.do?menuId=4246&amp;boardMasterId=271&amp;boardCategoryId=555&amp;boardId=1648380">https://www.me.go.kr/ysg/web/board/read.do?menuId=4246&amp;boardMasterId=271&amp;boardCategoryId=555&amp;boardId=1648380</a>)</p>

**목표 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세부 목표 번호	지표	출처/상세정보
7-1	(1)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수	EG-TIPS 에너지온실가스종합정보플랫폼 “에너지바우처사업” <a href="https://tips.energy.or.kr/statistics/statistics_view1114.do#">https://tips.energy.or.kr/statistics/statistics_view1114.do#</a>
7-2	(1)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국가통계포털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 <a href="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7&amp;tblId=DT_337N_A004A">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7&amp;tblId=DT_337N_A004A</a>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확정치) 결과안내 ( <a href="https://www.knrec.or.kr/pds/statistics_read.aspx?no=109">https://www.knrec.or.kr/pds/statistics_read.aspx?no=109</a> )
	(2) 1차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	국가통계포털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 <a href="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amp;menuId=M_01_01#content-group">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amp;menuId=M_01_01#content-group</a>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확정치) 결과안내 ( <a href="https://www.knrec.or.kr/pds/statistics_read.aspx?no=109">https://www.knrec.or.kr/pds/statistics_read.aspx?no=109</a> )
7-3	(1) 국가에너지효율지표	최종에너지소비량 EG-TIPS 에너지온실가스 종합정보플랫폼 (원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 <a href="https://tips.energy.or.kr/statistics/statistics_view0204.do">https://tips.energy.or.kr/statistics/statistics_view0204.do</a>
	(2) 건물에너지효율지표	국가통계포털 용도별 건물에너지 사용량 (총괄) ( <a href="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8&amp;tblId=DT_408003_A000_0">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8&amp;tblId=DT_408003_A000_0</a>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a href="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a> )
7-4	(1) 친환경차 확대 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4.1.19.) “자동차 누적등록대수 25,949천대...작년 신규등록차량 3.14대 중 1대는 친환경차”, <a href="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epage=1&amp;id=95089274">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epage=1&amp;id=95089274</a> 전기·수소차 보급대수(폐차, 말소 제외되지 않음): 환경부 내부자료(2024.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 <a href="https://www.msit.go.kr/bbs/view.do?bbsSeqNo=94&amp;nttSeqNo=3180840">https://www.msit.go.kr/bbs/view.do?bbsSeqNo=94&amp;nttSeqNo=3180840</a> )
	(2) 운송부문 에너지 총소비량 (단위: 천ToE)	국가통계포털 최종에너지 부문별 소비 : 수송 ( <a href="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9&amp;tblId=DT_F_M190">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9&amp;tblId=DT_F_M190</a> ) 국가에너지통계 에너지통계연보 ( <a href="http://www.kesis.net:80/FileDownloadAction.do?file=/admin/admin_RegList.jsp/20220110/715661641790731109_01.xlsb">http://www.kesis.net:80/FileDownloadAction.do?file=/admin/admin_RegList.jsp/20220110/715661641790731109_01.xlsb</a> )

## 목표 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세부 목표 번호	지표	출처/상세정보
8-1	(1) 연간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지표누리-지속가능발전목표, 지표 8.1.1 “1인당 실질 GDP 연 성장률” <a href="https://www.index.go.kr/unity/potal/sdg/8/SDGIndicatorService.do?idxCd=G0099">https://www.index.go.kr/unity/potal/sdg/8/SDGIndicatorService.do?idxCd=G0099</a> (원출처: UN DESA)
8-2	(1) 인구집단별 고용률(성별, 연령별, 장애여부별)	국가지표체계, 고용률 (성별 및 연령집단별 고용률), <a href="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12">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12</a> 국가통계포털, “장애인 경제활동상태-성별” <a href="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83&amp;tblId=DT_38304_2013_N001&amp;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83&amp;tblId=DT_38304_2013_N001&amp;conn_path=I2</a>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 2021년까지 매년(상반기 기준) 조사, 2022년부터 반기별 조사
	(2)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	국가지표체계, 비정규직근로자비율 ( <a href="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14">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14</a> )
8-3	(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취업자 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위상, 중소기업기본통계/전산업기준(소상공인) <a href="https://www.mss.go.kr/site/smba/foffice/ex/statDB/MainSubStat.do">https://www.mss.go.kr/site/smba/foffice/ex/statDB/MainSubStat.do</a>
	(2) 창업기업 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동향 ( <a href="http://211.253.148.167:8083/statHtml/statHtml.do?orgId=142&amp;tblId=DT_142N_F201&amp;dbUser=nsisupdb">http://211.253.148.167:8083/statHtml/statHtml.do?orgId=142&amp;tblId=DT_142N_F201&amp;dbUser=nsisupdb</a> )
8-4	(1) 남녀 임금격차	국가통계포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a href="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parentId=D.1&amp;vwcd=MT_ZTITLE&amp;menuId=M_01_01">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parentId=D.1&amp;vwcd=MT_ZTITLE&amp;menuId=M_01_01</a> )
8-5	(1) 이주노동자 고용 비율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 총괄(이민자)”, <a href="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amp;tblId=DT_2FA001F&amp;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amp;tblId=DT_2FA001F&amp;conn_path=I2</a> (통계청·법무부,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2) 연소근로자 고용 비율	-
8-6	(1) 사고사망만인율	e-나라지표 산업재해현황 사고성 사망만인율 <a href="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14">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14</a>
	(2) 전체 재해율	e-나라지표 산업재해현황 전체 재해율 <a href="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14">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14</a>

**목표 9** 산업의 성장과 혁신 활성화 및 사회기반시설 구축

세부 목표 번호	지표	출처/상세정보
9-1	(1) 도로보급률	국가통계포털 시·도별 도로보급률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 ( <a href="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6&amp;tblId=DT_MLTM_966&amp;vw_cd=MT_ZTITLE&amp;list_id=M2_10&amp;scrid=&amp;seqNo=&amp;lang_mode=ko&amp;obj_var_id=&amp;itm_id=&amp;conn_path=E1">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6&amp;tblId=DT_MLTM_966&amp;vw_cd=MT_ZTITLE&amp;list_id=M2_10&amp;scrid=&amp;seqNo=&amp;lang_mode=ko&amp;obj_var_id=&amp;itm_id=&amp;conn_path=E1</a> )
	(2) 일반국민대비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	e-나라지표 디지털정보격차 현황 <a href="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67">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67</a>
9-2	(1) 부채가 있거나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소규모 산업 비율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실태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2020 이후: <a href="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42&amp;tblId=DT_2ME0314&amp;conn_path=l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42&amp;tblId=DT_2ME0314&amp;conn_path=l2</a> 2018~2019: <a href="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42&amp;tblId=DT_1ME0314&amp;conn_path=l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42&amp;tblId=DT_1ME0314&amp;conn_path=l2</a>
	(2) 데이터산업 시장 규모	IT Statistics of Korea 데이터산업현황조사 데이터산업 시장 규모 ( <a href="http://www.itstat.go.kr/itstat/kor/tblInfo/TblInfoList.html?vw_cd=MT_ATITLE">http://www.itstat.go.kr/itstat/kor/tblInfo/TblInfoList.html?vw_cd=MT_ATITLE</a> )
	(3) 산업집중도	e-나라지표 시장집중도 현황 품목시장 집중도 및 산업집중도 <a href="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21">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21</a>
9-3	(1) WEF 세계경쟁력보고서 혁신역량부문 10개 지표의 점수	e-나라지표 (WEF 혁신역량·ICT 보급 - 혁신역량 순위) ( <a href="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37">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37</a> )
	(2) 세계혁신지수(GII)의 종합점수 또는 혁신산출점수	Global Innovation Index (Global Innovation Index ranking, <a href="https://www.wipo.int/edocs/pubdocs/en/wipo-pub-2000-2023-en-main-report-global-innovation-index-2023-16th-edition.pdf">https://www.wipo.int/edocs/pubdocs/en/wipo-pub-2000-2023-en-main-report-global-innovation-index-2023-16th-edition.pdf</a> )
9-4	(1) GDP 대비 연구개발비	지표누리-국가발전지표, “연구개발투자비율(GDP 대비)”, <a href="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06">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06</a>
	(2) 경제활동 1천 명당 (전일제) 연구자 수	e-나라지표, 총 연구개발인력 경제활동인구천명당연구원수 <a href="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31">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31</a>
9-5	(1)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국가지표체계, 온실가스배출량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a href="https://www.index.go.kr/unity/potal/sdgs/9/SDGsIndicatorService.do?idxCd=G0121">https://www.index.go.kr/unity/potal/sdgs/9/SDGsIndicatorService.do?idxCd=G0121</a>
	(2)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재활용 비율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국가통계포털(KOSIS), “폐기물처리현황_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a href="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6&amp;tblId=DT_106N_29_2020007&amp;conn_path=l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6&amp;tblId=DT_106N_29_2020007&amp;conn_path=l2</a> )

## 목표 10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세부 목표 번호	지표	출처/상세정보
10-1	(1) 전체 인구의 균등화한 가구소득 대비 소득하위 40% 인구의 균등화한 가구소득의 비율	$\frac{\text{소득1,2분위 가구 균등화소득의 평균(처분가능소득)}}{\text{전체 인구의 가구 균등화소득(처분가능소득)}} \times 100(\%)$ 국가통계포털 KOSIS, “소득분배지표” → 균등화 평균소득(5분위, 만원) → 처분가능소득, <a href="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amp;tblId=DT_1HDALF05&amp;conn_path=l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amp;tblId=DT_1HDALF05&amp;conn_path=l2</a>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24.12.9 갱신자료)
	(2) 소득격차비율	$\frac{\text{평균 빈곤갭} = \{ (\text{빈곤선}) - (\text{빈곤선 이하에 속한 사람들의 평균소득}) \}}{(\text{빈곤선})} \times 100$ 국가통계포털 KOSIS, “소득분배지표” → 평균 빈곤갭(중위소득 50% 이하) → 처분가능소득, <a href="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amp;tblId=DT_1HDALF05&amp;conn_path=l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amp;tblId=DT_1HDALF05&amp;conn_path=l2</a>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24.12.9 갱신자료)
10-2	(1) 소득 5분위 배율	국가통계포털 KOSIS, “소득분배지표” → 소득 5분위 배율(배), <a href="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amp;tblId=DT_1HDALF05&amp;conn_path=l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amp;tblId=DT_1HDALF05&amp;conn_path=l2</a>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24.12.9 갱신자료)
	(2) 소득 1, 2분위 가구의 순자산 점유율	$\text{소득 1,2분위 가구의 순자산 점유율} = \frac{\text{소득1,2분위 평균 순자산액의 합계}}{\text{소득1~5분위의 평균 순자산액 합계}} \times 100(\%)$ 국가통계포털 KOSIS, 가계금융복지조사 → 소득 5분위별 자산, 부채, 소득 현황 → 순자산액 <a href="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amp;tblId=DT_1HDAA10&amp;conn_path=l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amp;tblId=DT_1HDAA10&amp;conn_path=l2</a>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 2021~23년 수치는 가계금융복지조사(2021년 이후), 2019~20년 수치는 가계금융복지조사(2017~2022년) 활용 * 지표 취지에 따라 “지속 증가” 목표로 평가
10-3	(1) 인구집단별 고용률	전체, 연령별, 성별: 통계청→주제별 통계→노동→경제활동인구조사→성/연령별 경제활동인구 <a href="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amp;tblId=DT_1DA7012S&amp;conn_path=l3">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amp;tblId=DT_1DA7012S&amp;conn_path=l3</a>
	(2) 장애인의무고용률	고용노동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4.5.23.) “2023년 장애인 고용률 3.17%로 지속 상승” <a href="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580">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580</a>

세부 목표 번호	지표	출처/상세정보
10-4	(1) GDP 대비 노동소득 분배율	ILOSTAT→Data→SDG indicator 10.4.1→Labour income share as a percent of GDP ( <a href="https://www.ilo.org/shinyapps/bulkexplorer58/?lang=en&amp;segment=indicator&amp;id=SDG_1041_NOC_RT_A">https://www.ilo.org/shinyapps/bulkexplorer58/?lang=en&amp;segment=indicator&amp;id=SDG_1041_NOC_RT_A</a> )
10-5	(1) 이주민 권리보장에 관한 국제/국내 인권기구 권고에 대한 적극적 수용	〈국제〉 법무부 인권정책과 내부자료 (2024.6) 〈국내〉 국가인권위원회 (2024) 「2023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p.28 “(표) 이주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국가인권위원회, 자료공간 → 위원회 통계자료 → 연간통계, <a href="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list?boardManagementNo=20&amp;menuLevel=3&amp;menuNo=120">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list?boardManagementNo=20&amp;menuLevel=3&amp;menuNo=120</a> )
	(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통합조례 제정률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 <a href="http://elis.go.kr/">http://elis.go.kr/</a> )
	(3) 국민 다문화 수용성 지표	여성가족부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 <a href="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amp;bbsn=704816">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amp;bbsn=704816</a> )  다문화수용성지수: 통계청→국내통계→기관별통계→여성가족부→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일반국민→다문화수용성지수 ( <a href="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amp;tblId=DT_MOGE_3021100302&amp;conn_path=l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amp;tblId=DT_MOGE_3021100302&amp;conn_path=l2</a> )
	(4)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이민/다문화 교육 이수율	-

## 목표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세부 목표 번호	지표	출처/상세정보
11-1	(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국가지표체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a href="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8014">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8014</a> )
	(2) 공공임대주택 공급호수(천호)	e-나라지표 임대주택 재고 ( <a href="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1232">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1232</a> ) 공공임대주택 재고 <a href="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dNo=2&amp;clasCd=10&amp;idxCd=F0179&amp;upCd=8">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dNo=2&amp;clasCd=10&amp;idxCd=F0179&amp;upCd=8</a> ※ 2022 평가에는 민간임대주택 포함 0수치
	(3) 주거급여 수급가구수 및 재정 집행액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통계 <a href="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200&amp;bid=0019&amp;act=view&amp;list_no=377539&amp;tag=&amp;nPage=3">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200&amp;bid=0019&amp;act=view&amp;list_no=377539&amp;tag=&amp;nPage=3</a> 국토교통부 예산 및 기금운용상황. 연도별 12월 세출예산운용상황 ( <a href="http://www.molit.go.kr/USR/BORD0201/m_34879/LST.jsp?cate=budget">http://www.molit.go.kr/USR/BORD0201/m_34879/LST.jsp?cate=budget</a> )
11-2	(1)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국가지표체계 대중교통수송분담률 <a href="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dNo=2&amp;clasCd=2&amp;idxCd=4259&amp;upCd=5">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dNo=2&amp;clasCd=2&amp;idxCd=4259&amp;upCd=5</a>
	(2) 저상버스 보급률	국토교통통계누리 저상버스도입현황 ( <a href="https://stat.molit.go.kr/portal/cate/statView.do?hRslId=354&amp;hFormId=5250&amp;hSelectId=5250&amp;hPoint=00&amp;hAppr=1&amp;hDivEng=&amp;oFileName=&amp;rFileName=&amp;midpath=&amp;month_yn=N&amp;sFormId=5250&amp;sStart=2012&amp;sEnd=2020&amp;sStyleNum=1&amp;EXPORT">https://stat.molit.go.kr/portal/cate/statView.do?hRslId=354&amp;hFormId=5250&amp;hSelectId=5250&amp;hPoint=00&amp;hAppr=1&amp;hDivEng=&amp;oFileName=&amp;rFileName=&amp;midpath=&amp;month_yn=N&amp;sFormId=5250&amp;sStart=2012&amp;sEnd=2020&amp;sStyleNum=1&amp;EXPORT</a> )
	(3) 자전거 수단분담률	행정안전부 (2024), 「2023년 기준 자전거 이용 현황」 p.36 <a href="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14">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14</a>
11-3	(1) 시가화구역 내 이용토지면적 비율	-
	(2) 시민참여 활성화 예산율	-
11-4	(1) 세계유산 등재건수	e-나라지표 유네스코 유산 현황 ( <a href="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1668">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1668</a> )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 <a href="http://whc.unesco.org/en/">http://whc.unesco.org/en/</a> )
	(2)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 예산	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중 재정정보 ( <a href="https://www.cha.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1219&amp;mn=NS_04_06_03">https://www.cha.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1219&amp;mn=NS_04_06_03</a> )

세부 목표 번호	지표	출처/상세정보
11-5	(1) 인구 십만 명당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인구	행정안전부, 재난연감(사회재난) ( <a href="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14">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14</a> )
	(2)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 대비 국가복구예산액	행정안전부 재해연보(자연재난) ( <a href="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14">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14</a> ) 국가지표체계 자연재해피해액 ( <a href="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89">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89</a> ) e-나라지표 자연재난 복구비 <a href="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29">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29</a>
11-6	(1) 미세먼지 나쁨일수	에어코리아 대기환경 연/월보 ( <a href="https://www.airkorea.or.kr/web/detailViewDown?pMENU_NO=125">https://www.airkorea.or.kr/web/detailViewDown?pMENU_NO=125</a> )
	(2)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국가지표체계 미세먼지(PM2.5) 농도 ( <a href="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75">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75</a> ) 에어코리아 대기환경 연/월보 ( <a href="https://www.airkorea.or.kr/web/detailViewDown?pMENU_NO=125">https://www.airkorea.or.kr/web/detailViewDown?pMENU_NO=125</a> )
	(3)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톤/일)	e-나라지표 “생활, 사업장(일반, 건설)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a href="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77">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77</a>
11-7	(1) 1인당 도시공원 면적 (㎡/인)	국가지표 체계 1인당 도시공원 면적 ( <a href="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8062">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8062</a> )
	(2) 공원시설 접근이 용이한 인구 비중	-

## 목표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세부 목표 번호	지표	출처/상세정보
12-1	(1) 자원순환기본계획 및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 건수	-
	(2) 국가 지속가능생산·소비기본계획 수립 여부	-
12-2	(1) 국내 1인당 자원소비량	지표누리-지속가능발전목표, “12.2.2 국내물질소비량” <a href="https://www.index.go.kr/unity/potal/sdg/12/SDGIndicatorService.do?idxCd=G0157">https://www.index.go.kr/unity/potal/sdg/12/SDGIndicatorService.do?idxCd=G0157</a> (원출처: UNEP, 『Global Material Flows Database』) *지표 취지에 따라 감소 목표로 평가
	(2) 물질흐름분석(MFA) 구축 대상 자원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통합자원관리시스템, (⇒ 시스템 소개⇒ “연도별 금속 자원 물질흐름분석통계 구축 현황”) <a href="https://www.k-mfa.kr/app/mfa/business/outline/mfa_business_outline_v.jsp">https://www.k-mfa.kr/app/mfa/business/outline/mfa_business_outline_v.jsp</a>
12-3	(1) 식품 손실 지수	-
	(2) 1인당 식품폐기물 발생량	통계청, 한국의 SDG 데이터 플랫폼, 지표 12-3-1, “도시규모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원단위”, <a href="https://kostat-sdg-kor.github.io/sdg-indicators/12-3-1/">https://kostat-sdg-kor.github.io/sdg-indicators/12-3-1/</a>
12-4	(1)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확보율	환경부 내부자료 (2024. 7)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a href="http://kreach.me.go.kr">kreach.me.go.kr</a>
	(2) 사고대비 화학물질 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a href="https://www.law.go.kr/">https://www.law.go.kr/</a> )
	(3) 1인당 유해폐기물 발생량	자원순환정보시스템 ( <a href="https://www.recycling-info.or.kr/rrs/stat/envStatList.do?menuNo=M13020202">https://www.recycling-info.or.kr/rrs/stat/envStatList.do?menuNo=M13020202</a> ) 총인구 <a href="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amp;tblId=DT_1B040A3&amp;vw_cd=MT_ZTITLE&amp;list_id=A_7&amp;scrId=&amp;seqNo=&amp;lang_mode=ko&amp;obj_var_id=&amp;itm_id=&amp;conn_path=MT_ZTITLE&amp;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amp;tblId=DT_1B040A3&amp;vw_cd=MT_ZTITLE&amp;list_id=A_7&amp;scrId=&amp;seqNo=&amp;lang_mode=ko&amp;obj_var_id=&amp;itm_id=&amp;conn_path=MT_ZTITLE&amp;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a>
12-5	(1)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	KOSIS-국내통계-환경-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a href="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amp;menuId=M_01_01#content-group">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amp;menuId=M_01_01#content-group</a> )
	(2) 사업장폐기물의 재활용률	KOSIS-국내통계-환경-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a href="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amp;menuId=M_01_01#content-group">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amp;menuId=M_01_01#content-group</a> )
12-6	(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기업 수	지표누리-지속가능발전지표, “12.6.1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기업 수” <a href="https://www.index.go.kr/unity/potal/sdg/12/SDGIndicatorService.do?idxCd=G0162">https://www.index.go.kr/unity/potal/sdg/12/SDGIndicatorService.do?idxCd=G0162</a>

세부 목표 번호	지표	출처/상세정보
	(2) 녹색경영 참여 기업수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 ( <a href="https://www.gmi.go.kr/em/apntSttus.do">https://www.gmi.go.kr/em/apntSttus.do</a> )
12-7	(1) 공공분야(지방자치단체) 녹색제품 구매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알림 지식마당 > 통계 > 녹색구매 ( <a href="https://www.keiti.re.kr:8445/site/keiti/03/1030400000002018092809.jsp">https://www.keiti.re.kr:8445/site/keiti/03/1030400000002018092809.jsp</a> )
	(2) 생활용품의 녹색제품 인증 건수	-
12-8	(1) 인구대비 환경교육 수혜자 비율	환경부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a href="http://me.go.kr/home/web/public_info/read.do?pagerOffset=0&amp;maxPageItems=10&amp;maxIndexPages=10&amp;searchKey=&amp;searchValue=&amp;menuId=10357&amp;orgCd=&amp;condition.publicInfoMasterId=1&amp;condition.deleteYn=N&amp;publicInfoId=1191&amp;menuId=10357">http://me.go.kr/home/web/public_info/read.do?pagerOffset=0&amp;maxPageItems=10&amp;maxIndexPages=10&amp;searchKey=&amp;searchValue=&amp;menuId=10357&amp;orgCd=&amp;condition.publicInfoMasterId=1&amp;condition.deleteYn=N&amp;publicInfoId=1191&amp;menuId=10357</a> )
	(2) 일반 국민의 환경의식 수준	환경부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a href="http://me.go.kr/home/web/public_info/read.do?pagerOffset=0&amp;maxPageItems=10&amp;maxIndexPages=10&amp;searchKey=&amp;searchValue=&amp;menuId=10357&amp;orgCd=&amp;condition.publicInfoMasterId=1&amp;condition.deleteYn=N&amp;publicInfoId=1191&amp;menuId=10357">http://me.go.kr/home/web/public_info/read.do?pagerOffset=0&amp;maxPageItems=10&amp;maxIndexPages=10&amp;searchKey=&amp;searchValue=&amp;menuId=10357&amp;orgCd=&amp;condition.publicInfoMasterId=1&amp;condition.deleteYn=N&amp;publicInfoId=1191&amp;menuId=10357</a> )
12-9	(1)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합성 수지 국내수요량: 석유화학협회 > 생산판매통계> 합성수지> 종류별(LDPE, L-LDPE, EVA, HDPE, PP, PS, EPS, ABS, PVC, PC) 국내수 요량 합산  주민등록연앙인구: <a href="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amp;tblId=DT_1B040M5">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amp;tblId=DT_1B040M5</a>
	(2)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률	환경공단,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각년도) "생활계폐기물(생활(가정), 사업장비배출시설계) 발생 및 처리현황.xls" 생활폐기물=생활(가정폐기물)+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산식: 폐합성수지류 전체 재활용량/폐합성수지류 전체 발생량  단, 2018년은 통계 항목이 달라 (플라스틱류+비닐류)재활용량/(플라스틱류+비닐류)발생량 으로 계산하였음
12-10	(1) 지속가능관광의 참여자수	-
12-11	(1) GDP 대비 화석연료 보조금 비율	지표누리-지속가능발전지표, "12.6.1 GDP 단위(생산과 소비)당 화석연료보 조금액" <a href="https://www.index.go.kr/unity/potal/sdg/12/SDGIndicatorService.do?idxCd=G0167">https://www.index.go.kr/unity/potal/sdg/12/SDGIndicatorService.do?idxCd=G0167</a> (원출처: UNEP)

## 목표 13 기후변화 대응

세부 목표 번호	지표	출처/상세정보
13-1	(1) 방재시설 집행 비율	국가통계포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현황(시설별)”, <a href="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60&amp;tblId=DT_315_2019_H0005&amp;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60&amp;tblId=DT_315_2019_H0005&amp;conn_path=I2</a> (한국국토정보공사, 『도시계획현황』)
13-2	(1)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 비율	-
	(2) 기후·에너지 전담기관 설치 지자체 비율	세계환경신문 (2022.12.8) <a href="http://www.e-newsp.com/news/article.html?no=49171">http://www.e-newsp.com/news/article.html?no=49171</a>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a href="https://ecpi.or.kr/research/?q=YToxOntzOjEyOiJrZXI3b3JkX3R5cGUiO3M6MzoiYWxsljt9&amp;bmode=view&amp;idx=17596582&amp;t=board">https://ecpi.or.kr/research/?q=YToxOntzOjEyOiJrZXI3b3JkX3R5cGUiO3M6MzoiYWxsljt9&amp;bmode=view&amp;idx=17596582&amp;t=board</a>  탄핵위 센터현황 <a href="https://www.2050cnc.go.kr/base/contents/view?contentsNo=69&amp;menuLevel=2&amp;menuNo=105">https://www.2050cnc.go.kr/base/contents/view?contentsNo=69&amp;menuLevel=2&amp;menuNo=105</a>
	(3) 적응대책 이행 모니터링 파트너십 운영 지자체 비율	-
13-3	(1) 공공기관 적응대책 수립·이행 비율	환경부 기후적응과 내부자료 (2024.10)
	(2) 기후변화 교육 의무화 학교 비율	-
13-4	(1)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4) 「2023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통계 <a href="https://www.gir.go.kr/home/index.do?menuId=36">https://www.gir.go.kr/home/index.do?menuId=36</a> 환경부 『국가온실가스통계』 (국가통계포털, “국가 온실가스 분야별 배출량 추이” <a href="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6&amp;tblId=DT_106N_99_2800020">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6&amp;tblId=DT_106N_99_2800020</a> ) 환경부 보도자료(2024.9.10)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 6억 2,420만톤… 전년 대비 4.4% 감소, 2년 연속 감소 추세” - 2022년 잠정치

**목표 14** 해양생태계 보전

세부 목표 번호	지표	출처/상세정보
14-1	(1) 수질평가 지수값(WQI)을 이용한 생태기반 해역별 해수수질 기준 달성률	해양환경정보포털(한국해양환경 조사연보) ( <a href="https://www.meis.go.kr/mes/data/6/board.do">https://www.meis.go.kr/mes/data/6/board.do</a> )
	(2) 해양쓰레기 수거량	해양환경정보포털(해양쓰레기 사업정보 - 수거사업 정보) ( <a href="https://www.meis.go.kr/mli/business/collectStat.do#">https://www.meis.go.kr/mli/business/collectStat.do#</a> )
14-2	(1) 갯벌복원면적	해양환경공단 내부자료(24.5) “갯벌복원 및 갯벌식생복원 현황”
	(2) 바다숲 조성 누적면적	한국수산자원공단포털, 사업소개 - 바다숲 사업 성과, <a href="https://fira.or.kr/fira/fira_030303_new.jsp">https://fira.or.kr/fira/fira_030303_new.jsp</a>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3.1.6) “2023년 바다숲 및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지역 선정” <a href="https://www.2050cnc.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43&amp;boardNo=1224&amp;menuLevel=2&amp;menuNo=73">https://www.2050cnc.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43&amp;boardNo=1224&amp;menuLevel=2&amp;menuNo=73</a>
14-3	(1) 외해 평균 pH 농도 적정 범위(8.0~8.2) 유지	해양환경정보포털(해양환경 관측&조사 - 해양환경정보 - 해양환경측정망 정보)
14-4	(1) 총허용어획량(TAC) 할당 비율	지표누리 총허용어획량 소진율 <a href="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85&amp;clasCd=7">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85&amp;clasCd=7</a>
14-5	(1) 해양보호구역 지정 면적	통계청- e나라지표-해양보호구역 지정 현황 <a href="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3056">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3056</a>
14-6	(1)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어가소득	e-나라지표-부처별/영역별-해양수산부-어가 소득현황 <a href="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3050">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3050</a> 도시근로자 소득: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자(도시, 2인이상, 근로자가구) <a href="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43&amp;tblId=DT_143002_A000&amp;vw_cd=MT_ZTITLE&amp;list_id=K1_12_001&amp;seqNo=&amp;lang_mode=ko&amp;language=kor&amp;obj_var_id=&amp;itm_id=&amp;conn_path=MT_ZTITLE">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43&amp;tblId=DT_143002_A000&amp;vw_cd=MT_ZTITLE&amp;list_id=K1_12_001&amp;seqNo=&amp;lang_mode=ko&amp;language=kor&amp;obj_var_id=&amp;itm_id=&amp;conn_path=MT_ZTITLE</a>
14-7	(1) 정부연구개발예산 대비 해양수산 연구개발 투자비중	해양수산통계시스템 -> 해양정책/해양수산 R&D투자현황 <a href="https://www.mof.go.kr/statPortal/cate/statView.do">https://www.mof.go.kr/statPortal/cate/statView.do</a>
	(2) 국내 해양수산과학 기술이전 건수	해양수산부 - 알림·뉴스 - 공지사항 - 2023년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 열람 <a href="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docSeq=50929&amp;menuSeq=1067&amp;bbsSeq=81">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docSeq=50929&amp;menuSeq=1067&amp;bbsSeq=81</a>
	(3) 정부의 ODA 중 해양수산분야 무상원조 규모	한국수출입은행 ODA 통계 ( <a href="https://kodaportal.go.kr/portal/detail?basYyyy=2020&amp;amtSel=grntEqvInt2&amp;amtUnit=UsdAmt2">https://kodaportal.go.kr/portal/detail?basYyyy=2020&amp;amtSel=grntEqvInt2&amp;amtUnit=UsdAmt2</a> )
14-8	(1) 국내 3톤 이상 4톤 미만 어선의 어선원 보험 가입률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또는 수협중앙회 정책보험부
14-9	(1) 관련 협약 국내적 수용을 위한 국내 입법 진행률	-

## 목표 15 육상생태계 보전

세부 목표 번호	지표	출처/상세정보
15-1	(1) 육상 및 담수 생물다양성을 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비율	한국 보호지역 통합 DB관리시스템((KDPA, Korea Database on Protected Area) <a href="http://www.kdpa.kr">www.kdpa.kr</a> , ) 면적비율(커버리지) 통계
	(2) 총 육지면적 중 산림면적 비율	산림청, 「2023 산림임업통계연보」 (산림통계시스템 <a href="https://kfss.forest.go.kr/stat/ptl/fyb/frstyYrBookList.do?curMenu=12453">https://kfss.forest.go.kr/stat/ptl/fyb/frstyYrBookList.do?curMenu=12453</a> )
15-2	(1) 국가 산림경영 지표 확장	-
15-3	(1) 총 토지면적 중 황폐화된 토지 비율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와 세계식량기구(FAO)의 평가 방법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통계를 개발하고 있음
15-4	(1)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지정 수 및 개정 수	국립생물자원관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 <a href="https://species.nibr.go.kr/endangeredspecies/rehome/exlist/exlist_intro.jsp">https://species.nibr.go.kr/endangeredspecies/rehome/exlist/exlist_intro.jsp</a> ) 산림청 - 특별산림보호대상종 지정 고시문 ( <a href="https://www.kbr.go.kr/content/view.do?menuKey=635&amp;contentKey=81">https://www.kbr.go.kr/content/view.do?menuKey=635&amp;contentKey=81</a> )
	(2) 주요 멸종위기종 복원율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 <a href="https://www.nie.re.kr/modedg/contentsView.do?ucont_id=CTX000109&amp;menu_nix=57B9KU6O">https://www.nie.re.kr/modedg/contentsView.do?ucont_id=CTX000109&amp;menu_nix=57B9KU6O</a> )
	(3) 산악지역 녹색피복지수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FAO) ( <a href="https://www.fao.org/sustainable-development-goals/indicators/1542/en/">https://www.fao.org/sustainable-development-goals/indicators/1542/en/</a> )
	(4) 종보호지수 (Species Protection Index)	Map of Life ( <a href="https://mol.org/indicators/protection">https://mol.org/indicators/protection</a> )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 <a href="https://epi.yale.edu/">https://epi.yale.edu/</a> )
	(5) 전국 야생동물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스테이션의 수(1000) 대비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스테이션의 비율	-
15-5	(1)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실적	2020 환경통계연감
	(2) 관리제도가 필요한 야생동물·가축·인간 사이 고위험 접촉점 대비 관리제도가 확립된 접촉점 수의 비율	-

세부 목표 번호	지표	출처/상세정보
15-6	(1) 외래생물 관리 대상종수	2020 환경통계연감
	(2) 산림병해충에 의한 연간 산림피해 면적	산림청 - 산림통계 - 임업통계연보 ( <a href="https://www.forest.go.kr/kfswweb/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1064&amp;mn=NKFS_04_05_09">https://www.forest.go.kr/kfswweb/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1064&amp;mn=NKFS_04_05_09</a> )
15-7	(1) 백두대간 등 산림복원 면적	산림청 - 제6차 산림기본계획 ( <a href="https://www.forest.go.kr/kfswweb/kfi/kfs/cms/cmsView.do?mn=NKFS_02_13_01&amp;cmsId=FC_000388">https://www.forest.go.kr/kfswweb/kfi/kfs/cms/cmsView.do?mn=NKFS_02_13_01&amp;cmsId=FC_000388</a> ) 환경부 -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 <a href="https://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menuId=10259&amp;seq=7448">https://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menuId=10259&amp;seq=7448</a> )
	(2) 도심/생활권 복원	(산림청 내부자료)

## 목표 16 평화·정의·포용

세부 목표 번호	지표	출처/상세정보
16-1	(1) 범죄 발생비 (살인, 강도, 폭력, 성범죄)	검찰 범죄분석 ( <a href="https://www.spo.go.kr/site/spo/crimeAnalysis.do">https://www.spo.go.kr/site/spo/crimeAnalysis.do</a> ※ $\frac{\text{각각 살인, 강도, 폭력, 성폭력 범죄의 발생건수}}{\text{총인구}} \times 100,000$ )
	(2) 학교폭력 피해 경험	한국교육개발원 『학교폭력 실태조사』,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전수조사(1차) 기준, <a href="http://kedi.re.kr/khome/main/research/selectPubForm.do?plNum0=14989">http://kedi.re.kr/khome/main/research/selectPubForm.do?plNum0=14989</a>
16-2	(1) 아동학대피해아동 발견율	보건복지부 「2022 아동학대 주요통계」 “피해아동 발견율” p.21, <a href="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200&amp;bid=0019&amp;act=view&amp;list_no=378052">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200&amp;bid=0019&amp;act=view&amp;list_no=378052</a>
	(2) 실종아동 미발견건수	경찰청 청소년보호과 e-나라지표 실종아동 등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 <a href="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10">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10</a>
16-3	(1) 법률구조건수 증감률	e-나라지표, 최근 5년 민사 및 형사법률구조현황 ( <a href="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79">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79</a> )
16-4	(1) 범죄은닉자산 환수보전 평균액	검찰연감 검찰의 운영 범죄수익환수 ( <a href="https://www.spo.go.kr/site/spo/ex/board/List.do?cbldx=1603">https://www.spo.go.kr/site/spo/ex/board/List.do?cbldx=1603</a> )
	(2) 마약범죄건수	경찰범죄통계 전체범죄발생 및 검거 추세(최신년도) <a href="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List.do?q_bbsCode=1115&amp;estnColumn2=%EB%85%84%EB%8F%84">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List.do?q_bbsCode=1115&amp;estnColumn2=%EB%85%84%EB%8F%84</a>
16-5	(1) 부패경험지수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도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각년도) “외부체감도 부패경험률” <a href="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amp;bid=36&amp;act=view&amp;list_no=63073">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amp;bid=36&amp;act=view&amp;list_no=63073</a>
16-6	(1) 정부 기관 업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기관별 신뢰 정도 - 중앙정부 부처, 국회, 법원,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 <a href="https://www.kipa.re.kr/site/kipa/research/selectReList.do?seSubCode=BIZ017A001">https://www.kipa.re.kr/site/kipa/research/selectReList.do?seSubCode=BIZ017A001</a>
16-7	(1) 국민의 정치적 효능감 수준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정치 효능감” <a href="https://www.kipa.re.kr/site/kipa/research/selectReList.do?seSubCode=BIZ017A001">https://www.kipa.re.kr/site/kipa/research/selectReList.do?seSubCode=BIZ017A001</a>

세부 목표 번호	지표	출처/상세정보
16-8	(1)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존재 여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4. 7. 18.)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제도로 어려운 상황의 임산부와 아동 보호” <a href="https://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41732">https://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41732</a>
16-9	(1) 정보공개 청구 및 공개건수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a href="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38">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38</a>
	(2) 기본적 자유 침해 경험 비율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공공기관으로부터 인권침해 경험” <a href="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29&amp;tblId=DT_129001_B019&amp;conn_path=I2, “인권침해 경험”">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29&amp;tblId=DT_129001_B019&amp;conn_path=I2, “인권침해 경험”</a> <a href="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29&amp;tblId=DT_129001_B020&amp;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29&amp;tblId=DT_129001_B020&amp;conn_path=I2</a> 국가인권위원회, 「2023 인권의식실태조사 보고서」
16-10	(1) ODA 중 개도국 내 폭력 예방 및 테러·범죄 방지를 위한 국가기관 역량강화 지원 비중	-
16-11	(1) 개별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존재 여부와 이행	-
	(2) 차별 경험 비율	국가인권위원회, 「2023 인권의식실태조사 보고서」 p.102 <a href="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17&amp;boardNo=7609810&amp;searchCategory=23&amp;page=2&amp;searchType=total&amp;searchWord=&amp;menuLevel=3&amp;menuNo=115">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17&amp;boardNo=7609810&amp;searchCategory=23&amp;page=2&amp;searchType=total&amp;searchWord=&amp;menuLevel=3&amp;menuNo=115</a>
16-12	(1) 사이버 침해범죄 발생 대비 검거율	e-나라지표, 사이버범죄 발생 및 검거, <a href="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08">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08</a>
	(2) 디지털정보격차 감소율	e나라지표, 디지털정보화 종합수준, <a href="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67">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67</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일반국민 대비 취약계층 디지털정보화역량수준” <a href="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27&amp;tblId=DT_12017N0010&amp;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27&amp;tblId=DT_12017N0010&amp;conn_path=I2</a>

## 목표 17 지구촌 협력 강화

세부 목표 번호	지표	출처/상세정보
17-1	(1) GNI 대비 ODA	e-나라지표, GNI 대비 및 1인당 ODA 추이, <a href="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1688">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1688</a>
17-2	(1) 개도국과의 교역비중	한국무역협회, K-stat 수출입 무역통계, <a href="https://stat.kita.net/stat/kts/sum/SumImpExpTotalList.screen#">https://stat.kita.net/stat/kts/sum/SumImpExpTotalList.screen#</a> ※ K-stat 무역통계의 경제권별 분석, '신흥시장, 개발도상국(IMF 2014.10)' 기준
	(2) 개도국에 대한 투자규모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a href="https://stats.koreaexim.go.kr/sub/interstateStatistics.do">https://stats.koreaexim.go.kr/sub/interstateStatistics.do</a> ※ UNCTAD의 World Investment Report에 따른 개도국 분류기준
17-3	(1) 개도국의 과학기술혁신 지원 내용이 포함된 ODA 전략·정책 건수	-
17-4	(1) 신남방, 신북방 등과 같은 주요 대외 정책과 연계된 ODA 사업 비율	-
17-5	(1) PCSD 원칙의 전략적·입법적 명시, SDG 목표와 국가예산의 연계, SDG 이행을 위한 정책조정기구 등 정책일관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여부	-
	(2) 전년 대비 개선된 K-SDGs 지표 비율	-
17-6	(1) 다자간 국제협력협의체 운영 및 다자간 협력대화 건수	-
17-7	(1) SDGs 이행을 위한 민간협의체 참여기관 및 정례회의 건수	유엔글로벌콤팩트에 제출한 COP(이행보고서)/COE(참여보고서) 유엔글로벌콤팩트, <a href="http://unglobalcompact.kr/cop-coe/member-cop-coe/">http://unglobalcompact.kr/cop-coe/member-cop-coe/</a> 및 내부자료
	(2) ODA 민간협력 재원의 비율	-

**부록 II 2024 K-SDG 지표별 평가결과 요약**









□ 전략1: 사람(사회) -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

목표명	세부목표	지표	2040 목표	2024 평가결과		
				2022 순황도	2024 평가 대상 기간	
목표1: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1-1	남녀노소, 장애여부 등과 관계없이 빈곤 인구 비율을 OECD 평균 이하 수준으로 줄인다.	11.8		2018-2022	
	1-2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달성한다.	25		2017-2021	
	1-3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99		2018-2022	
	1-4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경제·사회·환경적 충격 및 재난에 대한 노출을 감소하고, 회복력을 강화한다.	84.2		2018-2022	
	2-1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 접근성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	20		2018-2022	
	2-2	농가 소득원을 다각화하고, 경영 안전망을 확충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6.5		2020-2022	
	목표2: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1) 취약계층 긴급복지지원 예산 및 비율 ※ 긴급복지 예산 = 긴급복지지원금+일자리사업	(0.009%)		2019-2023
			(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사망률의 비중 (1) 소득수준 하위가구 식품안전성 확보가구 (1) 농가소득	지속 감소 지속 확대 지속 확대	  	2018-2022 2013-2022 2019-2023

목표명	세부목표	지표	2040 목표	2022 순향도	2024 평가결과		
					순향도	평가 대상 기간	
목표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2-3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를 구축한다.	(2)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2014-2023	
			(1) 유기농업 인증면적 비율			2019-2023	
		(2) 농경지 토양유기물 함량			2013-2021		
		(3) 밭토양 산도			2013-2021		
		(1) 종장기 보존시설에 확보된 식물유전자원 점수			2019-2023		
	2-4	종자, 작물, 가축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 하고 신품종을 개발한다.	(2) 종장기 보존시설에 확보된 동물유전자원 점수			2019-2023	
			(3)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개발된 품종 수			2019-2023	
			(1) 정부비축미 평균재고량			2018-2022	
	3-1	만성질환의 위험요인관리와 건강보장을 확대한다.	(1) 심혈관질환, 암, 당뇨, 만성 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사망률(30~70세)	2.4	-		2015-2019
			(2) 당뇨병 조절률	38.5			2013-2021
(3) 성인 흡연율			12.7			2018-2022	
(4) 장애인 만성질환유병률			75	-		2017-2023	
3-2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약물오남용을 예방한다.	(1)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	지속 감소			2018-2022	
		(2)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알코올 섭취량	지속 감소			2013-2022	
















목표명	세부목표	지표	2040 목표	2022 순황도	2024 평가결과		
					순황도	평가 대상 기간	
3-3	교통사고 등 각종 인명사고로 인한 사망 과 신체손상을 예방한다.	(1) 인구 1천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1.2			2019-2023	
		(1) 인구 십만 명당 결핵신고 신환자율	지속 감소			2014-2023	
	3-4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2) 인구 십만 명당 말라리아 발생률	말라리아 퇴치 인증	-		2019-2023
			(1) 출생아 십만 명당 모성사망자 수	6			2018-2022
	3-5	모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1) 출생아 1천 명당 신생아 사망률	1			2019-2023
			(2)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	85			2018-2022
			(3) 아동·청소년 비만 유병률	지속 감소			2019-2023
	3-6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1) 인구가중 초미세먼지(PM2.5) 농도	지속 감소			2015-2022
(2) 인체 내 환경유해물질 농도 수준			지속 감소			2012-2020	
3-7	유해화학물질, 대기, 물, 토양오염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을 줄인다.	(1) 영아사망률	2.1			2018-2022	
		(2)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8	-	-	-	
		(3)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	85	-		2018-2022	
		(4) 기능제한 없는 노인인구 비율	75			2011-2020	
3-8	대한민국의 저출생 극복과 인구고령화를 대비한다.						

목표명	세부목표	지표	2040 목표	2022 순향도	2024 평가결과		
					순향도	평가 대상 기간	
목표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3-9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여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한다.	(1) 인구 1천 명당 공공병상 수	-	-	-	
	4-1	모든 아동이 성별과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적절한 효과적 학습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질의 무상 초·중등교육의 평등한 이수를 보장한다.	(1) 취학률			2014-2023	
			(2) 국제 학업성취도평가(PISA 2~6수준 학생 비율)	평가점수 지속 증가	-		2012-2022
			(3) 국가수준 학습성과지표 산출	지속 증가	-	-	-
	4-2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서비스의 이용 기회를 보장하여 초등학교에 대비한다.	(1) 신체적 건강, 학습, 심리사회적 안녕(well-being) 측면에서 발달정도가 정상적인 5세 이하 여아와 남아 비율	지속 증가	-	-	-
			(2) 초등학교 취학 전 체계적인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 이용률	지속 증가	-		2014-2023
			(3)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	지속 증가	-		2014-2023
			(4) 긍정적인 가정학습 및 양육환경을 경험하는 영유아 비율	-	-	-	-
	4-3	모든 학습자들에게 성별과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적정 비용으로 가능한 양질의 기술 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교육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해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1) 고등교육 이수율	49 유지			2018-2022
			(2) 학생 1인당 국가장학금 수혜 금액	지속 증가	-		2017-2021
			(3) 고등교육기관에서 성인 학습자의 비학위 교육과정 참여율	지속 증가	-	-	-
	4-4	디지털화, 기술변화에 따라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직업기술 등 적절한 기술을 가진 청소년 및 성인의 수를 실질적으로 증대한다.	(1) 평생학습 참여율	지속 확대			2019-2023
(2)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			지속 증가			2019-2023	
(3) 청소년 및 성인의 ICT 역량 수준			-	-	-	-	

목표명	세부목표	지표	2040 목표	2022 순향도	2024 평가결과		
					순향도	평가 대상 기간	
4-5	교육에서의 성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 이주민, 취약상황에 처한 아동 등 취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1) 모든 지표에 성별, 장애, 취약계층별 분리 통계 도입	1.0 유지	-	-	-	
		(2030) 언어능력 level2 이상 90%, 수리능력 level2 이상 84%	-	-	-	-	
4-6	모든 청소년과 다수의 성인이 문해 및 산술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1) 활용 가능한 언어역량과 수리역량의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숙련도를 달성한 특정 연령인구 비율 (PIAAC)	(2030) 수준4 이상 90%			2014-2020	
4-7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한 생활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문화 확산,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존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2) 성인 문해율	-	-	-	-	
		(1)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주류화 정도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사교육, 학생평가)	-	-	-	-	
		(2)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교육정책 사업 비율	-	-	-	-	-
		(3) 교육과정 내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요소 반영 비율	-	-	-	-	-
4-8	아동 장애인, 성별을 고려한 교육시설을 간접·개선하고,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한다.	(4) 교원 중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경험자 비율	-	-	-	-	
		(1)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율	지속 증가			2014-2023	
		(2) 학교 내진보강률	100			2019-2023	
		(3) Wee 클래스 설치 비율	100			2019-2023	

목표명	세부목표	지표	2040 목표	2022 순향도	2024 평가결과	
					순향도	평가 대상 기간
목표5: 성평등 보장	4-9	포용적이고 양질의 교육을 위해 모든 교육단계에서의 충분한 교육재정을 확보한다.	(1) 교육단계별 GDP 대비 교육비용 정부부담 비율	-	-	-
	4-10	모든 교육단계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사를 충분히 확보한다.	(1) 교사 1인당 학생 수		2019-2023	
			(2) 보육교사 중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비율		2015-2021	
			(3) 특수교사 1인당 특수학생 수		2014-2023	
			(4) 초·중등 전문상담교사 배치 비율		2019-2023	
	5-1	여성과 소녀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한다.	(1)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률	73.2		2018-2022
	5-2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해 모든 영역에서의 인신매매, 성적착취 등의 폭력을 철폐한다.	(1) 가정폭력 실신고건수 및 대응률	지속 증가	-	-
			(2) 성폭력 발생사건 및 미검거율	지속 저감		2020-2022
			(3) 디지털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 및 미검거율	지속 저감		2020-2022
	5-3	무보수 돌봄과 기사노동에 대해 인정하고 가치를 부여한다.	(1) 맞벌이 가구 여성대비 남성의 가정 내 무보수 기사노동 및 돌봄노동 시간 비율	40		2014-2019
5-4	정치·경제·공적생활의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리더십을 위해 평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1) 의회와 지방의회의 여성 비율	지속 증가		2010-2023	
		(2)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과제 목표 달성률	100		2019-2023	
		(3) 민간부문 여성 관리자 비율	지속 확대		2013-2022	

목표명	세부목표	지표	2040 목표	2022 순황도	2024 평가결과		
					순황도	평가 대상 기간	
목표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5-5	성·재생산 건강과 재생산 권리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	제도 수립	-	-	-	
	5-6	여성권한 강화를 위해 핵심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여성 인력을 양성한다.	100	-	☀️	2014-2018	
	5-7	모든 수준에서 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소년의 권한 강화를 위한 건설한 정책과 법을 채택하고 증진한다.	지속 증가	☀️	☀️	2006-2021	
	11-1	적절하고 부담 가능한 가격의 주택과 기본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지속 증가	☀️	☀️	2014-2023	
	11-2	안전하고 부담 가능한 가격의 교통시스템을 제공하고,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고려한 대중교통을 확대한다.	지속 확대	-	-	-	
	11-3	도시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며, 주거지에 대한 참여적, 통합적 계획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89.1%	☀️	☁️	2018-2022	
			(1) 성·재생산권과 건강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을 보장하는 제도 마련 여부 (2) 초·중·고등학교에서 성교육을 수행한 비율 (3) 피임 실천율	지속 감소	☀️	☀️	2013-2022
			(1) 성별 스마트폰 보유율 (2) 대학교 여성과학기술인력 졸업 현황	지속 확대	☀️	☀️	2013-2022
			(1)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의견 수용률	지속 확대	☀️	☀️	2013-2022
			(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2) 공공임대주택 공급호수 (3) 주거급여 수급가구수 및 재정 집행액	지속 확대	☀️	☀️	2018-2022
			(1)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2) 저상버스 보급률 (3) 자전거 수단분담률	지속 확대	☁️	⚡️	2017-2021

목표명	세부목표	지표	2040 목표	2022 순황도	2024 평가결과	
					순황도	평가 대상 기간
11-4	세계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1) 세계유산 등재건수	지속 확대			2018-2023
		(2)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 예산	지속 확대			2019-2023
11-5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현저히 감소시키며, 통합적 도시재난 위기관리를 개발, 이행한다.	(1) 인구 심만 명당 사망·사태로 인한 사망·실종 인구	0.1			2018-2022
		(2)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 대비 국가복구예산액	일정 비율 유지	-	-	-
11-6	대기질 및 폐기물 관리 등 도시가 가지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감소시킨다.	(1) 미세먼지 나쁨일수	지속 감소			2015-2022
		(2)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10			2018-2022
		(3)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지속 감소			2018-2022
11-7	여성, 아동, 장애인,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이에게 공공 녹지공간으로의 안전하고 용이한 접근을 보장한다.	(1) 1인당 도시공원 면적	15			2018-2022
		(2) 공원시설 접근이 용이한 인구 비중	지속 확대	-		2018-2021

□ 전략2: 번영(경제) - 혁신적 성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목표명	세부목표		지표	2040 목표	2022 순황도	2024 평가결과		
	8-1	8-2				순황도	평가 대상 기간	
목표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모두가 행복해지는 경제성장을 한다.	(1) 연간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지속 확대		2019-2023		2019-2023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	(1) 인구집단별 고용률(성별, 연령별, 장애여부별)	지속 확대		2014-2023		2014-2023	
		(2)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	지속 감소		2019-2023		2019-2023	
		(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장을 촉진한다.	안정적 유지	-	-	-	-	
		(2) 창업기업 수	안정적 유지	-	-	-	-	
		동일한 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1) 남녀 임금격차	(2030) 85.5 이후 지속 증가		2019-2023		2019-2023
목표9: 산업의 성장과 혁신 활성화 및	이주노동자, 연소근로자 등 취약그룹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확대한다.	(1) 이주노동자 고용 비율	안정적 유지		2019-2023		2019-2023	
	모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한다.	(2) 연소근로자 고용 비율	지속 감소	-	-	-	-	
		(1) 사고사망만인율	(2030) 0.22 이후 지속 감소		2019-2023		2019-2023	
		(2) 전체 제해율	지속 감소		2019-2023		2019-2023	
		데이터수 국민에게 정보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도로 보금률	지속 증가		2014-2023		2014-2023

목표명	세부목표	지표	2040 목표	2022 순황도	2024 평가결과	
					순황도	평가 대상 기간
사회기반시설 구축		(2) 일반국민대비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	지속 증가			2014-2023
		(1) 부채가 있거나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소규모 산업 비율	-	-	-	-
	9-2	산업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지속가능한 기업 활동의 기반미련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	지속 증가			2015-2022
		(3) 산업집중도	지속 감소			2017-2011
	9-3	기술 역량을 구축하고 고도화된 기술 상용화를 촉진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	지속 상승	-	-	-
		(1) WEF 세계경쟁력보고서 혁신역량부문 10개 지표의 점수	지속 상승			2019-2023
		(2) 세계혁신지수(GII)의 종합점수 또는 혁신산출점수	지속 상승			2013-2022
	9-4	국가 연구 인력과 자본을 확충하고 적절한 연구의 기획과 실행을 통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지속상승			2013-2022
	9-5	환경 친화적인 산업 활동과 기술 혁신을 통해 자원효율성이 높은 산업화를 추구한다.	지속감소			2012-2021
		(2)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재활용 비율	지속상승			2013-2022
목표10: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10-1	하위 40% 인구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국가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달성하고 유지한다.	55			2018-2022
		(2) 소득격차비율	25			2018-2022
	10-2	나이, 성별, 장애여부, 지위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 대한 사회·경제·정치적 포용성을 확대한다.	안정적 유지	-		2018-2022
		(2) 소득 1, 2분위 기구의 순자산 점유율	지속 증가			2019-2023













목표명	세부목표	지표	2040 목표	2022 순황도	2024 평가결과		
					순황도	평가 대상 기간	
목표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10-3	나이, 성별, 장애여부에 따른 차별적 대우를 철폐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	(1) 인구집단별 고용률			2019-2023	
	10-4	재정정책, 임금정책, 사회보호정책을 강화하여 더 높은 수준의 평등을 달성한다.	(2) 장애인무고용률			2014-2023	
	10-5	내·외국인 권익을 균형적으로 보장하는 이민정책을 통한 상호문화 이해 환경을 조성한다.	(1) GDP 대비 노동소득 분배율	57			2017-2021
			(1) 이주민 권리보장에 관한 국제/국내 인권기구 권고에 대한 적극적 수용	(국제) 100 (국내) 100 100 유지	-	-	-
	10-5		(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통합조례 제정률	100			2020-2024
			(3) 국민 다문화 수용성 지표	80			2015-2021
	10-5		(4)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이민/다문화 교육 이수율	100	-	-	-
			(1) 자원순환기본계획 및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건수	18건			2024
	12-1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통합적인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2) 국가 지속가능생산·소비기본계획 수립 여부	수립	-	-	
	12-2	모든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1) 국내 1인당 자원소비량	-	-		2018-2022
12-3	식품의 생산·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 손실과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폐기물을 감소시킨다.	(2) 물질흐름분석(MFA) 구축 대상 자원수	100개	-		2018-2022	
		(1) 식품 손실 지수	지속 감소	-	-	-	
12-4	화학물질과 유해폐기물의 친환경적	(2) 1인당 식품폐기물 발생량	210			2016-2021	
12-4	화학물질과 유해폐기물의 친환경적	(1)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확보율	100	-	-	-	

목표명	세부목표	지표	2040 목표	2022 순황도	2024 평가결과	
					순황도	평가 대상 기간
	관리를 통해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2) 사고대비 화학물질 수	200	-		2019-2023
	폐기물의 원천예방과减量, 재사용과 재활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감소한다.	(3) 1인당 유태폐기물 발생량	80			2018-2022
12-5		(1)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	75			2018-2022
		(2) 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 재활용 비율	90			2018-2022
12-6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활동을 관리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기업 수	400			2018-2022
		(2) 녹색경영 참여 기업수	1000			2018-2022
12-7	녹색 제품 인증 및 녹색 구매의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녹색 소비를 촉진한다.	(1) 공공분야(지방자치단체) 녹색제품 구매율	75%	-	-	-
		(2) 생활용품의 녹색제품 인증 건수	100	-	-	-
12-8	모든 국민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의식을 갖도록 환경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1) 인구대비 환경교육 수혜자 비율	50	-		2018-2023
		(2) 일반 국민의 환경의식 수준	75			2018-2023
12-9	플라스틱이 선순환하도록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증가시키고, 친환경재료 개발을 통해 플라스틱의 환경으로 유출을 방지한다.	(1)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98	-		2019-2023
		(2)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률	100	-		2018-2022
12-10	지속가능한 관광의 확대를 통해 환경보전에 기여한다.	(1) 지속가능관광의 참여자수	(방문자수) 칠백만 명 (해설사) 칠천 명	-	-	-
12-11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1) GDP 대비 화석연료 보조금 비율	0			2018-2022











□ 전략3: 환경 -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리는 깨끗한 환경

목표명	세부목표	지표	2040 목표	2022 순황도	2024 평가결과	
					순황도	평가 대상 기간
목표6: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6-1	모두를 위한 안전한 식수를 공평하게 공급한다.	지속 증가		2013-2021	
	6-2	모두에게 편리한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속 증가		2013-2022	
	6-3	수질오염 물질의 수계 유입을 최소화하여 수질개선을 담보한다.	90		2018-2022	
	6-4	물공급 안정성 도모를 위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200		2019-2023	
	6-5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다양성을 확대한다.	90	-	2017-2022	
		(1) 하수도 정비중점관리지역 정비대책수립 개소수	70		2018-2022	
		(1) 유역별 물순환율	76		2019-2023	
		(2) 수질목표기준 달성도 (TOC 기준)	8		2018-2022	
		(3) 신규 오염물질 관리 항목 수	지속 증가		2018-2022	
		(1) 상수도 누수율	25.5		2018-2022	
		(2) 지방상수도 지름률	70		2018-2022	
		(3) 하수처리수 재이용율	70		2018-2022	
		(1) 서식 및 수변환경 평가지수 (HRI)	70		2018-2022	
		(2) 어류건강성 평가지수 (FAI)	70		2018-2022	

목표명	세부목표	지표	2040 목표	2022 순황도	2024 평가결과	
					순황도	평가 대상 기간
목표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6-6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를 위해 지역공동체 참여를 지원하고 강화한다.	(3) 습지와 습지보호지역 면적 증감	지속 확대			2013-2022
		(1) 물 관련 행정기관위원회 운영 실적	지속 확대	-		2019-2023
		(2) 수질보전활동지원 예산 반영 비율	지속 확대			2018-2022
	7-1  에너지 서비스에 대해 안정적이고 적절한 접근을 보장한다.	(1) 에너지비우체 수급가구 수	200만 가구			2019-2023
		(2)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5			2018-2022
	7-2  국가 에너지원에서 청정에너지 공급을 증대한다.	(1) 신·재생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	17.6			2018-2022
	7-3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킨다.	(1) 국가에너지효율지표	목표치 추후 보완	-	-	-
(2) 건물에너지효율지표		지속 저감			2019-2023	
7-4  운송분야의 에너지소비로 인한 대기오염을 최소화한다.	(1) 친환경차 확대 수	2030년 300만대 (누적) 이후 안정적 유지			2019-2023	
	(2) 운송부문 에너지 총소비량	2030: 2017 대비 14.4% 저감 2040: 2030 대비 50% 저감			2018-2022	
목표13: 기후변화와 대응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을 감소시키고,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 및 적응 능력을 강화한다.	(1) 방재시설 집행 비율	98.5			2018-2022






목표명	세부목표	지표	2040 목표	2022 순황도	2024 평가결과	
					순황도	평가 대상 기간
13-2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계획을 지방정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1)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 비율	지속 증가	-	-	-
		(2) 기후·에너지 전담기관 설치 지자체 비율	100	-	-	-
		(3) 적응대책 이행 모니터링 파트너십 운영 지자체 비율	-	-	-	-
13-3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역량을 강화한다.	(1) 공공기관 적응대책 수립·이행 비율	100% 유지			2024
		(2) 기후변화 교육 의무화 학교 비율	100% 유지	-	-	-
13-4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에 비하여 2°C보다 아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을 1.5°C 까지 제한하도록 노력한다.	(1)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MtCO2eg)	2030: 2017 대비 24.4%감축 2040: 2017 대비 33.6%감축			2017-2022
		(2) 해양쓰레기 수거량	(2030) 90% (2040) 지속 확대			2019-2023
14-1	육상과 해양의 오염물질로부터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1) 갯벌복원면적	지속 증가			2014-2023
		(2) 바다숲 조성 누적면적	지속 확대	-	-	-
14-2	바다의 생태환경과 수산자원의 서식처를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1) 갯벌복원면적	(2030) 54,000 (2040) 지속확대			2019-2023
		(2) 바다숲 조성 누적면적	(2030) 54,000 (2040) 지속확대			2019-2023

목표명	세부목표	지표	2040 목표	2022 순황도	2024 평가결과	
					순황도	평가 대상 기간
목표15: 육상생태계 보전	14-3	과학기술 협력 강화 등을 통한 해양 산성화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한다.	(1) 외해 평균 pH 농도 직접 범위(8.0~8.2) 유지		-	-
	14-4	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과도한 어업을 지양한다.	(1) 총허용어획량(TAC) 할당 비율	-	-	-
	14-5	해양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면적을 확대한다.	(1) 해양보호구역 지정 면적			2019-2023
	14-6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확보한다.	(1)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어가소득	지속 확대		2019-2023
	14-7	해양과학 연구역량 제고와 해양과학기술 이전을 확대한다.	(1) 정부연구개발예산 대비 해양수산 연구개발 투자비중 (2) 국내 해양수산업 기술이전 건수	5		2019-2023
	14-8	소규모 영세어업인의 인종적 어업행위를 지원한다.	(3) 정부의 ODA 중 해양수산분야 무상원조 규모	지속 확대		2019-2023
	14-9	해양과 해양 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국제법을 국내법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해양과 해양 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강화한다.	(1) 국내 3톤 이상 4톤 미만 어선의 어선원 보험 가입률 (1) 관련 협약 국내적 수용을 위한 국내 임법 진행률	지속 확대		2016-2023
	15-1	육상과 내륙담수의 생태계 다양화를 위해 보전과 복원 활동을 활성화한다.	(1) 육상 및 담수 생물다양성을 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비율 (2) 총 육지면적 중 산림면적 비율	2030 17% 이후 안정적유지 지속 확대		2024 2018-2022
	15-2	산림파괴 중단, 황폐화된 산림복원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강화한다.	(1) 국가 산림경영 지표 확장	안정적 관리	-	-
	15-3	기름·중수·개발 등으로 황폐화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한다.	(1) 총 토지면적 중 황폐화된 토지 비율	지속 감소	-	-

목표명	세부목표	지표	2040 목표	2022 순황도	2024 평가결과	
					순황도	평가 대상 기간
15-4	생물다양성 손실을 예방하고 멸종위기종을 보호한다.	(1)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500	-		2017-2022
		(2) 주요 멸종위기종 복원율	100	-	-	-
		(3) 산악지역녹색피복지수	99 유지		-	-
		(4) 종보호지수 (Species Protection Index)	100			2016-2020
		(5) 전국 야생동물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스테이션의 수(1000) 대비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스테이션의 비율	100% 유지	-	-	-
15-5	동식물 보종의 포획과 불법거래를 없애도록 노력한다.	(1)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실적	지속 확대			2018-2022
		(2) 관리제도가 필요한 야생동물·가축·인간 사이 고위험 접촉점 대비 관리제도가 확립된 점 축적 수의 비율	100%	-	-	-
15-6	침입외래종의 유입을 예방하고 이들이 육지 및 수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1) 외래생물 관리 대상종수	1,500			2019-2023
		(2) 산림병해충에 의한 연간 산림피해 면적	지속 감소			2013-2022
15-7	개발사업 등 인간활동으로 단절된 생태축의 복원과 생태네트워크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1) 백두대간 등 산림복원 면적	3,000			2017-2021
		(2) 도심/생활권 복원	지속 확대			2017-2021

□ 전략4: 평화협력 - 지구촌 평화와 협력 강화

목표명	세부목표	지표	2040 목표	2022 순형도	2024 평가결과	
					순형도	평가 대상 기간
목표16: 평화·정의·포용	16-1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을 대폭 감소시킨다.	지속 감소			2018-2022
	16-2	이동에 대한 학대, 착취, 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을 종식한다.	지속 감소			2018-2022
	16-3	국내·국제적 차원에서 범죄를 증진하며, 모 두가 평등하게 사법제도의 보호를 받도록 보장한다.	지속 증가			2019-2023
	16-4	불법 자금 및 무기거래를 감소시키고, 불법 취득자산의 환수와 반환조치를 강화하며, 모든 형태의 조직범죄를 퇴치한다.	지속 증가			2013-2022
	16-5	부정부패와 뇌물수를 감소시킨다.	지속 감소			2018-2022
	16-6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는 정부정책과 제도를 수립·이행한다.	지속 감소			2019-2023
	16-7	포용적이며 사회 각계각층의 시민참여도가 높은 의사결정을 보장한다.	지속 증가			2019-2023
	16-8	모든 사람에게 출생 등록을 포함하여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제도 도입	-	-	-
	16-9	국내법과 국제협정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 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기본적 자유를 보호한다.	지속 증가			2018-2022
	16-10	개도국 내 폭력, 테러 및 범죄 퇴치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해 국제협력력을	목표치 추후 보완	-	-	-

목표명	세부목표	지표	2040 목표	2022 순형도	2024 평가결과	
					순형도	평가 대상 기간
목표17: 지구촌 협력 강화	강화한다.					
	16-11 차별을 지양하기 위한 법과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1) 개별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존재 여부와 이행 (2) 차별 경험 비율	제도 도입 지속 감소	- 	- 2019-2023	-
	16-12 디지털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1) 사이버 침해범죄 발생 대비 검거율 (2) 디지털정보격차 감소율	지속 증가 지속 증가	 	2018-2022 2014-2023	
	17-1 ODA를 확대하고 개발재원을 다양화한다.	(1) ODA/GNI 비율(%)	지속 증가		2013-2022	
	17-2 다자무역제제를 촉진하고 개도국의 교역 및 투자증대를 지원한다.	(1) 개도국과의 교역비중 (2) 개도국에 대한 투자규모	지속 증가 지속 증가	- 	2018-2023 2018-2023	
	17-3 개도국의 과학기술혁신시스템 강화를 지원한다.	(1) 개도국의 과학기술혁신 지원 내용이 포함된 ODA 전략·정책 건수	지속 증가	-	-	
	17-4 전략적인 개발협력을 추진한다.	(1) 신남방, 신북방 등과 같은 주요 대외 정책과 연계된 ODA 사업 비율	지속 증가	-	-	
	17-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일관성을 강화한다.	(1) PCSD 원칙의 전략적·입법적 명시, SDG 목표와 국가예산의 연계, SDG 이행을 위한 정책조정기구 등 정책일관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여부 (2) 전년 대비 개선된 K-SDGs 지표 비율	증가 증가	- -	- -	
	17-6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1) 다자간 국제협력의체 운영 및 다자간 협력 대화 건수	지속 증가	-	-	
	17-7 효과적인 공공, 공공-민간 및 시민사회 간 파트너십을 권장하고 촉진한다.	(1) SDGs 이행을 위한 민간협의체 참여기관 및 정례회의 건수 (2) ODA 민간협력 재원의 비율	지속 증가 지속 증가	- -	- -	

2024  
국가지속가능성  
평가